

발 간 등 록 번 호

74-6440000-000330-01

# 행복한 안전충남 실행계획 2050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 목 차

I. 안전총남 2050 전망과 안전관리 .....	1
01. 미래 환경과 재난 안전관리 여건 변화 .....	3
02.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환경 .....	7
03. 분야별 안전관리 여건 .....	19
04. 자연재난 피해현황 .....	44
05. 충남의 재난관리 여건 SWOT분석 .....	65
II. 안전총남 2050 비전 개요 .....	69
01. 비전 수립 배경 .....	71
02.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	74
III. 안전총남 2050 실행계획 전략수립 .....	109
01. 실행계획 수립 방향 .....	111
02. 실행계획 추진체계 .....	114
03. 실행계획 목표 .....	116
IV. 안전총남 2050 실행계획 세부사업 .....	119
V. 선도사업 .....	335
VI. 안전총남 2050 계획의 집행과 관리 .....	377
01. 예산계획 .....	379
02. 평가계획 .....	383
❖ 부록 1 .....	403
01.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재난·안전분야 정책 대응방향 .....	405
02. 드론산업과 재난·안전분야 정책 대응방향 .....	413
❖ 부록 2 .....	425
01. 기타 도민의견 제안 프로그램 .....	427
❖ 부록 3 .....	441
01. 실행과제(프로그램) 사업비 .....	443





I

안전충남 2050  
전망과 안전관리



# 01

## 미래 환경과 재난 안전관리 여건 변화

○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한국사회의 트렌드를 바탕으로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과 재난 및 안전관리 이슈 도출을 위한 전망

분류	변화	주요특징
인구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여성 근로자 도시화 인력의 국제이동	고령화는 향후 지속적인 글로벌 메가트렌드 고령화 인구 비중이 높고 외국인 비율이 높은 도시중심의 생활패턴 변화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가 글로벌 노동시장 형성 외국인 급증에 따른 다문화 사회로의 급속 이행
산업/기술	산업구조의 고도화 신기술·신산업 스마트 기술진보 기술 융합, 학제간 통합	서비스업의 확장, 제조업과 첨단기술의 결합 IT, BT, NT, HT(Health Technology) 분야의 상승적 결합 가속화 기술의 융합화, 지능화, 서비스화 진전 이동, 지능, 내재성이 극대화되는 기술 발전
사회	경제적 양극화 심화 네트워크 사회 북한과 안보, 통일문제	일정 수준의 삶이 보장되지만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 네트워크 사회가 구현되면서 자질보다는 연결을 중시하는 접속적 관계가 사회관계의 주류로 등장 북한문제의 국내와, 내부화와 급변화
환경	인구 자원부족과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지구온난화, 물부족과 수자원의 불균형 가용자원이 줄어들고 기후변화가 심한 환경 녹색 뉴딜사업 부상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1. 향후 10년간의 메가트렌드 분석 및 지식경제 정책방향 연구

## 1) 인구

### ▶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과 영아사망률 감소 등 전 세계 인구는 지속증가하지만, 인구 성장률은 둔화
  - 우리나라 인구는 2017년 5천 170만 명으로, 2000년에 비해 1.1배 증가하였으며, 향후 15년 간 소폭 증가하여 2030년에는 5천 2백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2060년에는 4천 4백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
- 출생율 감소로 유소년 인구가 줄고,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 고령화도 급속히 진전
  - 고령인구 비중은 2017년 현재 13.1%(세계 51위)에서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세계 2위)로 높아질 전망이다. 중위연령(Median age)기준으로도 2050년에 한국(53.9세)은 대만(56.2세)을 제외하고 세상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

### ▶ 노동인구감소와 외국인 인구 유입

- 선진국의 개도국 인력 유입이 증가하여 일자리 경합이 커지고, 문화적 이질성이나 종교 갈등과 같은 사회 분열과 갈등요인이 심화
  -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1960년 ~ 1965년에는 229만명에 그쳤으나 2005년 ~ 2010년에는 1,714만명, 2011년 ~ 2015년에는 1,317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50년 ~ 2055년에는 1,04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2000년 대 초반에는 연평균 2만 6천명씩 순유출 되었으나, 2010년~2013년에는 연평균 6만 8천명씩 순유입 되고 있음
- 높은 외국인 유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문화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공급으로 인한 편익보다 높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작용이 예상 됨

### ▶ 인구의 도시 집중

- 우리나라는 1960년대 39.1%의 도시화 비율을 보이는데 그쳤으나, 2015년에는 83%로 증가하였으며, 2040년에는 9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옥스포드 이코노믹스, 2017)
  - 인구의 도시 심화는 인구 1,000만명을 넘는 메가시티 증가로 이어지며, 각종 자연재난 피해발생을 높이고 피해 규모를 증대시키는 원인이 됨

---

## 2) 산업/기술

### ▶ 4차산업 중심 지식경제 산업의 고도화

-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 간 상호작용 증대로 다차원·다환경 가상 지능공간의 활용 증대
  -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가상이 현실을 압도하는 증강현실 시장의 확대
  - 재난관리 분야에 기술 접목의 필요성 증대 및 신종 재난 발생 가능성

### ▶ 첨단기술과 결합한 제조업

- 서비스업 중심 주요 선진국의 인구감소와 재정불안으로 제조업을 성장동력화 함
  - 전통 제조업이 IT기반의 첨단기술에 바탕을 둔 지식 정보형 신 제조업으로 변환
- 고령화, 질병, 에너지, 자원, 식량, 물 부족, 기후변화 등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과학 기술 개발
- IT, BT, NT 등 첨단기술이 치료, 질병예방, 에너지, 자원, 식량, 환경, 제조, 서비스,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
  - 도시화 해결을 위한 유망기술 : 친환경 스마트시티 설계, 건설기술, 지능형 전력, 교통, 통신망, 대체수자원 및 수질관리
  -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유망기술 : 기후변화 감시·대응 감시분석 평가기술, 자연재해감시망, 위험기상 예측시스템, 오염원 발생 방지·관리 및 유해성 평가, CO<sub>2</sub> 포집·저장, 첨단기능소재, 친환경 이동수단
  - 위험확산 대응을 위한 유망기술 : 신종 전염병 대응 진단키트, 슈퍼백신, 유해성물질 관리, 생활안전 재해예측·예방, 빅데이터 수집·분석, 사이버테러 대응, 미래전 대비 기술, 전장무인화, 초소형 정찰·무기, 복합신소재

## 3) 사회

### ▶ 정책조정자로서 정부역할 변화

- 2030년 국가권력은 약화되고 기업, 개인, 온라인 네트워크, NGO 권력은 강화될 전망(다보스포럼, 2008)
- 관료주의 조직에서 개방적이고 네트워크된 조직으로 변화

---

▶ 테러 및 각종 사이버 범죄 발생 증가

- 사회불안 소득증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치안, 경비 강화요구
- 네트워크 보안 요구 증대

#### 4) 환경

▶ 에너지, 자원, 식량, 물 부족 심화

- 2030년 까지 총 에너지 수요가 현재보다 약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인구증가, 육류소비, 바이오연료 생산 등으로 곡물 수요가 급증하고,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
  - 농촌인구감소, 기상이변, 식량자원화 등으로 식량 공급 부족과 불안이 심화될 전망

▶ 기후변화 가속화

- 이상기후, 집중호우, 기온상승 등 대형 기상이변 발생 빈도 급증 추세
- 지구 평균기온은 2030년 까지 0.5℃ ~ 1.5℃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21세기 말까지 1.1~6.4℃ 상승 전망(IPCC, 2007)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은 일상화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발생은 2100년 까지 전 세계 GDP의 5~20%에 이를 것으로 전망(UN)

## 02

#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환경

### 1) 기후변화 추이와 전망

- 최근 70년간 기후변화를 살펴보면, 뚜렷한 기온상승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폭염일수는 줄어든 반면, 여름일수와 열대야일수가 증가하고 있음

표 1-1. 최근 70년간 충청남도 기후변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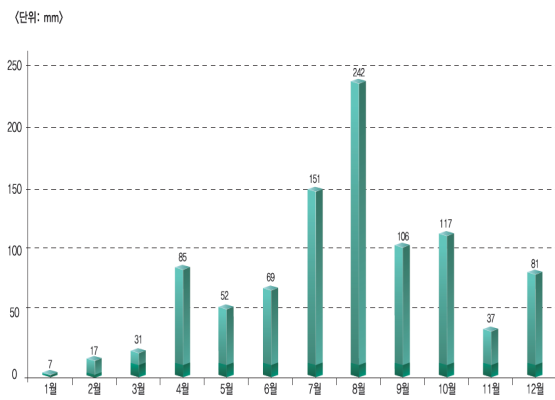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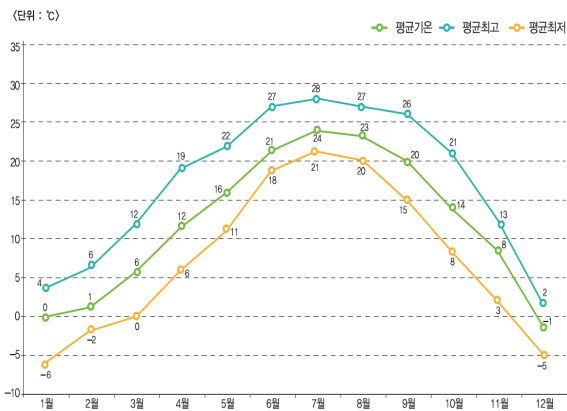
구분	1945년	2015년	경향성
평균기온(℃)	11.87	12.09	△0.03(℃/10년)
최고기온(℃)	17.30	17.72	△0.06(℃/10년)
최저기온(℃)	7.53	7.17	▼0.05(℃/10년)
연강수량(mm)	1,124.10	1,574.06	△64.28(mm/10년)
여름일수	108.60	115.96	△1.05(일/10년)
폭염일수	13.67	11.41	▼0.32(일/10년)
열대야일수	4.61	5.09	△0.06(일/10년)

※자료 : 충청남도 서해안 기후환경변화연구소, 2015, 「충청남도 기후변화 100년 '과거70년, 앞으로 30년」

○ 최근 5년간을 살펴보면, 2012년 기온 최고극값은 36.0℃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10년에는 연간 강수량이 2,141.8mm, 최대순간 풍속은 2012년에 26.3%를 기록한 바 있음

표 1-2. 충남의 기후현황 및 월별 기온/강수량

연도별	기온(℃)					강수량 (mm)	바람(%) Windspeed		
	평 균	평균최고	최고극값	평균최저	최저극값		평균풍속	최대풍속	최대순간 풍속
2010	11.7	16.3	31.6	7.3	-13.2	2,141.8	2.8	6.4	11.7
2011	11.6	16.4	33.0	7.2	-14.7	1,704.4	2.9	11.4	24.3
2012	11.5	16.6	36.0	6.9	-15.1	1,642.6	2.5	10.6	26.3
2013	11	16	33	7	-16	1,018	2	10	15
2014	12	17	33	7	-11	1,000	1	10	17



※자료 : 충청남도, 2015, 「2015충남통계연보」

○ 충청남도 서해안 기후환경변화연구소(2015)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향후 30년간 기온 상승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연강수량, 여름일수,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표 1-3. 미래 30년간 충청남도 기후변화 전망

구분	2025년	2035년	2045년	경향성
평균기온(℃)	12.94	13.23	14.84	△0.95(℃/10년)
최고기온(℃)	16.15	16.52	17.15	△0.50(℃/10년)
최저기온(℃)	9.99	10.18	11.08	△0.55(℃/10년)
연강수량(mm)	1,083.98	1,019.35	1,210.00	△63.01(mm/10년)
여름일수	132.29	139.32	139.92	△3.82(일/10년)
폭염일수	11.69	12.02	23.81	△6.06(일/10년)
열대야일수	17.73	20.47	26.49	△4.38(일/10년)

※자료 : 충청남도 서해안 기후환경변화연구소, 2015., 「충청남도 기후변화 100년 '과거70년, 앞으로 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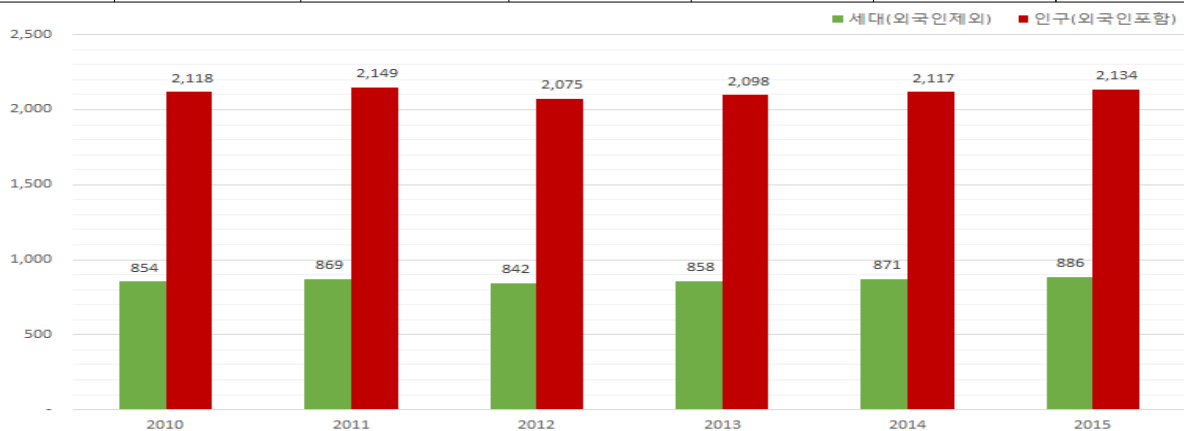
## 2) 인구 현황 및 전망

### ▶ 인구현황

- 충남의 인구는 2015년 기준 총 2,134,232명으로 내국인 2,062,273명, 외국인 56,583명이며, 세대당 인구수는 2.41명으로 나타남

표 1-4. 충남의 인구추이

연도별	세대수	총계	내국인		외국인	
			남	여	남	여
2010	854,432	2,118,264	1,075,266	1,042,998	25,903	16,847
2011	868,768	2,149,374	1,092,491	1,056,883	29,479	18,611
2012	842,446	2,074,918	1,054,652	1,020,266	27,840	18,301
2013	857,699	2,097,555	1,067,850	1,029,705	30,429	19,495
2014	871,459	2,116,830	1,079,571	1,037,259	33,679	20,878
2015	885,968	2,134,232	1,089,219	1,045,013	34,780	21,803



※자료 : 충청남도, 2016, 「2016충남통계연보」

- 2015년 충남의 65세이상 고령자는 315,079명으로 충남의 노령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노령화 지수는 114.4%임
- 4세 이하 아동의 인구는 103,537명으로 출생아가 얼마나 태어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조출생률’은 9.0%임

표 1-5. 2015년 충남 인구구조 특징

총인구	세대수	노령화지수	조출생률
2,134,232	885,968호	114.4%	9.0%

※자료 : 충청남도, 2015, 「2015충남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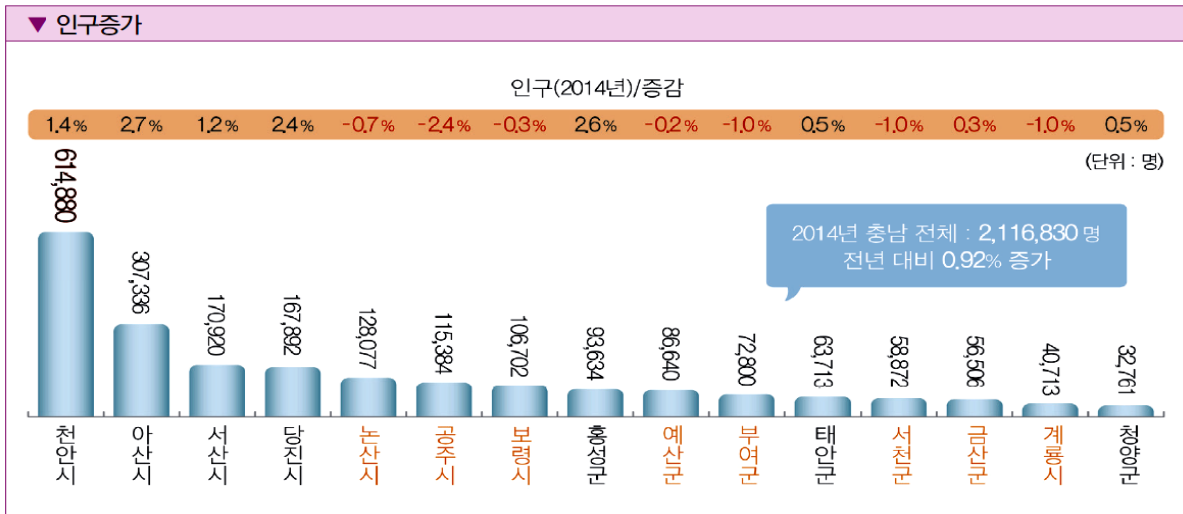
-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622,836명으로 가장 많으며, 아산시 311,143명, 서산시 173,715명, 당진시 170,259명, 논산시 127,735명 순으로 많으며, 외국인은 천안시와 아산시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6. 2015년 충남 시·군별 인구현황

지역별	세대수	총계	내국인		외국인	
			남	여	남	여
총계	885,968	2,134,232	1,054,439	1,023,210	34,780	21,803
천안시	247,695	622,836	307,821	297,955	10,290	6,770
공주시	48,632	113,057	55,958	55,303	858	938
보령시	46,739	107,279	52,968	51,786	1,921	604
아산시	122,131	311,143	152,634	145,103	8,682	4,724
서산시	69,993	173,715	87,280	82,819	1,955	1,661
논산시	56,095	127,735	62,142	62,090	1,760	1,743
계룡시	14,397	41,920	20,703	21,027	80	110
당진시	72,074	170,259	86,454	78,668	3,468	1,669
금산군	25,154	56,417	27,769	27,110	828	710
부여군	32,733	72,257	35,298	35,845	553	561
서천군	26,622	58,143	28,039	28,871	859	374
청양군	15,226	33,038	16,236	16,249	280	273
홍성군	41,008	96,463	47,198	47,355	1,276	634
예산군	37,488	85,257	41,870	41,614	1,119	654
태안군	29,981	64,713	32,069	31,415	851	378

※자료 : 충청남도, 2016, 「2016충남통계연보」

- 충남 전체의 인구증가율은 2014년 대비 0.75% 증가하였으며, 시·군별로는 천안, 아산, 서산과 당진, 홍성에서 1%의 인구증가율을 보인 반면, 공주, 부여, 서천 등 지역은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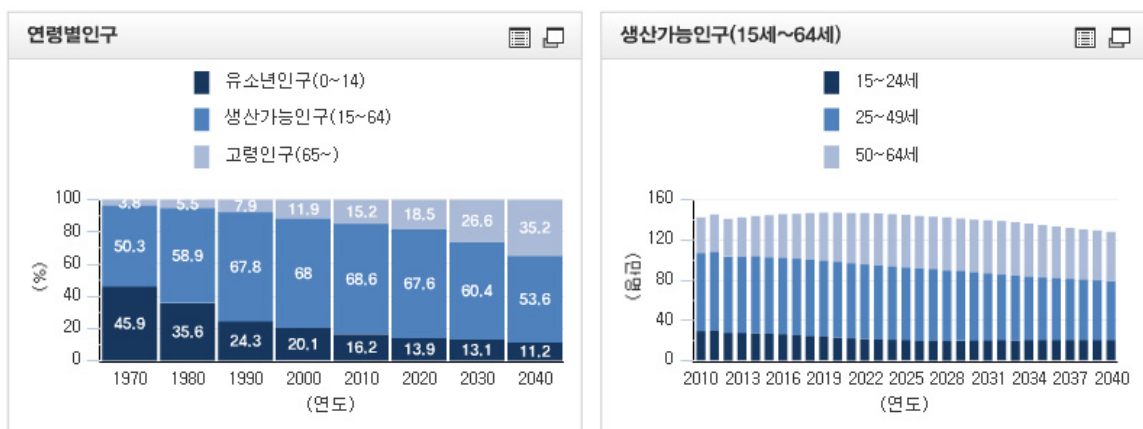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 2015, 「2015충남 사회지표 요약」

[그림 1-1] 2014년 충남의 지역별 인구증가율

## ▶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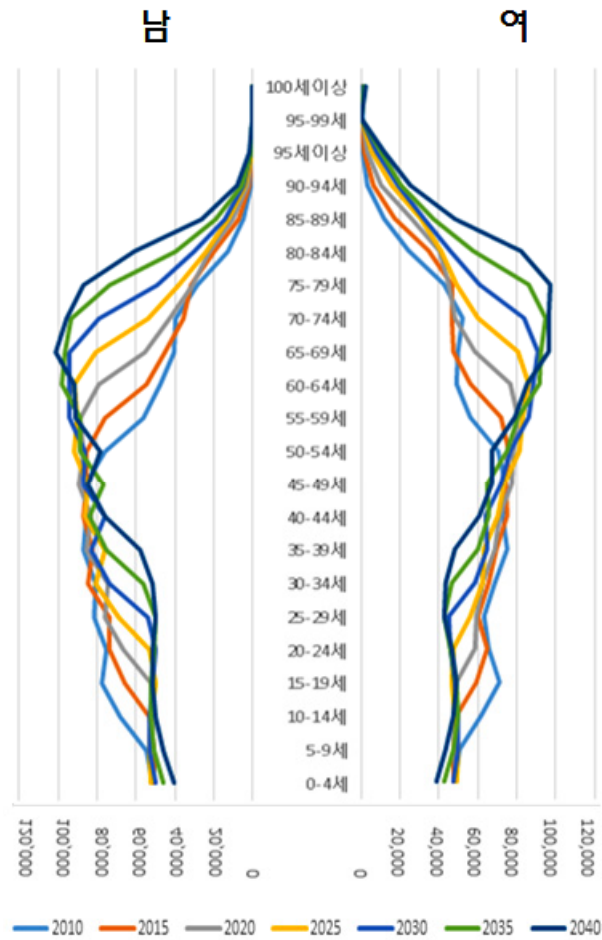
- 통계청에 따르면, 충남의 인구는 2030년 2,323,88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연령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유소년 인구(0-14세)의 경우 2010년 16.2%에서 2030년 13.1%로 저출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 역시 68.6%에서 60.4%로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5.2%에서 35.2%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2016.11.25.) 「인구추계교실」

[그림 1-2] 충남의 인구구조 전망

○ 남녀별로는 인구구성비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여성의 고령인구 증가율이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2016.11.25.) 「인구추계교실」

[그림 1-3] 충남의 남여 인구 변화 전망

### 3) 재난취약계층 현황 및 특징

#### ▶ 영유아 및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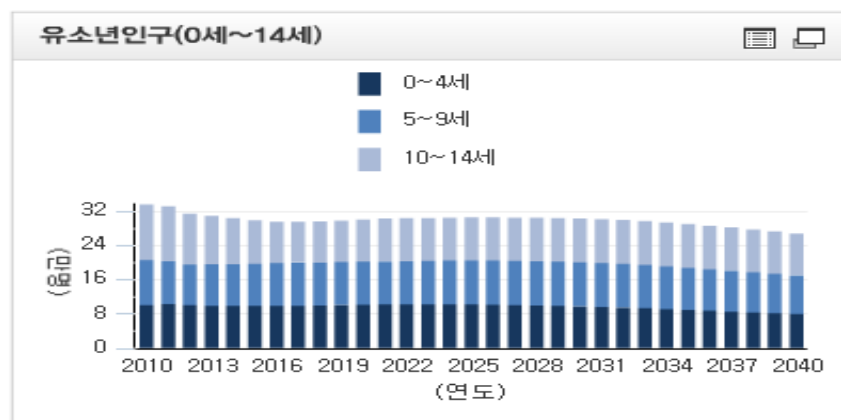
- 충청남도의 아동인구는 2014년까지 급격히 증가했으나, 2015년부터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 총인구의 증가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아동인구의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남녀 구성비는 여아의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남아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어 향후 여아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됨

표 1-7. 2015년 충남 시·군별 인구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337,497	174,951	162,546	2,101,284	1,063,012	1,038,272	2,028,777	1,026,812	1,001,965
0-4세	100,848	51,932	48,916	103,537	53,382	50,155	99,303	51,101	48,202
5-9세	103,902	53,789	50,113	100,446	52,083	48,363	97,493	50,481	47,012
10-14세	132,747	69,230	63,517	129,789	67,481	62,308	118,763	62,017	56,746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2,047,631	1,037,421	1,010,210	2,062,273	1,045,892	1,016,381	2,077,649	1,054,439	1,023,210
0-4세	98,875	50,878	47,997	98,147	50,585	47,562	97,179	49,975	47,204
5-9세	98,104	50,725	47,379	97,952	50,648	47,304	100,057	51,819	48,238
10-14세	113,458	59,043	54,415	108,420	56,304	52,116	100,964	52,339	48,625

※자료 : 충청남도, 2015, 「2015충남통계연보」

- 2015년 기준 5세 미만 영유아 수는 97,179명으로 충남 전체 인구의 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산률 저하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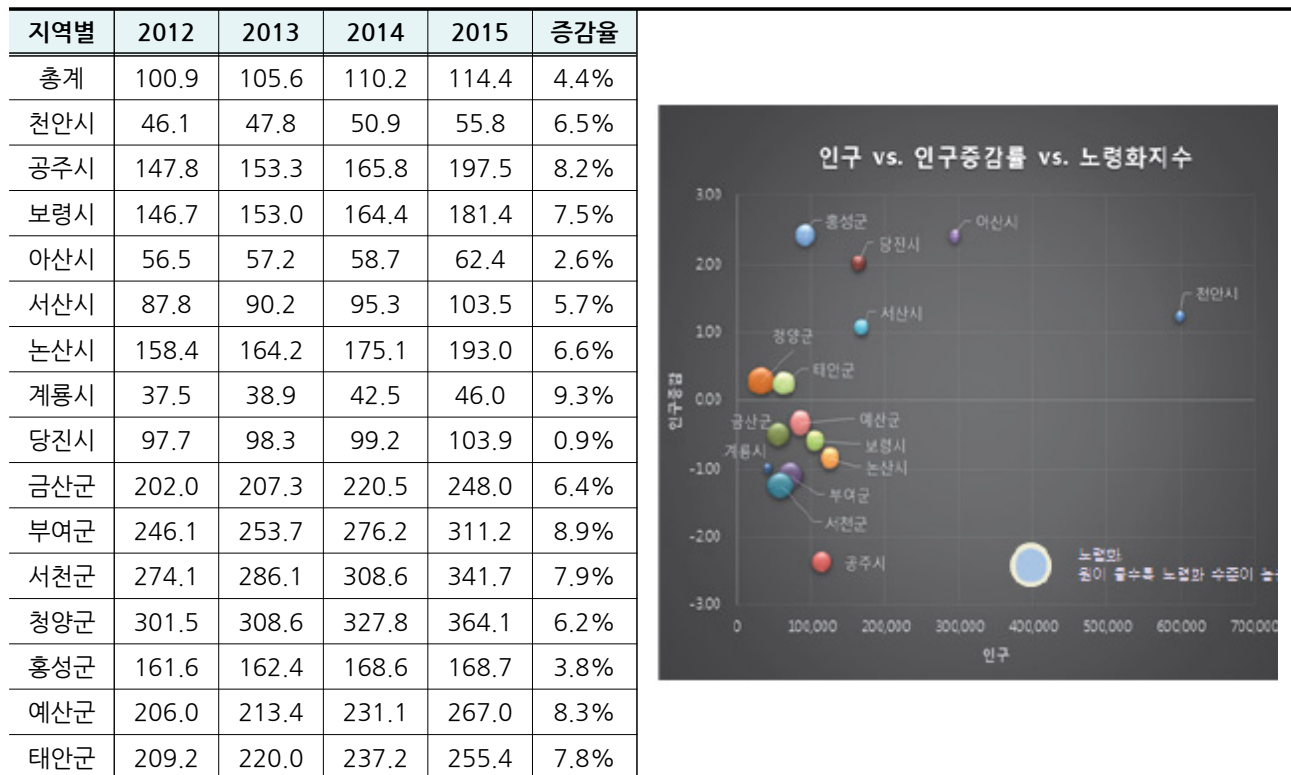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2016.11.25.) 「인구추계교실」

[그림 1-4] 충남의 인구구조 전망

## ▶ 고령자

- 2014년 충남의 노령화지수는 2014년 대비 5.8% 증가한 114.4으로 전국 88.7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국 17시도 가운데 6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전망을 고려할 때 고령인구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는 2013년 대비 당진시의 노령화지수 증감율이 0.9%로 가장 낮으며, 계룡, 부여, 예산, 공주, 서천의 순으로 노령화지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 인구 수 대비 인구증감률과 노령화지수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공주, 계룡, 부여, 서천의 경우 인구 증가율은 낮은 반면, 노령화지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재난취약계층으로서 고령 인구에 대한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지역임

표 1-8. 2015년 충남 시군별 노령화 지수



※자료 : 충청남도, 2016, 「2016충남 사회지표 요약」

- 충남의 경우, 노인 인구의 경우 2015년 기준 질병사고율 외에 사고부상률이 22.1%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율도 9.8%도 높은 수준임
- 특히 천안, 아산, 당진 지역의 경우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으며(충청남도, 2013), 향후 고령화에 따른 위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충청남도, 2015, 「2015충남 사회지표 요약」

[그림 1-5] 충남 시군별 고령인구 구급사고의 종류별 비율(%)

## ▶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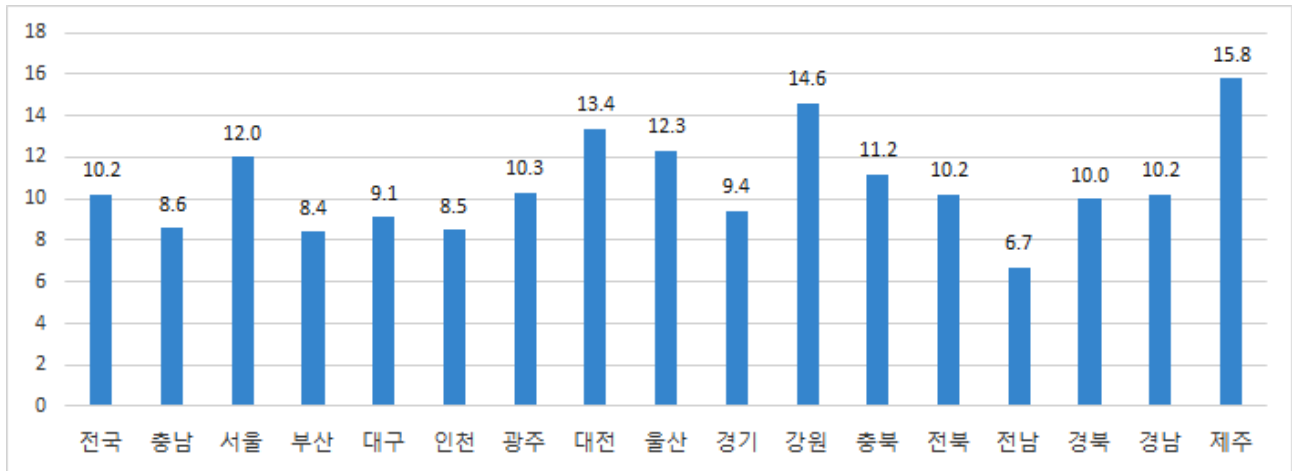
- 충남의 장애인 인구수는 2015년 기준 124,801명으로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65,661명으로 가장 많으며, 청각 13,537명, 시각 12,097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장애인수는 크게 변화가 없으며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수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1-9. 충남 장애유형별 장애인수 변화 추이

장애유형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계	130,646	131,108	124,872	124,561	124,721	124,801
지체	69,859	70,005	66,779	66,470	66,021	65,661
시각	12,489	12,609	12,086	12,116	12,128	12,097
청각	14,262	14,365	13,656	13,532	13,534	13,537
언어	921	931	904	897	933	952
지적	9,719	10,098	9,793	10,174	10,436	10,739
뇌병변	12,055	12,023	11,231	10,836	10,897	10,828
자폐	385	422	448	504	568	631
정신	5,620	5,437	5,036	5,029	5,091	5,150
기타	5,336	5,218	4,939	5,003	5,113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2016.11.25.)

- 또한 인구 1만명당 장애인복지시설 수는 8.6개소로 전국 평균 10.2개소보다 낮으며, 전남, 대구, 인천에 이어 4위로 시설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료 : 통계청, 2016

[그림 1-6] 전국 시도별 인구1만명당 장애인 복지시설 수

- 충남 시군별로는 총 139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 가운데 생활시설은 총 59개소이며, 천안, 공주에 가장 많은 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표 1-10. 충남 시군별 장애인복지시설 수(2012년 기준)

구분	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경제 활동지원	기타 시설
		공동 생활가정	장애인 거주시설	주간단기 재가보호	장애인 복지관	심부름 센터	수화 통역센터	편의시설 지원센터	직업 재활시설	
계	139	17	27	15	13	15	15	16	13	8
천안시	22	1	5	4	2	2	2	1	2	3
공주시	20	3	5	3	1	1	1	2	2	2
보령시	14	1	3	2	1	1	1	1	2	2
아산시	11	2	2	1	1	1	1	1	2	-
서산시	12	1	2	2	1	1	1	1	3	-
논산시	7	-	3	1	-	1	1	1	-	-
계룡시	1	-	-	-	-	-	-	1	-	-
당진시	6	1	1	1	-	1	1	1	-	-
금산군	9	4	1	-	1	1	1	1	-	-
부여군	4	-	-	-	1	1	1	1	-	-
서천군	8	1	2	-	1	1	1	1	1	-
청양군	6	1	-	-	1	1	1	1	1	-
홍성군	9	2	1	1	1	1	1	1	-	1
예산군	5	-	1	-	1	1	1	1	-	-
태안군	5	-	1	-	1	1	1	1	-	-

※자료 : 충청남도청 내부자료(2012)



▶ 외국인

- 201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는 1,143,087명으로 충청남도의 경우 56,583명으로 나타남

표 1-11. 충남 외국인 변화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918,917	982,461	932,983	985,923	1,091,531	1,143,087
충남	42,753	48,091	46,141	49,924	54,557	56,583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2016.11.25.)

- 이 가운데,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다문화가족(국제결혼, 인지, 및 귀화) 전국 기준 305,446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한국계) 98,037명, 중국인 81,010명, 베트남인 58,761명, 필리핀인 17,353명, 일본인 13,239명으로 높으며, 여성의 비중이 높음

표 1-12. 2015년 전국 광역 시도 다문화가족 현황

구분	전체	남	여
전국	305,446	51,655	253,791
서울	74,629	19,791	54,838
부산	11,720	1,368	10,352
대구	7,827	871	6,956
인천	19,397	3,554	15,843
광주	5,540	447	5,093
대전	5,750	644	5,106
울산	5,750	709	5,041
세종	741	74	667
경기	89,877	17,999	71,878
강원	6,697	421	6,276
충북	8,736	808	7,928
충남	14,019	1,373	12,646
전북	10,291	517	9,774
전남	11,316	401	10,915
경북	13,045	867	12,178
경남	16,836	1,405	15,431
제주	3,275	406	2,869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2016.11.25.)

- 
- 한편, 충남의 경우 14,019명으로 5위로 다문화가족의 상대적 비중이 높으며, 여성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 거주특성을 살펴보면, 천안, 아산에 전체 외국인의 과반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산, 공주, 금산의 경우 유학생의 비중이 높음
  - 국적별로는 아산, 홍성, 보령, 부여, 계룡의 경우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며, 예산, 청양, 금산은 베트남인이, 태안, 서천군에는 필리핀인의 비율이 높음

---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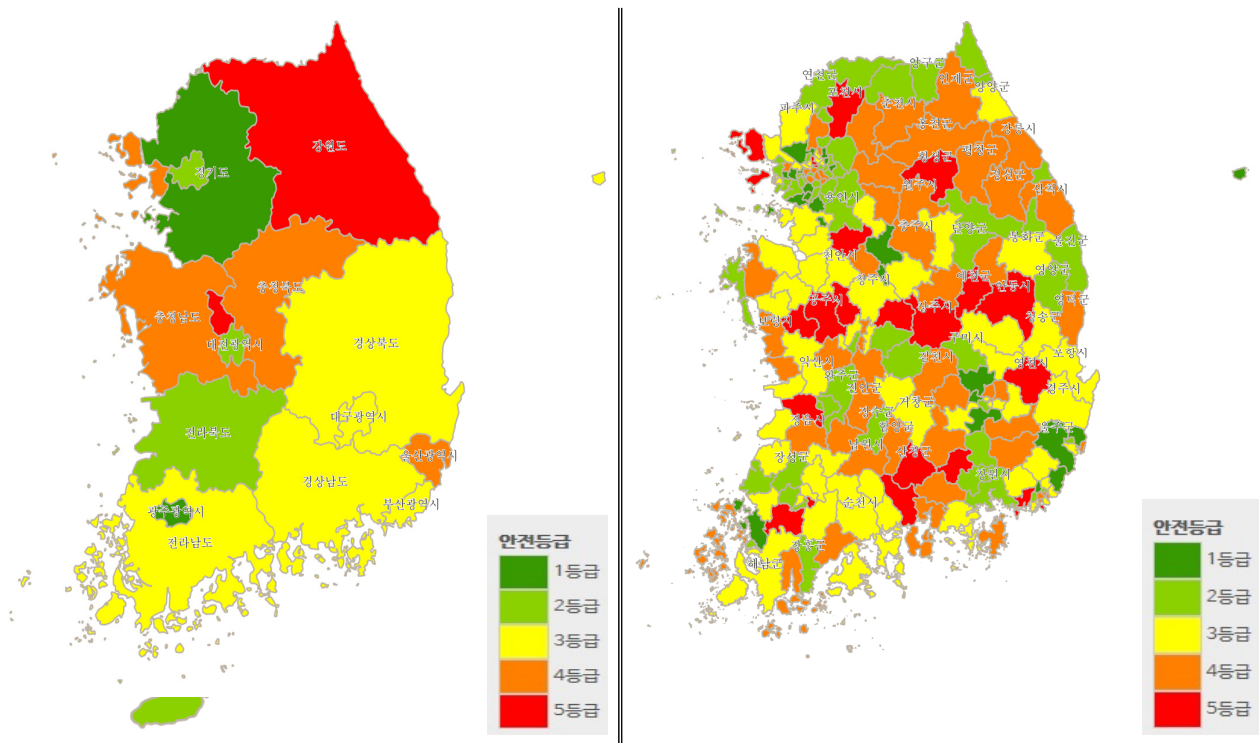
## 분야별

## 안전관리 여건

### 1) 2016 충청남도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재난관리여건

#### ▶ 화재

- 충남의 화재분야 지역안전등급은 전체 5등급 중 4등급으로 매우 낮은 편으로 충청북도, 울산광역시와 같은 그룹에 속하고 있음
- 시군별로는 태안이 2등급으로 높은 편이나 천안, 아산, 당진, 홍성, 예산, 부여가 3등급 서산, 논산, 금산, 서천, 보령이 4등급, 공주, 청양이 5등급에 속해 대부분 지역의 화재 취약성이 높음



[그림 1-7] 화재분야 지역안전지수 현황(2016년)

- 2015년 기준 충청남도의 소방대상시설물은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12,914개소 창고시설 8,124개소, 공장 7,897개소, 복합건축물 4,027개소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도 1,925개소가 위치하고 있음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홍성군이 3,120개소로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공장, 창고시설, 복합건축물은 천안시에 가장 집중되어 있음
- 아산시의 경우 공장과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다수가 위치하고 있음

표 1-13. 2015년 충청남도 시군별 소방대상시설물 현황

지역별	공 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충청남도	7,897	8,124	1,925	709	12,914	412	260
천안시	2,177	1,881	330	157	1,798	89	180
공주시	315	324	147	28	462	26	2
보령시	306	175	133	47	1,215	20	6
아산시	1,710	1,667	202	59	1,522	49	1
서산시	312	179	157	60	1,211	14	4
논산시	597	681	148	68	882	65	25
계룡시	40	12	19	8	16	3	9
당진시	617	539	158	92	295	44	4
금산군	729	865	130	20	424	26	17
부여군	193	237	111	20	336	11	-
서천군	166	568	63	34	208	16	3
청양군	97	158	48	17	462	6	-
홍성군	246	188	98	48	3,158	9	4
예산군	281	124	100	25	519	21	-
태안군	111	526	81	26	406	13	5
방송통신 시설	묘지관련 시설	관광휴게 시설	장례 식당	지하가	지하구	문화재	복합건축물
104	20	87	48	92	5	296	4,027
24	2	11	7	4	2	17	938
7	1	8	5	26	-	29	153
1	1	5	4	6	-	13	265
11	3	8	3	3	1	24	426
5	1	6	1	3	-	28	299
7	1	3	7	2	-	44	188
4	1	-	-	-	-	4	47
6	1	14	3	2	-	10	595
7	2	4	2	12	-	15	330
3	-	2	6	8	-	28	36
2	1	6	2	6	1	12	70
2	1	4	3	5	-	17	44
5	2	2	3	5	1	23	276
2	2	8	1	9	-	21	56
18	1	6	1	1	-	11	304

※자료 : 충청남도, 2016, 「2016충남통계」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6년간 충남의 화재피해는 2012년 3,0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산 피해액은 2010년도에 27,140,238원으로 가장 많았음

- 인명피해의 경우도 2010년 1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재민 수의 발생은 2011년이 25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함
- 화재피해의 경우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인명피해에 대비하여 재산피해액이 많으며, 이재민 수의 발생이 높음

표 1-14. 최근 5년간 충청남도 화재피해 현황

년도	발생건수	피해액	피해경감액	인명피해			이재민수
				소계	사망	화상	
2010	2,994	27,140,238	-	135	26	92	250
2011	3,089	17,955,682	516,597,251	124	18	117	207
2012	3,098	21,739,562	458,641,995	95	17	107	165
2013	2,784	24,508,566	720,901,422	108	13	82	210
2014	2,838	20,475,505	483,674,055	86	26	70	206
2015	3,031	17,281,830	687,070,202	62	17	45	232

※자료 : 충청남도, 2016, 「2016충남통계」

- 한편, 소방관서별로는 천안(동남, 서북)이 2015년도에 5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당진이 277건으로 많이 발생함
- 피해액에서는 천안이 가장 피해액이 큰 반면, 당진, 공주의 경우도 피해액이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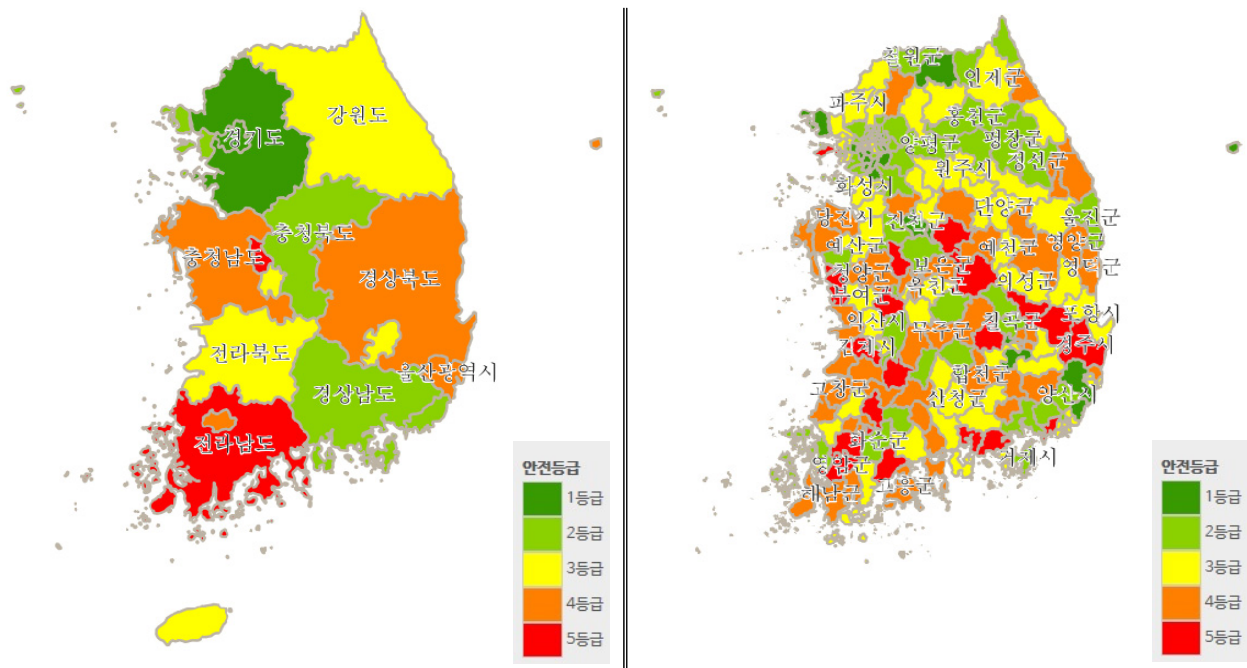
표 1-15. 2015년 충청남도 시군별 화재피해 현황

소방관서	발생건수	피해액	피해경감액	인명피해			이재민수
				소계	사망	화상	
총계	3,031	17,281,830	687,070,202	62	17	45	232
천안동남소방서	263	1,719,382	135,646,702	8	1	7	8
천안서북소방서	306	3,526,704	76,646,125	10	2	8	13
공주소방서	231	1,353,920	17,212,540	4	4	0	32
보령소방서	207	952,393	65,953,324	3	0	3	4
아산소방서	263	1,399,042	82,900,129	5	2	3	24
서산소방서	259	1,048,080	42,654,530	4	1	3	24
논산소방서	223	918,869	31,037,230	2	1	1	23
당진소방서	277	1,807,204	64,922,347	3	0	3	14
금산소방서	116	323,948	2,471,737	3	2	1	14
부여소방서	175	799,484	8,373,594	0	0	0	12
서천소방서	145	614,777	80,632,530	1	1	0	5
홍성소방서	96	341,190	2,884,680	2	1	1	10
예산소방서	160	951,649	50,941,642	10	1	9	10

※자료 : 충청남도, 2016, 「2016충남통계」

## ▶ 교통

- 충남의 교통안전등급은 4등급으로 광역시도 중 광주, 울산, 경북과 같은 등급에 속하고 있으며, 전남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시도 중 하위 등급에 속해 있음
- 시군별로는 천안, 홍성이 2등급이나, 아산, 예산, 금산, 부여가 3등급, 당진, 서산, 태안, 청양, 공주가 4등급, 보령은 5등급에 속하는 등 교통안전 취약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그림 1-8] 교통안전분야 지역안전지수 현황(2016년)

- 최근 5년간 충남의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전국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충남의 교통안전 분야가 낮은 등급을 보이는 원인으로는 경부-서해 고속도로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교통물류 중심으로서 교통량이 높은 데 따른 점을 짐작할 수 있음

표 1-16. 최근 5년간 충청남도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발생건수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국	10.47	9.72	11.11	11.05	10.13
서울특별시	11.62	11.14	13.54	13.63	12.99
부산광역시	11.29	9.43	10.45	10.16	9.41
대구광역시	12.43	11.29	13.54	12.86	11.58
인천광역시	8.31	7.00	7.09	6.44	5.94
광주광역시	13.94	12.76	13.90	12.86	11.61
대전광역시	8.82	8.45	9.50	10.9	11.63
울산광역시	9.02	8.77	10.27	10.22	8.35
세종특별자치시	6.51	6.74	7.09	5.75	4.72
경기도	9.28	8.70	10.25	10.77	9.88
강원도	12.84	11.89	12.90	12.84	12.24
충청북도	11.62	11.12	12.77	12.79	12.35
충청남도	8.50	7.80	9.04	9.72	8.83
전라북도	11.87	10.81	11.85	10.57	9.03
전라남도	11.55	10.80	12.00	11.61	9.98
경상북도	11.57	10.88	12.22	12.05	10.81
경상남도	8.59	8.11	8.88	8.74	7.7
제주특별자치도	11.43	11.12	11.67	10.68	9.49

※자료 : KOSIS e-지방지표

- 시군별로는 공주, 아산, 서천이 2016년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계룡시와 부여군은 다른 시군에 비하여 교통사고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아산 등의 교통사고발생건수 특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충남의 교통중심에 위치하는 지역적 특성이 교통안전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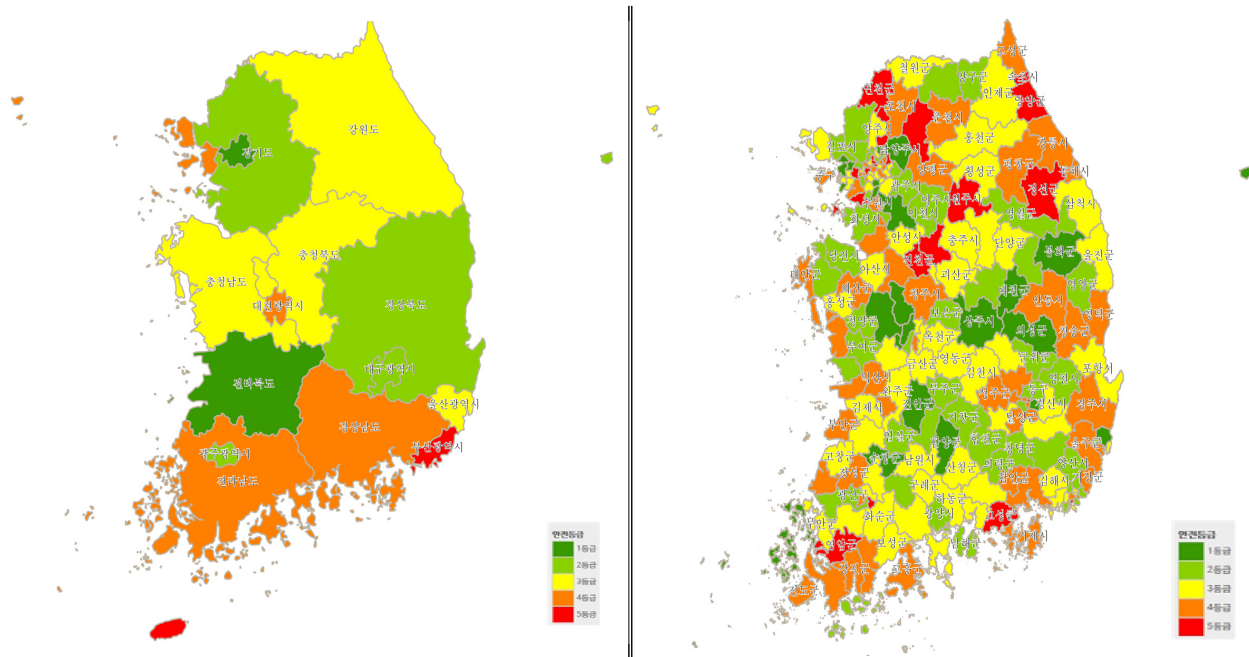
표 1-17. 최근 5년간 충남 시군별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발생건수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천안시	9.08	7.24	8.89	9.29	8.52
공주시	7.87	7.73	8.74	9.16	10.68
보령시	11.63	10.33	10.34	12.17	10.27
아산시	4.45	3.94	5.35	8.36	8.53
서산시	8.18	8.04	9.61	8.58	8.01
논산시	10.39	9.42	10.72	10.21	9.73
계룡시	4.81	3.96	4.12	4.39	4.07
당진시	7.84	10.11	9.03	10.61	8.89
금산군	9.46	8.13	9.45	8.47	7.8
부여군	7.58	6.89	9.33	10.01	6.37
서천군	11.82	10.83	13.37	13.43	14.43
청양군	13.68	11.68	13.02	15.02	11.44
홍성군	7.20	10.30	11.09	10.85	8.45
예산군	9.77	9.24	11.19	11.49	7.59
태안군	8.63	9.36	11.97	10.86	10.65

※자료 : KOSIS e-지방지표

## ▶ 자연재해

- 지역안전도 진단결과에 기초한 자연재해 분야 지역안전등급을 살펴보면, 충남은 3등급으로 1등급의 전북, 서울 2등급의 대구, 경북, 경기를 제외한 중위 등급에 속하고 있음
- 시군별로는 공주, 예산이 1등급, 아산, 서천, 논산, 금산이 2등급, 당진, 홍성, 부여가 3등급에 속하고 있음



[그림 1-9] 자연재해 분야 지역안전지수 현황(2016년)

- 지역안전도 진단결과는 위험환경, 방재성능, 위험관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가-마의 5개 등급(세부 10등급)으로 분류하여, 최하위 15%그룹과 신청 자치단체에 대해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68.3%가 중간그룹인 다와 마 등급에 속하고 있음
- 2015년 진단결과 계룡, 예산, 서천, 서산 청양이 10등급으로 최하위에 속하였으나, 2016년도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에서는 계룡시가 3등급, 아산시가 3등급, 예산군이 4등급으로 큰폭의 상승을 보였으며, 서산시와 보령시, 청양군은 각각 9등급과 10등급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비교적 안전한 등급으로 평가 받는 3등급과 4등급은 공주시, 계룡시, 아산시, 예산군인 것으로 나타남
- 위험환경 수준은 계룡이 0.251로 지역에 잠재된 환경적 위험요인이 낮은 반면, 서천군은 0.507, 부여군은 0.491로 위험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 관리능력은 계룡시 0.894, 공주시 0.887, 아산시 0.876 등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나 서천의 경우 0.638로 다른 시군과 대비하여 매우 취약함

○ 방재성능은 천안이 0.925로 가장 높은 반면, 예산은 0.240, 계룡은 0.280으로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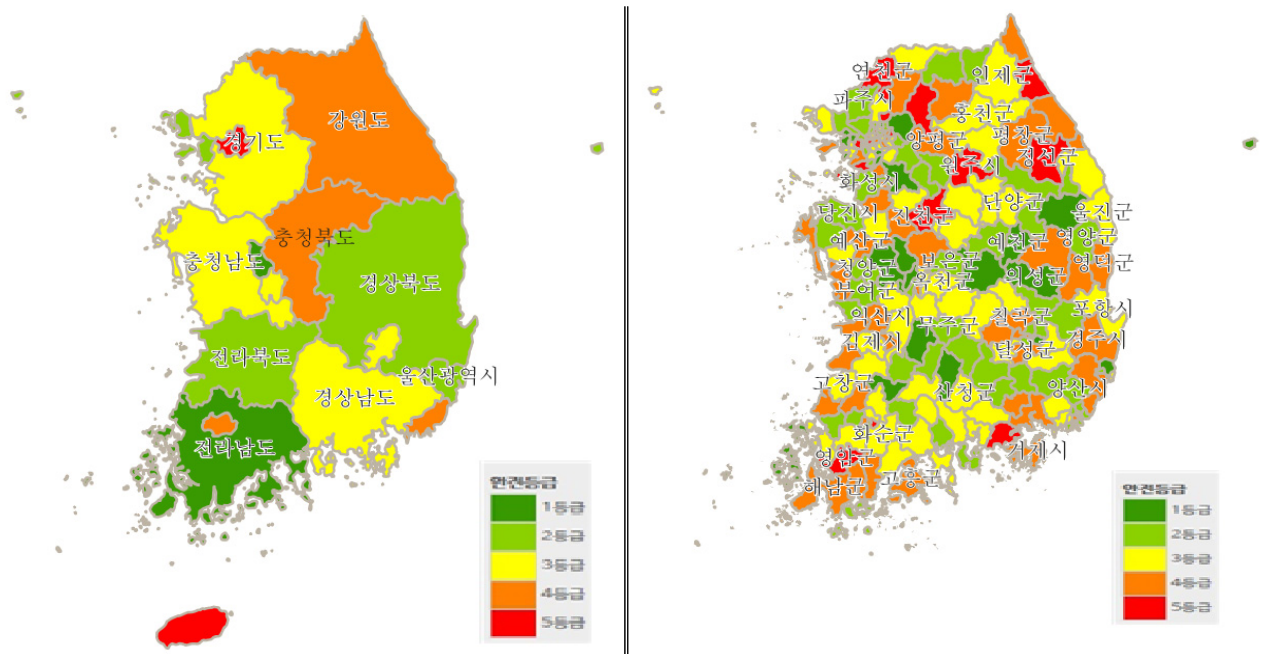
표 1-18.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구분	위험환경	관리능력	방재성능	안전도	등급
공주시	0.365	0.825	0.770	0.465	3
계룡시	0.251	0.896	0.690	0.484	3
아산시	0.347	0.869	0.667	0.493	3
예산군	0.409	0.865	0.653	0.529	4
논산시	0.460	0.677	0.910	0.559	5
금산군	0.463	0.657	0.864	0.569	5
서천군	0.507	0.904	0.636	0.631	6
부여군	0.491	0.553	0.820	0.688	7
당진시	0.453	0.761	0.536	0.691	7
태안군	0.467	0.697	0.583	0.696	7
천안시	0.348	0.622	0.460	0.716	8
홍성군	0.403	0.680	0.458	0.726	8
서산시	0.416	0.863	0.373	0.765	9
보령시	0.481	0.708	0.407	0.773	9
청양군	0.450	0.729	0.269	0.930	10

※자료 :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내부자료

## ▶ 범죄

- 충남은 범죄안전등급은 대구, 대전, 경기, 경남과 함께 3등급에 속하고 있으며, 부산, 강원, 충북의 4등급, 서울의 5등급보다는 양호한 중위 그룹에 속하고 있음
- 시군별로는 계룡, 공주가 1등급으로 범죄안전등급이 가장 높으며, 당진, 서산, 청양, 부여, 서천이 2등급, 홍성 아산, 논산이 3등급, 천안, 보령, 예산, 태안이 4등급에 속하고 있음



[그림 1-10] 범죄분야 지역안전지수 현황(2016년)

- 충남의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범죄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범죄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반면, 풍속범은 감소추세에 있어, 강력범, 폭력범 등 직접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범죄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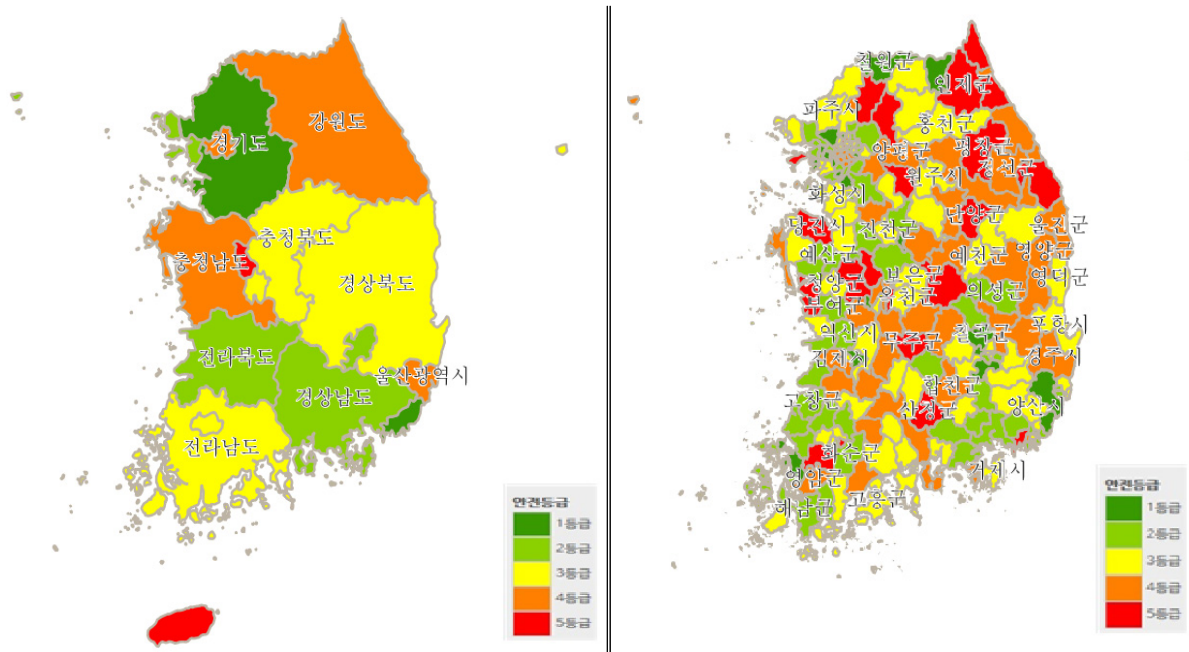
표 1-19. 최근 5년간 충남의 범죄발생 현황

연도	계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풍속범	기타 형사범
2011	63,052	1,018	12,369	8,897	10,319	507	2,155
2012	67,551	1,043	14,035	9,480	11,282	462	2,544
2013	70,573	1,110	13,152	9,384	13,110	382	2,841
2014	71,135	1,131	11,976	9,726	12,243	420	3,189
2015	73,409	1,005	11,224	10,044	12,656	838	2,275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2016.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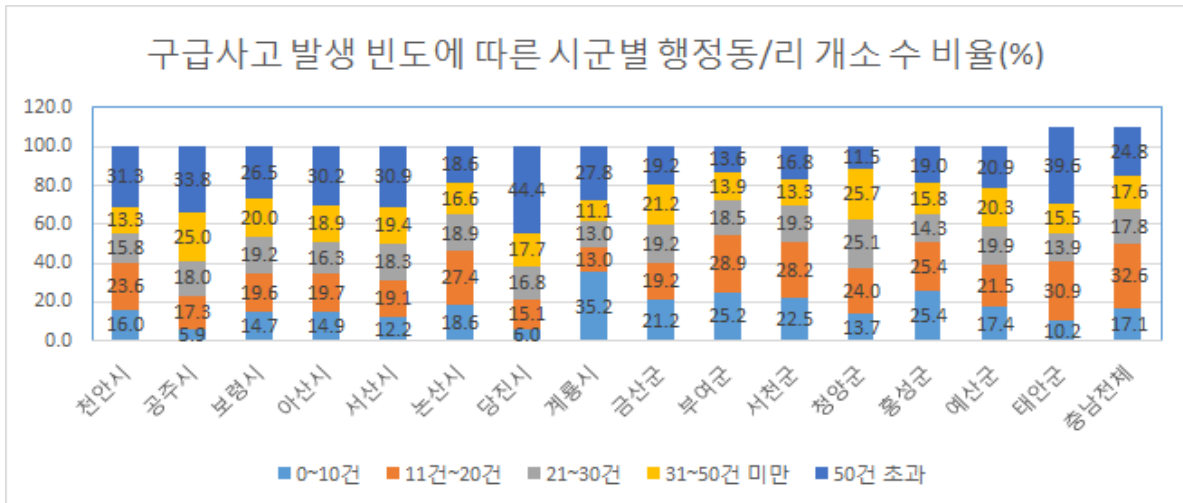
## ▶ 안전사고

- 충남의 안전사고 안전등급은 4등급으로 가까운 대전(3등급), 충북(3등급)에 대비하여 낮은 등급이며, 경기(1등급), 전북(2등급) 등 보다 낮으므로 전국에서 낮은 등급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는 계룡이 1등급, 천안, 홍성, 부여, 예산 2등급, 서산, 아산, 서천, 청양이 3등급, 논산, 태안 4등급, 공주, 보령, 당진이 5등급임



[그림 1-11] 안전사고 분야 지역안전지수 현황(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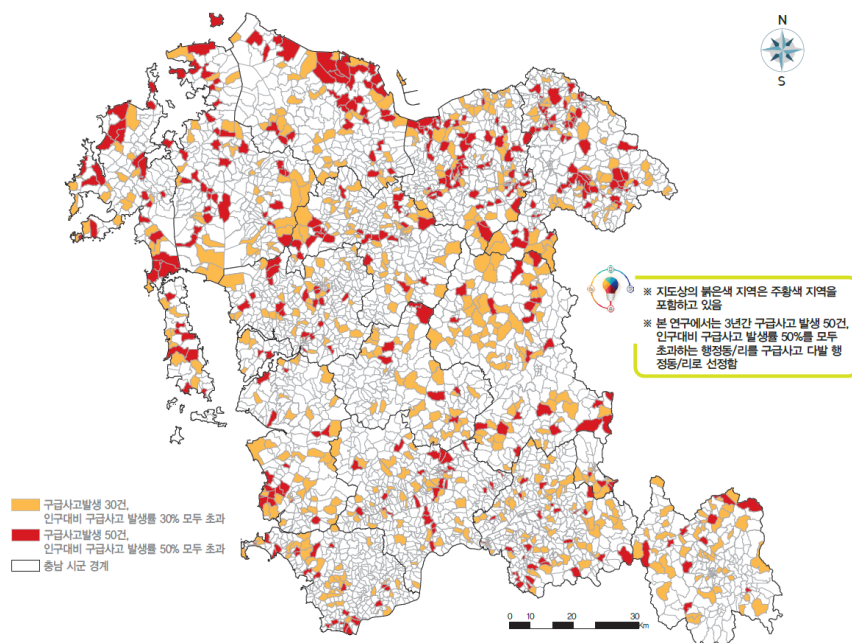
- 충남의 최근 년(2012-2015) 총 구급사고 중 정상 출동건은 279,409건으로 이 가운데 200,097건 (71.6%)의 구급사고가 시 소재지에 집중되어 있음
- 시군별로는 천안시(21.2%), 아산시(12.3%), 서산시(8.0%)에서 발생 빈도가 높으며, 구급사고 발생은 농촌지역이 66.2%로 도시지역보다 많이 발생함
- 사고의 종류별로는 질병사고(39.6%), 사고부상(20.8), 교통사고(11.9%)로 나타남



※자료 : 충남연구원, 2016, 「충남 정책지도 2016-3호(통권 5호)」

[그림 1-12] 최근 3년간 충남 시군별 구급사고 발생빈도 현황

- 시군별 행정동/리 별로는 인구대비 구급사고 발생률이 30%를 초과하는 지역이 전체 4,417개소 중 974개소(22.1%)이며, 인구대비 50%이상 발생률 지역도 387개소(8.8%)에 이르고 있음
- 시군별로는 태안(16.0%), 당진(14.2%), 아산시(12.7%) 소재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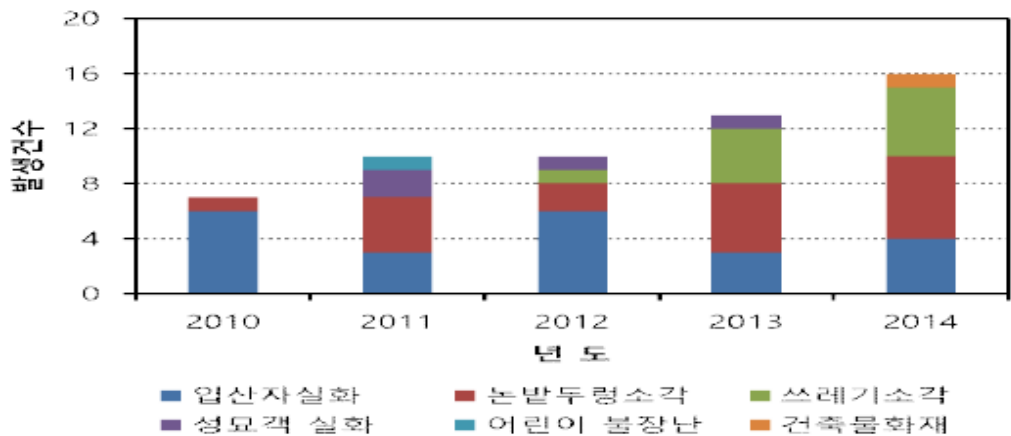
※자료 : 충남연구원, 2016, 「충남정책지도 2016-3호(통권5호)」

[그림 1-13] 최근 3년간 충남 시군별 구급사고 다발지역 현황

- 구급사고의 종류별 발생 중 사고부상은 청양(25.7%)이 가장 많으며, 질병사고는 청양(44.1%), 교통사고는 당진(17.2%)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 청양군의 안전사고 관리대책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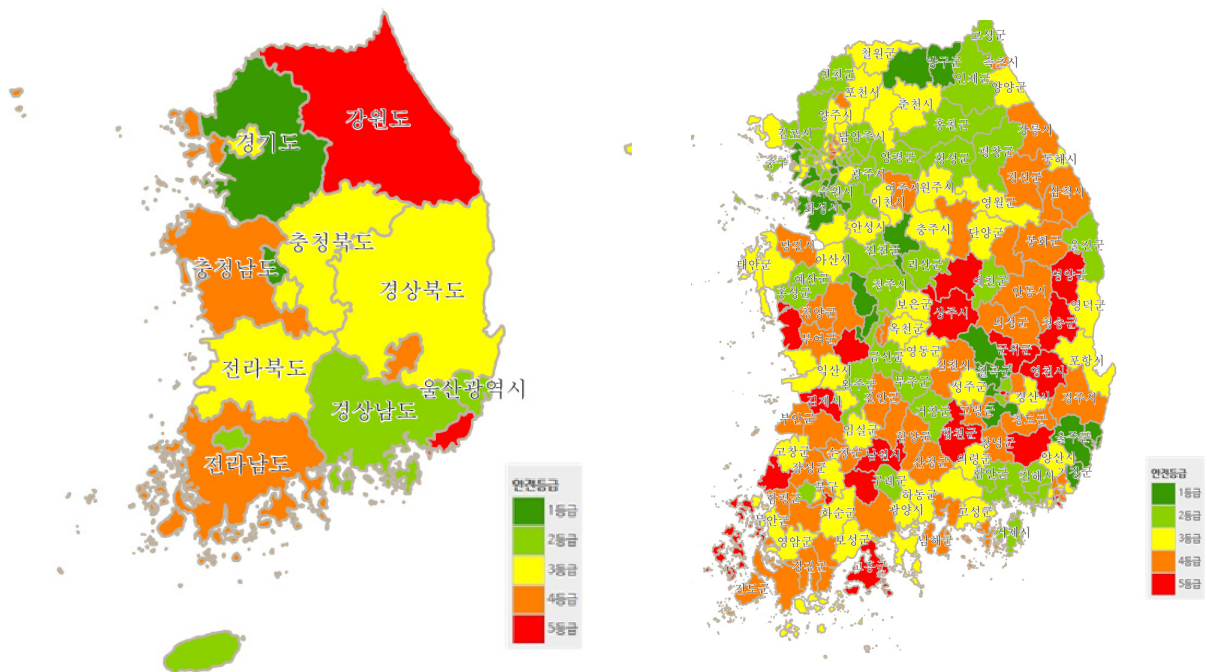
○ 또한 충남의 경우, 2015년 기준 산불발생건수는 23건으로 최근 10년 평균(05-14) 16.5건의 약 70%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산불관리에 대한 관심이 함께 요구됨



※자료 : 충청남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2016, 「충남기후정보브리핑 10호」  
 [그림 1-14] 충남의 산불 발생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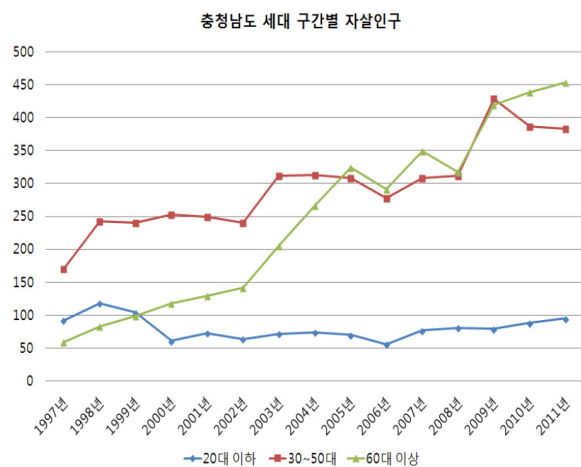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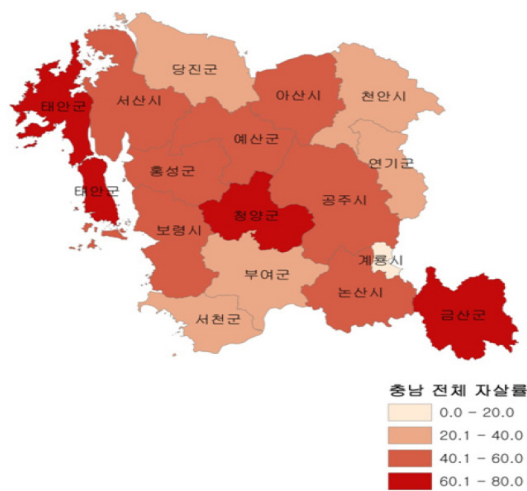
### ▶ 자살

- 충남은 강원, 부산의 5등급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 대구와 함께 자살 안전등급이 4등급의 위험지역으로 발표됨
- 시군별로는 천안, 계룡, 홍성이 2등급, 아산, 예산, 태안이 3등급, 당진, 공주가 4등급 서산, 청양, 보령, 부여, 논산이 5등급으로 전반적으로 자살 위험이 높은 지역에 속하고 있음



[그림 1-15] 자살 분야 지역안전지수 현황(2016년)

- 충남의 2011년 기준 발표에 따르면, 태안, 청양, 금산의 자살율이 타 시군에 대비하여 높은 가운데, 세대별로는 60세이상 고령인구의 자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대 이하의 경우도 2000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30-50대 자살인구는 2008년을 분기점으로 2009년에 급증하였다가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속하고 있어 전 연령대에서 자살에 대한 방안 대책 마련에 관심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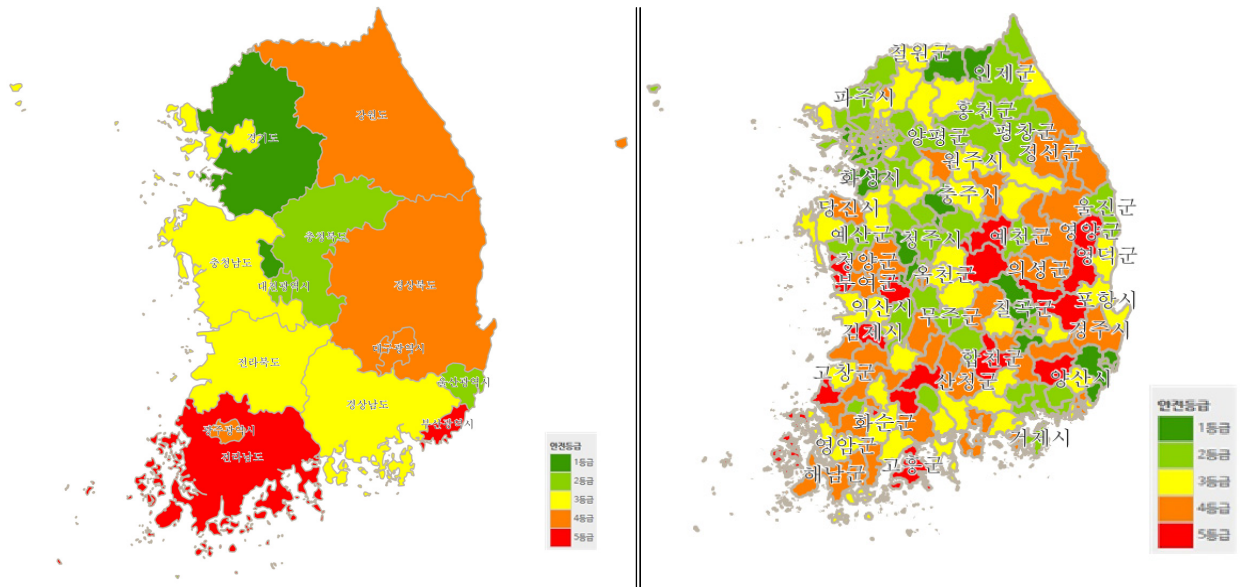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 2014, 「충남리포트 제113호」

[그림 1-16] 충남의 지역별, 세대별 자살인구 현황(2011년 기준)



## ▶ 감염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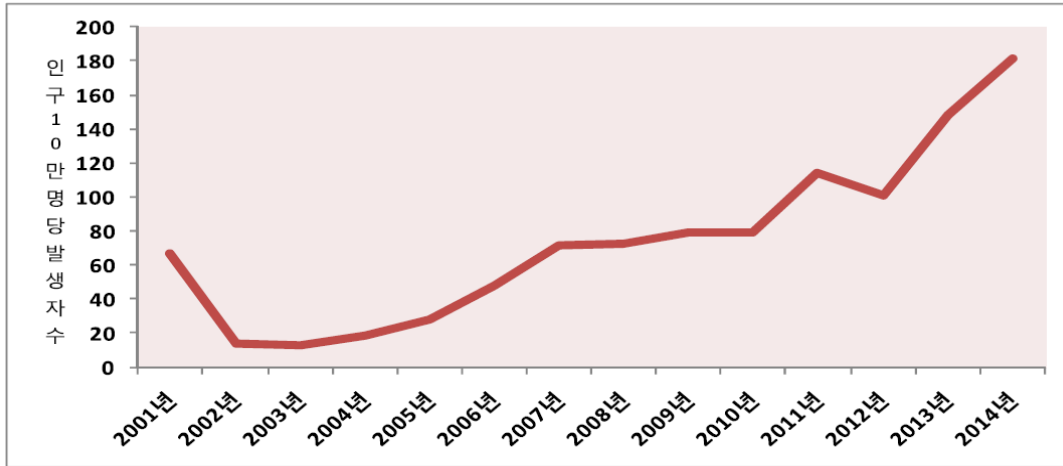
- 충남의 감염병 안전등급은 3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종, 전남의 5등급, 경북, 대구, 부산의 4등급 이외의 중위 그룹에 속하고 있음
- 시군별로는 계룡이 1등급, 천안, 예산, 홍성 2등급이나, 보령, 논산이 4등급에 속하고 있어 지역간 차이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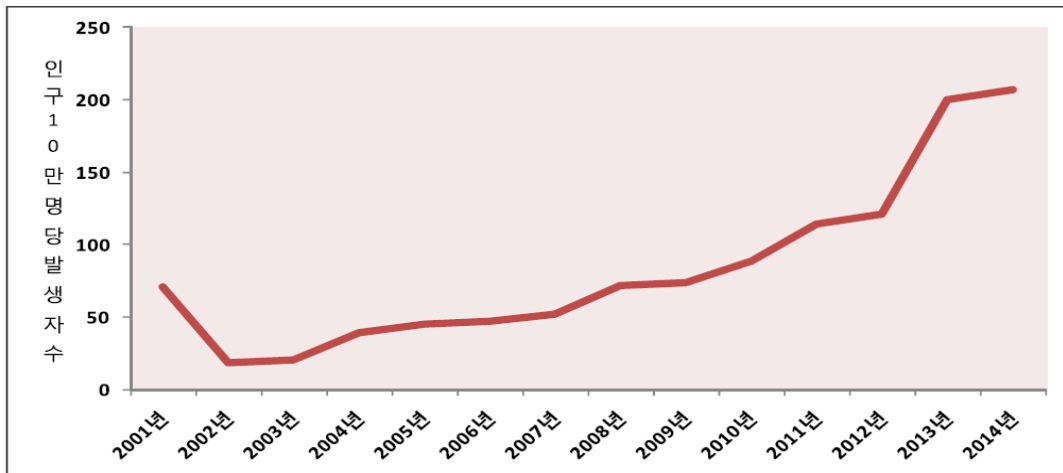
[그림 1-17] 감염병 지역안전지수 현황(2016년)

- 2000년 이후 전국 법정감염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충남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해당 기간 시군별로 누적 발생건수는 태안, 보령, 예산, 아산의 순으로 높으며, 천안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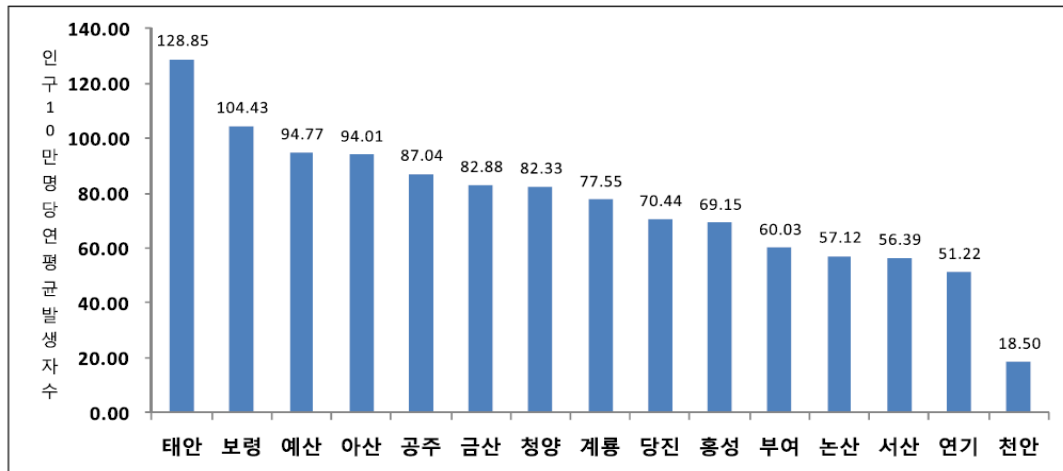
[전국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



[충남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



[충남 시군별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



자료 : 감염병웹통계시스템 자료 분석 (2001년~2014년) \*\*통계 수치의 시계열성 누적으로 인해 연기군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충남연구원, 2015, 「충남리포트 제17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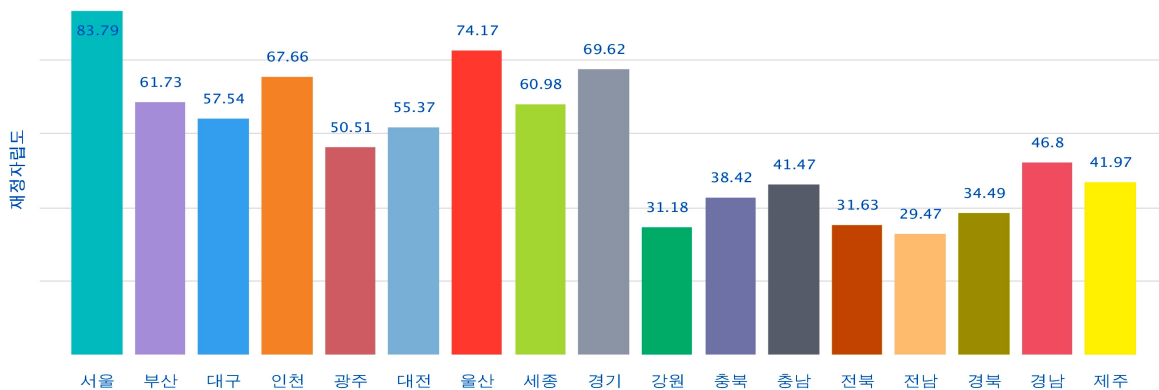
[그림 1-18] 충남의 지역별, 세대별 자살인구 현황(2011년 기준)

## 2) 행재정적 관리 여건

### ▶ 재정자립도

- 2015년 기준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는 41.47%로 전남, 강원, 전북, 경북, 충북에 이어 광역 시도 가운데 하위 6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지역별로는 계룡시가 자체수입 대비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으며, 천안, 아산이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반면, 서천, 예산, 부여, 논산, 청양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구분(백만원, %)	자체수입 (A)	자치단체예산규모 (B)	재정자립도 (A/Bx100)
본청	1,464,040	4,765,425	30.72
천안시	529,110	1,179,945	44.84
공주시	114,638	548,000	20.92
보령시	127,074	528,509	24.04
아산시	378,089	849,900	44.49
서산시	196,232	635,056	30.90
논산시	98,549	529,382	18.62
계룡시	40,760	144,136	28.28
당진시	217,799	646,482	33.69
금산군	71,232	320,969	22.19
부여군	89,308	494,300	18.07
서천군	65,676	390,646	16.81
청양군	59,113	303,804	19.46
홍성군	107,757	464,615	23.19
예산군	83,409	469,646	17.76
태안군	101,596	387,679	26.21



※자료 : 지방재정365 홈페이지(2016.11.25.)

[그림 1-19] 2015년 충남의 재정자립도 현황

## ▶ 재난관리기금 적립

-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및 재난관리 활동에 활용 가능한 예산으로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률은 전국 수준을 고려할 때, 충남의 경우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시군별로는 2014년 기준 천안시의 재난관리기금 적립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문제점을 보임

표 1-20.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억원, %)

지방자치단체	적립 기준액 (누계)	적립액 (누계)	적립률				사용액				기금잔액
			12년	13년	14년	누계	12년	13년	14년	누계	
소계	1,652	1,608	105	101	96	97	99	101	84	1,047	790
본청	747	747	100	100	100	100	27	31	38	457	412
천안시	260	195	41	86	68	75	9	4	3	116	108
공주시	46	52	100	154	111	113	7	6	4	44	12
보령시	44	44	100	100	95	101	4	2	1	30	18
아산시	155	157	228	100	100	101	20	14	12	92	81
서산시	84	84	100	100	100	100	3	5	1	35	63
논산시	46	46	100	100	100	100	1	6	2	33	19
충남 당진시	78	80	106	100	100	102	10	10	10	73	15
계룡시	9	9	100	100	100	100	-	1	-	6	3
금산군	24	28	100	209	155	118	4	3	1	19	12
부여군	29	30	100	100	100	104	2	4	2	26	6
서천군	24	24	100	100	100	100	2	3	2	22	5
청양군	12	12	100	100	100	100	-	4	2	8	7
홍성군	33	37	100	100	100	112	2	2	2	31	9
예산군	33	35	100	100	100	107	3	3	4	29	13
태안군	28	28	100	100	100	100	5	3	-	26	7

※자료 : 감사원, 2014, 「2014 재난관리기금 처분결과」

## ▶ 소방인력

- 충남의 소방인력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현재 2,090명이며, 현장 대응을 고려할 최하위 소방사 인력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본청 및 기관 소속을 제외한 소방관서별로는 당진 소방서의 인력이 가장 많은 반면, 예산 소방서의 인력이 가장 적은 실정임

표 1-21. 2015년 충청남도 시군별 화재피해 현황

연도별 소방서별	총계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2011	2,061	-	1	17	53	122	121	305	649	793
2012	1,989	-	1	17	51	114	119	296	623	767
2013	2,090	1	-	18	55	146	133	312	654	771
2014	2,145	1(1)	-	20	61	163	142	318	672	765
2015	2,243(2)	1(1)		20(1)	63	177	162	333	694	791
감사위원회	1	-	-	-	-	1	-	-	-	-
소방본부	131(1)	1(1)	-	4	21	24	26	20	34	-
의회	1	-	-	-	-	1	-	-	-	-
충청소방학교	19(1)	-	-	1(1)	3	2	4	4	3	1
천안동남소방서	143	-	-	1	3	10	9	24	45	51
천안서북소방서	170	-	-	1	3	11	14	27	54	60
공주소방서	162	-	-	1	3	10	8	27	52	61
보령소방서	144	-	-	1	3	9	11	25	44	51
아산소방서	180	-	-	1	3	11	10	25	55	75
서산소방서	148	-	-	1	3	11	10	22	44	57
논산소방서	187	-	-	1	3	11	10	28	67	67
당진소방서	179	-	-	1	3	11	9	25	62	68
금산소방서	105	-	-	1	2	9	7	11	39	36
부여소방서	122	-	-	1	2	9	7	16	27	60
서천소방서	123	-	-	1	2	10	7	18	40	45
홍성소방서	70	-	-	1	2	9	7	12	16	23
예산소방서	143	-	-	1	3	10	9	19	45	56

※자료 : 충청남도, 2015, 「2015충남통계」

- 또한 2010년 이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를 고려하더라도 충남의 소방인력은 전국 수준보다 높은 상태임

표 1-22. 최근 5년간 충남의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1,421.81	1,387.48	1,341.03	1,285.67	1,341.03
충남	1,073.18	1,077.99	1,040.46	963.68	1,040.46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2016.11.25.)

- 119안전센터의 경우도 1개소당 담당주민수는 29,262.66명으로 강원, 제주에 이어 상위 3위 수준으로 높은 편임

표 1-23. 최근 5년간 충남의 119안전센터 1개소당 주민수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54,552.99	54,258.01	54,814.00	53,134.49	52,527.36
서울특별시	89,909.46	88,654.94	88,205.61	87,854.20	86,854.20
부산광역시	66,999.30	66,763.85	65,326.57	65,174.09	65,069.94
대구광역시	55,717.13	55,680.98	54,382.35	54,201.39	52,932.53
인천광역시	60,897.26	61,825.67	62,603.96	63,100.17	62,251.38
광주광역시	66,521.09	66,782.55	64,039.57	64,168.87	64,008.65
대전광역시	60,624.12	60,983.32	58,954.27	58,915.73	58,414.42
울산광역시	51,613.36	57,362.80	55,070.48	55,541.76	55,882.57
세종특별자치시	-	28,279.25	24,430.60	31,225.00	35,147.33
경기도	74,145.43	75,113.66	75,522.41	75,814.91	76,825.8
강원도	24,781.42	24,816.61	23,727.12	23,400.64	23,477.38
충청북도	43,413.97	41,200.74	41,387.68	40,485.46	40,614.15
충청남도	33,891.68	32,722.21	31,994.23	31,246.56	29,262.66
전라북도	38,245.53	38,231.45	38,223.78	38,195.10	38,195.10
전라남도	36,119.60	36,030.53	35,984.38	34,650.55	34,089.21
경상북도	34,167.03	34,156.37	32,136.19	31,404.58	30,713.93
경상남도	41,359.56	39,515.64	54,652.79	39,884.01	39,124.44
제주특별자치도	27,436.00	27,795.86	28,276.48	27,606.64	28,381.59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2016.11.25.)

- 한편, 화재예방교육을 받은 주민수도 2014년 급증하여, 전국 상위에 위치하는 등 화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 구조구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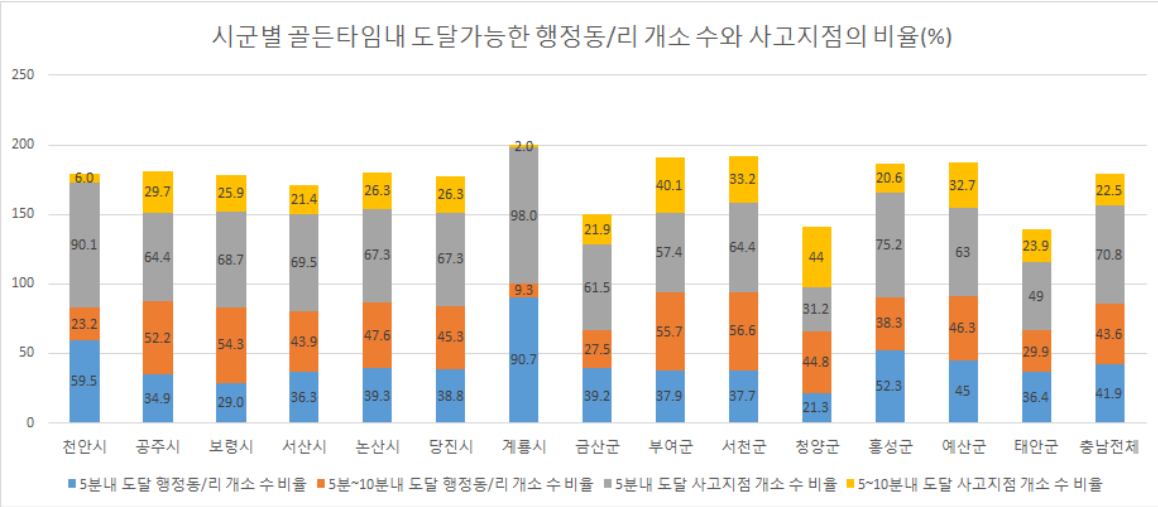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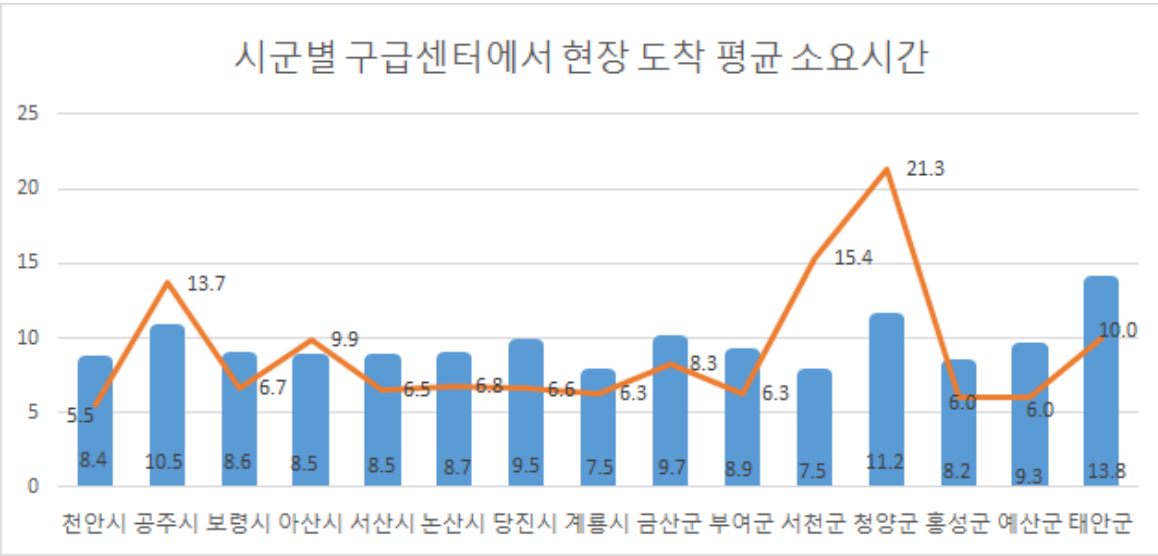
- 충남의 구조구급 환경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구조구급대원 1인당 주민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강원, 전남, 전북에 이어 상위에 위치하고 있음

표 1-24. 최근 5년간 충남의 구조구급대원 1인당 주민수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4,955.97	4,677.59	4,928.35	4,377.27	4,191.76
서울특별시	6,057.73	6,054.23	8,376.26	5,511.86	5,184.78
부산광역시	6,207.98	5,763.00	5,938.78	5,865.67	4,813.39
대구광역시	5,927.35	5,220.09	5,461.98	5,016.63	4,830.74
인천광역시	5,922.36	5,815.91	5,423.32	5,110.23	5,001.39
광주광역시	5,283.26	5,502.68	5,375.58	5,020.01	4,811.11
대전광역시	5,491.32	5,523.85	5,614.69	5,590.54	5,062.58
울산광역시	5,677.47	4,923.85	4,963.43	4,434.89	4,267.4
세종특별자치시	-	11,311.70	2,840.77	3,717.26	3,834.25
경기도	8,198.77	7,474.23	7,401.47	6,793.75	6,776.3
강원도	2,062.35	2,056.99	2,115.59	1,982.60	1,846.85
충청북도	3,034.76	3,028.29	3,089.85	2,819.52	2,803.45
충청남도	3,484.72	3,553.02	3,345.80	3,268.26	3,091.74
전라북도	3,681.79	3,807.60	2,931.09	3,093.49	2,782.31
전라남도	2,770.39	2,467.21	2,526.06	2,610.66	2,518.46
경상북도	2,899.24	2,898.34	3,142.54	2,761.55	2,616.48
경상남도	4,983.08	3,397.46	4,204.06	3,209.06	3,374.83
제주특별자치도	2,743.60	2,766.41	2,814.25	2,905.96	2,973.31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2016.11.25.)

- 한편, 충남의 104개소 구급센터로부터 도출한 충남연구원의 골든타임 분석결과를 보면, 충남의 전체 행정동/리 기준으로 전체 4,417개 지역에 대해 3,777개 지역(85.5%)가 도착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인구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구급센터에서 10분 이내 도착거리에 위치하는 행정동/리 3,777개 지역 내에 전체 인구의 96.6%가 거주하고 있음
- 특히 시군별로는 계룡, 아산, 부여군 지역의 119안전센터가 골든타임 내 사고현장 도착가능성이 높게 배치되어 있음



※자료 : 충남연구원, 2016, 「충남 정책지도 2016-3호(통권 5호)」

[그림 1-20] 2015년 충남의 시군별 골든타임 내 행정구역 및 현장 도착 평균시간



## ▶ 경찰인력

- 충남의 경찰인력 중 경찰청 소속 경찰인력의 경우 2011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왔으며, 해양경찰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 경찰청 소속의 경우 계룡은 논산에서, 태안은 서산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해양경찰의 경우 보령과 태안에 거점을 두고 있음

표 1-26. 2011-2015년 충남의 경찰 인력 현황

연도별 소방서별	총계	경찰청				해양경찰			
		계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계	지방해양 경찰청	해양경찰서	파출소 출장소 등
2011	4,303	3,899		1,597	1,762	404	-	126	278
2012	4,187	3,793	582	1,580	1,630	394	-	115	279
2013	...	3,994	633	1,617	1,744	...	...	...	...
2014	4,492	3,910	696	1,673	1,541	582	-	165	417
2015	4,126	3,596	-	1,776	1,820	530	-	172	358
천안시	830	830	-	420	410	-	-	-	-
공주시	239	239	-	118	121	-	-	-	-
보령시	484	252	-	129	123	232	-	88	144
아산시	371	371	-	179	192	-	-	-	-
서산시	399	399	-	199	200	-	-	-	-
논산시	254	254	-	121	133	-	-	-	-
당진시	-	-	-	-	-	-	-	-	-
계룡시	250	250	-	121	129	-	-	-	-
금산군	141	141	-	73	68	-	-	-	-
부여군	180	180	-	80	100	-	-	-	-
서천군	167	167	-	79	88		-	-	-
청양군	130	130	-	64	66	-	-	-	
홍성군	204	204	-	107	97	-	-	-	-
예산군	179	179	-	86	93	-		-	-
태안군	298	-	-	-	-	298	-	84	214

※자료 : 충청남도, 2015, 「2015충남통계」

▶ 의료기관 현황

- 충남은 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병원 수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의료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 환자 입원 등에 관련된 병상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 병원의 병상수 증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시군별로는 천안시, 아산시에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있으며, 청양, 당진, 태안 등의 경우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

표 1-27. 충남의 의료환경 현황

연도별 소방서별	합계		종합병원		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병원수	병상수			
2011	2,038	23,262	12	4,410	40	3,850	15	158	239
2012	2,058	24,927	12	4,672	43	4,669	13	151	233
2013	2,089	24,447	12	4,796	37	3,062	14	151	233
2014	2,110	27,687	12	4,703	40	3,423	14	151	233
2015	2,131	28,720	13	4,978	44	3,805	14	151	233
천안시	672	7,754	4	2,261	15	1,323	2	12	18
공주시	132	3,713	1	229	1	86	1	10	18
보령시	68	1,222	1	200	3	356	1	10	17
아산시	275	3,471	1	209	6	487	1	11	16
서산시	146	1,102	2	495	-	-	1	10	15
논산시	158	3,416	1	641	3	298	1	13	26
당진시	45	182	-	-	2	139	1	2	-
계룡시	165	1,191	1	288	4	213	1	11	19
금산군	68	804	-	-	1	118	1	9	8
부여군	70	1,225	-	-	2	134	1	15	20
서천군	67	1,232	-	-	1	89	1	10	17
청양군	25	220	-	-	2	128	-	9	13
홍성군	94	1,746	1	480	1	42	1	11	14
예산군	94	981	1	175	3	392	1	11	16
태안군	52	461	-	-	-	-	-	7	16

※자료 : 충청남도, 2015, 「2015충남통계」

- 2015년 기준 충남의 전체 의료인력은 21,604명으로 의사는 3,215명을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천안, 아산, 논산, 공주의 순으로 의료인력이 많으며, 청양, 계룡의 의료인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표 1-28. 충남의 의료인력 현황

구분	총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전체의료인력	21,604	7,926	1,536	960	2,307	1,383	1,712	272	1,395	513	611	577	207	1,064	679	462
의사상근	3,215	1,262	180	110	328	172	308	62	255	56	80	70	33	123	85	91

※자료 : 충청남도, 2015, 「2016충남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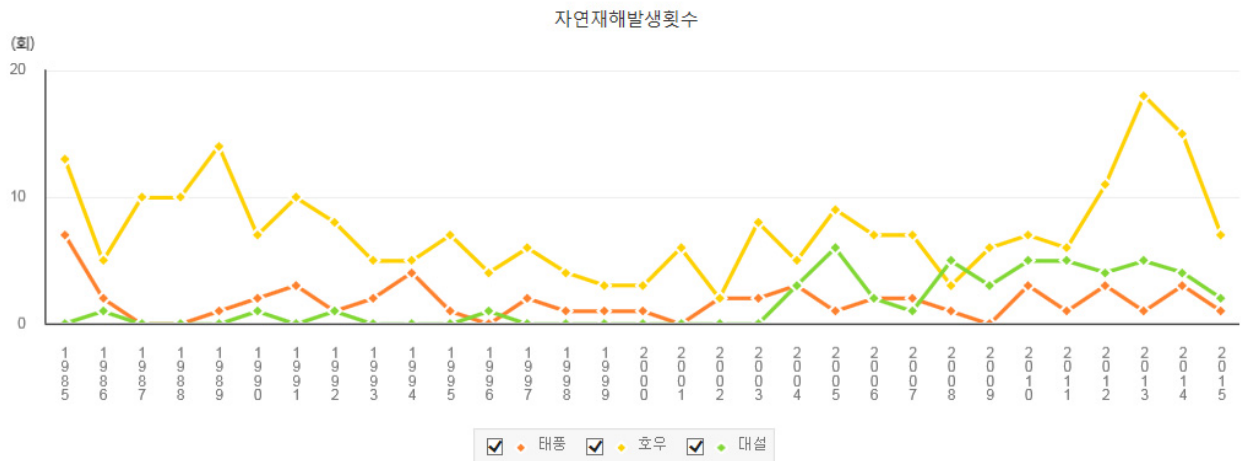
---

# 04

## 자연재난 피해현황

### 1) 국내 자연재난 발생 추이

- 최근 국내의 주요 자연재난을 태풍, 호우, 대설별로 살펴보면, 태풍의 발생 빈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으나, 대설이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호우는 2011년 이후 급증하여 2013년에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남



※자료 : 국민안전, 2015, 「2015재해연보」

[그림 1-21] 최근 10년간 국내 주요 자연재난 발생 현황

- 반면, 재난 발생 시 피해액 및 복구액 등을 살펴보면, 시설 피해액의 경우 공공시설의 피해액이 가장 크며, 농경지, 건물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복구액의 경우는 국고와 지방비 부담이 큰 가운데 자력복구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큼
-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유형별 피해액을 살펴보면, 호우 피해가 평균 3조 5,787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태풍의 경우 1조 5,408억원으로 2012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음

표 1-29.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복구액

구분	국고	지방비	자력	계
2006	3,165,258	722,110	316,548	4,203,916
2007	343,212	130,214	82,572	555,998
2008	81,911	19,715	52,754	154,380
2009	383,721	234,086	192,826	810,633
2010	389,032	173,142	160,028	722,202
2011	874,456	393,412	296,879	1,564,747
2012	1,283,109	452,389	193,474	1,928,972
2013	190,100	90,408	88,574	369,082
2014	279,818	117,670	89,231	486,719
2015	7,026	5,662	23,435	38,123
평균	699,764	233,881	149,832	1,083,447

※주 : 2015년도 환산 가격기준

표 1-30.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피해액

구분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기타	계
2006	28,862	1,848	162,434	1,949,391	94,766	2,237,301
2007	6,709	2,965	12,454	177,215	86,504	285,847
2008	1,603	180	4,009	54,376	6,451	66,619
2009	2,358	742	8,004	255,893	46,142	313,139
2010	28,624	2,806	9,047	209,653	180,706	430,836
2011	26,618	1,703	14,573	650,007	58,430	751,331
2012	31,354	3,566	12,058	600,666	375,676	1,023,320
2013	1,664	124	6,431	143,020	13,116	164,355
2014	3,519	120	2,922	137,261	28,973	172,795
2015	254	305	10	13,132	18,161	31,862
평균	13,156	1,436	23,194	419,062	90,892	547,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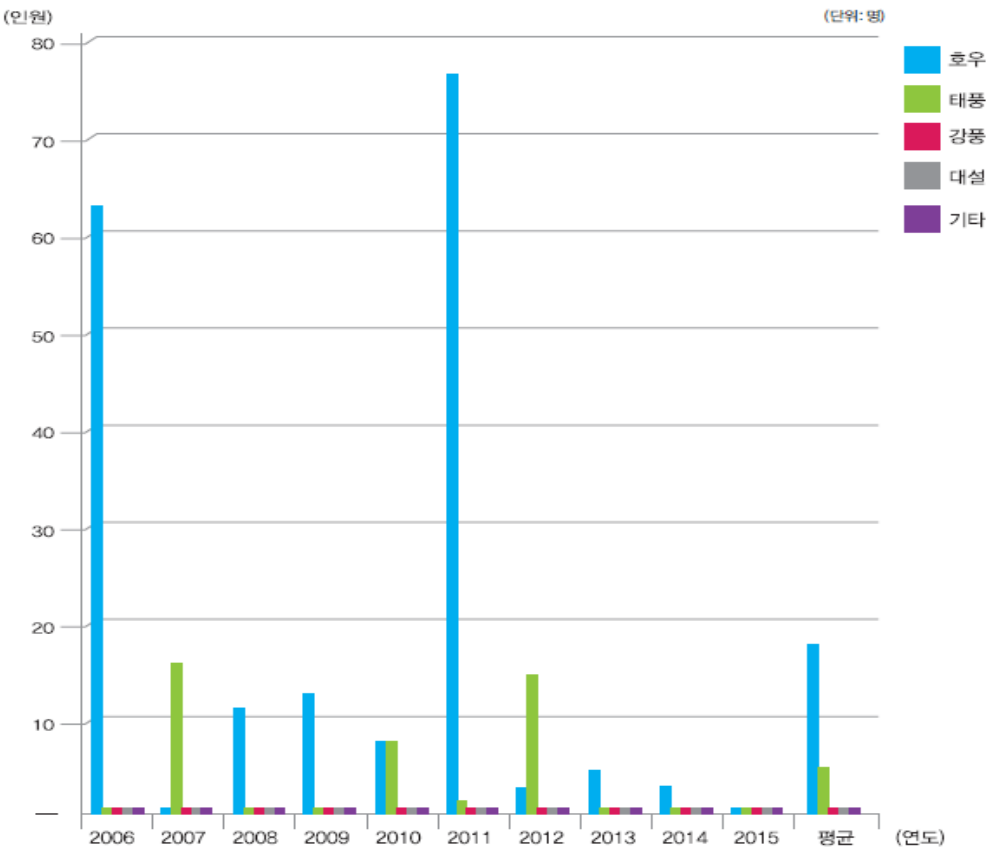
※주 : 2015년도 환산 가격기준

표 1-31.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유형별 피해액

구분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계
2006	13,592	2,195,035	5,959	16,166	6,549	2,237,301
2007	182,613	49,371	8,447	7,810	37,606	385,847
2008	897	60,749	3,808	1,166	-	66,620
2009	-	267,130	13,392	7,373	25,245	313,140
2010	174,145	182,479	66,933	176	7,103	430,836
2011	206,530	499,132	45,386	-	293	751,331
2012	942,997	36,106	19,121	25,096	-	1,023,320
2013	1,613	150,980	10,829	890	42	164,354
2014	5,079	136,505	31,120	91	-	172,795
2015	13,404	1,213	13,021	3,891	333	31,862
평균	154,087	357,870	21,802	6,266	7,716	547,741

※주 : 2015년도 환산 가격기준

○ 재난 유형별로 피해자는 호우 피해 발생 시 평균 18명으로 가장 많으며, 태풍이 4명으로 차순위에 있으며, 강풍과 대설은 인명피해를 가져오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자료 : 국민안전, 2015, 「2015재해연보」

[그림 1-22] 재난 유형별 인명피해

## 2) 충남의 연도별 주요 자연재난 피해 현황

### ▶ 2010년 자연재난 피해

- 2010년도 충남의 자연재난 총 피해액은 1조 3,391억원으로 444세대 1,084명의 이재민이 발생함
- 이 가운데 사망, 실종 포함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자연재난 피해로 인한 복구액은 1조 7,865억원이 소요됨
- 특히 2010년은 태풍 곤파스로 인해 전국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충남지역의 경우도 이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함

표 1-32. 2010년도 자연재난 피해 현황

원인	피해자			이재민수 (세대/명)	재산피해액 (백만원)	피해복구액 (백만원)
	계	사망/실종(명)	부상(명)			
전체	9	4/1	4	444/1,084	133,910	178,652
태풍	5	1	4	432/1,058	109,714	111,637
호우	4	3/1	-	12/26	21,211	64,644
강풍	-	-	-	-	1,962	1,962
대설	-	-	-	-	1,023	409

※자료 : 충남도청, 2016, 「2015통계연보」

### ▶ 2011년 자연재난 피해

- 2011년도 충남의 자연재난 총 피해액은 2,257억원으로 18세대 38명의 이재민이 발생함
- 이 가운데 사망, 실종 포함 1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자연재난 피해로 인한 복구액은 5,180억원이 소요됨
- 특히 2011년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천 2,57억원으로 크게 발생하였으며, 강풍, 대설 등의 자연재난은 발생하지 않음

표 1-33. 2011년도 자연재난 피해 현황

원인	피해자			이재민수 (세대/명)	재산피해액 (백만원)	피해복구액 (백만원)
	계	사망/실종(명)	부상(명)			
전체	1	-	1	18/38	22,578	51,803
태풍	-	-	-	1/2	1,143	2,001
호우	1	-	1	17/36	21,435	49,802
강풍	-	-	-	-	-	-
대설	-	-	-	-	-	-

※자료 : 충남도청, 2016, 「2015통계연보」



## ▶ 2012년 자연재난 피해

- 2012년도 충남의 자연재난 총 피해액은 7천, 19억원으로 86세대 189명의 이재민이 발생함
- 이 가운데 사망, 실종 포함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자연재난 피해로 인한 복구액은 1조 655억원이 소요됨
- 특히 2012년은 태풍 볼라벤이 전국적으로 피해를 가져왔으며, 2012년 발생한 태풍으로 인한 충남의 총 피해액은 4,491억원이며, 78세대 175명의 이재민과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함
- 또한 강풍 풍해가 발생하면서 7,210억원의 재산피해와 3세대 6명의 이재민이 발생함

표 1-34. 2012년도 자연재난 피해 현황

원인	피해자			이재민수 (세대/명)	재산피해액 (백만원)	피해복구액 (백만원)
	계	사망/실종(명)	부상(명)			
전체	5	3	2	86/189	70,199	106,556
태풍	4	2	2	78/175	44,915	73,349
호우	-	1		5/8	14,943	28,095
강풍	-	-	-	3/6	7,210	2,903
대설	-	-	-	-	3,131	1,209

※자료 : 충남도청, 2016, 「2015통계연보」

## ▶ 2013년 자연재난 피해

- 2013년도 충남의 자연재난 총 피해액은 47억원으로 1세대 3명의 이재민이 발생함
- 이 가운데 사망, 실종 포함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연재난 피해로 인한 복구액은 29억원이 소요됨

표 1-35. 2013년도 자연재난 피해 현황

원인	피해자			이재민수 (세대/명)	재산피해액 (백만원)	피해복구액 (백만원)
	계	사망/실종(명)	부상(명)			
전체	-	-	-	1/3	470	295
태풍	-	-	-	-	-	-
호우	-	-	-	1/3	69	129
강풍	-	-	-	-	-	-
대설	-	-	-	-	401	166

※자료 : 충남도청, 2016, 「2015통계연보」

## ▶ 2014년 자연재난 피해

- 2014년도 충남의 자연재난 총 피해액은 1,369억원으로 이재민은 발생하지 않음
- 한편, 자연재난 피해로 인한 복구액은 561억원이 소요되었으며, 태풍이나 강풍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대설로 인해 재산피해액 1,340억원이 발생함

표 1-36. 2014년도 자연재난 피해 현황

원인	피해자			이재민수 (세대/명)	재산피해액 (백만원)	피해복구액 (백만원)
	계	사망/실종(명)	부상(명)			
전체	-	-	-	-	13,691	5,616
태풍	-	-	-	-	-	-
호우	-	-	-	-	286	370
강풍	-	-	-	-	-	-
대설	-	-	-	-	13,405	5,246

※자료 : 충남도청, 2016, 「2015통계연보」

## ▶ 최근 5년간 충남의 자연재난 발생 특성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자연재난은 해마다 지속되고 있으나 자연재난 유형별 피해는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재난 유형별로 호우의 경우 해마다 지속적으로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재민 발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잦음
- 반면, 태풍 및 대설의 경우 발생빈도는 주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매우 큰 특성을 보이고 있음
- 또한, 강풍과 대설의 경우 재산피해액에 대비하여 피해복구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반면, 태풍과 호우의 경우 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에 들어가는 소요액이 큰 특성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재난 유형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며, 특히 피해액의 규모가 큰 태풍과 호우 등의 경우 재해저감을 위한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강풍과 대설의 경우 재난 피해 가구에 대한 용자 제도 및 재난보험 등 가구의 피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도적으로 권장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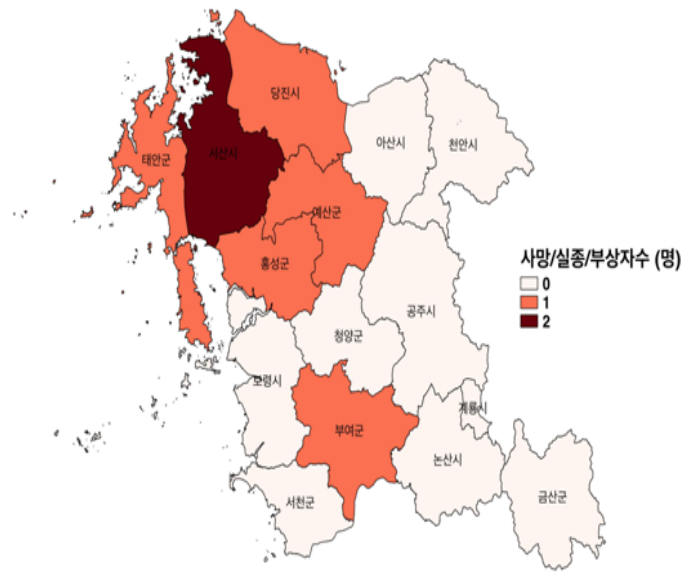
### 3) 충남의 시군별 최근 5년간 주요 자연재난 Mapping 결과

#### ▶ 2010년도 자연재난 피해

- 2010년 충남 시군별 자연재난 피해를 살펴보면,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에서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서산, 부여에서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도 같은 해에 발생함

표 1-37. 2010년 자연재난 피해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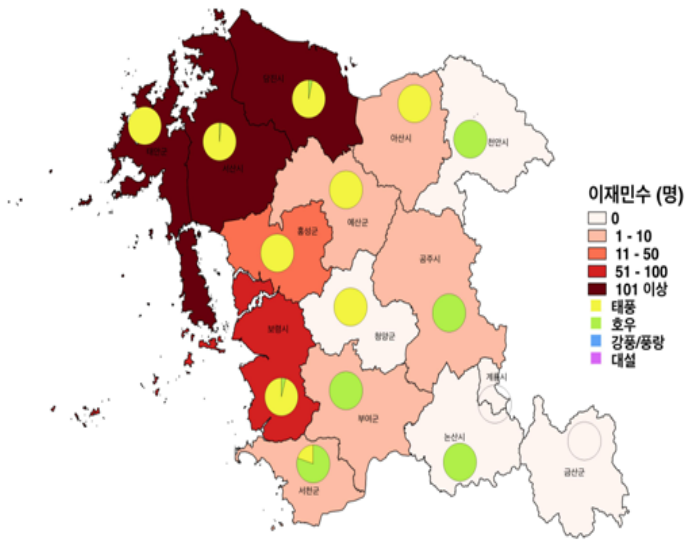
지역명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천안시	-	-		
공주시	-	-		
보령시	-	-		
아산시	-	-		
서산시	1	1		
논산시	-	-		
계룡시	-	-		
당진시	1	-		
금산군	-	-		
부여군	-	3		
서천군	-	-		
청양군	-	-		
홍성군	1	-		
예산군	1	-		
태안군	1	-		



- 반면,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이 가장 컸으며, 서산이 171세대 415명, 태안이 143세대 345명, 당진 61세대 164명으로 태풍 피해가 컸으며, 호우로 인한 피해는 서산에서 2세대 5명, 당진 2세대 6명, 부여 2세대 3명, 서천 2세대 4명이 발생함
- 충남 태풍 및 호우로 인해 서북부 지역의 이재민 발생이 많았으며, 서산의 경우 태풍과 호우 모두에 영향을 많이 받음

표 1-38. 2010년도 이재민수(세대/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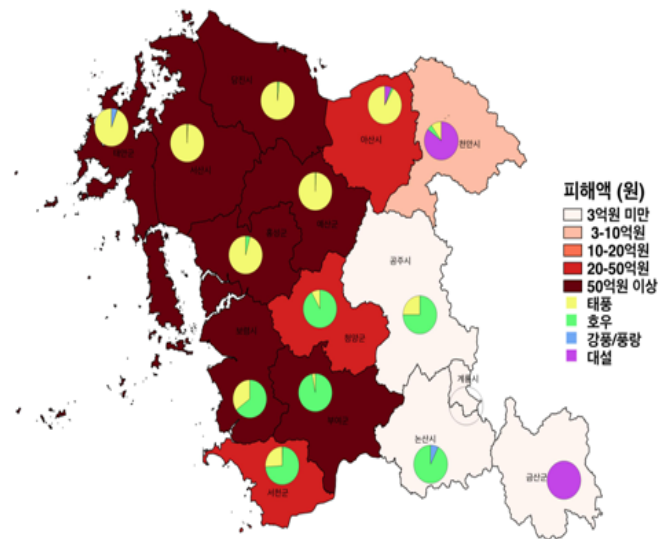
지역명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천안시	-	1/1	-	-
공주시	-	1/2	-	-
보령시	39/91	1/4	-	-
아산시	2/2	-	-	-
서산시	171/415	2/5	-	-
논산시	-	1/1	-	-
계룡시	-	-	-	-
당진시	61/164	2/6	-	-
금산군	-	-	-	-
부여군	-	2/3	-	-
서천군	1/1	2/4	-	-
청양군	1/1	-	-	-
홍성군	12/36	-	-	-
예산군	2/3	-	-	-
태안군	143/345	-	-	-



- 2010년 충남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태풍, 호우 순으로 높았으며, 대설로 인한 피해가 함께 발생함
- 지역별로는 태풍 피해의 경우 서산, 태안, 당진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호우의 경우 부여, 보령, 대설 피해는 천안, 공주에서 큰 피해를 가져옴
- 특히 대설 피해의 경우, 내륙지역, 도시 지역에서 큰 피해를 가져온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서산과 태안의 경우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재산피해도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표 1-39. 2010년도 재산피해액(백만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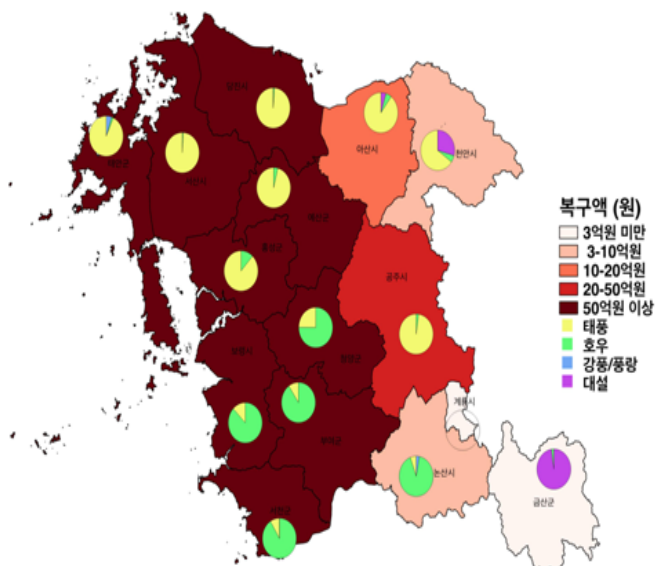
지역명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천안시	72	34	-	1,023
공주시	27	81	-	610
보령시	3,527	6,547	-	-
아산시	2,294	47	-	-
서산시	42,106	199	-	161
논산시	-	166	13	30
계룡시	-	-	-	-
당진시	12,261	154	-	-
금산군	-	-	-	14
부여군	244	7,362	-	200
서천군	1,013	2,855	-	-
청양군	300	3,302	-	8
홍성군	7,562	335	-	-
예산군	7,034	39	-	-
태안군	33,274	90	1,949	-



- 재난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액은 서산, 태안, 예산의 경우 태풍으로 인해 피해복구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호우는 부여, 보령, 서천, 청양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됨

표 1-40. 2010년도 재난복구액(백만원) 현황

지역명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천안시	557	48	-	409
공주시	2,431	56	-	249
보령시	2,589	18,016	-	-
아산시	1,134	71	-	-
서산시	38,579	344	-	60
논산시	24	387	13	10
계룡시	-	-	-	-
당진시	7,468	84	-	-
금산군	-	2	-	6
부여군	3,137	29,477	-	81
서천군	910	9,285	-	-
청양군	1,673	5,044	-	3
홍성군	4,660	625	-	-
예산군	13,217	550	-	-
태안군	35,258	655	1,949	-



▶ 2011년도 자연재난 피해

- 2010년도 자연재난 중 인명피해는 호우로 인해 아산시에서 1명 부상이 나타난 등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표 1-41. 2011년 자연재난 피해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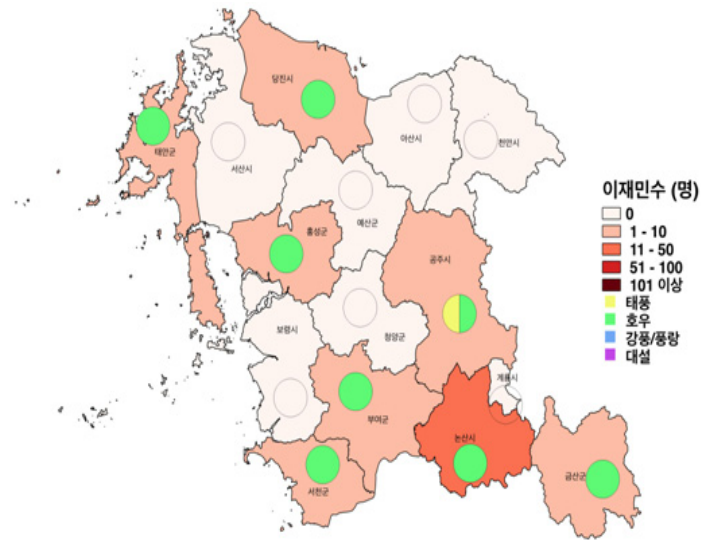
지역명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천안시	-	-		
공주시	-	-		
보령시	-	-		
아산시	-	1		
서산시	-	-		
논산시	-	-		
계룡시	-	-		
당진시	-	-		
금산군	-	-		
부여군	-	-		
서천군	-	-		
청양군	-	-		
홍성군	-	-		
예산군	-	-		
태안군	-	-		



- 한편, 이재민은 태풍으로 인해서는 공주에서 1세대 2명만이 발생했으나, 호우로 인해서는 부여, 서천, 논산, 금산, 공주, 당진, 홍성, 태안의 순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논산은 3세대 13명으로 세대 수 대비해 가장 많은 이재민이 발생함

표 1-42. 2011년도 이재민수(세대/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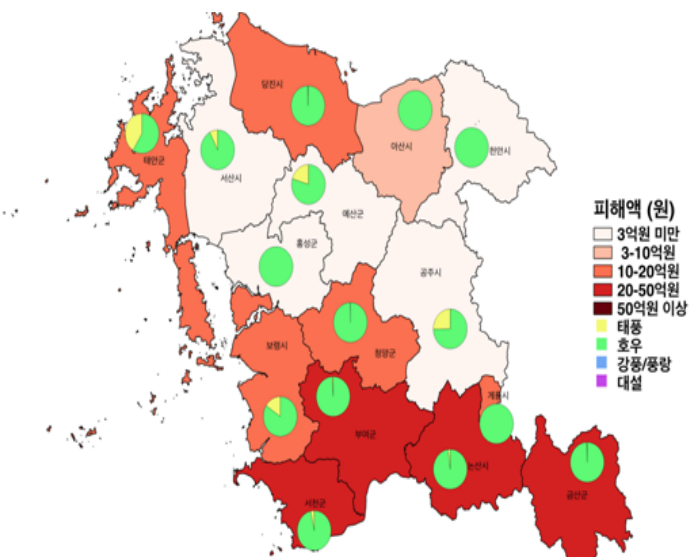
지역명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천안시	-	-	-	-
공주시	1/2	1/2	-	-
보령시	-	-	-	-
아산시	-	-	-	-
서산시	-	-	-	-
논산시	-	3/13	-	-
계룡시	-	-	-	-
당진시	-	1/2	-	-
금산군	-	1/3	-	-
부여군	-	5/9	-	-
서천군	-	4/5	-	-
청양군	-	-	-	-
홍성군	-	1/1	-	-
예산군	-	-	-	-
태안군	-	1/1	-	-



○ 재산피해액은 태풍의 경우, 태안 지역이 가장 컸으며 보령이 다음으로 큰 피해를 보였으며, 호우의 경우 부여, 논산, 금산, 서천의 순으로 전 지역에 피해를 가져옴

표 1-43. 2011년도 재산피해액(백만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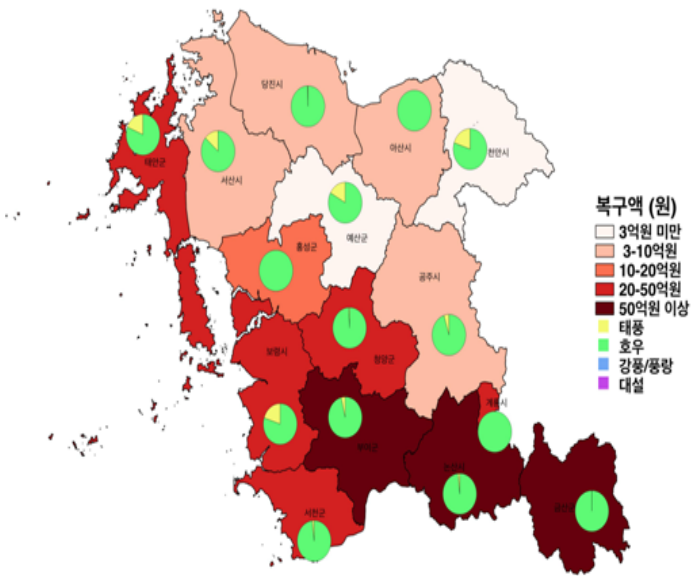
지역명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천안시		16	-	-
공주시	68	201	-	-
보령시	210	1,125	-	-
아산시		384	-	-
서산시	15	178	-	-
논산시	85	3,960	-	-
계룡시		1,361	-	-
당진시	5	1,433	-	-
금산군	19	3,811	-	-
부여군	41	4,552	-	-
서천군	80	2,300	-	-
청양군	2	1,058	-	-
홍성군		114	-	-
예산군	22	86	-	-
태안군	596	856	-	-



- 재난복구액은 재난피해액 대비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지역적으로 충남의 남부지역에서 큰 피해와 함께 복구액이 소요됨
- 태풍으로 인해서는 태안, 보령, 부여의 순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호우의 경우는 부여, 논산, 금산의 순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충남 전 지역에서 피해를 가져옴

표 1-44. 2011년도 재난복구액(백만원) 현황

지역명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천안시	2	8	-	-
공주시	30	588	-	-
보령시	521	2,064	-	-
아산시	-	557	-	-
서산시	102	644	-	-
논산시	177	9,590	-	-
계룡시	-	3,859	-	-
당진시	3	581	-	-
금산군	10	9,524	-	-
부여군	433	10,765	-	-
서천군	78	4,100	-	-
청양군	30	3,446	-	-
홍성군	-	1,433	-	-
예산군	20	97	-	-
태안군	595	2,54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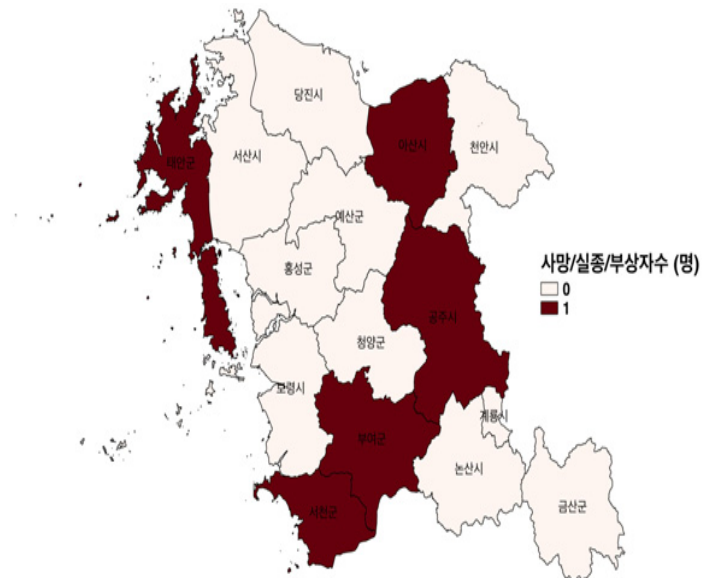


▶ 2012년도 자연재난 피해

- 2012년도에는 인명피해가 태풍, 호우 피해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산, 부여, 서천, 태안에서 발생한 반면, 호우는 공주에서만 1명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큰 인명피해는 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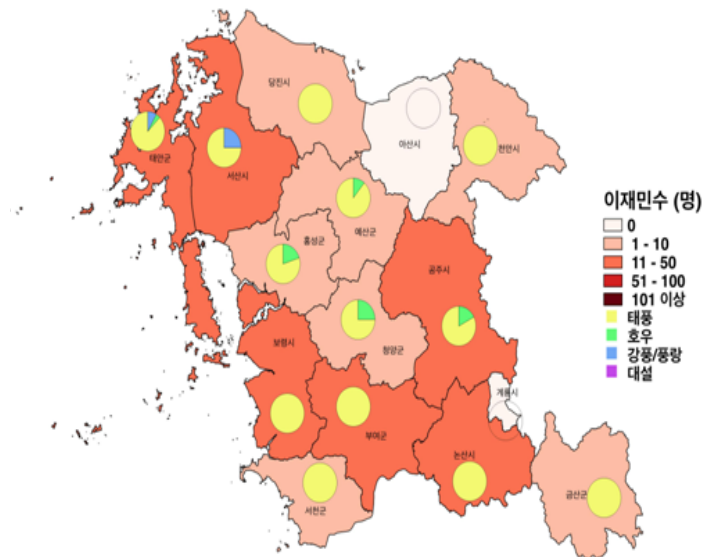
지역명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천안시	-	-		
공주시	-	1		
보령시	-	-		
아산시	1	-		
서산시	-	-		
논산시	-	-		
계룡시	-	-		
당진시	-	-		
금산군	-	-		
부여군	1	-		
서천군	1	-		
청양군	-	-		
홍성군	-	-		
예산군	-	-		
태안군	1	-		



-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컸으며 부여, 논산, 공주, 태안, 보령, 서산의 순으로 크게 발생한 가운데 아산, 계룡을 제외 한 전 지역에서 발생함
- 반면, 호우로 인한 이재민 발생은 공주가 1세대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양, 홍성, 예산, 태안에서 1세대 1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이재민 발생이 많았음을 알 수 있음

표 1-46. 2012년도 이재민수(세대/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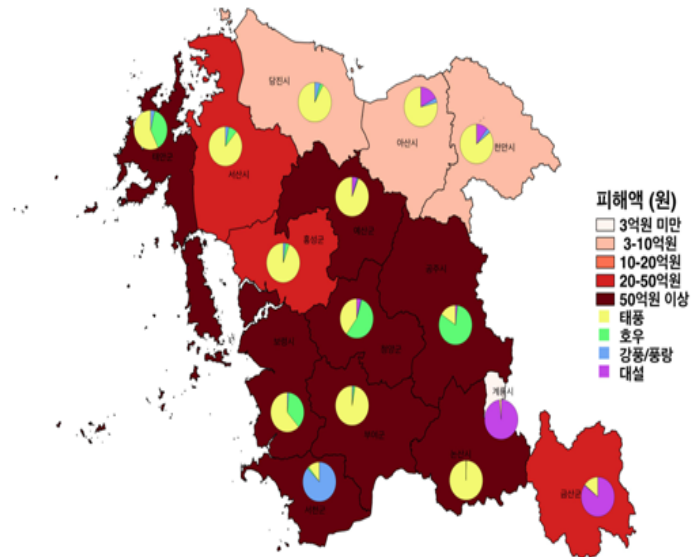
지역명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천안시	2/5	-	-	-
공주시	11/19	1/4	-	-
보령시	7/19	-	-	-
아산시	-	-	-	-
서산시	5/12	-	-	-
논산시	12/34	-	-	-
계룡시	-	-	-	-
당진시	4/6	-	-	-
금산군	1/1	-	-	-
부여군	17/39	-	-	-
서천군	2/4	-	-	-
청양군	2/3	1/1	-	-
홍성군	3/4	1/1	-	-
예산군	4/8	1/1	-	-
태안군	8/21	1/1	-	-



- 재산피해액은 태풍 경우 부여, 논산, 예산에서 크게 발생했으며, 호우의 경우 청양, 공주, 태안에서 크게 발생함
- 강풍 피해는 부여에서 가장 큰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대설은 금산에서 가장 큰 피해액이 발생하는 등 부여에서 2012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가장 컸으며, 충남의 중부와 남부 지역 및 해안지역에서 피해액이 크게 발생함

표 1-47. 2012년도 재산피해액(백만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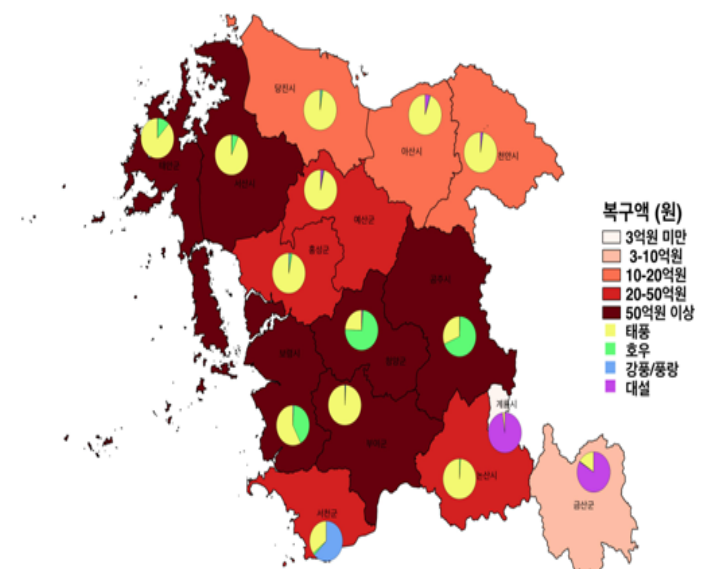
지역명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천안시	531	1	23	68
공주시	889	4,566	2	100
보령시	3,274	1,945	67	-
아산시	737	-	36	164
서산시	2,438	225	91	-
논산시	6,587	9	6	-
계룡시	2	-	-	111
당진시	604	19	35	-
금산군	349	1	9	2,039
부여군	12,460	238	145	-
서천군	817	113	6,306	-
청양군	3,710	5,222	91	371
홍성군	3,409	126	84	-
예산군	5,441	18	64	278
태안군	3,667	2,460	251	-



○ 재난복구액은 태풍 피해로 인해 전 지역에서 집행이 되었으며, 특히 태안, 부여, 서산의 순으로 높게 집행되었으며, 호우 피해는 청양, 공주에서, 강풍은 서천, 대설은 금산에서 큰 비용이 소요됨

표 1-48. 2012년도 재난복구액(백만원) 현황

지역명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천안시	1,355	-	10	25
공주시	3,925	8,643	1	36
보령시	4,220	3,018	57	-
아산시	1,317	-	13	61
서산시	8,085	541	38	-
논산시	4,426	46	3	-
계룡시	1	-	-	43
당진시	1,454	21	17	-
금산군	153	1	4	796
부여군	12,721	52	80	-
서천군	1,395	72	2,476	-
청양군	4,095	12,367	36	156
홍성군	2,946	62	40	-
예산군	3,819	15	29	92
태안군	24,437	3,257	99	-



## ▶ 2013년도 자연재난 피해

○ 2013년도에는 큰 자연재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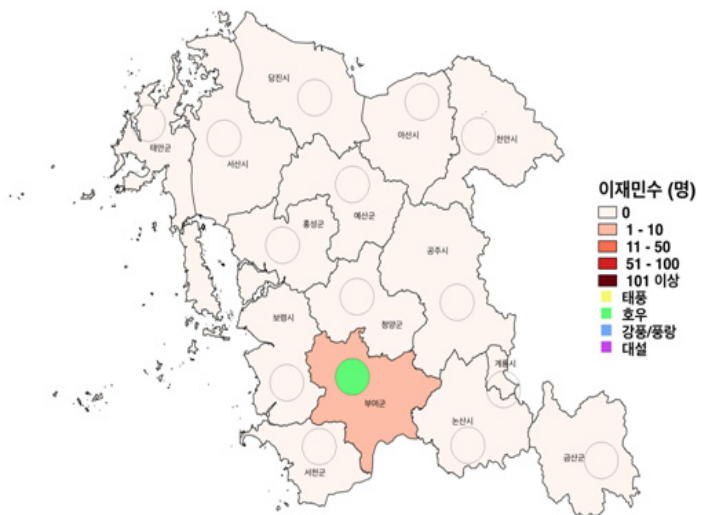


[그림 1-23] 2013년 자연재난 피해자 현황

○ 반면, 이재민은 호우로 인해 부여군에서 1세대 3명이 발생하는 등 이재민 발생도 크지 않음

표 1-49. 2013년도 이재민수(세대/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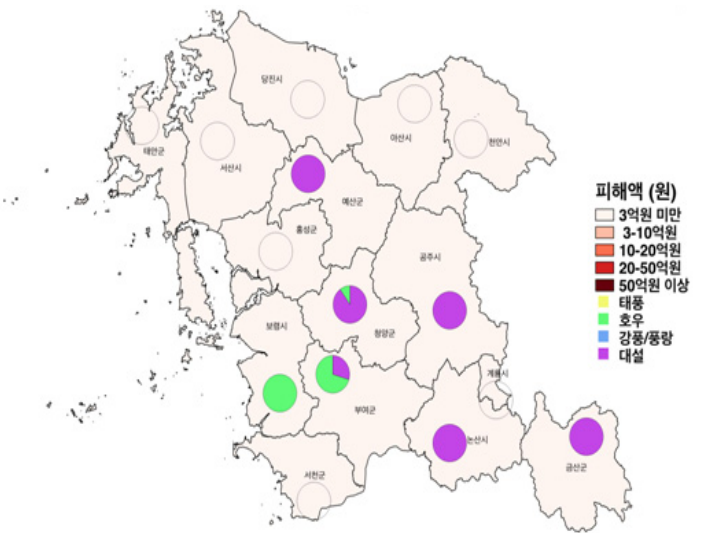
지역명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천안시	-	-	-	-
공주시	-	-	-	-
보령시	-	-	-	-
아산시	-	-	-	-
서산시	-	-	-	-
논산시	-	-	-	-
계룡시	-	-	-	-
당진시	-	-	-	-
금산군	-	-	-	-
부여군	-	1/3	-	-
서천군	-	-	-	-
청양군	-	-	-	-
홍성군	-	-	-	-
예산군	-	-	-	-
태안군	-	-	-	-



- 재산피해액 발생은 호우와 대설로 인해 발생했으며, 호우의 경우 보령, 부여에서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청양에서도 호우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발생함
- 반면, 대설 피해는 예산에서 가장 큰 피해가 있었으며, 금산, 논산, 청양, 부여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부여에서 호우와 대설로 인한 피해가 모두 발생함

표 1-50. 2013년도 재산피해액(백만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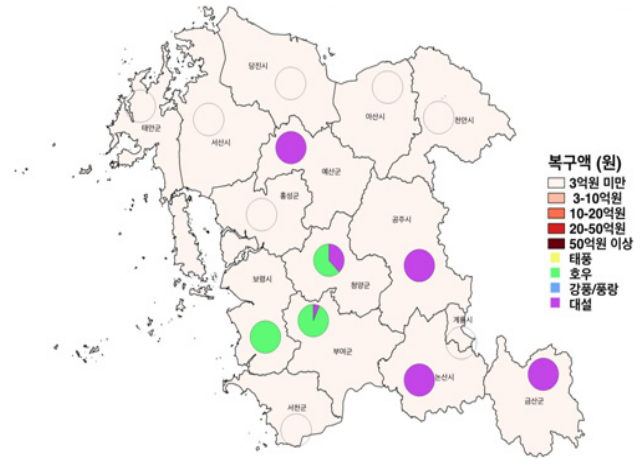
지역명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천안시	-	-	-	-
공주시	-	-	-	50
보령시	-	36	-	-
아산시	-	-	-	-
서산시	-	-	-	-
논산시	-	-	-	22
계룡시	-	-	-	-
당진시	-	-	-	-
금산군	-	-	-	80
부여군	-	31	-	13
서천군	-	-	-	-
청양군	-	2	-	18
홍성군	-	-	-	-
예산군	-	-	-	218
태안군	-	-	-	-



- 같은 해 호우로 인한 재난복구액은 부여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갔으며, 보령, 청양 재난복구액이 발생함
- 반면, 대설은 예산에 가장 많은 비용이 집행되었으며, 금산, 보령, 논산, 청양, 부여 순으로 집행됨

표 1-51. 2013년도 재난복구액(백만원) 현황

지역명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천안시	-	-	-	-
공주시	-	-	-	22
보령시	-	14	-	-
아산시	-	-	-	-
서산시	-	-	-	-
논산시	-	-	-	9
계룡시	-	-	-	-
당진시	-	-	-	-
금산군	-	-	-	32
부여군	-	102	-	7
서천군	-	-	-	-
청양군	-	13	-	8
홍성군	-	-	-	-
예산군	-	-	-	88
태안군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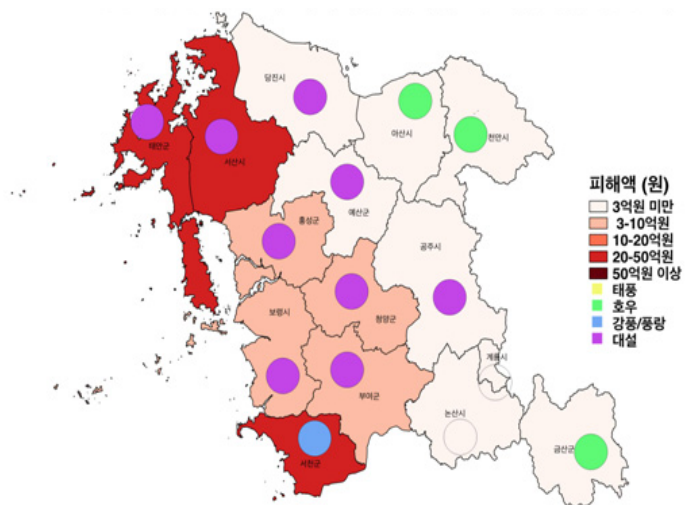


## ▶ 2014년도 자연재난 피해

- 2014년 충남 전역에서 인명피해를 수반한 자연재난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발생도 나타나지 않음
- 반면, 재산피해액은 호우와 대설로 인해 발생했으며, 특히 대설로 인한 피해가 컸던 특징이 있음
- 호우의 경우 아산에서 가장 큰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금산, 천안 순으로 피해액이 발생한 반면, 대설은 서산, 서천, 태안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부여, 홍성, 청양, 보령, 예산, 당진, 공주 등에서 대설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해안 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피해가 크게 발생함

표 1-52. 2014년도 재산피해액(백만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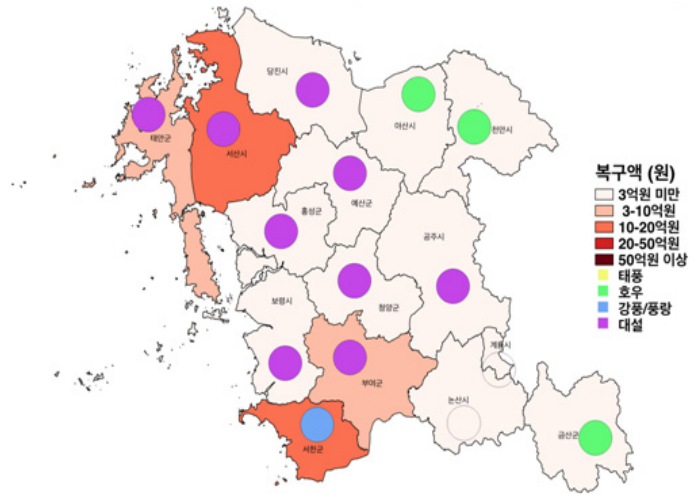
지역명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천안시	-	39	-	-
공주시	-	-	-	72
보령시	-	-	-	308
아산시	-	201	-	-
서산시	-	-	-	4,675
논산시	-	-	-	-
계룡시	-	-	-	-
당진시	-	-	-	186
금산군	-	46	-	-
부여군	-	-	-	704
서천군	-	-	-	4,063
청양군	-	-	-	413
홍성군	-	-	-	541
예산군	-	-	-	212
태안군	-	-	-	2,231



- 2014년도 재난 복구액은 아산이 가장 많은 집행이 이루어졌으며, 천안, 금산의 순으로 집행된 반면, 대설은 서산, 서천, 태안의 순으로 많이 집행되었으며, 피해액 대비 복구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특징을 보임

표 1-53. 2014년도 재난복구액(백만원) 현황

지역명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천안시	-	70	-	-
공주시	-	-	-	30
보령시	-	-	-	164
아산시	-	238	-	-
서산시	-	-	-	1,856
논산시	-	-	-	-
계룡시	-	-	-	-
당진시	-	-	-	72
금산군	-	62	-	-
부여군	-	-	-	313
서천군	-	-	-	1,458
청양군	-	-	-	160
홍성군	-	-	-	221
예산군	-	-	-	86
태안군	-	-	-	886





---

# 05

## 충남의 재난관리 여건 SWOT 분석

### ○ 충남의 안전환경 강점(Strength)

-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 정책 변화에 따라 인접한 세종에 국민안전처가 자리하고 있으며, 소방교육 시설, 재난안전(환경·기술 등) 관련 연구기관이 집중되고 있음
- 충청남도청 차원에서는 재난안전 전담부서 및 연구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함
- 재난안전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를 토대로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해오고 있음

### ○ 충남의 안전환경 약점(Weakness)

- 충남은 2015년 지역안전지수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 재난안전 분야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재난 유형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큼
-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행조직이나 주민의 안전의식, 그리고 교육기회가 부족한 실정임

- 재정적 측면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 양호하나 재정자립도가 광역시도 가운데 하위에 속하며,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투입 또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또한 민선6기 들어 다양한 거버넌스 조직 및 시민단체가 활성화되었으나, 그 역량이 검증되지 못한 실정임
- 지리적으로 중국 동부 산업시설 및 원자력발전 밀집지역과 인접하여 대기 오염물질이 유입되며 연약지반으로 지진발생 위험지역에 속함

#### ○ 충남의 안전환경 기회요인(Opportunity)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ICT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재난안전 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 정부의 예산 지원, 재난안전기술개발, 방재산업 육성,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정착 등 관련 법제도 재정비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 도는 도민의 자치의식이 높아지고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도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음

#### ○ 충남의 안전환경 위협요인(Threat)

-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도 기온 상승, 강수량 증가 등 각종 기후변화의 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각종 전염병을 비롯한 신종재난의 증가와 사회기반시설의 연계성이 증가하면서 복합재난 등의 연쇄적 재난 발생 또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사회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결혼 및 국가간 이동성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등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또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면서 위협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음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안전 정부부처·연구기관·교육 시설 집중</li> <li>· 재난안전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li> <li>· 재난안전 전담부서 및 긴급구조 인력 확충</li> <li>· 근거에 기반한 정책수립 의지 및 실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재난안전 취약성 격차</li> <li>·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행조직 불명확</li> <li>· 주민 안전의식 저조 및 교육기회 부족</li> <li>· 재정자립도 취약 및 예산투입 경직성</li> <li>· 안전거버넌스 역량 미입증</li> </ul>
Opportunity(기회)	SO전략	WO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ICT기술력 우위</li> <li>· 국가 재난안전 R&amp;D 등 산업수요 증가</li> <li>· 재난안전 법제 정비 및 고도화</li> <li>· 높아진 자치의식과 지역사회 공동체 관심 증가</li> <li>·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 고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한과 책임의 안전자치 구현</li> <li>· 안전정보 접근권 및 전달체계 강화</li> <li>· 재난안전 DB 수집 및 관리 등 정책기반 강화</li> <li>· 재난안전 산업 육성 및 집적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형 안전활동 기반 구축</li> <li>· 재난에 강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li> <li>· 수요자 중심의 안전서비스 체계 강화</li> <li>· 다양한 안전네트워크 활성화 및 기술적용</li> <li>· 재난행정지원 시스템 강화</li> </ul>
Threat(위협)	ST전략	WT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 증가</li> <li>· 신종재난 및 복합재난 증가</li> <li>· 저출산·고령화, 결혼이주 등 재난 취약계층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기반의 재난안전 교육 및 매뉴얼 개발 보급</li> <li>· 실질적 현장대응 능력 향상</li> <li>· 안전취약계층 배려 정책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중심의 안전기반시설 강화 및 안전한 지역만들기</li> <li>· 전면적 생활안전문화 운동</li> <li>· 충남도정 및 조례의 안전요소 강화</li> <li>· 안전골든타임 확보 체계 강화</li> </ul>

## 그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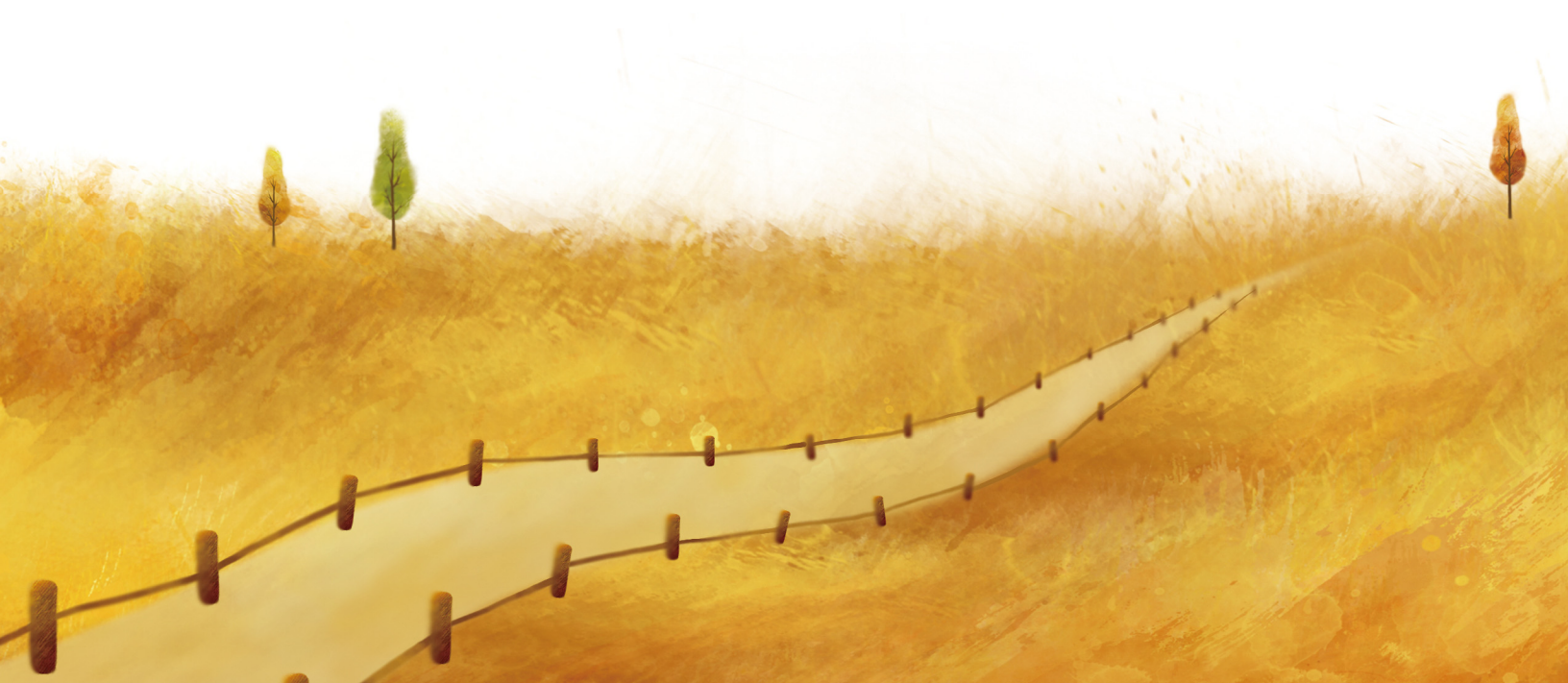
송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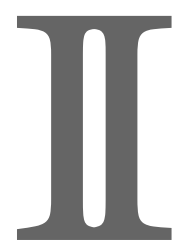
엄니 엄니 생각하니  
위메 위메 보고잡고,

어매 어매 그려보니  
엄니 추억 떠오른다.

이제 내가 엄마 되어  
울~엄마 불러 보니

가슴에서 올라 오는  
뭉클한 우리 엄마.





## 안전충남 2050 비전 개요



---

# 01

## 비전 수립 배경

### 1)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미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충청남도를 위한 제안

- 기계문명과 과학기술의 진화가 가속화 될 미래사회는 기후환경 변화와 사회의 복잡화 다양화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 미래사회 안전에 대비한 일관된 정책기조를 세우고, 소통, 창의성, 분석력, 협업의 방법을 통해 실행하기 위한 새로운 30년의 시작을 비전수립으로 밝히고자 함

### 2) 기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반성

#### ▶ 안전 환경변화와 전통적 관리체계의 한계

- 대규모 자연재난과 각종 인적·사회적 재난의 발생, 경제수준 및 시민의식 향상 등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대두됨
- 안전관리는 국가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안전망 제공,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 시민 네트워크형성 등 지방정부 거버넌스 구축이 강조됨

- 재난 발생이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과 발전 역량에 대한 침해가능성으로부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하도록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재난 발생에 총체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는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 ▶ 수요자로서 국민의 요구변화

- 사고를 ‘예방 가능한 우연’이 아니라 ‘신이 점지한 필연’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재난에 대한宿命적 접근에서 벗어나, 정부의 안전관리정책이 생활의 불안요소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회 안전 분야에 대한 대응정책 마련을 요구받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도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도민 생활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자연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도민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난 발생에 대비한 전방위 지역방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 간의 정책적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공통의 가치지향성 설정이 시급함

### 3) 새로운 가치 설정 필요성

#### ▶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

-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며, 재난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임
- 현대사회에서는 예상치 못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험요소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기본권으로 인식되는 안전권 보장과 안전한 생활환경의 제공이 가장 근본적인 복지라 할 수 있음
- 안전문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쉽게 동의하고 협력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요소임.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대립을 협력으로 바꾸어야 하며, 오랜 시간을 요하므로 미래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함

#### ▶ 과학적 예측을 통한 대비 중심의 안전관리

- 미국연방위기관리청(FEMA)의 지구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자연재해 예측·저감 기술개발에 1달러를 투자할 경우 재해복구비용을 7달러 절약하는 효과가 있음. 기후변화로 인하여 대형화 되는 자연재난으로



---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탄력적인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구축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필요함

-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활용하여 위기 시 생존을 돕고, 지역과 개인 스스로가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방향과 기법이 현실적으로 변화해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주체로서 지방정부 역할 강화**

- 안전에 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의 부재로 인하여 전체적인 시각에서 도민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집행이 어렵고, 단기적·단편적 사업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자연재난 및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사고 빈발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기인하여 중앙정부의 안전관리 활동이 다양화됨에 따라 재난관리의 제1차적 책임자이자 최종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할이 강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과 단체가 안정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행정이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일관된 지향성이 필요함

---

## 02

#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 1) 비전의 가치와 정책영역의 설정

#### ▶ 핵심가치 설정

- 핵심가치는 본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충청남도 및 조직 구성원이 지향해야 할 내용으로 장기적으로 충청남도의 안전문화를 형성하기 위함
- 3대 핵심가치

#### ① 생명가치 존중

- 생명이란 유기체와 분리되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창발성의 속성으로, 생명가치 존중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개체가 지닌 생명의 존엄성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적 가치와 비견할 수 없는 고유한 것으로 지켜져야 함
-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를 아끼고 존중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평화로운 삶은 안전할 때 가능하므로 안전의 기본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생명간의 우열을 가르는 사회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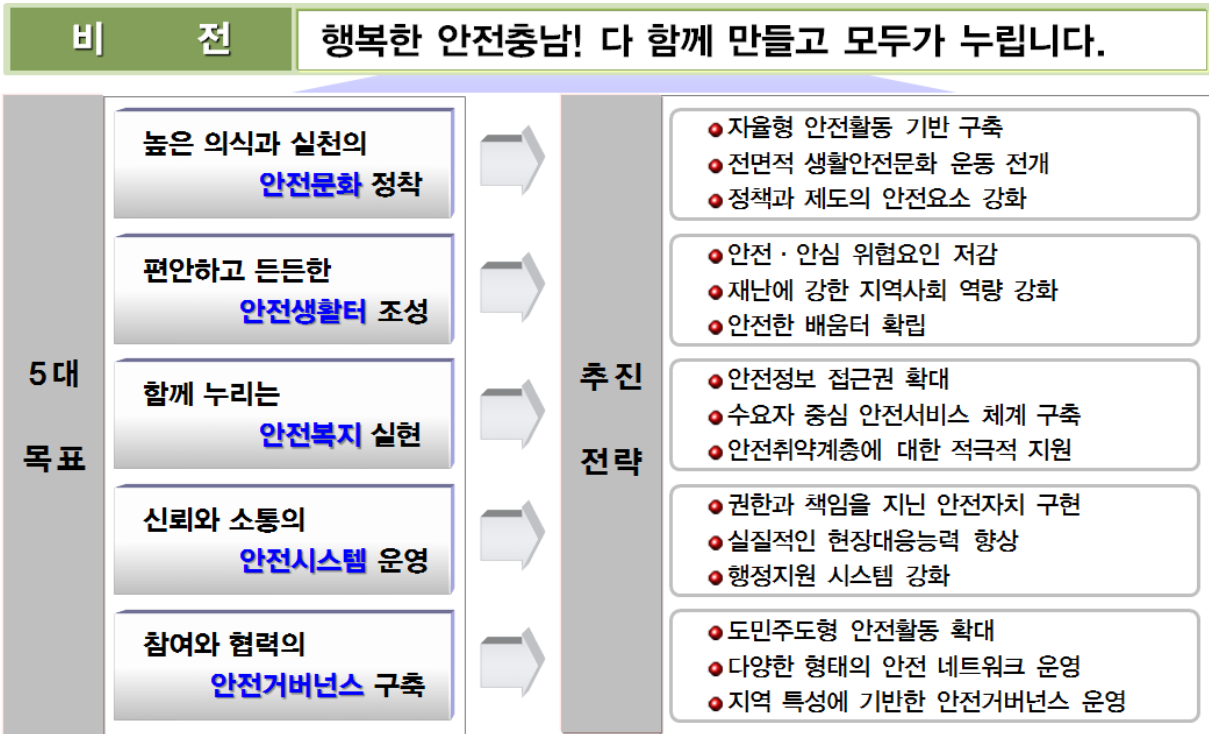
- 
- 현대 사회는 지구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공존해야 하는 시대로, 안락한 생활공간과 협력적 거버넌스도 생명가치에 대한 존중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정 없이 출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질서가 시스템 내에 정착해야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순환구조를 가질 수 있으므로 생명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존중해야 함

## ② 더불어 함께

-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호성에 근거하여 시장, 정부, 시민사회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의 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한 참여와 타협의 단계를 넘어 서로의 협력과 의존성을 높이는 과정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함
- 대나무밭의 모든 뿌리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홍수 때 언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안전은 함께 연대할 때 지킬 수 있는 것임
- 안전은 외부에 의존하여 새롭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에 의해 형성하는 공동체를 통해 확보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주체적 역량, 협력과 배려의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 ③ 누리는 안전

- 지금까지 안전은 국가가 베풀어주는 시혜로 여겨져 왔으며, 국민은 ‘돌봄’을 받는 수혜자일 뿐 주체적인 위치로 자리 잡지 못하였으나, 누리는 안전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가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이를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함
- 누린다는 것은 마음껏 즐기거나 맛본다는 뜻으로, 시민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안전을 하나의 권리로 인식하고 안전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보다 높은 차원의 안전을 의미하며, 안전에서 오는 믿음과 신뢰가 충남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임



## 2) 목표별 추진과제

### [목표 1] 높은 의식과 실천의 안전문화 정착

- 안전문화는 안전에 대해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 인식, 가치관의 총체이며, 안전을 일구는 기반임
- 개인은 의식적 학습을 통해 행동 양식을 만들어가고, 체화된 행동의 집합이 장시간 지속될 때 문화로서 정착하게 됨
-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 인지의 둔감함을 극복하기 위해 배움과 훈련을 통해 안전에 대한 배려 수준을 높이고, 이에 맞는 실천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안전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상태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목 표	전 략	추진 과제
높은 의식과 실천의 안전문화 정착	자율형 안전 활동 기반 구축	안전 불감증 극복을 위한 자발적 도민운동 전개
		안전도민 육성을 위한 안전 교육 강화
	전면적 생활안전문화 운동 전개	다양한 테마의 생활 운동 실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다각화
		생활안전 위해요소 점검방식 개편
	정책과 제도의 안전요소 강화	계획에서 평가까지 안전요소 반영
		안전등급제 도입
		안전문화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전략 1. 자율형 안전활동 기반 구축

##### (1) 필요성 및 목적

- 안전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 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함. 도민, 민간 기업, 지역 안전문화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서로 협력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지난 10월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도민 대상 타운홀 미팅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57%가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응답
- 안전문화는 도민이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인식하여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 도민 스스로 선진적인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정부별로 개별화된 노력으로 특정 시기 또는 사고 발생 이후 전개되는 교육보다는 안전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속성을 갖는 안전문화 정착이 가능함

## (2) 추진과제 및 방향

### 추진과제① 안전불감증 극복을 위한 자발적 도민운동 전개

- 안전불감증은 안전에 대해 둔감하거나 안전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전 무지(無知) 현상임. 안전불감증은 안전문화 형성 초기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요소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성숙한 안전문화의 발전과 지속적인 개선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에 대한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도민이 참여하여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매월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시민들이 직접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방식을 마련하고 도민의 참여 및 손쉬운 체험을 통해 안전문화의 의미를 상호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새로운 유형의 안전 위협 요인이 발생하면 해당 정보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유발하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추진과제② 안전 도민 육성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 안전충남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조(自助) 능력을 갖춘 도민을 양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함
- 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구조와 구급할 수 있도록 건강한 육체와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로 안전충남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도민은 안전 확보와 재난 상황에서 자신을 구조 및 구급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키우고, 안전 및 재난 상황에서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예측력과 판단력을 갖춰야 함
- 이처럼 도민 개개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는 역량을 키움으로써 재난 발생 초기의 인명 희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권역별·테마별 안전체험 시설을 확충하여 체험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영유아, 학생, 여성, 근로자, 군인 등 교육대상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 자신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용 및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가 필요함
- 공동체 단위의 자조모임을 만들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정보 교환활동을 유도해야 함

## 전략 2. 전면적 생활안전문화운동 전개

### (1)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이를 극복하고 안전기준을 상향조정하며 문화적 확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면적 안전문화 운동이 필요함. 따라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 다각적인 방법과 수단 활용을 통해 안전에 관한 사회적 각성 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 전체 차원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됨
- 안전에 관한 강한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 맞는 안전에 관한 주제를 설정하여 활동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서 실시해야 함
- 진행시기를 일정하게 협의하여 이슈 제기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며 안전한 사회로 움직이는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동원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함

### (2) 추진과제 및 방향

#### 추진과제① 다양한 테마의 생활운동 실시

- 충청남도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 인구 증가, 독거노인 증가, 외국인 인구 증가, 다문화가정 증가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 별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 안전취약계층의 증가와 다양화,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재난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관련 대상을 중심으로 맞춤형된 다양한 안전교육 개발 및 강화 필요
- ‘충남의 생활안전! 유아기부터 고령기까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유아기 때 안전문화를 내면화한 가치관 정립을 통해 일생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 실천이 가능하게 해야 함. 이를 위해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각 유관기관 및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체험시설을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고, 안전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교육 아이템 다양화 및 계층별 체험교육 확대, 재난·사고 유형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다양한 맞춤형 안전교육모델 개발이 필요함

#### 추진과제②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다각화

- 도민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 무지증, 안전 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고, 테마별, 주제별, 대상별로 안전문화에 대한 실천과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위험 및 안전 정보의 공개는 도민에게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한편, 사안에 따라 지역이미지 훼손, 재산권에 대한 악영향 등으로 주민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도민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해야 함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대중의 감정 확산 운동이 필요함. 브라질 상파울루의 산타카사(Santakasa)병원에서 실시한 헌혈 QR코드 밴드 배포 운동을 벤치마킹하여 안전문화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감정을 유도하고, 도내 안전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기관 종사자의 활동에 대해 QR코드를 배포하고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감정 확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 추진과제③ 생활 안전 위해요소 점검방식 개편

- 생활시설 및 산업시설의 특성에 따라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자체적인 안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안전에 대해 자율적인 실천이 가능하고 안전요소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점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안전요소는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위험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배제되는 요인으로 이를 확인·분석·검토할 수 있는 점검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둠
- 가정,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 주체별로 시설, 내부, 화재, 안전사고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척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도민이 직접 참여해서 안전요소를 고려하고 새로운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함. 충청남도는 안전요소의 위험도를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신규 위험 대응 요소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안전사고의 심각성 홍보 및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함

## 전략 3. 정책과 제도의 안전 요소 강화

### (1) 필요성 및 목적

-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위험 요인들이 등장하고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은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임. 거주지역의 안전 요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방관자적인 태도, 무사안일 주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함
- 안전요소에 대한 정책, 프로그램, 제도의 구축은 도를 중심으로 기초단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역량 강화를 이루어야 함. 지자체별로 집중 또는 단기, 장기적 측면의 활동 차이를 감안하여 인력과 예산의 조정이 필요함
-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의 설계 단계에서 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안전성 평가를 제도화하고 실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선도적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집중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하고 도민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 강화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음



## (2) 추진과제 및 방향

### 추진과제① 계획에서 평가까지 안전요소 반영

- 도정의 주요 정책과제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안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최근에는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보다 근본적인 재난안전 관리의 강화를 위해서는 안전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도정의 모든 정책의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에 대한 검토와 감수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에 실시 중인 정책에 대해서는 부족한 안전관련 요소를 강화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유도함
- 도정 전반의 계획 수립 및 작성 시 사전 검토항목에 도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 대책에 대한 검토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제도화 함

### 추진과제② 안전등급제 도입

- 충청남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등급의 재구성·재조정을 통해 유형을 구분하고, 관련 부처 및 담당 부서의 대응 활동을 포함하여 새로운 안전등급제를 마련해야함
- 전국 획일적 기준의 안전등급과는 별도로 충청남도의 안전등급제를 개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는 행정기관에서 주도하는 등급 확인 체계가 아니며, 소비자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소비자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음
- 도민이 거주 지역 및 개별 활동 영역에 대한 안전등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취약점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도록 공개해야 함

### 추진과제③ 안전문화 인센티브 제도 도입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참여하는 도민과 각 기관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안전문화 활동의 참여 및 기여 정도에 따라 동기유발을 위한 여러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충청남도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 도민의 적극적인 안전문화 활동의 전개를 위한 유인 방안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방관적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음
-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전개해 온 주체를 개인, 단체 및 기관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전문화 체험교육 참가자, 안전문화 인증 단체, 안전문화 인증 기관, 안전문화 인증 기업 등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참여율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식 마련이 필요함

## [목표 2] 편안하고 든든한 안전생활터 조성

- 안전한 생활터는 일상 생활공간으로서 삶터, 직업 생활공간으로서 일터, 학습 공간으로서 배움터, 레저와 관광 공간으로서 놀이터를 설정하고, 각 공간의 특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자연적·환경적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음
- 지역사회와 구성원, 정부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기능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예측적이고 과학적이며,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갖춘 생활공간을 만드는 일은 공간 특성에 맞는 일상적 시간의 안전 확보 노력, 비상시 대응 노력, 재난 발생 이후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돕는 조치를 포함한 전략을 통해 달성 가능함

목 표	전 략	추진 과제
편안하고 든든한 안전생활터 조성	안전·안심 위협요인 저감	기반시설 안전성 확보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
		생활환경 규제 강화
		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재난에 강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Lifeline 긴급복구체계 구축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 대응력 강화
		피해지원 확대 및 조기 회복방안 강구
	안전한 배움터 확립	학교시설 안전관리 강화
		학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재난안전교육 강화

### 전략 1. 안전·안심 위협요인 저감

#### (1) 필요성 및 목적

- 충청남도의 지역특성상 시군과 읍면의 격차가 크고 자연환경도 상이함. 따라서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도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삶터와 일터, 배움터, 놀이터 등 안전생활터에서 도민들이 경험하는 주요 위험요인을 찾기 위한 방법을 정립해야 함
- 생활환경을 생활시설별로 구분하면 주거시설, 교육시설, 다중이용시설(병원, 요양원, 마트, 시장, 영화관 등),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사현장, 기간시설(도로, 교량, 철도 등) 등이 있고, 각 시설에 대한 안전관련 규제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 안전·안심의 생활환경은 단순히 규제나 제도가 있고 이를 적용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님. 도민 스스로 생활환경에서 느끼는 위험요인이나 경험하는 위험 상황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변화시킬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생활환경에서 적용하는 규제와 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통로를 개발한 후에 규제나 행정, 기술적 검토를 통해 반영하는 과정이 도입되어야 함

## (2) 추진과제 및 방향

### 추진과제① 기반시설 안전성 확보

-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대형 주거시설 및 대형 공급처리 구조물 등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도민 차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형 재난을 대비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함
- 시설안전 상시점검 기준 및 제도, 대형 구조물 시설의 성능 개선 및 보강 기준과 제도의 마련, 관리 매뉴얼, 대형 재난 시 피난 등을 고려해야 함
-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함. 주민 대피시설이나 이재민 보호를 위한 시설에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 도는 중추도시 생활권, 도농연계 생활권, 농어촌 생활권 등 다양한 생활권에 노출된 도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 인프라에 대한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특히 대형 시설물 및 사회 기반시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물 및 작업장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도심 및 산업 지역에서의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 기술을 개발해야 함

### 추진과제② 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

-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재난, 가축 질병, 다중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대형사고, 에너지 사고에 대한 지역 단위의 위험목록을 별도 작성·관리해야 함
- 우리 도에서 피해정도가 큰 사고 유형을 조사하여 계획단계, 설계단계, 확인단계 및 실행단계(PDCA)에서 예상 가능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민원 해소를 통해 사고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거점 의료센터 등을 중심으로 백신 등 의료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거점 의료센터, 보건소, 민간 의료원 등의 정보공유 및 취약계층 집중 관리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대형 주거시설인 다중이용시설물 및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대형 시설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도민 차원의 신뢰성 확보 및 대형 재난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함
- 중추도시 생활권, 도농연계 생활권, 농어촌 생활권 등 다양한 생활권에 노출된 도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 인프라에 대한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기술을 개발함

### 추진과제③ 생활환경 안전규제 강화

- 현재의 안전 관련 규제와 규정을 도민들에게 명확히 홍보하는 한편, 이에 대한 도민의 동의를 구하고, 일상생활환경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 환경, 자살 요인들을 찾아 안전 규제 개선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단계에서 확인된 규제와 규정은 다음 단계의 도민의견과 비교하여 개정, 폐지, 신설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도민의견조사, 공청회,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생활환경에서 경험하는 위기, 위험상황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원인을 분석하여 현실적인 안전관련 규제 및 규정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피상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해야 함

### 추진과제④ 폭력과 범죄로 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로 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그동안 폭력·범죄 예방 전략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의존해 왔으나, 지역사회안전망은 지방자치 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완성 가능함. ‘폭력과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sustainable) 지역공동체’는 21세기 국가 사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이며 향후 이 같은 경향은 지속될 것임
- 지자체는 지역 내 폭력과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① 범죄 위험 공간, ② 범죄피해 취약집단, ③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④ 지역주민의 두려움 수준을 조사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범죄 예방 전략은 범죄자들이 이성적 존재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지만 범죄자 중 일부는 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CPTED의 기계적 감시만으로 모든 범죄를 예방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주민의 책임감과 참여를 통해 기계적 감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함

## 전략 2. 재난에 강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 (1) 필요성 및 목적

- 재난피해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힘과 민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함. 재난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복원 기술 등을 개발함으로써 재난에 강한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재난 피해자는 매년 36만 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2차, 3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재난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재난 레질리언스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재난피해자를 위한 재난구호 체계 강화를 포함하여, 재난 발생 이전, 재난 발생 중, 재난 발생 이후 등 재난관리 전반에서 신속한 상황 반응과 생활 복귀를 위한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
- 미국은 2011년 9.11 테러 이후 월드 트레이드 센터 헬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와 관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당뇨, 천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7만 1,000명을 지원한 사례가 있음. 일본도 비경제적 맞춤형 재난구호 서비스를 통해 재난 레질리언스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 (2) 추진과제 및 방향

#### 추진과제① Lifeline 긴급복구체계 구축

-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같은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자연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인 수도,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물류 등의 기능이 중단되는 경우, 도민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
- 유사시 전기·가스·수도 등 라이프라인을 확보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전에 민간업자들과 ‘재난관리협정’을 맺어 재난이 발생하면 물자나 의료 지원, 긴급 수송지원, 이재민 수용장소 제공, 라이프 라인 복구 등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무상의 지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라이프라인 마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협요인과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발굴하는 단계부터 시작하고, 재난 발생 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중화, 백업, 로컬화 등 대비방안을 마련해야 함

#### 추진과제②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 대응력 강화

- 재난에 노출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충격에서 벗어나 재난 이전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역 경제력도 회복될 수 있음
- 우리 도의 맞춤형 민관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복력 향상을 유도하고, 놀이시설이나 놀이 콘텐츠를 통해 우리 도의 안전 문화 정착을 돕고, 이를 통한 재난 안전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

- 안전 체험 테마파크를 개설하여 스스로 안전의 대응자가 되도록 하는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해야 함. 안전지킴이 전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재난 유형별 또는 원인별로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을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충남 지역 문화와 결합된 안전놀이 콘텐츠를 개발하여 축제에 연계할 필요가 있음.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안전체험 콘텐츠 사업, 매뉴얼 교육 콘텐츠 사업, 부문별 안전 콘텐츠 사업 등을 위한 전담 인력 양성과 사업을 실시해야 함
-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적용한 재난 시뮬레이터 개발, 재난 체험 게임 기술 개발, 가족 체험형 대국민 교육훈련 콘텐츠 개발, 현장 대응 조직을 위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충남 맞춤형 재난 안전 콘텐츠 개발 등이 요구됨

### 추진과제③ 피해지원 확대 및 조기 회복방안 강구

- 현행 구호체계는 그 대상이 자연재해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원 항목도 경제적인 부분에 국한됨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구호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함
- 또한 구호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 장애인이나 노인 등 구호 약자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재난 피해자의 성별, 장애유형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구호가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재난 및 범죄 피해자 커뮤니티 회복력 향상을 위해 재난 피해자와 범죄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심리 회복 지원 센터를 마련하고, 우리 도에 적합한 회복력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재난피해 이후 지역사회 전체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단순 피해 복구 지원뿐만 아니라 산업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전략 3. 안전한 배움터 확립

### (1) 필요성 및 목적

- 미래세대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별히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초·중·고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배움터 여건 마련이 필요함
- 그동안 영아기부터 성인 이후까지 약 3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학교 주변의 안전 환경은 여러 이해관계에 의해 차순위로 분류되어 왔으며,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학교 시설의 설계와 디자인 등으로 유발되는 사고위험을 감소하고, 학생들의 일상생활 중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재난 및 안전관리는 생명의 존엄성을 실천하는 과정이므로 생명존중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미래 사회 안전에 대한 실효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음

## (2) 추진과제 및 방향

### 추진과제① 학교시설 안전관리 강화

-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현재 학교 시설에 대한 지진 대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내진설계 보강은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진 성능에 대한 평가와 우선순위 선정이 요구됨
- 우선순위 평가시에는 재난으로 인하여 사회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려가 필요함
- 평상시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 안전 체크리스트를 보급하며, 학교 시설물 점검을 위한 평가단을 운영
- 학교 뿐만 아니라 주요 청소년 이용시설인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관리와 수련활동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함
- 학교 내에 소규모 안전체험시설을 운영하여 평상시에는 재난 체험시설로 활용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피난소 기능을 병행하도록 유도함

### 추진과제② 학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재난안전교육 강화

- 학교 안전교육에서는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세대 안전교육의 지표로 삼음
- 지역주민과 공무원,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주변지역의 위험요소를 찾아보고 함께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참여형 교육을 병행

### [목표 3]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실현

-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음. 따라서 국민 일반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짐
-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고 안전이 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자존감을 존중하는 것은 복지에서 강조되어야 함. 안전복지는 자선활동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는 사회적 정의의 실천 영역
- 안전복지는 생활환경에 잠재해있거나 내면적인 위험요소까지 해결하려는 예방적 복지이며, 사고발생 이후 치유와 자활지원 등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형태의 안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 복지임
- 저소득층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에 대한 경제적 대응능력도 부족하며 이는 저소득층의 추가적 계층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자활과 참여, 개인과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관계맺기 등을 통한 인식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전환되면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안전복지의 핵심임

목 표	전 략	추진 과제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실현	안전정보 접근권 확대	안전정보 공개 시스템 확대
		재난안전관리 정보수집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
		도민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한 안전정보 전달체계 마련
	수요자 중심 안전 서비스 체계 구축	도민의 안전요구 파악을 통한 맞춤형 지원
		지역복지시스템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	관리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적 관계 복원을 통한 안전 확보

#### 전략 1. 안전정보 접근권 확대

##### (1) 필요성 및 목적

- 재난 발생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왜곡된 정보 등으로 인하여 위기가 증폭되거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 전달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일원화된 홍보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언론 브리핑과 관련한 체계화된 매뉴얼이 없으며, 일원화된 언론창구도 없어 정부의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불신이 가중됨



- 최근 재난 및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재난안전에 대한 관리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재난안전취약계층은 여전히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사회, 경제, 문화 등 삶의 많은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 기존의 재난안전 분야의 서비스 정보는 주로 다양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국가 정책의 개발과 국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며 생활안전 분야의 정책개발과 국민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실정임
- 따라서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과 시스템을 개발하여 재난안전취약계층의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 추진과제 및 방향

### 추진과제① 안전정보 공개 시스템 확대

- 도민 누구나 안전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분산되어 관리되는 다양한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과 공유가 가능해야 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련 정보를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달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폭넓고 다양한 재난안전정보의 공개가 필요함
- 현재 부서별, 지역별로 안전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고, 관리주체가 서로 달라 정보공유 및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질의 재난안전 DB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주민에 대한 재난안전 정보의 공개는 자치단체의 단순 정보 제공에 그쳐서는 안 됨.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전정보와 자료를 공급하고 공유해야 하고 복합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함
- 도민들이 위험에 대한 이해와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도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에 대응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 추진과제② 재난안전관리 정보 수집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

- 재난안전정보체계는 도민의 능동적 참여하에 구축함으로써 도민이 직접 사용하기 편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이러한 도민 참여형 재난안전정보체계(망)의 목적은 지역적 위험으로부터 지속적이며 일상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보체계 구축(H/W) 및 달성하려는 요소들(S/W)임

- 주민재난안전정보망은 공공재로서 충남도 내의 위험에 대한 지역성과 주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실현하고 주민안전 최하한선을 보장하려는 것임
- 기존에는 중앙주도로 이루어졌던 정책과 사업들이 지역과 주민 중심으로 그 주체가 변화하고 있으며, 국가와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함
-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대비를 위해 국지적 공간정보가 우선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 내의 재난안전정보를 통합하고 공간정보를 수집해야 함
- 지역의 재난안전 상황에 친숙한 주민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재난안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주민이 주도하고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협력적 모델이 바람직함. 우리마을 재난안전 지도 작성 워크숍 등 주민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개발해야 함

### 추진과제③ 도민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한 안전정보 전달체계 마련

- 도민의 접근편의성이 고려되지 않은 안전정보의 매체는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정보 매체를 개발해야 함
- 충남도민의 재난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정보공동이용센터(중간 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 재난안전 정보공동이용센터의 운영은 분산 처리되는 정보를 충남도가 모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충남도 및 도내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망으로 연결(linking)해주고 각 기관이 어떤 종류와 어떤 형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내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 정보의 제공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접근편의성을 고려한 모바일 기반 재난안전정보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에게 재난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모바일 웹/앱을 개발하여 서비스하는 방안이 가장 체감도와 접근편의성을 높일 수 있음

## 전략 2. 수요자 중심 안전서비스 체계 구축

### (1)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인적·사회적 재난의 발생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안전한 삶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욕구가 커지고 있음
- 서비스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안전서비스 수요자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지역별·개인별 속성 및 재난안전 체감 항목 정의를 통해 가구별 재난안전 유형을 확인함으로써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개인은 서로 다른 생활환경에서 각기 다른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역시 개인별 상황에 맞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재난안전 관련 민원데이터나 SNS Buzz 분석 등에 의한 보다 세분화된 도민의 재난안전 니즈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도민 안전서비스 기반을 구축해야 함
- 지금까지는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팽배해 있고 위험정보에 대한 소통이 부재함에 따라 각종 재난에 대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등 국민 체감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 (2) 추진과제 및 방향

### 추진과제① 도민 수요 맞춤형 지원

- 적극적 안전복지 지원체계의 구축은 적극적 안전 복지(positive safety welfare)가 사후적 재난 및 안전 대응에 대한 대안으로 안전 영역에서의 자율성과 개인적, 집단적 책임을 통한 사전적 안전 확보를 지원하려는 체계의 구축을 말함
- 지역의 안전수요 증가 및 도민의식 향상은 안전에 대한 다양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 단체 및 기관, 의용소방대 등과 연계하여 안전복지가 필요한 이웃에게 맨투맨 안전복지 지원이 필요함
- 안전복지는 보편성에 입각하여 운영하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며, 특히 우리 도의 다양한 상황을 잘 반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 도는 타 지역에 비해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고령자에 대한交通安全 심각성도 높음. 따라서 도민의식 향상에 따른 복지사회 구현 요구와 함께 안전 수요 증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아동, 장애인, 고령자, 국내체류외국인, 여성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지역 내부에 권한이나 직책, 능력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과 작용이 존재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주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안전복지 컨설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자살은 충동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으므로 고층 아파트 옥상이나 교량 등에 자살방지 문구를 넣거나 맹독성 농약 판매시 이를 주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상담인력을 투입하여 자살위험에 놓이는 사람들의 마지막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추진과제② 지역복지시스템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사회안전망은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공공근로사업, 취업훈련 등을 포괄하는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민복지 기본선을 보장하려는 것이며, 안전이 최선의 복지라는 안전복지 기본선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

- 안전취약계층의 안전복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복지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함. 부서별, 생애주기별, 대상별, 장소별, 유형별로 분산되어 있는 안전복지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재난약자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기존에 마비되어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던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종합 안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재난 약자의 경우는 안전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정보와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 재난안전취약계층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함께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는 고충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함
- 농산어촌이 많아 인구밀집도가 떨어지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낙후된 우리 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재난약자의 소외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방안을 시군단위에서 추진해야 함

### 전략 3.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

#### (1) 필요성 및 목적

-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은 매우 미흡함
-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을 야기하는 위험인자로부터 피해받기 쉽거나 받은 피해로부터 복구행위가 어려운 사람 또는 계층”(심기오, 2010: 9)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재난약자, 재해약자, 안전약자, 재난 취약자, 재난취약계층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이은애, 2008; 심기오 외, 2010; 김윤희 외, 2012; 오금호 외, 2013)

표2-1. 국가별 재난취약계층의 기준

국가	용어	정의	대상
미국	vulnerable people susceptible to attack [재난(취)약자]	재해 대비·대응·복구에 있어 제공되는 기본 장비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육체적·정신적 장애인(시각·청각·인지·지체), 영어를 못하는 사람, 지리적·문화적 고립자, 의학적·화학적 의존자, 집이 없는 부랑자, 신체적 허약자 및 어린이 등
일본	재해약자 [災害弱者]	위험관리능력, 정보입수·발언능력 및 행동능력에 제한이 있는 자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유아, 임산부 등
한국	재난약자 재난취약자 재난취약계층 안전약자 안전취약계층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각종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촌 거주자 등	어린이,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외국인 등

- 일본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 ‘방재백서’(内閣府, 1987)를 비롯한 각종 문헌에서 나타나기 시작함. 방재백서는 재난약자를 “재난 시에 일련의 행동을 함에 있어 핸디캡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 (Nemoto·Ariga, 2014: 3)하고 있음
- 미국은 재해 대비·대응·복구에 있어 제공되는 기본 장비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재난약자로 정의하고, 주요대상으로는 육체적·정신적 장애인(시각·청각·인지·지체), 영어를 못하는 사람, 지리적·문화적 고립자, 의학적·화학적 의존자, 집이 없는 부랑자, 신체적 허약자 및 어린이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한국은 재난약자를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각종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촌 거주자 등(소방방재청, 2013)으로 정의하고, 그 주요 대상으로는 어린이,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외국인 등이 됨
-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각종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는 재난취약계층이 작은 것 하나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누리는」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함
- 재난 시 보호가 요구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대피를 돕는 문화를 확산하고, 집단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대피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며,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재난안전 정보 제공에 주력해야 함
- 재난 복구 및 구호 시 여성을 고려한 인력, 시설 및 물자 확보와 지급 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하며, 이주여성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2) 추진과제 및 방향

### 추진과제① 관리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안전은 기본, 최우선 가치’, ‘안전투자는 이익’ 등 안전혁신 패러다임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으나 안전은 기업이나 기관의 이익 보장과 관계없이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서 사고와 안전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이자 감시자인 도민, 그중에서도 안전에 취약한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행정기관은 안전에 대한 시책을 강화해야 하며, 고용주는 장애인 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시설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
- 안전에 대한 투자 성과를 측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안전 투자에 따른 위험 저감 정도, 재해 감소 정도, 안전관리체계의 변화 등을 통해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우수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유도가 필요함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는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공급자 적합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실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추진과제② 사회적 관계복원을 통한 안전 확보

-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한 이들은 범죄의 위험, 재난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며, 여성이나 1인 가구도 범죄의 표적이 되고, 독거노인 증가는 고독사 및 노인 자살의 위험을 키움
- 우리 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노인인구, 거주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는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함
- 지역이 공동의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안전 확보에 중요하며,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지역사회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 취약계층을 지역이 함께 돌보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복지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지역사회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시설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시각 차이가 존재함. 도민의 주관적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 공유가 있어야 함
- 단순 물품지원이나 후원에서 벗어나 주민들과의 관계 복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실현함.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경제적 빈곤, 1인가구 등 고립과 우울 속에서 분노조절 장애 및 자살충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사회관계망 복원을 통해 해결함
-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을 타개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 좋은 예로 공동부엌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 스스로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마무리까지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립에 빠질 수 있는 주민들을 일상적인 사회관계망으로 이끌어낼 수 있음

## [목표 4]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 운영

- 시스템이란 각 구성 주체들이 제대로 작동된다는 전제 조건을 지님.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 내 관련 부서와 모든 민간 자원이 질서정연하게 작동해야 함. 안전행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전문가들이 시스템에 의한 업무수행이 가능하기 위한 선진적 운영이 필요함
-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도민이 지닌 위험 인식의 특성을 바탕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함. 소통은 일반 도민의 안전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신뢰는 소통의 전제가 됨.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정부가 도민으로 부터 신뢰받을 수 있고, 중앙과 지방, 정부와 도민의 인식 격차를 줄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목 표	전 략	추진 과제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 운영	권한과 책임을 지닌 안전자치 구현	안전자치 구현 방향 정립을 위한 법제도 구축
		자치역량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실질적인 현장 대응능력 향상	동원자원 통합관리체계 및 공동활용시스템 마련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
		재난대응 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행정지원 시스템 강화	재난안전 관련 계획 및 매뉴얼의 실효성 강화
		재난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재난안전 성과평가 및 결과활용체계 구축
		생활안전 골든타임 확보

### 전략 1. 권한과 책임을 지닌 안전자치 구현

#### (1) 필요성 및 목적

- 현재의 중앙정부 중심 재난관리체계와 지방 관련조직과의 연계성 부족에 따라 재난대응에 있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우선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 명확한 역할 재정립 등이 필요함
- 재난 발생 시에 관련 기관 간 권한의 불균형이 존재하여 명령체계의 혼선이 있음. 또한 중요한 점은 평상시의 역할 및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방서, 지방경찰청, 기타 유관기관들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이 어렵고 이들 기관은 자신의 고유 업무영역에 대한 간섭과 지시를 기피하기 때문에 협력체계 구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우리 도는 큰 틀에서 재난과 안전관리를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적 분산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안전자치의 구현은 충남의 재난 및 안전 현황에 적합한 개별 전문부서의 분산된 사전관리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위기상황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집중된 대응 네트워크 체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관에서의 관련 부서 및 인력의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을 위하여 명확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현재의 위치를 분석하고, 기관의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부서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며, 재난안전 조직 및 인력의 위상 재정립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 확보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권한과 책임을 지닌 안전자치의 구현”전략은 충남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자치 구현방향 정립, 자치 역량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함

## (2) 추진과제 및 방향

### 추진과제① 안전자치 구현방향 정립을 위한 법제도 구축

- 현장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에 대한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적 대비가 필요하며, 평상시 생활안전 및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방법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관리 역할을 자체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체계는 재난발생 시의 긴급구조 활동에 대해서는 지역 통제단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의 대응활동에 대해서는 지역대책본부가 지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난 현장에서는 긴급구조 활동과 그 밖의 재난대응활동이 쉽게 구분되지 않을 우려가 높으므로 지휘체계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단계에서 지역대책본부와 지역통제단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에서 현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임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 또한 존재함
-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관리 책임, 긴급구조 및 사고수습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역할 분담 시 자치단체의 분명한 대응력 강화를 규정한 입법예고를 시도하거나 지침 또는 조례 규정(안) 마련해야 함
- 자치단체 내 실질적인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통합이 정책 대안임. 우리 도가 주도하여 통합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한 물리적인 공간 즉, 소방조직과 경찰조직, 그리고 중앙정부 조직 등이 상시적으로 정보공유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스마트 재난대응통합 센터(가칭 스마트 빅보드 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임



## 추진과제② 자치역량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 안전자치는 충남에서 재난과 안전관리를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충남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적 분산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함. 안전자치의 구현은 충남에 재난 및 안전 현황에 적합한 개별 전문 부서의 분산된 사전관리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위기상황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집중된 대응 네트워크 체계로 이루어져야 함
- 안전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재난안전 기관들과의 단일기관적 수직적 협력 및 지원체계는 효과적이지 않고 불가능함. 이에 지방정부 중심의 현장 공조 및 협업체계 구축, 수평적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중앙정부는 지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신뢰관계가 우선 되어야 함
- 미국의 경우 재난에 관한 초동 대응기관은 지방정부로 정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과 조정의 업무를 수행함. 지방정부는 재난발생 시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양한 수준에서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 재난대응기관들은 자신의 고유영역을 고집하며 간섭과 지시를 기피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지방의 재난안전 업무협력체계를 명확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평상시의 협력 체계가 재난발생 시에 작동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갖추고 이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함
- 이는 지방정부의 조직진단과 관련기관의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안전 관련업무 및 기능의 연계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활용 가능한 동원 자원(인적, 물적, 시간적)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 자원동원 네트워크 체계를 우선적으로 확립해야 함
- 공공부문의 업무적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민간의 전문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동원 및 활용 체계를 갖추어야 함.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는 행정역량 강화와 민간부문의 적극적 협력 역량 강화의 두 축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전략 2. 실질적인 현장 대응능력 향상

### (1) 필요성 및 목적

- 지자체, 소방, 해경 등 각 분야별로 독립된 재난현장 지휘체계 및 재난대응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표준화된 통합지휘체계가 미흡하여 현장대응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재난의 확대 단계별로 현장에 투입되는 실무반을 사전에 규정하지 않아 돌발 상황에서 현장대응의 혼란이 나타나고 있으며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재난대응 물자, 장비, 인력 등이 현장에 제공되어 자원이 부적절하게 제공되거나 낭비되는 실정임
- 전문성 확보는 재난안전 경력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유관 조직과 업무를 반영한 경력지도를 구체화 해야 하며, 경력지도에 의한 배치와 필요한 직무역량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재난수습에 필요한 동원자원 관리, 재난유형별 전문가 지원, 재난현장 수습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자의 동원과 관리가 요구됨
- 재난구호 및 복구를 위한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장비 동원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여 응급조치의 지연이 발생함
- 언론의 건전한 역할이 필수적임. 재해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과 재난발생시의 복구 지원, 재난 대응 요령에 관한 교육 등에 있어서 언론의 참여의지를 확대하여야 함

## (2) 추진과제 및 방향

### 추진과제① 동원자원 통합관리체계 및 공동활용시스템 마련

- 재난대응 동원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자원을 장비, 자재, 인력 등의 분야로 분류하고, 재난유형별로 핵심자원·특수자원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각 공공·민간기관과 단체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연계·통합하여 관리하고 필요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함
- 공공활용시스템은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산을 위한 기능을 포함함
- 도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유형별로 필요한 지식·판단·기술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악하고, 이들을 관리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충남 재난유형별 전문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함
- 충청도에서 발생하는 재난유형과 규모별로 필요한 민간 자원봉사자의 규모를 추정하고, 민간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교육·훈련하는 민간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추진과제②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

- 공공영역에 재난을 비롯한 각종 대형사고와 같은 다양한 위기발생 가능성이 커짐. 도민들은 자연재난보다 개인이 대비하기 어려운 사고에 주목하고, 안전사고 이면의 배경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됨
- 사고발생 경위가 사회문제와 결부될 경우 부정적 여론 형성의 가능성이 커지며, 위기 자체가 가져오는 위협보다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된 정보 등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인한 위기의 증폭과 사회적 갈등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함으로써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2차적인 사회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도민의 안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및 각종 사고 상황을 대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을 위하여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개념, 범위, 내용을 정립하고, 국내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사례, 우리의 현황 및 실태 분석을 실시함

### 추진과제③ 재난대응 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 현재의 분산적 안전관리 운영체계 하에서는 기획 및 조정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관련 부서와 산하 기관과의 상호 협력이나 협의·조정 필요성이 낮음. 이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시책과 사업의 중복과 비효율, 예산 낭비 및 업무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내포함
- 실질적인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총괄부서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의 공유 및 표준화, 부서간 실질적 의사소통과 협치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경찰청, 교육청, 군부대 등 대외기관들을 포함하여 의료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위하여 정례적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 이밖에도 실무자들의 수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함
- 국제적인 교류 협력은 활성화되지 않은 영역이지만, 최근 이슈가 되는 미세먼지와 감염병 등 재난관리 환경이 국제적으로 노출되는 경향을 피하기 어려우며, 우리 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
- 장기적으로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하여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진 안전관리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
- 중앙정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협약체결 및 공동사업 추진, 재난 대응 합동훈련 방안을 마련
-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리 관련 국제 행사를 개최 또는 참여하여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기후 환경이나 재난특성에 맞는 선진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

## 전략 3. 행정지원 시스템 강화

### (1) 필요성 및 목적

- 재난안전을 위한 계획은 세부적인 투자 우선순위와 자원조달, 전 과정에서의 성과 착안점 등이 명확해야 함. 그러나 현재의 계획 및 매뉴얼은 추상적이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제적 가이드가 될 수 있는 활동의 구체화가 미흡함. 이는 성과지표의 측정요소와 측정방법의 구체화로 보완될 수 있음

- 지방정부의 재난안전관련 행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집행 또한 제한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많은 한계와 새로운 위기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난안전 행정에 관한 주민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음
-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상이하고 재난에 의한 피해수준과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동일한 역할과 기능, 재해복구 및 보상 등 중요시하는 현재의 재난안전시스템은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이에 지방정부의 재난안전시스템은 지역현실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재논의와 재정립이 필요함
- 지방정부에서는 부서별 중복된 예산낭비 우려가 존재하고, 재난예방에 대한 예산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시에 재난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예산은 신규사업 예산으로 간주되어 편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주로 복구예산 중심으로 전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예방사업에 있어서는 예산부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계획과 매뉴얼 운용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임. 이는 실제 계획만 존재하고 평가와 환류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2) 추진과제 및 방향

### 추진과제① 재난안전 관련계획 및 매뉴얼의 실효성 강화

- 지역현실을 반영한 중앙-지방, 지방정부 조직 내, 지방정부-협력기관, 공공부문-민간부문, 또한 상호 교차적 네트워크 방식의 재난안전계획 수립을 통한 실행 가능성 확보가 필요함
- 실제적으로 재난안전계획의 구체성과 표준화된 대응매뉴얼이 부족한 경우 초기대응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 마련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집행 노력이 필요함
- 사전 협의된 많은 계획들이 재난대응에 활용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통일화되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과 매뉴얼을 수립해야 함
- 우리 도의 재난안전 계획 수립은 내부 부서를 포함하여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협력기관 등이 작성한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론 및 실무 전문가를 활용하여 충남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실제 계획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중심의 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수요자는 매뉴얼 활용의 대상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주민이 될 수도 있음
- 수요자 중심의 현장중심 안전관리 계획은 용어의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에서 시작하여, 지역의 지리적 정보, 지역 재난관련 특성, 재난관리 단계별 수행 활동 시나리오 등이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되어 있어야 함

### 추진과제② 재난정보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 초동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상황을 분석·판단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시에 상황을 전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재난 및 업무 영역에 따라 분산된 재난관리체계에서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자원을 공유하고 표준화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과 저비용의 전파망 구축이 필요함
- CCTV, 센서 등 첨단 ICT 장비를 통한 정확한 재난정보 수집하고, Big Data 재난상황 수집·저장·분석을 통해 재난을 예측하며 지상파·지역유선방송, IPTV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해야 함
- 현재 분산된 재난대응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플랫폼(Smart Screen)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상황실과 현장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야 함
- 재난안전 포털을 통한 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과 기관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재난관리 선순환 구조의 기반이 됨. 다양하고 정확한 지식정보는 행정시스템과 연계되어 활용되어야 함. 또한 유관기관과의 상호 지식공유 체계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임
- 재난관리 초동대처에 있어서 관련 정보의 부정확성 및 왜곡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즉 재난 시설정보와 인력, 기술, 장비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활용하여 재난대응 및 복구에 활용해야 함
- 예방단계에서의 재난정보는 주민들에게 재난의 위험성과 대응요령에 관한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음
- 구축된 재난 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언론의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함. 문제점을 지적하는 고유의기능과 함께 재난의 예방과 대응책을 홍보하고, 나아가 언론기관에서 수행한 과학적, 객관적 규명 내용을 지식으로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재난 정보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 상호협력의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 추진과제③ 재난안전 성과평가 및 결과활용체계 구축

- 성과는 조직의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산출하였는가에 대한 기관의 핵심활동의 산출 또는 결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재난안전 성과평가는 관련된 목표를 유관 활동을 통하여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임
- 재난안전의 성과관리체계는 조직업무평가, 자원의 합리적 배분, 구성원의 동의와 공감, 조직의 방향성 제고, 기관에 대한 신뢰성 확보, 구성원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략중심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업무성과의 개선하는 기본적 성과관리 목표달성을 통하여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성과관리의 기반인 전략기획(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구성 중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구체성, 신뢰성 확보에 있음

- 성과지표의 명확한 설정, 성과달성을 위한 활동의 측정방법 구체화가 우선되어야 함. 또한 유용한 정보에 의한 측정값의 활용가능성, 전체 업무 활동 반영의 적절성 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세부 성과산출방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이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재난안전 행정의 방향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추진과제④ 생활안전 골든타임 확보

- 비상시 골든타임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을 발굴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규제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구조 시간을 확보해야 함
- 시설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법은 있으나 지원이 미비한 경우를 발굴하고, 일상적인 상황(비 응급 상황)에서 기초질서 및 규정준수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
- 골든타임 저해 요인을 사고 유형별로 발굴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초기 대피요령과 응급 구조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 조기 발견과 상황전파를 위한 역량 강화,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과 인명 구조 활동, 응급의료소 운영, 광역 출동 및 지원기관 현장 활동 순으로 진행
- 이를 위해 대응기술 및 인프라 확보 노력이 요구되며, 신종 및 복합재난을 대비한 전문가 모임을 구성하여 대비해야 함
- 응급대응 훈련이 관계기관 상호간 통합적 대응 형태로 이루어지고 구급대응훈련의 추세가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긴급구조통제단 출동체계 가동 및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으로 이루어짐. 이를 통해 구급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현장지휘소와 현장응급 의료소 간 지휘·보고체계 확립, 유관·단체 기관간의 임무의 적절성, 이송환자 현황 등에 대한 SNS단체 카톡방 공유 현황 등 대형재난 발생 시 대응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함
- 응급환자 구명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 복지부는 닥터 앰블런스와 이동형 병원 등을 기술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이를 우리 도와 연계하는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피해자 위치정보 조회를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인명구조와 관련된 우수 자원을 모집하고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목표 5]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구축

-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에서부터 안전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타협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 정책의 모든 과정이 공개되고 지역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 정부, 시장, 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협력할 때 공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임
- 지역의 안전거버넌스 구축은 스스로의 주체적 역량을 키우고 토론과 합의를 추구하는 문화적 성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행정기관은 거버넌스의 구동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실시해야 함

목 표	전 략	추진 과제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구축	도민주도형 안전활동 영역확대	자율형 도민 안전모임 활성화
		리더 안전역량 강화
	다양한 형태의 안전 네트워크 구성	생활안전 협의체 구성
		주민 주도 안전마을 육성
	지역특성에 기반한 안전거버넌스 운영	지역공동체 맞춤형 안전거버넌스 모형 개발 협치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운영

### 전략 1. 도민주도형 안전활동영역 확대

#### (1) 필요성 및 목적

-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네트워크는 물론 그 구성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기능적, 영역적 범위를 확장하고 그에 따른 분명한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 안전거버넌스의 경우, 정부부문 주도 방식이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는 태생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시민주도형의 자율적 참여를 강조한 상향식 시민안전 공동체 구축으로 안전거버넌스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안전거버넌스의 범위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안전협의체 구성이 필요한데, 안전 관련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평가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안전거버넌스의 영역을 보다 확대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일본의 공조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시민이 주도가 되어 안전마을 만들기와 같이 주민밀착형 생활안전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시민 참여 활성화와 운영의 정례화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안전진단 정례화 모델 개발이 요구됨

- 이를 통해서, 하향식 안전 협의체 구성이 아닌 시민 주도의 방식의 시민안전공동체구성과, 안전거버넌스 활동영역의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네트워크의 기본 속성인 확장성이 강화되고 참여와 교류도 활성화 되어 활발한 안전거버넌스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음

## (2) 추진과제 및 방향

### 추진과제① 자율형 도민 안전모임 활성화

- 도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사회 안전공동체를 도민 친화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도민 자율에 기초한 생활 속 안전문화를 실현해야 함
- 도민 안전모임은 지역사회의 안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방안임. 충청남도 안전은 ‘스스로 안전, 나부터 안전, 이웃을 위한 안전’의 슬로건을 바탕으로 안전모임을 개별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도에서 시간적·공간적 지원을 통해 도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함
- 자율형 도민 안전모임은 지역 주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직하고, 나아가 사업장 안전모임, 산악회 안전모임, 학교운영위원 안전모임, 경로당 안전모임 등 직종 및 연령별로 안전모임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생활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방법을 개선하고 선순환적 안전신고시스템을 정착하는 한편, 신고사항을 데이터화 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함

### 추진과제② 리더 안전역량 강화

-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의 파급효과 측면에서 어느 계층에 대한 교육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조직 내 리더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이를 해당 기관의 하부조직으로 파급하는 교육방식이 바람직함
- 경영층의 안전 전문성 확보와 의식 내재화를 통해 업계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해야 함. 직장 내 관리자 인식전환으로 선진 안전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자기실현적 예언이 필요함. 아차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질책, 비난하는 대신 칭찬을 할 수 있는 ‘No blame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업종, 공동체 등 각 분야 대표자를 소그룹화 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교육을 우선 실시함. 안전 리더가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직접 안전 교육 및 활동을 주도하게 하고, 참여도 제고를 위해 안전리더 교육 실시 및 수료 대상 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 대상과 직능에 따른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대상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과정 예산을 편성 지원함



## 전략 2. 다양한 형태의 안전네트워크 운영

### (1) 필요성 및 목적

- 기존 안전거버넌스가 연령과 문화 등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고, 일부 중복성과 비효율의 측면이 있음
- 기존 조직들을 대상으로 세대와 문화 및 계층을 고려한 생활안전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자원봉사자와 민간부문 등 협력체제로 활용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에 의해 다양한 안전관리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2) 추진과제 및 방향

#### 추진과제① 생활안전 협의체 구성

- 생활안전협의체는 기존의 다양한 지역사회 방재관련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대안조직으로써 생활권 단위의 안전활동을 위한 기존 조직 및 민관 협력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도민 주도형의 기구로 구성
- 마을 또는 동 단위의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 발생시 이를 중심으로 맞춤형 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생활권 단위의 안전활동과 홍보를 통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함
- 지역공동체 또는 생활공동체에서 안전거버넌스의 토양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차이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구성원 간 상호 협동과 학습 그리고 선의의 경쟁 구도가 필요함
- 주민밀착형 생활안전네트워크는 첫째, 정부와 민간지원주체가 중심적 역할과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하고, 둘째,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셋째, 지역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 안전네트워크의 최종적인 책임자이나 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협력·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지방교육청, 지방경찰청을 비롯한 행정 관계기관의 협력을 연계 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생활안전 협의체의 구성단위는 마을 또는 동 단위의 생활권 단위가 되며, 구성원은 주민, 단체, 활동가, 학교, 병원, 치안센터 등이며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발생시 복구활동을 지원함

#### 추진과제② 주민주도 안전마을 육성

- 지역 공동체 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경제공동체(마을기업, 정보화마을 등), 생활공동체(희망마을, 주민자치회 등), 사회공동체(새마을 운동 지역 공동체 사업, 새마을 금고 지역공헌 사업 등) 등으로 구분되어 논의되고 있음. 이에 재난안전 공동체(안심마을 등)의 새로운 구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재난극복을 위한 지역별 취약성 발견과 지원이 가능함

- 안전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영유아, 여성 등)과 안전사각지대, 재난취약 구조물 밀집지역 등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지표 개발하여 도정에 반영해야 함. 재난 징후로 인한 사전 점검을 의무화 할 수 있는 조례 입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재난취약시설 안전지도 구축 및 운영. 이를 통한 안전점검, 점검반영 또는 점검문제 이력 등을 종합적 관리 방안이 제시되어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음. 충남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마을 만들기 추진해야 함. 재난안전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구축하여 위험에 대한 사전인지 및 초기 대응을 위한 지역 자율 협력체계 구축해야 함
- 지역별로 취약성을 스스로 발견하여 주민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조성하여 지역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주민사업으로 연계해야 함. 충남의 재난안전 지역 공동체 복원 및 형성에 관한 연구와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TF가 구축되어야 함
- 내 지역의 생활 안전을 위한 생활 안전 민원을 취합하기 위한 투자 필요. 충청남도 학교 재난 취약성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지킴이 인력으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또한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이 스마트 안전 귀가를 위한 실시간 정보 플랫폼 구축하여 주민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주민 안전망 운영
- 문화재 안심 공동체, 산림해양 안심 공동체와 같이 재난유관기관 상시적 협의체 구성하여 안전점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용자 및 관리자를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하고 비치해야 함. 관련 관리자 및 해설사 등의 모의훈련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유도
-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병행(안전교육, 예방, 안전산업 등), 입상작은 지역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으로 연계하여, 선정된 제안자가 안전정책 입안자로 이력 관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참여를 유도

### 전략 3. 지역특성에 기반한 안전거버넌스 운영

#### (1)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도의 경우 권역별로 재난 발생 유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시군별로 획일적인 안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천안, 아산 등의 북부 도심권역의 경우 화재 등 도시형 재난 발생 빈도가 높고,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등의 서해 해안권역은 해양 재난의 발생 빈도가 높으며, 청양, 부여,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등 내륙 동남권의 경우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어 특히 태풍, 홍수 등 풍수해 피해가 많음
- 따라서 지역특성에 기반한 안전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도시형과 농촌형을 구분한 안전 거버넌스 모델 개발이나 거버넌스 작동을 위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재난안전 훈련 프로그램 발굴과 안전거버넌스 활동 지원이 요구됨

- 우리 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형과 농촌형의 두 트랙 안전거버넌스 모델 개발이 필요한데, 철저하게 지역의 특성에 기반하여 운영과 성과창출을 도모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지역 내 기존의 형식적인 안전네트워크가 보다 실행력을 갖추고 실질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기반 마련 및 여건 조성과 같은 인큐베이팅이 가능함

## (2) 추진과제 및 방향

### 추진과제① 지역공동체 맞춤형 안전협거버넌스 모형 개발

- 공동체의 유형과 규모, 안전 및 재난 서비스의 특성과 수요 유형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안전 거버넌스 모형을 개발해서 제공함으로써 자율성과 작동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수요자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참여와 수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안전거버넌스 조직의 생명력인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함
- 생활기반의 다양한 안전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 협동조합(協同組合, co-operative)은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소생산자나 소비자가 서로 협력하여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상호복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출자에 의해 형성된 기업을 의미함
- 따라서 안전총남 비전이 지향하는 안전 취약계층 또는 안전 약자들을 우선한다는 의미와, 주민이 자치행정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PROSUMER(생산자+소비자)라는 관점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지속가능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의 자원을 투입하고 융합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시형과 농촌형 등 다양한 안전거버넌스 모델 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조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원인에 따라 자율성, 전문성 및 책임성을 부여는 물론 활동 공간과 연건 등을 조성하여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 도시·농촌별/ 시장/ 산업 등 참여와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음
- 안전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영유아, 여성 등)과 안전사각지대, 재난취약 구조물 밀집지역 등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도정에 반영해야 함. 재난 징후로 인한 사전 점검을 의무화 할 수 있는 조례 입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지역별로 취약성을 스스로 찾아 주민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지역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주민사업으로 연계해야 함

---

## 추진과제② 협치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운영

- 협치를 통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안전정책 전 영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기획하며 집행과 평가를 함께 공유함. 도민 안전 확보에 있어서 실질적 시민생활 향상을 위해 상존하는 문제를 민관이 협력하여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문제 해결형 협치를 실현하기 위함
- 시민은 관련 당사자, 위원회, 시민단체, 전문가로 활동하며 도는 소관 부서에서 역할하는데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중간지원조직에서 담당하도록 함
- 기초자치단체 별 협치 지원조직을 두어 지역주민과 시장 군수, 행정부서, 시민단체 등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촉매역할을 담당하고, 지역공동체 기반 형성 정도에 따라 협치의 한 축으로서 도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기능을 수행함
- 지역공동체 기반이 미약한 경우에는 주민모임을 활성화 하고, 안전교육 및 홍보, 안전 리더를 발굴·육성, 안전 위해요인을 조사·발굴하는 역할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주민 중심의 자율적 참여와 안전 관련 다양하고 종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함
- 중간지원조직은 기존의 마을만들기 지원조직과 연계하여 안전 관련 활동과 기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임

# III

안전충남 2050  
실행계획 전략수립



---

# 01

## 실행계획 수립 방향

### 1) 기본방향

#### ▶ 다양한 시책 주체와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소통

- 행정기관 주도의 일방적 계획이 아닌 도민, 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여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 작성
  - 비전 수립과정에서 도민과 관련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하여 도민의 안전 민감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비전 수립
  - 도민 안전을 위한 비전 수립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이후 정책 추진과정에 도민의 합의 유도

#### ▶ 세미나·토론회를 통한 도민 공감대 확산

- 도민 한사람 한사람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모든 자연적·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사람, 경제, 환경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상생과 균형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 안전에 취약한 저소득층,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 약자들도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
  - 시설물 위주의 구조적 안전대책을 보완하여, 생활안전, 산업체 안전, 도민참여, 안전 문화 등 비구조적 대책을 보강함으로써 구조적 측면과 비구조적 측면의 균형 도모
- 도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함
  - 전문가와 도민, 공무원이 참여하는 토론회 정보 교류 방식으로서 세미나, 토론회 개최

### ▶ 재난안전이슈에 대한 집중홍보로 사회적 붐 조성

- 안전관리를 위한 문화적 기반과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정 전반에 안전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도민 전체가 안전한 생활문화를 견지할 수 있도록 인식을 변화하기 위한 언론 등 대도민 홍보 강화

## 2) 계획의 범위

### ▶ 본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을 중심으로 설정

- 충청남도는 천안시, 공주시 등 8개 시와, 금산군, 부여군 등 7개 군으로 구성되며, 전체 2,084,034 (2016년 현재) 명이 거주하고 있음
- 지방분권시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효과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고, 향후 국민 안전권 시대의 선두역할을 수행할 전략 수립

### ▶ 본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단기('18년 ~ '20년)와 중기('21년 ~ '30년), 장기('30년 이후)로 구분

- 충청남도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계적 전략 수립이 필요
- 단기적으로는 3년 내 가시적 성과를 확보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하되, 기 수행중인 과제들과 신규 과제를 병행
- 중·장기적으로는 2050 계획에 맞는 중·장기적 시각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들과 과제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과제,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과제로 구분하며, 기술주기, 재정, 기타 환경 여건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시작하기 어려운 과제도 중·장기 영역에 포함 함

## 3) 계획의 내용

### ▶ 본 계획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5개 분야로 계획의 내용적 범위를 분류하고, 각 분야별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도출

- 충청남도 안전비전 「안전충남 2050」의 성공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 현황의 면밀한 검토 필요
  - 환경분석 과정에서는 안전관리 기본 전략 수립에 필요한 충청남도 내·외부 현황 및 미래 전망 정보
  - 안전비전 실행계획은 지역 발전전략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충청남도의 미래 비전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집적할 수 있어야 함
- 국내·외 재난관리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변화방향과 전망을 도출
  - 세계적으로 기후환경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재난발생의 대형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대비한 정책방향의 전환이 요구됨



- 이에 따른 지방정부 관점에서의 충남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과 관리가능성을 통해 안전비전 실행 계획의 세부사업을 도출

#### ▶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도민의 안전욕구를 계획에 반영

- 각 시·군에도 풍수해저감계획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인 재난안전상황을 총괄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시·군과 충청남도의 연계전략 수립이 필요
  - 도 재난안전실 이외의 타 실·국의 현재 추진중인 사업 중 안전관련 사업과 이후 추진 계획이 있는 사업에 안전비전의 추진과제를 반영
  - 각 시·군이 기 추진한 과제들에 대한 정보는 물론, 향후의 계획을 분석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
-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도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 함
  - 안전비전 수립을 위한 도민 요구 조사를 위하여 도민 9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2016년 6월 ~ 2016년 8월) 하여 직접 의견을 청취함
  - 권역별로 타운홀 미팅을 실시(2016년 2회, 2017년 2회)하여 도민의 요구 변화를 관찰 함
  - 안전신문고 신고상황을 전수조사(2017년 4월) 하여 실제 도민의 불편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함

#### ▶ 안전관리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도출 및 시행 전략을 수립하여 제시

- 안전관리에 필요한 중점 추진과제 도출을 위해 합리적인 방법론을 적용
  - 전문가 집중인터뷰를 통하여 우선 시행해야 할 과제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도출된 각각의 사업에 대한 집중 분석 수행

#### ▶ 투자계획 및 평가계획 제시

- 안전충남 비전 수립을 통해 제시한 전략을 토대로 추진과제 발국 및 과제별 실행 계획을 수립
  - 실행사업 발굴과정에서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위험요인 검토 등 충청남도 안전 정책상의 과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고려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
- 실행력을 갖추기 위하여 각 사업에 따른 수행전략을 작성
  - 안전충남 2050 비전 실행계획에서 제안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 실행 전략이 필요함
  - 수행전략은 각 개별 사업을 추진한데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 및 평가지표 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비전 실행계획의 향후 보완 및 발전을 위하여 평가지표체계를 설정
  - 평가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비전의 실행에 대한 종합 평가와 이후 발전 방향을 제안할 수 있음

---

## 02

# 실행계획 추진체계

### ▶ 도민과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비전 수립

- 안전충남 2050 비전 수립에 있어 새로운 접근 방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 교환과 참여형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과 전략 및 실행사업 마련
- 다양한 계층의 주민 대상 조사
  - 15개 시·군별 총28회 면담인터뷰 실시(재난 유형별, 계층별)를 통하여 도민의 안전 요구 파악 및 사업 발굴
- 타운홀미팅
  - 4회에 걸친 권역별 타운홀 미팅을 통하여 참석자의 안전의식과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기대 조사
- 시군 재난 및 안전 관리 담당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안과제 파악
- 워크숍 개최(5회)를 통하여 공무원, 전문가, 도민이 합동으로 비전 수립에 대한 목표와 핵심가치 설정 및 공유

---

▶ **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비전위원회 구성·운영**

○ 비전위원회

- 학계, 경제계, 연구기관, 중앙정부, 도내 직능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 24인으로 구성된 비전위원회 구성
- 충남 안전비전 수립의 방향 설정 및 안전충남비전(안)에 관한 의견 검토 (4회 운영)

○ 총괄위원회

- 전문가와 공무원, 연구자 등 12인으로 구성된 안전충남비전 총괄위원회 운영 및 워크숍 실시

○ 분과위원회

- 전문가, 직능단체, 안전관리책임기관, 일반도민, 담당공무원 등 분과별 7~9인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운영 및 워크숍 실시

○ 국내외 위기관리 전문가가 참여한 세미나·토론회를 통한 비전 수립의 이론적 토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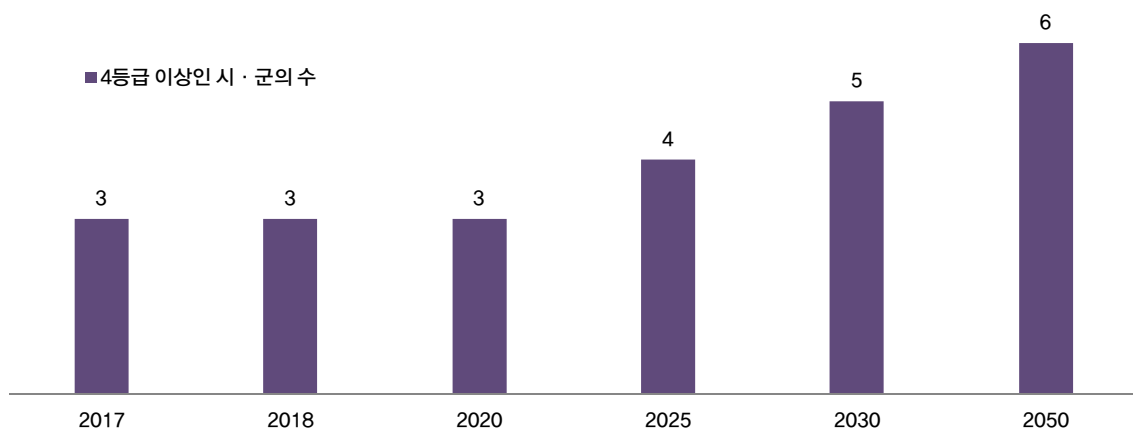
## 03

# 실행계획 목표

### ▶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목표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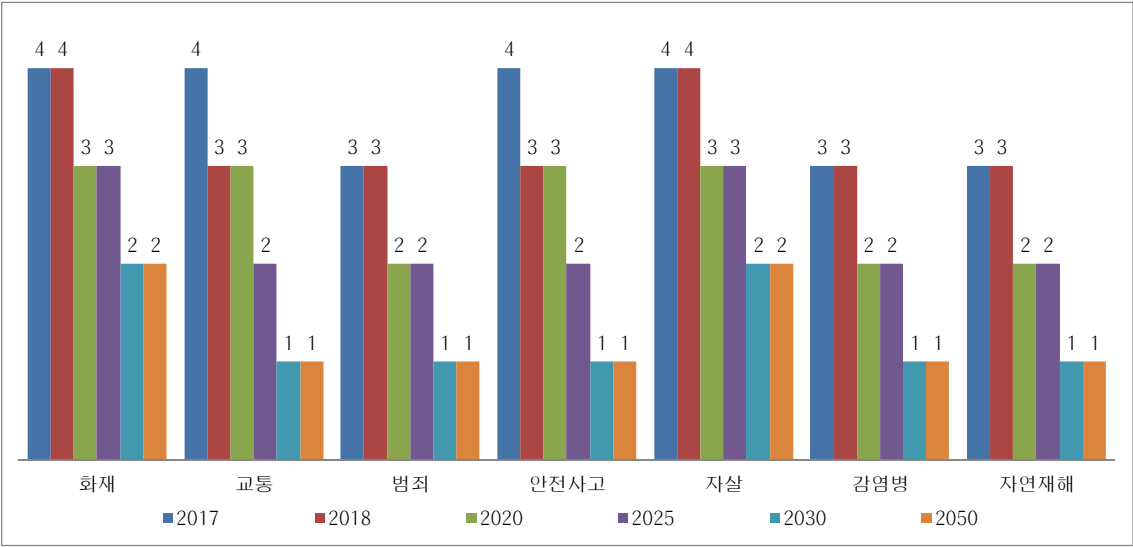
#### ○ 자연재난 관리 능력의 척도가 되는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등급 상향

- 자연 재난 관련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의 3개 분야 59개 지표로 구성된 시군의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등급 3등급 이상지역 총 3개 시군 (공주시, 계룡시, 아산시)
- 자연재난관리 등급 상향화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전 시군의 등급 상향화 목표



〈지역안전도 진단 등급 상향화 목표치〉

- 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등 우리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관리하여 지역안전지수 등급 상향
  - 2016년 현재 분야별 충청남도의 지역안전지수 등급은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자살 분야 4등급, 범죄, 감염병, 자연재해 분야 3등급으로 낮은 편
  - 순차적으로 향상하여 1등급으로 상향화 목표



〈연차별 충남 지역안전지수 등급 목표〉

## 선 물

나태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안은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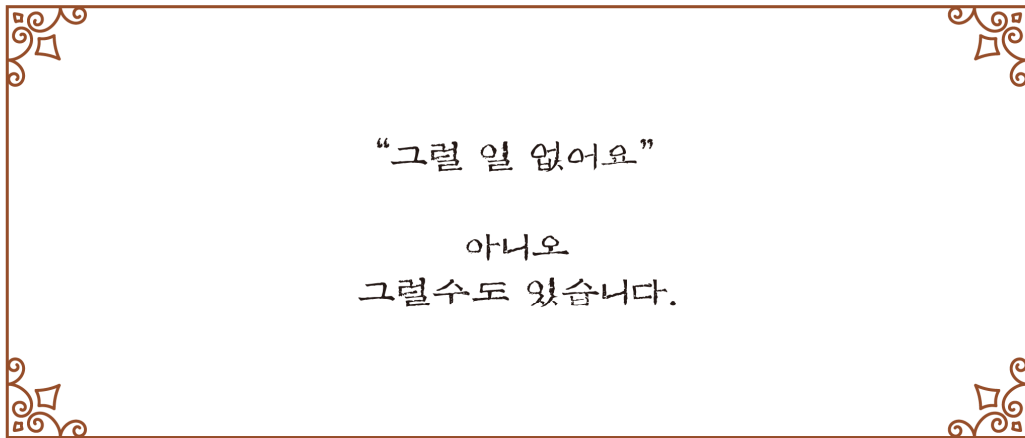
안전충남 2050  
실행계획 세부사업





# 1

높은 의식과 실천의  
안전문화 정착



- 다 함께 누리는 안전신분증 휴대
- 위험에 취해 있는 안전규제의 필요적 강화
- 충청남도 '안전지킴이북' 제작 활용
- 한 눈에 알 수 있는 생명의 탈출안내 지도 제작 배포
- 도민이 연상 가능한 '재난영화 콘테스트' 개최
- 중독없는 안전충남 만들기

---

## 목 차

---

(1) 농어촌 안전사고·범죄 줄이기 사업 .....	124
(2) 도민이 만드는 생활 속 안전 정책 홍보 .....	129
(3) 「안전 플러스 사업」 - 스스로 안전 의문 갖기 .....	132
(4) 함께하는 주민 안전교육 활성화 .....	135
(5)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리더 교육 .....	138
(6) 편리한 휴대폰 안전사용 문화정착 .....	141
(7)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	144
(8) 안전문화 경진대회 정례화 .....	147
(9)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 운영 .....	149
(10)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문화 콘텐츠 개발사업 .....	152
(11)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폐기물 처리개선 .....	154
(12) 모든 계획·정책에 안전계획 필수반영 .....	157
(13)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한 안전 문화활동 참여 촉진 .....	159

---

# 01

## 높은 의식과 실천의 안전문화 정착

### (1) 농어촌 안전사고·범죄 줄이기 사업

농어촌 관련사고 신속대응 체계 구축 및 농·어업 종사자 중심의 안전교육 사업 확대

#### 1.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농기계 및 해양사고 사례 교육을 통해 안전불감증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자 함. 사고발생에 취약한 도내 고령자, 농·어업인, 다문화가정, 지역방문 관광객에게 사고 유형별 안전예방교육·응급이송 관련 리스트 배포·마을 내 안전사고 관리를 통해 사고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농·어업 종사자의 자발적인 안전불감증 극복을 위한 관리는 사전적 활동으로의 관리(예방) - 농어촌 사고에 대한 계획 및 비상체계 매뉴얼 구축(준비) - 농어촌 사고발생시 구조 및 응급의료 체계운영(대응) - 농어촌 사고발생시 사고처리 및 지원관리(복구)의 단계로 운영이 검토되어야 함
- 농어촌 지역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구성을 고려하여, 노약자 및 다문화 이주여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농촌 지역 농기계 관련 사고는 '12년 2,07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후 1,5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추세임. 충남의 경우 농기계 사고에 대한 원인 중 작업부주의가 1순위로 나타났음. 이에 비해 충남의 농기계 안전관리 교육 '16년 기준 4,819건에서 '17년 3,700건(계획)으로 감소하였음

표 4-1. 충청남도 2017 안전관리계획\_농기계 안전관리 교육 계획 및 실적

(단위 : 건)

구 분 (시군)	2017년 교육 계획	2016년 교육 실적		
		계	남	여
계	3,700	4,819	3,981	838
천안	170	224	204	20
공주	300	306	248	58
보령	200	210	139	71
아산	300	300	268	32
서산	300	322	240	82
논산	300	267	190	77
계룡	160	553	516	37
당진	300	530	458	72
금산	220	340	310	30
부여	300	200	130	70
서천	200	345	310	35
청양	250	201	156	45
홍성	300	258	235	23
예산	200	651	504	147
태안	200	112	73	39

※자료 : 충청남도, 2017, 「2017 안전관리계획」

표 4-2. 농·어업인 안전교육실시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우리지역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지역은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례수	그런 편	보통	그렇지 않은 편	사례수	그런 편	보통	그렇지 않은 편
합계	소계	3,920	11	35.5	53.5	3,920	12.4	39.3	48.3
읍·면	읍	1,067	11.9	41	47.1	1,066	14.6	41.9	43.6
	면	2,853	10.6	33.5	55.9	2,854	11.6	38.3	50.1
영농 여부	농어가	1,343	11.6	31	57.5	1,344	12.5	38.4	49.1
	비농어가	2,577	10.6	37.9	51.5	2,576	12.3	39.7	48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농촌진흥청, 2017

- 국내 해양 사고 발생건수는 '15년 2,740건으로 '09~'14년에 발생한 사고가 2,000건 미만인 것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레저로 인한 생활체육 발생 건수 또한 '11년부터 2,000건 이상 발생해 관리의 필요성을 나타냄
- 충남의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는 방치된 공간의 증가로 이어짐. 방치된 공간은 주변에 대한 불안감 조성 및 범죄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나, 예산의 문제 및 시군 별 관리로 인한 전반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



※자료 : 네이버, 「성남시, 중1·금광1 재개발이주 빈집 봉쇄\_헤럴드 경제」(2017.03.26.)

네이버, 「공·폐가 매입 후 도시재생형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_광주광역시 공식블로그」(2017.02 .28.)

[그림 4-1] 성남시의 빈집 관리

[그림 4-2] 광주광역시 공폐가 관리

## 2. 사업개요

- 농어촌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체계 매뉴얼 구축 및 관련대상자 중심 안전교육실시
- 농어촌 지역 내 범죄발생지역 관리 및 안전 환경 조성마련
- 사업대상 : 농·어민, 소방관, 119 응급구조원, 읍·면·동 개인 사업자, 관광객, 해양안전관리 담당자
- 사업기간
  - 2018-2020(단기) 농어촌사고 유형별 응급체계 매뉴얼 개선(거점병원 지정), 농어촌 내 공간관리, 해양사고 신고체계 개선, 다문화가정 의료 서비스 개선
  - 2018-2030(중기) 농어촌사고 비상체계 응급의료운영 및 점검평가, 안전예방교육사업
  - 2031-2050(장기) 거점병원 선정운영 및 응급의료 시스템 통합 운영

## 3. 추진계획

- 대상별(사업자 교육사업, 지역주민, 관광객, 어르신, 다문화가정)중심의 안전 예방 교육사업 추진
- 농어촌, 시·군·구별 사고 발생유형 분석 및 전문성을 고려한 응급병원 리스트 개선

- 도내 거점병원 및 응급체계 매뉴얼 운영 및 개선
- 농어촌 안전사고 신고체계 개선
- 지역 안전을 위한 공가관리 시스템 개선

#### 4. 사업내용

- 농어촌 사고 유형별 치료 전담 병원 지정 및 리스트 제작
- 응급 상황별 긴급연락처 및 특화 병원 리스트 배포(응급 이송 기관 및 관련 기관, 도민 - 예) 농약사고, 추락사고, 산업사고, 예초기사고, 뱀 물림, 벌쏘임, 분마류 출현 사고 등)
- 어르신(거동장애, 사·청각장애, 심장병, 당뇨) 응급등록부 제작 후 재난발생 시 구조대, 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
- 농기계 안전 및 부주의 사고 행동교육
- 해양안전·레저활동 안전교육 - 예) 해안부표에 위치좌표를 표식하여 신속하게 신고체계 대응, 해변 폭죽놀이 사고 등
- 읍·면·동 개인 사업자 교육사업 : 농업, 어업인 중심
- 지역 공가 관리 캠페인 - 예) 공가 안심안전안내를 위한 스티커부착 및 안내판
- 다문화 이주여성 및 외국인 모국방문을 위한 감염병 및 예방주사 접종안내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사업부서 : 보건정책과, 농업기술원, 해양정책과, 건축도시과
  - 지역안전 거점병원 지정(안전정책과, 보건정책과)
  - 읍면동 개인 사업자 교육사업 : 농업, 어업인 중심 (안전정책과, 친환경농산과)
  - 농업사고 관리센터 지정 및 농기계 안전개선 사업(친환경농산과)
  - 해양안전·레저 활동 안전교육(해양정책과)
  - 지역 공가 관리개선사업(건축도시과)
  - 감염병 및 예방주사 접종안내(보건정책과)
- 협조기관 : 경찰청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12,712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농어촌사고 대응체계 및 시스템 개선	• 거점병원지정 • 농-어촌사고유형별 응급체계 분류	2018-2020	비예산	-	-	-
농어촌 내 공가관리	• 농어촌 내 공가 안내스티커 부착, 안내판 표시 및 빈집정비	2018-2025	10,500	-	-	10,500
농어촌 응급 의료 체계	• 농어촌 사고 및 사고 대상자에 따른 응급등록부 구축	2018-2030	비예산	-	-	-
안전예방교육사업	• 농어촌내 개인사업자, 해양안전 관리자, 관광객 • 농업기계 안전관리 교육 강화	2019-2030	2,212	1,106	442	664
거점병원 선정 및 응급의료 시스템 통합	• 거점병원 선정운영 • 응급의료 시스템 통합	2031-2050	비예산	-	-	-

## 7. 기대효과

- 농어촌 사고 유형별 거점병원의 선정 및 관리를 통해 도내 응급체계 시스템의 신속성, 전문성 강화
- 고령층 및 다문화 가정 등 인구 특성을 고려한 안전체감도 향상, 도내 공가관리 개선을 통한 안전환경 조성 마련 및 이미지 개선 지역별 안전 위협 요소 및 신종 위협에 대한 지속적 안전교육을 통해 예방적 안전문화를 형성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음



## (2) 도민이 만드는 생활 속 안전 정책 홍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도민 중심의 생활운동 홍보 캠페인 추진

### 1. 배경 및 필요성

- 도민중심의 자발적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 내 안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행동 점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주변위해요소를 개선해나가는 실천적 안전문화를 추진하고자 함
- 거주 지역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이를 도내 지역에 전파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획의 제공 및 참여의 기회를 확대함



▲ 네이버,「(충남도) 도정신문 명예기자 연찬회, 도정신문」  
(2009. 5.13.)



▲ 네이버,「공주시, 제 6기 시민명예기자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주)피디언」(2017. 4. 4.)

### 2. 사업개요

- 도민의 안전 활동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
- 대상별, 시기별 안전 활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안전 정보 제공
-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험 요소의 개선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관련 관공서와 협업을 통한 정보알림 및 예방 모니터링 프로그램 실시
- 사업대상 : 도민, 지역소방당국
- 사업기간
  - 2019-2020(단기) 안전 시민 명예기자단 현황 및 위촉, 시민원고 모집 후 도정·시정 신문에 안전테마 소식지 발간

---

### 3. 추진계획

- 도정신문 및 기존의 매체를 활용한 도민 참여 방안 확보 및 홍보
- SNS 등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를 활용한 안전정보 제공 및 홍보

### 4. 사업내용

- 도정·시정신문 책자배너에 분기별 안전테마 소식지 발간소개
- 도정신문에 「안전 제언 독자 투고란」 신설 운영, 안전 전문가 투고 및 각계각층 기고문·칼럼 등 게재 운동 추진
- 기획, 특집기사, 뉴스, 정례브리핑, 인터뷰 등을 통한 기획특집 홍보
  - ※ 도정신문, 영문잡지 등 특집 기획보도 및 전면광고 상시 게재
- 안전 취약계층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홍보 지원(연중)
  - 노인(도정신문 활자 확대), 장애인(점자소식지), 외국인(영문잡지) 배부
- 신문·방송,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반복 광고 실시
- 안전충남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영상 및 광고 디자인 제작·지원(연중)
  - ※ 홍보영상 활용 : 케이블방송3사, SNS, 각종행사, 시·군 전광판 등 연계 홍보
- 도 영상소식, 인터넷방송국, 엘리베이터, SNS 등 자체매체 활용 홍보(연중)
- 인터넷 짤방, 모바일 클립영상 등 모바일용 콘텐츠 제작·공급(연중)
- 안전활동 홍보강화 (ex.소화기·화재감지기 점검활동홍보)
- 각종 고지서에 지역별 대피소 및 안전관리자 연락처 안내
- 각종 고지서 및 홍보 책자에 및 시기별, 대상별 예방접종 정보안내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협조기관 : KBS대전방송총국,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34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시민원고 모집 및 발간	• 시민명예 기자단 원고모집 및 도·시정 신문에 안전정보 소식지 발간	2019-2020	비예산	-	-	-
안전활동 홍보 강화	• 소화기·화재감지기 점검활동 홍보 • 지역소방·지역 언론 MOU체결	2019-2020	320	-	160	160
안전관련 정보제공	• 안전정보 알림e-서비스 • 지로(고지서)를 활용한 실생활 안전 정보 제공	2019-2020	20	-	20	-

## 7. 기대효과

- 도민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안전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자치 활동에 대한 홍보를 도민 스스로의 참여로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여 참여 채널 강화 및 다양화
- 도민을 위한 안전예방 모니터링 활동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 불감증에 대한 실천적 의식 문화를 개선

### (3) 「안전 플러스 사업」 - 스스로 안전 의문 갖기

일상생활에서 도민 스스로의 안전궁금증을 유발하여 자유적 안전점검과 위험예지 훈련을 활성화 함

#### 1. 배경 및 필요성

-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안전향상을 위해 도민 스스로의 활동을 전개하는데 중점을 둠
- 안전 위협 상황은 실제 존재하는 위험과 주관적인 지각위험 사이에 많은 차이가 나타날 때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됨. 나·가족·이웃을 중심으로 일상 속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 인식과 환경개선에 관심을 유도하는 캠페인 문화운동을 전개 하고자 함
- 위험예지훈련을 통해 일상생활 및 업무 활동 전에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상황 파악, 시나리오별 대응 활동의 평가·분석·대책수립



※자료 : 네이버,「금산소방서, 겨울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브레인스토밍\_아시아뉴스통신문」(2016.11.22.)

네이버,「거창소방서, 위험예지 훈련 발표회\_내외일보」(2017.3.13.)

[그림 4-3]금산소방서 인명피해 저감회의



[그림 4-4]거창소방서 위험예지 훈련 발표회

#### 2. 사업개요

- 도내 안전의 날을 지정하여 일상 속 안전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및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 위협 상황 및 요인 탐색 교육
- 안전에 대한 평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위험예지훈련 실시
- 사업대상 : 도민, 농·어민, 교육기관 내 학생(유치원 및 학교), 사업장 내 작업자
- 사업기간
  - 2018-2020(단기) 개별체크리스트 제작 및 홍보, 안전스티커 제작 및 보급
  - 2018-2030(중기) 기관별 안전궁금증 확산 프로그램, 위험예지 훈련실시

---

### 3. 추진계획

- 가정 및 기관별로 위험 요인별 평가문항을 구성하여 체크리스트 개발
- 가정 및 기관(교육기관, 사업장)별 안전궁금증 확산 프로그램의 활동 주간선정 및 홍보 실시
- 도내 안전의 날 ‘옐로우(Yellow)서즈 데이’(직장 내 안전점검 후 업무 진행)
- 가정 안전의 날 ‘우리집 생활안전온도’(현재 도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 사업을 교육청 및 학교 연계확장)
- 이웃점검의 날 ‘우리 이웃 안전한가요?’(소년소녀가장 및 고령층에 대한 주거안전 확인프로그램)
- 도내 사업장 위험예지훈련 실시(안전점검 실시, 비상문 위치확인 및 비상문 개방 활동)
- 안전스티커 제작 및 보급을 통해 실천적 안전문화 정착

### 4. 사업내용

- 가정 및 기관(교육기관, 사업장)별 안전의 날 지정하여 캠페인 문화확산
  - 개인 : 옐로우 서즈 데이
  - 가족 : 우리 집 생활안전 온도점검
  - 이웃 : 주거안전 확인프로그램)
- 안전궁금증 확산 프로그램
- 세대별 체크리스트 제작 및 홍보
- 안전스티커 제작 및 보급
- 위험예지 훈련실시(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위험예지훈련 참고)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사업부서 : 시군 재난안전 부서
- 협조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1,216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 체크리스트 키트 보급	2019	100	-	100	-
안전궁금증 프로그램	• 기관별 실시홍보 • 안전브레인스토밍 실시주간 선정	2018-2030	비예산	-	-	-
옐로우셔츠·안전스티커 제작 및 안전점검의 날 홍보	• 옐로우셔츠·안전스티커 보급 및 안전점검 지정의 날 홍보	2018-2025	1,116	-	-	1,116
가정 안전의 날	• 우리집 생활안전운도	2018-2020				
이웃 주거안전확인	• 이웃 주거안전 방문단 구성 및 운영	2018-2020	비예산	-	-	-
위험예지훈련실시	• 안전보건공단운영 참고	2018-2030	비예산	-	-	-

## 7. 기대효과

- 위험에 대한 자발적인 점검과 진단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문화 확산 및 현장중심의 안전 문화 조성
- 가정·교육시설·개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의식고취
- 위험 예지훈련의 도내 확산을 통해 안전점검 및 신속대응력 향상

#### (4) 함께하는 주민 안전교육 활성화

방문형, 체험형, 안전교육확대, 대상별, 권역별 다양한 교육 콘텐츠의 운영 및 개발 사업

##### 1. 배경 및 필요성

- 주민의 안전의식고취 및 사고발생 시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 주민제안 중 형식적인 이론교육을 탈피하여 방문형·체험형 교육에 대한 의견수렴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의 변화추진
- 지역의 안전교육 대상 및 연령, 교육유형별, 위험상황(생활, 재난, 레저, 교통안전)을 개별화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교육콘텐츠 개발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프로그램 시행 후 결과에 대한 주민의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 및 재개발 추진이 필요함
- 기존의 안전체험관의 시설 보완 및 소규모 체험장을 설치 등 체험형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체험인프라 구축하고자 함

##### 2. 사업개요

- 방문형 교육 - 경로당, 학교, 집합건물 등 찾아가는 교육을 위한 모듈개발
- 체험형 교육 - 방독면 사용, 소화기 위치 및 면적당 필요 개수 계산법 교육, 심폐소생술(소소심), 생존수영교육, 수상안전장비사용, 선박안전사고 대처법, 4D 시뮬레이션 교육, 교통안전, 완강기 교육 등의 콘텐츠 개발 및 체험 부스마련
- 방문체험형 교육 - 기존의 도상 교육이 아닌 체험콘텐츠가 접목된 방문형 체험교육을 시행
- 교육강사 선정 - 안전교육 전문인력 중심으로 안전교육전문 강사진 구축
- 체험장 구축 및 체험교육 사각지대를 위한 방안 마련
- 사업대상 : 주민(어르신, 유아, 청소년 등)
- 사업기간
  - 2018-2030(중기) 교육방법별 프로그램 개발, 주민 안전교육 홍보, 교육기관 및 교육강사 선정, 주민안전교육 실시 및 평가

##### 3. 추진계획

- 교육방법(방문형, 강의+실습, 체험 병행)별 교육프로그램의 구체화
- 시군별 맞춤형 주민 안전교육 실시 및 평가(방독면·소화기사용 및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 주민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캠페인홍보활동의 추진
- 체험장 구축 및 체험교육 사각지대를 위한 방안 마련

#### 4. 사업내용

- 안전체험 교육장 방문 프로그램 운영
  - ※ 충남 천안시 안전체험교육장, 공주시 로보카폴리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안전보건공단 충청체험 교육장 등
- 안전체험 교육장 방문 프로그램 운영
  - ※ 충남 천안시 안전체험교육장, 공주시 로보카폴리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안전보건공단 충청체험 교육장 등 체험시설 연계활용
- 해양체험교육 및 체험시설 조성, 교육인원 확대
- 미니체험장 신축, 이전 아산 소방서에 소규모 체험장 설치
- 체험교육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가는 이동체험차량 운영
  - ※ 소방체험부스 지원 시·군 지역 축제 및 행사장에 소화기·심폐소생술 등 소방체험 부스 적극 지원
  - ※ 現 이동체험차량 3대 운영(소방서별 연 2개월 운영) / 2022년까지 5대 확보 목표

##### ○ 교육대상

- 경로당 방문 교육 : 농번기를 제외하고,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 집합건물의 경우, 교육 전 영상체험을 실시하고, 실제 생활하는 곳에 설치된 안전설비(완강기)등을 활용한 교육 실시
- 해양안전의 경우 교육 수용인원을 확대

##### ○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교통안전 교육, 화재대피 행동요령, 생존수영, 선박안전사고 대응요령, 안전용품(방독면, 소화기) 사용 방안 등

##### ○ 강사수급 : 적십자사 강사풀 연계, 교육전문 강사 섭외 및 교육장비지원

##### ○ 홍보방법 : 캠페인(자체 브로셔 제작, 언론사 홍보)

##### ○ 심화교육 : 강사양성 교육과정 확대(은퇴 공직자 활용)

##### ○ 지속발전방향 :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체험시설의 구축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사업부서 : 소방본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해양정책과
- 협조기관 :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5,64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주민안전교육	• 대상별, 방법별 안전 교육 실시 및 평가	2018-2030	비예산	-	-	-
해양안전체험교실 운영	• 수상장비 안전사용 및 생존 수영 교육	2018-2030	3,380	2,366	507	507
교육방법 프로그램 개발	• 교육방법유형(방문형, 강의+실습, 체험병행)	2018	비예산	-	-	-
주민안전교육 홍보	• 리플렛 제작, 언론사홍보	2018-2019	92	-	92	-
교육기관 및 교육강사 선정	• 교육기관 및 교육강사 MOU체결	2018-2019	8	-	8	-
이동형 체험시설 등 구축	• 미니체험장 • 이동체험차량 • 소방체험 부스지원	2021-2025	2,000	1,000	1,000	-

## 7. 기대효과

-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 안전교육을 통한 실효성 확보
- 방문형·체험형 안전교육 및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주민 안전역량 강화
-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적 행동이 발현될 수 있는 의식을 마련
-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대상별·유형별 안전교육 활성화

(5)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리더 교육

재난 주관기관 외 민간단체 운영자 및 지역리더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전파 및 재난대응 능력 확보

1. 배경 및 필요성

- 안전리더는 위기관리·안전리더십을 발휘하여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 안전리더 양성교육 사업은 지역사회 내의 사업장 안전관리자·이장·동장 등 지역지도자를 중심으로 안전리더를 교육 및 양성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둠
- 이에 안전리더 교육 사업은 지역사회 개별 사업장의 대표 및 공공·민간 리더들의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 의식 개선과 실천, 안전에 대한 관리가 사업장 및 마을 내 조직 구성원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안전 문화를 시키고자 함



※자료 : 네이버,「중부도시가스, 특정가스시설 안전관리자교육\_한국가스신문」, (2015.11.2.)  
네이버, 「함양소방서, 위험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_경남열린뉴스」, (2017.03.21.)

[그림 4-5] 특정시설 안전관리자교육

[그림 4-6] 위험물 안전관리자교육

표 4-3. 충청남도 이·통장 현황

(단위 : 명)

구분	현황 (2016. 12월말 기준)
이장	4339
통장	1283
행정리통	리 : 4358, 통 : 1208

※자료 : 충청남도, 충청남도 행정구역 현황, 2017

---

## 2. 사업개요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효과적이므로 지자체·공공 기관·사업체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네트워크 구축
- 이·통장을 중심으로한 지역리더 양성
- 민간단체의 사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교육제공
- 사업대상 :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 동장, 통장, 반장, 이장, 지역지도자 등
- 사업기간 : 2018-2030(중기) 리더 안전교육 협력기관 선정, 사업장 내 리더안전 교육 참여

## 3. 추진계획

- 교육대상자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업장 내 안전리더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여 안전교육 문화 확산
- 지역리더 이·통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리더의식 함양기회제공

## 4. 사업내용

- 사업장 안전관리자 교육
  - 안전관리자를 사업장(대표)별로 선정하여 안전교육 실시
  - 안전관리 담당자는 관찰-평가-대책마련의 과정을 통해 자발적 안전관리 및 평가
- 지역지도자(동장, 통장, 반장, 이장 등) 안전 의무교육 실시 : 안전보건공단 의무교육에 안전리더 프로그램 편성 (마을 내 사건사고에 대응 가능한 프로그램 구축 : 가스안전교육, 눈길사고, 폭우, 제설, 추락사 등)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협조기관 : 안전보건공단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비예산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안전리더 교육기관 선정	• 협력기관 선정	2018	비예산	-	-	-
교육대상 선발	• 사업장 내 안전지도 관리자 선정 • 교육 홍보활동	2019	비예산	-	-	-
사업장 안전관리자 교육	• 안전 사업장 선정 • 안전관리자 교육	2019-2030	비예산	-	-	-
지역지도자 안전 의무교육	• 지역지도자 안전리더 프로그램	2019-2030	비예산	-	-	-

## 7. 기대효과

- 사업장 및 지역사회 중심의 관리자 선 교육으로, 안전 책임감을 고취 및 안전리더의 체계적 안전교육 실시로, 현장에서의 위험 요소 조기 발견 및 안전활동의 동기유발
- 안전관리 담당자는 관찰-평가-대책마련의 과정을 통해 자발적 안전관리 및 평가. 사업장 내 직원 및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안전활동 능력 강화로 안전문화 확산

## (6) 편리한 휴대폰 안전사용 문화정착

일상적인 스마트폰 사용에서 발생하는 위험상황 및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올바른 사용의 교육과 안전의식 함양

### 1. 배경 및 필요성

-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필요에 대응하는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 하고있는 실정임.
-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사용 유형별(운전 및 보행 등으로 구분) 안전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함
- 운전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시설·시스템을 도입하고, 보행자들의 안전 경각심을 제고 하기 위한 캠페인·시설 등을 개선함



※자료 : 네이버, 「'보행 중 스마트폰 위험' 강남역 등에 안전표지 생긴다\_연합뉴스」, (2016.6.16.)

「서울시,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 안전표지 설치\_세이프타임즈」, (2016.6.16.)

[그림 4-7] 보행중 스마트사용 주의안내

[그림 4-8] 보행중 스마트사용 주의 국외사례

### 2. 사업개요

- 스마트폰 사용시 상황별 위험 요소를 분석. 위험요소 및 상황에 대한 안전 사용 교육과 캠페인 실시
- 시설물 및 시스템 도입
- 사업대상 : 도민, 교육기관 학생, 배달업 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 사업기간
  - 2018-2020(단기) 스마트폰 올바른 사용문화 교육(대중교통 운전기사 운영 중 사용제한)

- 
- 2020-2030(중기) 제한속도 초과 시 스마트폰 데이터 차단 방안시스템 도입, 노면안전표시 확대, 횡단보도 침범 경고 알림 서비스

### 3. 추진계획

- 스마트폰 사용 대상자별(운전자, 보행자) 올바른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추진
- 보행 및 운전시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위험을 구체화 하여 제시
-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문화의 유도를 위한 시설물설치 및 콘텐츠개발

### 4. 사업내용

- 운전자 중심 스마트폰 사용 개선프로그램 :
  - 운전면허교육에 스마트폰 사용관련 안전사항 추가
  - 업주를 대상으로한 이륜차 안전교육
  - 프로그램개발(텍스팅 조작불가 어플리케이션 배포)
  - 홍보캠페인(국도·고속도로 전광판에 스마트폰사용 사고장면 노출, 안전스티커보급)
- 보행자 중심 스마트폰 사용 개선프로그램 :
  - 안전사용 유도 사업(스마트폰 부주의 사용 사고 영상 제작 및 전파, 횡단보도 내 영정사진캠페인)
  -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안내표지판, 노면 안전표시, 횡단보도 노면에 신호등, 횡단보도 침범경고 알림서비스)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사업기관 : 교통안전공단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1,2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스마트폰 올바른 사용 캠페인	• 대중교통 운전기사 운행 중 사용제한 • 스마트폰 부주의 사용관련 사고 콘텐츠 배포	2018-2020	비예산	-	-	-
스마트폰 올바른 사용 교육	• 배달 업주 교육 강화 • 일반 도민 사용 교육	2018-2020	비예산	-	-	-
횡단보도 경고알림서비스	• 시설물설치(횡단보도 침범시 경고 알림 및 노면안전표시)	2018-2030	1,000	-	-	1,000
스마트폰 데이터차단 콘텐츠 개발	• 스마트폰 콘텐츠 개발 (제한속도 초과 시 데이터 차단서비스)	2020-2030	200	100	100	-

## 7. 기대효과

- 타 도와 차별화된 스마트폰 사용 개선 사업의 추진으로 선점적인 활동 모델 제시
- 대상자별(운전자·보행자) 교육·홍보 및 시각적·청각적 시설환경의 전반적 개선을 통한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문화 정착
- 스마트폰의 비정상적·부주의한 사용의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형성 및 안전 공감대 마련

## (7)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도내 안전취약자 중심의 교통 사망자 감소를 위한 의식개선 캠페인 및 대중교통 안전문화를 위한 프로그램 시행

### 1. 배경 및 필요성

- 도내 안전취약자를 중심으로 한 교통안전증진 캠페인을 시행하고자 함
- '17년 1-6월 기준 국내 교통사고발생 건수 중, 노인교통사고율 17%이고, 그 중 사망률은 41%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됨(2017, 경찰통계) 13세 미만 교통사고율은 5%로 안전취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이 확보되어야 함을 보여줌
-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대중교통사고(버스사고)는 시내버스 6,281건, 전세버스 1,162건 등 연평균 8,509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86명, 부상 14,371명 등 연평균 14,557명에 달해, 사고당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고함
- 안전취약자를 어르신,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보호자,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안전취약자 중점 교통안전증진 캠페인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기업체 협력을 통한 실천적 생활운동이 전개 되도록 함



※자료 : 네이버, 「도로교통공단 어르신교통안전 사회교육\_도로교통공단 웹진」, (2011.10.10.)

네이버, 「부천시, 어린이 통학안전 워킹스쿨버스제도\_대한민국정책기자단 블로그」(2017.4.18.)

[그림 4-9] 어르신교통 안전교육

[그림 4-10] 통학안전 워킹스쿨 사례

### 2. 사업개요

- 충남의 교통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안전취약자 중심의 교육 및 대중교통 안전프로그램 보급추진
- 사업대상 : 고령어르신,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보호자,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대중교통 운수업자
- 사업기간 : 2018-2020(단기) 안전취약자 대상별 교통안전문화 교육 및 캠페인, 대중교통 안전문화 프로그램실시(출발 전 안전수칙 및 VCR 의무시청)



### 3. 추진계획

- 안전취약자 대상별 교통안전 교육실시 및 캠페인 추진
- 안전신문고 신고내용의 세부항목을 중심으로 시설설치 및 점검활동
- 대중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수칙 의무시청에 대한 정착추진

### 4. 사업내용

- 안전취약자 대상별 교통안전캠페인

#### 《어르신》

- 고령자 교통안전문화 캠페인(주·야간 운전 및 보행안전)
- 도로교통법상 차종류별 교통안전교육(농기계 및 전동차, 자전거)
- 어르신 운전자스티커 보급(농기계 및 전동차, 자전거)
- 차량번호판을 연령별 다른 색으로 구분하여 알림이 캠페인

####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보호자》

- 임산부 운전자 관련 안전교육- 유모차 안전수칙교육
- 영·유아 동반 차량탑승 시 안전벨트 및 카시트 의무안전교육

#### 《영·유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기관 차량안전교육(안전벨트 교육, 탑승 전 VCR의무시청, 여름철 내 버스안 질식사고발생 예방교육)- 버스기사 및 교육기관의 안전교육 필수 인증제도(인센티브제도와 연계)

#### 《장애인》

- 대중교통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교육(지하철, 버스, 택시, 마을버스 이용관련)- 전동휠체어사고 예방교육
- 장애인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수칙 교육(장애인 교통안전시설물 이용 정보제공)
- 장애인 개별 위급상황 대피경로 자체제작하여 대피안내지원

#### 《외국인》

- 우리나라 교통문화 안내
- VCR의무시청 사업 시 외국어 매뉴얼지원- 대학 및 다문화가구 이주지역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 (외국인 및 국내 학생과 함께 교육)

#### 《대중교통운수업체》

- 출발 전 안전수칙 VCR 의무시청사업
- 대중교통시설 내 휴대용 안전장비 보급현황 점검 및 의식개선캠페인

- 도 추진 교통안전문화 개선 활동 홍보 및 전파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도로교통과
- 사업부서 : 안전정책과, 장애인복지과
- 협조기관 : 교육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5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안전취약자 교통안전 캠페인	• 대상별 교통안전프로그램· 캠페인 계획 및 실시	2018-2020	비예산	-	-	-
안전취약자 교통안전 교육	• 시·군·구별 대상자 교통안전문화 교육실시	2018-2020	130	-	130	-
어르신 운전자 스티커	• 운전자 스티커 제작 및 보급	2018-2020	120	-	-	120
휴대용 안전장비 보급	• 휴대용 망치, 렌턴, 호루라기 지원	2018-2020	250	-	-	250
대중교통 안전문화 캠페인	• 버스 및 대중교통시설 출발 전 안전수칙 VCR의무시청 정착 추진(버스회사 MOU체결)	2018-2020	비예산	-	-	-

## 7. 기대효과

- 대상별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
-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환경개선을 시도, 도민맞춤형 교통안전문화사업의 실현
- 대중교통 안전문화 정착

## (8) 안전문화 경진대회 정례화

안전인식 개선과 도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대상별 접근성을 고려한 다양한 경진대회를 개최, 도민의견 수렴

### 1. 배경 및 필요성

-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고, 시민이 역량을 확인하고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며, 안전문화 경진대회를 지역축제 등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 함
- 다양한 경로 제공을 통해 안전 소비자가 안전지식을 체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임



※자료 : 네이버,「삼성반도체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한마당」, (2017. 06. 07)

「명지병원 심폐소생술CPR경진대회\_고양시 블로그」, (2014. 04. 04)

[그림 4-11] 환경안전 퀴즈대회 민간사례

[그림 4-12] CPR 경연대회 민간사례

### 2. 사업개요

- 지역 내 도민을 중심으로 참여중심의 안전캠페인을 시행하고자 함. 안전문화 경진대회 및 골든벨 대회, 백일장을 추진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도민의 참여를 통해 평소 안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도민들의 제안 및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 사업대상 : 도민, 지역 내 어르신, 관공서 공무원
- 사업기간 : 2018~2030(중기) 도민을 위한 안전문화 경진대회 및 골든벨 대회, 백일장(지역축제 연계), 도민 의견수렴

### 3. 추진계획

- 충남도내 도민참여 자원봉사 시상(12월) 및 안전문화 마일리지 실시사업과 연계
- 도민 주체적 안전문화 캠페인의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 경진대회’의 확산 추진
- 지역 내 안전예방 및 대응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마련

### 4. 사업내용

- 안전 골든벨 및 백일장 시행 및 아이디어 공모전
- 지역 축제와 연계한 안전문화 경진대회 및 안전교육
- 경로당 안전활동 경진대회
- 공무원 안전문화 경진대회
- 우리마을 안전을 위한 도민 제안(시설 설치 및 개선)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사업부서 : 인재육성과, 관광마케팅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시군재난안전부서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79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안전문화 경진대회	• 도민대상, 경진대회, 골든벨 대회, 백일장대회(지역축제 연계)	2018-2030	790	-	790	-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토크’	• 도민대상, 안전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설문지, 질의 응답, 안전토크쇼)	2018-2030	비예산	-	-	-

### 7. 기대효과

- 다양한 연령 및 분야의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의식 확산, 자발적 생활문화 운동 확산 효과
- 도민의 안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체적인 시스템 마련의 현실화가 가능
- 도민, 지자체, 관련 기관 등 안전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상호 교환하여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

## (9)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 운영

체험형 교육을 통한 현장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참여의 접근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발전적인 기술도입과 프로그램 개발로 미래지향적인 체험 콘텐츠를 마련하고자 함.

### 1. 배경 및 필요성

- 기존의 안전예방프로그램 자료들이 가지는 평면적인 특성으로 인해 일회성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특성은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해당 콘텐츠는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따름
- 가상현실을 및 증강현실이 보편화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간접 경험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제작 하고자함
- 도민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최적의 재난 위기 대처 기준을 균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과 연계한 가상현실 영상 콘텐츠 개발·적용이 필요



※자료 : 네이버,「어린이 안전장 체험박람회 재난안전 프로그램 항공기 안전 체험 VR\_키즈현대」, (2017. 2. 24.)  
네이버,「뇌졸중 환자가 VR로 치료하는 모습\_사이언스타임」, (2017. 7. 10.)

[그림 4-13] VR 안전체험 민간사례

[그림 4-14] VR 활용 민간사례

### 2. 사업개요

- 안전예방을 위한 기존의 평면적인 홍보자료물을 대신하여 도민들의 흥미와 관심, 접근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VR 안전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VR체험형 안전예방프로그램 활성화를 마련
- 실물체험 구현이 불가능한 재난 유형별 가상체험 체계 구축
- 사업대상 : 도민
- 사업기간 : 2018-2025(장기)

### 3. 추진계획

- ‘안전예방 및 대응요령’을 토대로 체험형 VR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황별, 대상별로 프로그램의 세분화 과정을 추진함
- 기존 VR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감각(시각, 청각, 촉각, 후각)기능이 추가된 체험형 VR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민이 체험활동을 접근할 수 있는 관공서 및 안전체험기관에 시범배치운영
- 실물체험 구현이 불가능한 재난 유형 별 가상체험 체계 구축
  - 1단계(2017년) : 약물사이버 중독 증강체험 신설, 교통사고 영상 시뮬레이터 추가 보강
  - 2단계(2017년) : 화재 시뮬레이션 활용 대피 콘텐츠, 생활안전관련 주택위험요인 자가진단 프로그램, 지진·해일 및 태풍 관련 대피 시뮬레이션

### 4. 사업내용

- VR을 통한 재난안전교육 체험장 마련(개선 및 확대)
- VR로 체험하는 교통·재난 안전프로그램 개발
- 실물체험 구현이 불가능한 재난 유형 별 가상체험 체계 구축
  - 약물사이버 중독 증강체험 신설
  - 교통사고 영상 시뮬레이터 추가 보강
  - 화재 시뮬레이션 활용 대피 콘텐츠
  - 생활안전관련 주택위험요인 자가진단 프로그램
  - 지진·해일 및 태풍 관련 대피 시뮬레이션
- 안전체험관의 지속성을 위한 민관협력
- 증강현실을 이용한 정보제공
  - 지역사회 안전지도(Community Safety Map) 활동
  - 가정 및 관공서에서 동네산책프로그램을 통해 사진수집 및 그림그리기 활동
  - 우리 마을 위험지역 표시하여 공유하기
  - Geopros 및 GIS 시스템과 연계하여 우리동네 안전지도 배포사업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사업부서 : 도로교통과, 소방본부
- 협조기관 : 경찰청, 교육청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95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VR프로그램 개발 계획	• VR·AR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자료수집	2019	비예산	-	-	-
VR체험프로그램 개발착수	• VR체험프로그램 개발	2021-2023	200	100	100	-
VR체험장 개선 및 확대	• 시설 설비 도입 • 기존 장비 보완					-
체험콘텐츠 운영 및 보강	• 안전체험관 내 실물 위주 체험콘텐츠 보강	2018	350	175	175	-
증강현실을 활용한 정보제공	• 지역사회 내 안전지도 만들기 활동 • 지역사회 위험지역 정보제공	2021-2025	100	50	50	-
VR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보급	• VR체험프로그램 시범운영 후 보급	2023-2025	100	50	50	-

## 7. 기대효과

-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험형 안전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안전 예방적 접근성을 강화
- 간접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미래 위험에 대한 경각심 제고
- 안전취약계층 및 거동불편자, 상황에 따른 안전 교육 및 활동 불가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현장 및 상황 중심적인 안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모티브를 통해 기존의 평면시각 자료에서 입체 및 체험위주의 자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10)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문화 콘텐츠 개발사업

도민 맞춤형 안전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안전정보의 접근성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

### 1. 배경 및 필요성

- 도민맞춤형 안전문화 정보제공 및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자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 재난문자내용 개선을 통해 도민이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대응활동에 대한 상황별 구체적 정보를 습득 하게함
- 안전 활동에 대한 도민의 긍정적인 감정을 확산시키고, 개인별 맞춤형 안전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 조성필요



※자료 : 네이버,「오명 쓴 긴급재난문자 방식 바뀐다는데...결림돌 여전\_보안뉴스」, (2016.10.16.)

세계와도시 7호 특집2 , 2015,「대도시 뉴욕의 안전관리 : 뉴욕시 \_레디 뉴욕(Ready New York)

[그림 4-15] 긴급재난문자 문제 제안

[그림 4-16] 뉴욕안전관리

### 2. 사업개요

- 도민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콘텐츠 개발을 시행하고자 함. 이후 정책 및 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대상 : 도민중심
- 사업기간 : 2020



### 3. 추진계획

- 기존 재난문자 내용개선을 통해 재난대피 및 재난 정보취합 시 도민 맞춤형 문자구성 콘텐츠를 제작
- 안전활동 참여 및 도의 안전활동으로 인한 피해 감소·회복의 긍정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 4. 사업내용

- 재난문자 내용개선(문자내용 및 문자구성 콘텐츠 제작 후, 각종 고지서에 안내)
- 재난문자 오류정보 확인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위기관리시스템 구성(미디어-시민-관리관공서 협업)
- 안전활동에 대한 도민의 긍정적 감정 확산 운동(QR코드를 활용한 Thank you캠페인)
- 충남 안전생활 이모티콘 개발 및 보급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사업부서 : 재난대응과, 정보화정책과
- 협조기관 :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역본부, KT 충남고객본부,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70백만 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재난문자 내용개선 콘텐츠 개발	• 재난 문자 내용 개선콘텐츠 개발 및 홍보	2020	10	-	10	-
시민중심 Thank you 캠페인	• QR코드 개발 및 홍보	2020	50	-	50	-
충남 안전생활 이모티콘 보급	• 충남 안전생활 이모티콘 개발 및 보급	2020	10	-	10	-

### 7. 기대효과

- 안전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도민맞춤형 안전캠페인에 기여
- 콘텐츠 개발 및 정책과 제도의 안전요소 강화를 통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마련
- 콘텐츠를 통한 친화적인 활용으로 안전정보의 접근성 강화효과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11)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폐기물 처리개선

위험 생활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환경 조성

### 1. 배경 및 필요성

- 생활 폐기물은 지역사회 환경을 훼손시킬 뿐 만 아니라 위험 물질의 방치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큼
- 도심지역의 경우, 종량제봉투의 의무적 사용 및 처리시설의 보급으로 일정 수준의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외지역의 경우 폐기물 및 쓰레기처리 시설의 산발적인 설치 및 운영으로 환경 저해 및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도심지역에서의 도시가스 보급이 되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 교외지역 및 일반 구도심, 농어촌 지역에서의 LPG 및 휴대용 부탄가스의 사용률이 높아 생활 폐기물 처리개선을 위한 시설 및 안전한 처리 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에서 발표한 한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중 충남을 살펴보면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현황에서 영농폐기물 62.8(톤/일)이 배출되는 건수가 높음. 생활 폐기물 처리사업을 위해 먼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생활폐기물설치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안전교육이 함께 이루어져 전면적인 생활안전문화 운동을 전개



※자료 : 네이버,「영농폐기물 수거\_뉴스인 서울」,(2017.06.20.)  
한국환경공단, 2012,「한국환경공단\_지속가능경영보고서」

[그림 4-17] 영농폐기물 수거 타 지자체사례



[그림 4-18] 슬레이트 지붕 철거 화면

표 4-4.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_충청남도

(단위 : 톤, 일)

종류	소계	종류	소계
종이류	177.3	유탄유	0
병류	40.5	형광등	1.1
캔류	10.7	고철	261
플라스틱	17.4	의류	8
합성수지	27.8	영농폐기물	62.8
전자제품	7.7	가구류	4.9
전지류	0.3	폐식용유	0.1
타이어	0.1	기타	30.8
총 계		650.5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환경부, 2017

## 2. 사업개요

- 시·군·구별 구도심 및 농어촌 내 생활폐기물 처리개선에 대한 시설환경 구축
- 생활폐기물의 위해요소를 점검 후 폐기물 처리시설물(휴대용 부탄가스 및 농약병) 추진
- 사업대상 : 농·어민
- 사업기간
  - 2018-2021(단기) 생활폐기물의 위해요소 점검, 안전한 처리방법에 대한 안전교육, 휴대용 부탄가스 전용처리장 및 마을별 농약병 공동수거 처리장 설치
  - 총 400개소(매년 80개),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를 위한 공동집하장 설치 추진

## 3. 추진계획

- 생활폐기물로 인한 위험사고 예방을 위한 위해요소 점검 및 사용 후 처리에 대한 안전교육 시스템 강화(부녀회장 및 지역지도자를 중심으로 어르신들에게 생활폐기물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홍성군 지역사업과 연계추진)
- 생활폐기물의 안전한 폐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내 Allbaro시스템 연계를 통한 폐기물 시설 구축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빈병)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추진
- 한국환경공단과 슬레이트 사업 연계추진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개정으로 환경공단에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음)계획

#### 4. 사업내용

- 생활폐기물 처리 개선을 위한 위해요소 점검 및 안전교육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빈병)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추진
- 슬레이트 지붕처리 (한국환경공단 연계)
- 영농폐비닐 수거 및 보상금 제도 홍보(한국환경공단 연계)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환경보건과
- 협조기관 : 한국환경공단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10,69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생활폐기물 위해요소 점검	• 생활폐기물 위해요소 점검	2018	비예산	-	-	-
안전교육	•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2018-2020	비예산	-	-	-
슬레이트 지붕개선	• 슬레이트 지붕처리	2018-2020	350	175	105	70
영농폐기물 관련제도 홍보 및 사업추진	•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제도 홍보 및 사업추진	2018-2021	8,800	880	1,760	6,160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 농약병, 폐비닐 등	2018-2021	1,540	462	308	770

#### 7. 기대효과

- 구도심 및 농어촌 내 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한 위해요소 점검을 통해 생활폐기물 전용 처리장 설치 및 확대
- 생활폐기물처리장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환경개선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마련
- 생활 쓰레기 및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및 관리 중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변화

## (12) 모든 계획·정책에 안전계획 필수반영

도내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계획서 작성 시, 안전에 대한 요소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사업의 기획부터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 1. 배경 및 필요성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음. 계획서 내에 ‘안전관리’ 항목을 마련하여 초기부터 개별 사업 추진 시 안전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평가내용이 구비되어야 함
- 민간에서는 경영평가 항목에 안전 요소를 반영하여 기준을 설정하여 정책과 제도의 안전한 요소가 강화된 ‘안전한 충남’을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지역 문화행사 개최 전 철저한 안전계획과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해 축제장 안전관리 및 실행력을 높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민간·공공 부문에서 사업 작성계획 담당자 및 대표
- 사업기간
  - 2018-2020(단기) 민간·공공 부문에서 사업계획서 항목 추가 및 변경 추진
  - 2018-2030(중기) 민간·공공 부문에서 사업계획 안전요소 설정 및 자체 진단·평가·보완체계 확립

### 3. 추진계획

- 사업계획 시 안전요소에 대한 부분의 계획 및 평가반영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사업계획 시 안전에 대한 정책적 제도 및 안전요소 반영 실현
- 축제예산 지원 시군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 점검(11개)
  - 축제 현장평가단에서 안전계획 시행 여부 확인(개최 1개월 전 및 행사기간 중)
- 현장평가단의 평가보고서에 안전조치 내역 등 수록, 전파 및 활용
  - ※ 도내에서 개최하는 축제장과 평가결과 공유 및 반영 유도(110개 축제)

### 4. 사업내용

- 사업계획 시 안전관련 기준 편성
- 안전계획 및 기준 별지편성 제공
- 경영평가 항목에 안전계획 및 진단 항목 편성 추진

- 지역향토문화축제 선전 평가 항목에 안전관리 분야 평가 항목 추가
  - 사전 축제장 안전관리 계획 작성 여부
  - 축제 현장평가에서 안전관리 조치계획 실행여부 측정
  - 안전관리요원 적정배치 여부 확인 등
- 지역향토문화축제 개최 전 안전계획 실행 여부 등 현장 확인
  - 사전에 축제장 안전계획 수립 매뉴얼 배부, 계획 수립시 반영 유도
  - 안전계획 실행여부 확인 및 축제의 안전 관련 자료 분석 평가
  - 안전요원 및 축제 진행요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주관기관)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사업부서 : 시군 재난안전 관련 부서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비예산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민간·공공부문의 계획서	• 계획서 내 안전요소 반영 및 개선	2018-2020	비예산	-	-	-
민간·공공부문의 계획 평가 및 점검	• 계획서 내 안전요소 반영 실천 및 보완	2018-2030	비예산	-	-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작성의무화 및 이행점검						

## 7. 기대효과

- 도내 사업 추진 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진단 및 고려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음
- 평가서의 개발 및 확산으로 인한 타 지역과의 차별화 및 도의 안전에 대한 역할 제시
- 축제 안전계획 수립 내용 등에 대한 시군 등 관련기관 전파를 통한 축제장 안전문화 확산

### (13)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한 안전 문화활동 참여 촉진

안전문화 활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은 도민의 자발적·실천적 참여에 있어서 촉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초기 안전활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과 동시에 자발적인 문화가 정착 및 지속을 위한 방안이 됨

#### 1. 배경 및 필요성

- 안전문화 활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도의 안전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안전문화 활동의 참여와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인 및 사업장, 관련 기관 등 유형화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함
- 안전문화 시범지역 설정을 통해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지속적인 사업 개선 및 보완이 함께 요구됨 또한 개인을 중심으로 안전 활동 참여에 대한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천 활동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 도내 사업장의 경우, 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활동의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로 사업장 홍보 및 교육을 이수한 대표에 대한 홍보, 도지사 표창 등으로 자구적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안으로 접근이 필요함



※자료 : 대선조선 홈페이지, 「안전보건공단, 2015년 근로자 건강활동 우수사업장, (2017.09.19.)

네이버,「미래창조과학부\_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재인증 현판식 및 인증제\_머니투데이」(2016.10.10.)

[그림 4-19] 안전문화 우수사업장 수상사례

[그림 4-20]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사례

####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민대상, 도내 사업장, 도내 교육기관
- 사업기간 : 2020(단기) 인센티브 및 인증사업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2021-2030(중기)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 반영 후 인센티브 및 인증 사업 본격화를 위한 컨설팅 활동 실시

### 3. 추진계획

- 시범사업을 통해 사전예방 컨설팅 활동 및 인센티브 지급의 효과성 검토
- 현재 활용 중인 인센티브의 활용도 및 장단점 분석
- 도를 중심으로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의 선정에 대한 효과성 검토
- 인센티브 부여 및 인증기관 선정의 기준 및 방식 마련
- 인증 및 평가를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도입

### 4. 사업내용

- 안전문화 시범지역 지정 및 시범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 시범사업 : 어린이집 안전인증제
- 안전교육 참여 및 도교부금 참여 도민 인센티브
- 안전 우수사업장 발굴 및 표창
- 안전 우수사업장 무료 홍보 및 안전교육 이수사업장 대표 홍보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사업부서 : 시군 재난안전부서
- 협조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KBS대전방송총국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78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 인센티브 및 인증사업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
  - 2021-2030(중기)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 반영 후 인센티브 및 인증사업 본격화를 위한 컨설팅 활동 실시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안전문화 인센티브 시범사업	• 시범사업 기관 선정 및 평가 전문가구성, 시범사업시행	2020	6	-	6	-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	• 시범사업을 통한 개선, 신규 인센티브 방안 마련	2021-2030	72	-	72	-
안전 우수사업장 발굴 및 홍보	• 안전 우수사업장 발굴 • 안전 우수사업장 표창 • 안전 우수사업장 무료홍보					



---

## 7. 기대효과

- 안전문화의 실천을 위한 능동적 행동을 유도 및 우수 참여 인원·단체의 선정으로 안전문화의 참여도 증진
- 인센티브 수여 방식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인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활동 유지
- 안전문화의 초기 정착 목표의 달성 및 자발적 안전요소의 강화



# 2

편안하고 든든한  
안전생활터 조성

안전의 핵심은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 것처럼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가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를 도우려는  
의지를 늘 일깨워주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러려고 했을 때  
비상구가 잠겨있어 절망하지 않도록 사회적 제도와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 안전총남 비전 2050 선포식 중 도지사 말씀('17. 1. 19)

연  
관  
시  
책

- 현미경으로 살펴본 '안전사각지대 없애기'
- 모두가 동행(同幸)하는 안전운전 123
- 권역별 다목적 '드론 통합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 단계별 지진재난 대응책 마련
- 지방하천 수문(통문) 자동화 시스템 구축
- 항구적인 가뭄극복 대책

## 목 차

(1) 풍수해 저감 대책 수립·추진 .....	166
(2) 운전자와 보행자가 더불어 행복한 도로 안전 관리 .....	169
(3) 재해위험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사업 .....	171
(4) 반복되는 재해연결고리 차단하기 .....	173
(5)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하기 .....	175
(6) 재해에 안전한 지방하천 정비하기 .....	177
(7)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보강사업 .....	179
(8) 해양사고 안전관리 확보방안 마련 .....	181
(9) 산사태 위험 미리 개선하기 .....	186
(10) 재난유형별 취약요인분석 전문역량 강화 .....	189
(11) 깨끗하고 안전한 가축농장 환경 및 기준 만들기 .....	191
(12) 365일 안전한 도로만들기 혁신대책 .....	194
(13) 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사용으로부터 안전권 확보하기 .....	196
(14) 다중이용시설 안전 특별관리 .....	199
(15) 단계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	202
(16) 안전까지 하도급으로 불공정 하도급 근절대책 .....	204
(17) 교량 및 터널 등의 공공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	206
(18) 지방상수도 지하관로 종합관리 대책 추진 .....	208
(19) 재난안전 위험 특성에 따른 현장대응 훈련 강화 .....	210
(20) 신속한 재난 회복을 위한 유효 재난시스템 확립 .....	212
(21) 학교 및 청소년 이용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 .....	215
(22)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환경 개선 .....	218
(23) 배움터 지진대비 시설물 보강 .....	220
(24) 우리고장 위험요소 보고 배우기 .....	222
(25) 재난 및 안전을 주제로 한 생명존중 교육 .....	224

---

## 02

# 편안하고 든든한 안전생활터 조성

### (1) 풍수해 저감 대책 수립·추진

풍수해 저감 대책은 방재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방재분야의 기본계획으로 지리적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해 각종 풍수해로부터 취약한 지역의 피해를 줄이고 예방대책을 제시하는 역할

####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집중호우 등으로 풍수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재해유형도 점차 다양화·대형화 되어 가면서 인명 및 시설피해에 대한 우려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이처럼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재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계획의 수립은 매우 중요함
- 2005년 이후 각 지자체별로 수립하도록 규정된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풍수해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타 계획과의 유기적 연계의 미비, 재해취약성 분석 등 기존 계획수립과정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예방대책 마련 필요

---

## 2. 사업개요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대상 재해 목록 확대
-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마련
-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

## 3. 추진계획

- 재난유형별 발생 현황조사 및 분석
- 방재전문가 및 도시계획전문가 간 협의체 조성 및 운영
- 계획 상호간 연계체계 마련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 4. 사업내용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대상 재해 목록 확대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대상 이외의 재해발생 현황 조사·분석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대상 이외의 재해 중 해당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 고려대상 재해 선정(FGI 등)
  - 주 고려대상 재해의 재해취약성 및 위험도 분석 방법론 제시
-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마련
  - 기초조사 및 분석 시 도시계획수립 과정과의 연계 방안
  - 풍수해위험지구와 용도지역·지구와의 연계성 검토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의 도시계획과의 상호 피드백 등 연계성 검토
-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
  - 풍수해위험지구 및 용도지역·지구 지정기준 등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의무대상 및 기준의 명확화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사업부서 : 건설정책과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3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풍수해저감대책 수립용역 재수립	• 용역재수립	2020	300	-	300	-

## 7. 기대효과

- 풍수해저감대책과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계획간 정합성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재난 대응의 실효성 증대



## (2) 운전자와 보행자가 더불어 행복한 도로 안전 관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사고 대응형’에서 ‘예방중심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효율적 유지 관리를 적기(適期)에 시행함으로써 장기적인 보수비용 감소의 효과를 극대화

### 1. 배경 및 필요성

-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의 부주의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도로 및 보행공간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
- 최근 교통정책의 방향이 사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2. 사업개요

- 보행자 친화형 도로구조로의 개선
- 교통안전 시설물의 개선
- 고령자 대상의 보행환경 개선
- 교통약자를 위한 Barrier Free 확대
- 보행자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종합적 진단 실시

### 3. 추진계획

- 유형별 보행자 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실시
- 보행자 친화형 교통환경 조성 사례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 4. 사업내용

- 보행자 친화형 도로구조로의 개선
  - 속도저감형 도로선형 도입 적용(S자형, 도로다이어트 등)
  - 대로 횡단보도에의 교통섬 설치
  - 보행우선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
  - 상습 사고유발도로에 대한 직선화 사업
  - 농어촌 지역 도로의 노면(갯길) 개선사업
  - 지체장애인(전동보행보조기구 사용자), 유모차 사용자를 위한 보행공간 확보
  - 회전교차로의 확대

○ 교통안전 시설물의 개선

- 시인성 높은 안전표지판 교체
- 불합리한 교통안전 시설물의 개선 및 재배치
- 스쿨존·실버존 시설 개선 및 보강, 정비
- 상습 사고지역·사고다발지역 중심으로 CCTV 확충

○ 고령자 대상의 보행환경 개선

- 보행자가 고령자일 경우, 안심벨을 누르면 보행신호가 탄력적으로 늘어나는 고령자용 안심벨 설치
- 실버존 지정 확대 및 단속 강화

○ 교통약자를 위한 Barrier Free 확대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보도턱 낮추기
- 경사로 및 보도턱 기준 개선
-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횡단보도에 안심벨 확대 운영
- 버스정류장 보도 개선사업

○ 보행자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종합적 진단 실시

- 보행자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원인분석 및 유형화 실시
- 원인별 대응 사례 조사 및 적용가능성 검토
- 유형별 대응방안 마련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도로교통과
- 협조기관 : 충남지방경찰청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19,5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도로구조 및 시설물 개선사업	• 도로구조 및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등	2018-2030	19,500	9,750	9,750	-

## 7. 기대효과

- 교통약자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근본적인 교통안전 대책 마련

### (3) 재해위험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사업

재해에 노출된 지역 주민들이 재해로부터 벗어나고 또한 저수지 수해 농경지에서 보다 편리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촌 영농 환경개선에 기여

#### 1.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저수지 1만7000여개 중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1만4000여개로 전체 저수지의 70% 이상이 50년 이상 된 노후가 심한 상태임
-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집중호우 등의 재해 증가는 노후저수지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가 차원에서도 지자체 관리 노후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위험이 높은 안전도 D, E등급의 저수지 중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354개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한 충남도 내 노후 위험 저수지(24개소) 피해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와 정비가 요구됨

####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 사 업 량 : 24지구(D등급)
- 사업기간 : 2018 ~ 2024년
- 사업시행 : 시장, 군수

#### 3. 사업내용

- 노후저수지 그라우팅, 제당보강, 여수로 정비 등

####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사업부서 : 시군 재해위험 저수지 담당부서
- 협조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 5.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2,83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 노후저수지그라우팅, 제당보강 등	2018-2024	2,830	1,415	-	1,415

## 6. 기대효과

- 노후 저수지의 붕괴 위험요인 해소로 하류지역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도모

#### (4) 반복되는 재해연결고리 차단하기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재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 기술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적절한 장치마련

##### 1. 배경 및 필요성

- 자연재해에 취약한 하천범람, 저지대 침수우려지역, 미개수 제방 등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의 정비로 재해의 사전예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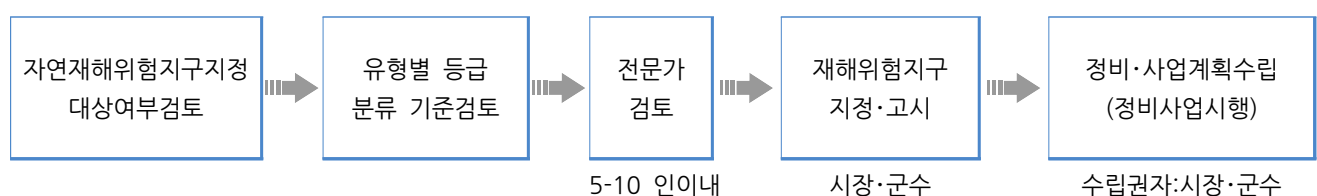
##### 2.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 사업대상 : 15개 시군 122개 지구
- 사업유형 : 침수, 유실, 고립, 위약방재시설, 붕괴위험, 해일위험 등 6가지 유형

##### 3. 추진계획

-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조기추진단 운영(단장:재난안전실장)
- 사업비 이월최소화를 위한 이월방지단 운영
- 최근 침수피해 발생지역, 추가피해 예상지역 등 신규지정 확대
- 재해위험지구 투자효과 제고 및 철저한 예산관리

표 4-5.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절차



##### 4. 사업내용

- 하천정비, 제방축조, 배수펌프장 설치, 사면정비 등 재해위험요인 사전제거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사업부서 : 시군 재해위험지구 담당부서
- 협조기관 : 금강홍수통제소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2,183억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하천정비, 제방축조, 배수 펌프장 설치 등	2018-2022	2,183	1,091	328	764

## 7. 기대효과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

## (5)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하기

소하천 정비 등 치수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예방 조치하고, 효율적 공간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소하천 조성

### 1. 배경 및 필요성

- 소하천정비계획 및 경관, 안전, 환경적 종합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시도가 요구됨

### 2. 사업개요

- 사업명 : 소하천정비사업
- 사업기간 : 2018 ~ 2030
- 사업내용 : 제방, 호안 등 물길 안정을 위한 시설 및 보, 수문, 배수펌프장, 저류지 등 소하천 수위 조절을 위한 시설 사업

### 3. 추진계획

- 소하천의 경우 농업용수와 관련된 독립적인 용수공급 계통이 거의 없는 실정, 소하천 이수계획의 용수 수요예측은 소하천 특성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유량 추정되지 않고 있음
- 소하천 환경계획 수립시 자연보전, 친수기능 등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극대화 하고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제반 계획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 시행
- 소하천 주변을 포함하여 자연환경, 사회환경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소하천 공간을 적정하게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본구상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반영
- 소하천 공간을 친수구역, 복원구역, 보전구역으로 계획, 가능한 통합적 하천환경(물리/생물/수질/친수)구분하여 결정토록 계획 수립

### 4. 사업내용

- 하천시설의 변화된 공간 수요에 맞추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 하천수 이용 상황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불필요한 보 철거 등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5. 추진체계

- 소하천의 지정고시 : 시장군수 ▶ 도지사협의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초안 수립 : 시장군수 ▶ 주민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 소하천 시설물 계획 : 하도시설, 저수 및 저류시설, 사방시설, 하천환경시설
- 항목별 세부계획 수립 : 재해예방계획, 이수 및 친수 계획, 하천환경계획
- 시행계획 수립 : 주민설문조사, 사업효과 및 경제성 분석, 타계획과의 연계성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최종계획 수립 : 시장군수
-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 시장군수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승인요청 : 시장군수 ▶ 도지사
-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 도지사 ▶ 시장군수 (종합계획 승인 통보)
- 소하천정비사업의 시행 ▶ 시장군수
- 주관부서 : 하천안전과
- 협조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5,200억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소하천 정비사업	• 제방, 호안 및 보, 수문 등 사업 추진	2018-2030	5,200	2,600	-	2,600

## 7. 기대효과

-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일관성 있는 소하천 정비로 통수능력 개선, 유수에 의한 제방의 침식 또는 세굴 방지 등의 재해예방 효과와 더불어 생활환경 개선, 자연환경 보호, 보건위생 향상, 하천의 수질보전 및 용수이용, 지하수 오염방지 등



## (6) 재해에 안전한 지방하천 정비하기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와 생태가 조화되는 하천정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하천 및 고향의 강 조성, 물 순환형 수변도시 정비 등 사업 추진

### 1. 배경 및 필요성

- 지방하천정비종합계획 및 경관, 안전, 환경적 종합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시도가 요구됨

###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5년
- 사업내용 :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요용을 증진하며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하천시설 설치

### 3. 추진계획

- 지방하천의 이수시설물(하천수 사용허가시설,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하천수를 취수하고 있는 관정 등)의 시설물 조사 관리체계 구축
- 유역의 용수공급을 위한 시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댐, 농업용저수지, 다기능보, 하구둑, 강변저류지, 저류시설 등의 시설 이력 현황 조사
- 하천 이수유량을 고려한 이수계획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보에 대한 시설물 관리기관과 협의를 통한 존치 여부 검토하고 지역여건, 하천의 역사와 문화, 하천의 경관,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 및 관리방향을 설정하여 하천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하천정비사업 시행

### 4. 사업내용

- 지방하천 공간내 하천시설 등의 관리를 위한 하천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하천시설물 파악
-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 친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정비, 이용, 관리 방안 등을 하천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
- 지방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등 하천정비사업 추진

### 5. 추진체계

- 하천별 하천기본계획 마련 : 국토부, 충남도, 시군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유역조사 자료 등 기초자료 조사를 통한 치수, 이수, 환경 등 종합분석
  - 하천기본계획(초안) 마련 : 주민, 전문가 자문 등 환경조사
  - 관련기관 협의 및 조정 : 하천관리청, 홍수통제소, 지자체, 환경부 등 협의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 도지사
- 하천기본계획 수립 고시 : 도지사
-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 도지사, 시장군수
-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시행 ▶ 도지사, 시장군수
- 주관부서 : 하천안전과
- 협조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 6. 예산계획

- 소요예산 : 1조 1,242억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지방하천 정비사업	• 제방, 호안 및 보, 수문 등 사업 추진	2018-2025	1조 1,242	5,621	2,811	2,810

### 7. 기대효과

- 지방하천이 홍수에 안전하고 건강한 자연친화적인 생태·문화 공간으로 조성, 하천가치향상 및 하천 복지를 통해 하천사업의 효과 증진

## (7)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보강사업

지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내진성능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분류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개선사업을 진행

### 1. 배경 및 필요성

- 충청남도는 2013년의 경우 전국 지진발생의 35% 이상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에는 진도 5.1의 지진이 발생하였음. 최근에도 보령, 홍성 등에서 발생하는 등 진앙이 점차 내륙으로 이동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음
- 200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진설계 의무를 강화하여 진도 6.0의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 시점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경주 지진과 같은 5.0 이상의 지진 발생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적절한 내진설계가 반영되었는지 검토하고, 2005년 이전 건축물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학교시설, 병원시설 등 내진성능 개선대상을 선정한 후 개선사업을 진행
- 충남도는 공공시설물 1,540개소 가운데 1,234개소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음(44%)

###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다중이용시설 등 지진발생으로 인한 붕괴 또는 손괴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을 1차적으로 확정함. 대상을 특정한 후 2005년 이후 시공된 건축물은 내진성능 확인과 점검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2005년 이전 시공된 건축물은 내진안전성을 검증한 후 진도 6.0기준의 지진강도를 버틸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실시
- 단기는 대상을 확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2005년 이후 시공된 건축물의 확인과 점검은 중기사업으로 함. 2005년 이전 시공된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대상 확정 사업이후 지진발생 빈발지역, 피해강도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로 진행(2018년 ~ 2030년)

### 3. 추진계획

- 지진발생과 강도에 대한 mapping 작업과 피해예측 시나리오 연구
-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병원시설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listup (개정시점 이전과 이후에 대한 확인 필요)
-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및 점검을 위한 인력과 장비 pool 작성 (보강과 개축에 대한 기준 개발)
- 점검 및 확인을 위한 지역, 대상 시설물의 우선순위 작성
- 시설물 내진보강과 개축사업 진행

#### 4. 사업내용

- 취약지구 위험도 및 강도 / 개선사업 대상 시설물 목록화 사업
- 내진성능 보강, 개축 기준 및 대상사업 우선순위 개발
- 내진성능 보강사업(2020년 까지 50% 수준 목표), 내진성능 점검 및 평가 사업
- 내진 설계 완료된 건축물(공공+민간) 도민에게 알려 재난 시 활용방안 마련(안전디딤돌 연계)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사업부서 : 도로교통과, 건축도시과
- 협조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2,374억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취약지구 위험도 및 강도 mapping 구축		2020	2	1	0.6	0.4
내진성능 보강사업		2018-2030	2,362	1,181	709	472
내진성능 점검 및 평가 사업		2019-2030	10	5	3	2

#### 7. 기대효과

- 단기간에 내진성능 확인과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을 도출하고, 지진발생 자료등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여 위험성이 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음
- 시간과 비용에 문제가 없다면 일괄적으로 모든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건축법 개정시점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효과적인 지진피해 대응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부터 개선해 나간다는 점에서 도민홍보를 통한 안전정책의 신뢰성을 제고

## (8) 해양사고 안전관리 확보방안 마련

해양사고 발생시 시설·인명피해 예방 및 사고현장 돌발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방안 마련

### 1. 배경 및 필요성

- 갯벌에서 조수간만의 차로 고립되는 조난자가 2015년 기준 121명, 이로 인한 사망도 8명에 이르는 등(국민안전터) 갯벌 체험 중 사고 발생율이 높고 야간 고립시 사망사고로 직결됨
- 야간 빛이 없는 해수욕장, 낚시구역, 항만시설 관리가 어려움



[그림 4-21] 해수욕장 등 야간 식별 영상 화면

- 해수욕장 안전관리가 해경에서 지자체로 이전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 인원을 배치하지만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에는 인력 투입이 어려우며, 특히 재난관리용 CCTV는 외각지역 모니터링 대부분 야간 조명시설 부족으로 영상불량(하천범람, 하천부변, 해변 등 주변모니터링 상황 취약)
  - 어항 : 총101개소(국가어항8, 지방어항29, 어촌정주어항24, 소규모어항40)
  - 해안선길이 : 1,242.03km(육지부 808.08, 도서부 433.95)
  - 도서 : 268개(유인도33, 무인도235) / 해수욕장:51개소(지정해제 16-2015.6)
- 충남의 낚시 관련 사고의 증가로, 낚시 인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국민의 레저 욕구에 부응. 어항 안전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방지 및 위험시설안전사각지대 해소
- 소규모 어선 폐유를 수거용기에 담아 직접 수거시설까지 운반함으로써 부주의 등으로 인한 오염사고 및 불법배출 발생, 도내 급유소를 통합 폐유수 관리체계 개선하여 소규모 어선의 폐유 무단배출에 따른 해양오염 사고 예방
  - ※ 소규모 어선에 의한 오염사고 : 어선 오염사고 중 57.7% 차지
- 충남 대산항 내 대규모 석유 화학단지 증설('00년 3개→'15년 59개), 대형유조선 정박 및 통항에 따른 해양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방제

## 2. 사업개요

-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대상(2030년까지 단계적 시행)
  - 4개 시군·33개 해수욕장(보령2, 당진2, 서천1, 태안28)
- 낚시어선 안전사고예방 사업대상(2030년까지 단계적 시행)
  - 6개 시군(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 5톤 이상, 승선원 13인 이상 낚시어선(567척, '16년)
- 지방어항 시설물 안전점검(2030년까지 단계적 시행)
  - 6개 시군(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 점검대상 : 56개소(연안항 4, 지방어항 28)
  - 어촌정주어항(24), 비법정어항(40)은 시군 자체 실시
- 소규모 어선 폐유 수거관리시스템 개선(2018년 ~ 2023년)
  - 6개 시군(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 폐유수거시스템 구축(폐유탱크, 회수펌프, 호스 릴 등) 급유소에 폐유저장탱크를 설치하여 급유와 동시에 폐유를 수거
- 해양오염(유류피해) 방제선 건조 및 운영(2018년 ~ 2019년)
- 해양방제자원 확충(2018년 ~ 2030년)
  - 서천군, 태안군 등 주요 항·포구
  - 방제장비 보관 컨테이너 7개소, 오일펜스 400M, 유흡착포 50box 등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그림 4-22] 소규모 어선 폐유수거 관리 시스템 모델링

## 3. 추진계획

- 국립해양조사원 조석데이터서버와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동작감지기반 자동감시서버 구축, 전송장비 및 방송장치 구축

- 열화상 카메라 및 경고방송용 스피커 설치
-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대상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고예방활동 및 현장 대응
- 낚시어선 안전사고예방 사업대상
  - 낚시어선 자체 안전점검계획 수립, 낚시어선 현황조사
  - 낚시 시즌 집중 합동 안전점검 실시, 사고예방 사후 조치
- 지방어항 시설물 안전점검
  - 지방어항 안전점검계획 수립, 합동 안전점검 실시
  - 안전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 등 예산 확보(단기·중기 조치계획 수립)
  - 안전시설물 파손 등 어항 운영관리 미흡사항은 시·군 통보 시정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시행
- 소규모 어선 폐유 수거관리시스템 개선(2018년)
  - 6개 시군(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 폐유수거시스템 구축(폐유탱크, 회수펌프, 호스 릴 등) 급유소에 폐유저장탱크를 설치하여 급유와 동시에 폐유를 수거

#### 4. 사업내용

- 각 시군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열화상 카메라 영상을 이용, 낚시배, 어선 및 여객선 입출항 모니터링 및 야간 불법조업, 해사채취 단속에 활용
-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조석데이터를 위치기반 서비스와 연계하여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탐지와 경보방송 실시
- 도내 해수욕장 우선 설치 및 어항, 도서지역 순차 설치
-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업대상
  -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및 어선 안전장비 구축
  - 안전관리요원 채용 및 안전장비 확충
  - 해경과 합동으로 안전관리요원 대상, 사전장비 활용 등 교육·훈련
  -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고예방활동 및 현장 대응
- 낚시어선 안전사고예방 사업대상
  - 낚시어선 자체 안전점검계획 수립, 낚시어선 현황조사
  - 낚시 어선 안전수칙 이행여부, 출입항 관리 현황 점검 : 불법 증개축, 출입항 신고, 안전장비 구비 및 작동, 승선정원 초과여부 등
  - 낚시 시즌 집중 합동 안전점검 실시, 사고예방 사후 조치

○ 지방어항 시설물 안전점검

- 지방어항 안전점검계획 수립, 합동 안전점검 실시(상·하반기 2회) : 시설물의 외관, 주요 부재의 변형·파손, 콘크리트 구조물의 침하 및 변위, 방충재, 차막이, 계선주 등의 안전시설 탈락 및 파손여부, 안전간판, 구명함 등 안전장비 관리상태 점검 등
- 상반기 :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시 병행점검 추진
- 하반기 : 방제시설 유지관리 및 점검계획 수립 추진
- 안전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 등 예산 확보(단기·중기 조치계획 수립)
- 안전시설물 파손 등 어항 운영관리 미흡사항은 시·군 통보 시정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시행

○ 해양오염(유류피해) 방제선 건조 및 운영

- 당진시와 협력, 행정안전부 사업 지원 건의
- 해양방제자원 수요조사(1월), 시군 보급(2~3월), 보관상태 점검(상시)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해양정책과
- 사업부서 : 시군 해양안전 관련 부서
- 협조기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16,398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국립해양조사원 데이터 프로그램 연동 협약		2019	비예산	-	-	-
열화상 카메라 설치		2019-2030	3,000	1,500	900	600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및 어선 안전장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안내표지판</li> <li>• 인명구조장비함</li> <li>• 안전관리요원 채용</li> <li>• 구명조끼, 자동소화시스템</li> </ul>	2018-2030	10,000	5,000	5,000	-
낚시어선 안전사고예방 사업대상		2018-2030	비예산	-	-	-
지방어항 시설물 안전점검		2018-2030	비예산	-	-	-
해양오염(유류피해) 방제선 건조 및 운영		2018-2019	2,500	500	-	2,000
해양방제자원 확충		2018-2030	598	299	-	299
소규모 어선 폐유 수거관리 시스템 개선		2018-2023	300	-	90	210



---

## 7.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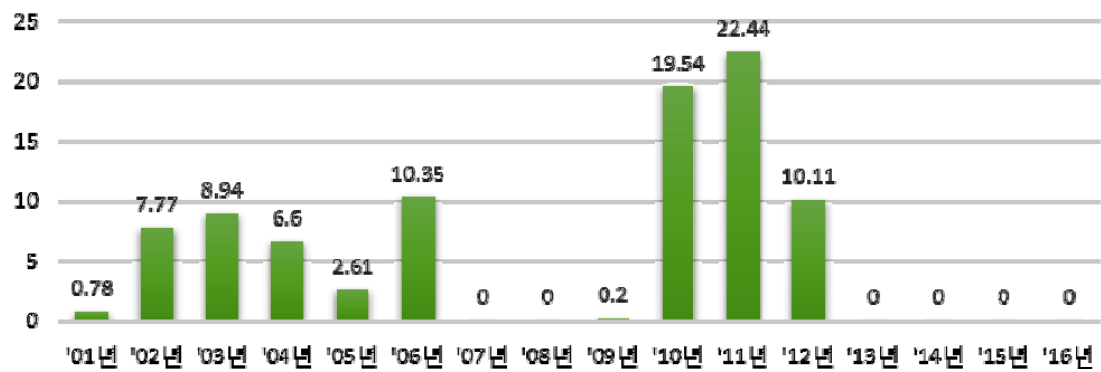
- 연안 주변의 인명피해 감소
- 일반 관광객의 고립으로 인한 조난사고 예방
- 여름철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예방,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 강화
- 소규모 어선의 폐유 무단배출에 따른 해양오염사고 예방
- 상시적인 해양오염 예찰 및 해안오염 방제 업무역량 향상
-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난(어선)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및 구난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경제손실 최소화
- 연안 체험자들에 대한 사고 위험성 환기로 연안사고 예방
-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한 연안관리
- 어선사고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사회적 비용 감소
-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한 어선 관리
- 해양오염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의 추가 확산 방지
- 해양환경 보전을 통한 수산자원 확보 및 어민의 안정적 소득 지원

(9) 산사태 위험 미리 개선하기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산사태 등 산림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과 산사태 위험지도를 활용하여 배수로정비, 비닐피복 등으로 붕괴를 방지하고, 정기적인 점검·정비

1. 배경 및 필요성

- 산지의 경사가 급하고, 하절기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우리나라 강우패턴은 매년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위험이 높음
- 충남은 산지가 낮고 경사가 급하지 않아 다른 시·도에 비하여 산사태 피해가 적은 편이나, 장마철 및 태풍을 동반한 집중 강우 정도에 따라 발생가능성이 상존함



※자료 : 산림청, 2017, 「산사태통계」  
[그림 4-23] 연도별 피해면적('01년 ~ '16년, 단위 : ha)

- 도내 산사태나 땅밀림으로 인한 하류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사방(砂防, Erosion control)댐 설치지역의 미스매칭 문제가 제기됨
- 산지내 사방댐 보다 하류 유역민 보호를 위한 사방댐으로 변화 필요



※자료 : Google, 「우면산 산사태 \_오마이뉴스」,(2013. 4. 4.)      Google, 「우면산 산사태 현장\_국민뉴스」,(2012. 9.17.)

[그림 4-24] 산사태 및 땅밀림 발생 현장

---

○ 폐광산 하류지역 사방댐 설치

- 전국 갭구 노출된 광산 350개지점 수질함물 10곳, 지반침하 가능성 28지점
- 전국광산 38%인 41곳 토양오염발생; 주변 논에서 20배넘는 납검출(갱내수 2000톤/일 유출) 등 오염 확산과 지반약화로 인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관리를 위한 사방댐 설치가 요구됨 (국정감사 제종길 의원)

○ 전원주택과 휴양 숙박시설(펜션) 건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사태 우려 지역 뿐만아니라 건물 신축으로 인한 산사태 우려도 생겨남에 따라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짐

## 2.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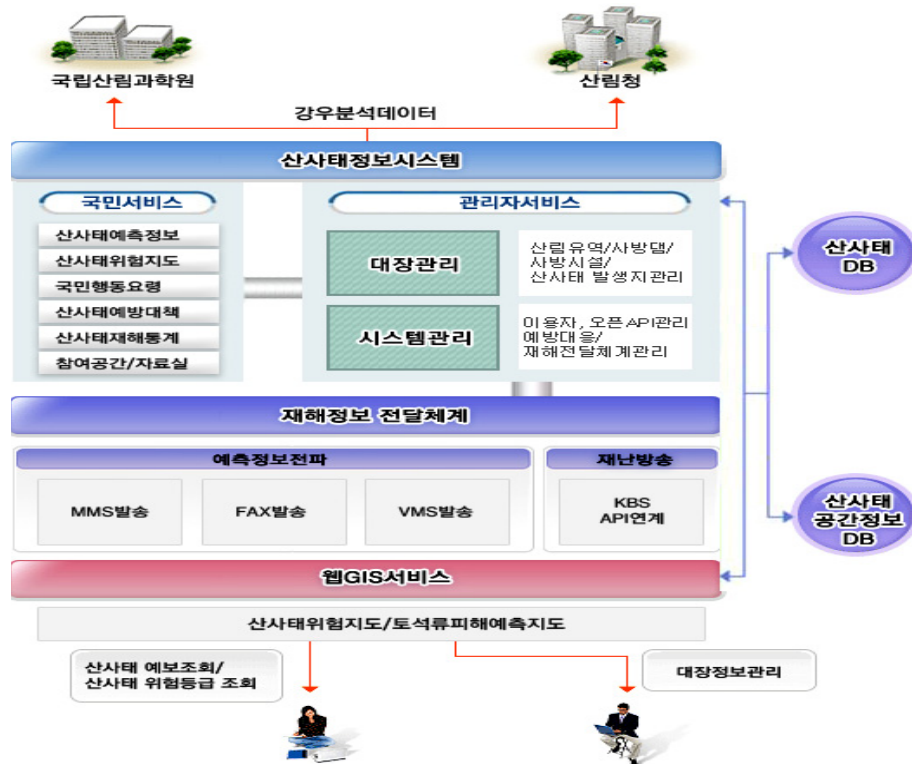
- 사업대상 : 충남도내 산사태위험 지역
- 사업기간 : 2018년~2030년

## 3. 추진계획

- 산사태 위험지역 실태 조사
- 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시행

## 4. 사업내용

- 산사태 위험도에 따른 건물 및 주택의 입지제한 제도화
- 산사태정보시스템(산림청)과 연계한 다기능 사방댐 설치



※자료 : Google, 「산림청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산사태 정보시스템 개념도」, (2017.09.13.)

[그림 4-25] 산사태 정보시스템 개념도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산림녹지과
- 사업부서 : 재난대응과
- 협조기관 : 중부지방산림청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224,695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다기능사방댐 설치		2018-2030	81,250	56,875	16,250	8,125
입지제한 제도화	• 조례제정	2018-2020	비예산	-	-	-
산사태취약지역 주거지 이전		2020-2030	10,000	7,000	2,000	1,000
산림생태복원사업 및 계류보전사업 등		2018-2030	133,445	93,412	26,689	13,344

## (10) 재난유형별 취약요인분석 전문역량 강화

### 재난취약요인 분석기법 및 활용능력 배양과 전문성 강화

#### 1.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의 고도화·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 사고발생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또한 도로뿐만 아니라 철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도 종종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음
- 이처럼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주변에서도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요인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취약성에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규명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임

#### 2. 사업개요

- 지역별 재난발생 취약성 분석
- 위험설비 안전진단 평가 방안 마련
- 지반침하 피해 및 원인분석

#### 3. 추진계획

- 재난 취약요인 분석 및 우선순위 선정
- 재난유형별 취약성 및 안전진단 실시, 개선방안 도출 및 제시

#### 4. 사업내용

- 지역별 재난발생 취약성 분석
  - 재난발생 및 피해 현황 및 추이 분석
  - 재난유형별 취약성 분석 기법 및 프로세스 마련
  - 분석지표 및 조사방법 마련
  - 재난유형별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방안
- 위험설비 안전진단 평가 방안 마련
  - 위험설비 분포현황 및 위험요인 도출
  - 유사 안전진단 평가체계 분석
  - 위험설비 안전진단 평가체계 및 적용방안

- 지반침하 피해 및 원인분석
  - 국내외 지반침하 피해 사례 조사·분석 및 유형화
  - 유형별 지반침하 원인 분석 및 규명
  - 개선 및 적용방안 제시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사업부서 : 안전정책과, 도로교통과, 건설정책과
- 협조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2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재난발생 취약성 분석 등 용역 추진		2020~2022	200	-	200	-

### 7. 기대효과

-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한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안전진단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충청도내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에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11) 깨끗하고 안전한 가축농장 환경 및 기준 만들기

가축의 사양관리, 환경오염방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도모

### 1. 배경 및 필요성

- 식용으로 사용되는 동물에게 발생한 질병이 사람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등 식용을 위한 가축의 집단 사육으로 인한 질환의 인체전이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 2015년 가축전염병(두):돼지단독(Swine erysipelas)25, 추백리1, 브루셀라17, 결핵634, TGE,PED3,641, 마렉병1, 기타91,831
- 축사 주변의 악취와 해충, 토양 및 수질의 오염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으로 지역공동체 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충청남도의 가축 사육 두수는 한·육우 350,424두, 젓소 69,141두, 돼지2,239,197두, 닭42,735,604 두로 토지면적당 사육밀도가 전국 1위를 기록함
- 노후된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혐오감을 유발하며, 비위생적 사육시설과 과밀한 축사환경은 동물 복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이 됨



[그림 4-26] 노후 가축사육 시설 현황

###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소, 돼지, 닭 사육시설
- 사업기간 : 2018년~

### 3. 추진계획

- 가축면역력 증강사업
  - 친환경 방목축산 육성, 가축사육환경 개선

- 악취, 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 차단 밀폐형축사 시설기준 마련 및 친환경 가축사육시설 인증제 추진
-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충남형 SOP 마련 및 매몰지 관리 강화 사업
  -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발병 원발 농가 관리를 통한 확산 최소화
  - 매몰지 주변의 악취와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강화
- 가축분뇨의 친환경자원순환(유기질비료 후 사용) 의무화 방안



※자료 : Google, 「친환경 축산! 가축분뇨 자연순환으로부터 시작합니다\_경기뉴스포털」, (2017.06.19.)

[그림 4-27]친 환경 축산 자원순환체계

#### 4. 사업내용

- 동물원성감염증(zoonoses)방지프로그램
  - 동물 질병의 인체전이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 홍보
  - 가축질병 예방 및 근절(구제역, 광우병, 고병원성AI 등)을 위한 충남형 SOP 마련
- 축산시설 현대화사업프로그램
  - 전염병확산 예방, 악취와 해충차단,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시설기준 제안
  - 화재 위험이 높은 전기시설 안전기준 제안 및 홍보



- 매몰지 관리 체계 일원화 (매몰과 사후 환경관리 및 침출수 관리에 관련된 부서별 업무의 공동 관리)
-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후 시비(의무)프로그램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축산과
- 사업부서 : 물관리정책과, 재난대응과
- 협조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153,846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동물원성감염증 방지대책 사업		2018-2030	62,023	35,353	5,582	21,088
축산시설현대화 사업	• 사업비 지원	2018-2030	19,500	19,500	-	-
가축매몰지 관리		2018-2030	1,525	610	305	610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규격화후 시비 (의무) 프로그램	• 0.5톤이상 의무	2018-2030	36,400	18,200	5,460	12,740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		2018-2030	34,398	-	10,320	24,078

## 7. 기대효과

- 가축질병의 인체전이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
- 축사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역 주민 간 갈등 해소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가축 전염병의 예방과 사체 처리방법의 다원화를 통한 매몰 두수의 축소로 가축 매몰지에서 발생하는 2차 오염의 확산 방지

---

## (12) 365일 안전한 도로만들기 혁신대책

###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 등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 1. 배경 및 필요성

- 도시 노후화와 교통량 산업시설을 통과하는 대형 화물차량 증가로 인하여 포장도로의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고, 포장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함

#### 2. 사업개요

- 도로 포장 유지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포장 설계 방식을 개선하고, 차열성, 저소음 배수성 포장 시험포장 및 추적 조사 실시

#### 3. 추진계획

- 차도 혁신 종합대책 마련
  - 도로포장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 유지관리 혁신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빅데이터 기반)
- 포장공사 품질 강화

#### 4. 사업내용

- 교통량·교통하중을 반영한 하부 지지력 보강 및 아스팔트 포장 단면 설계
- 재포장 주기 설정 현실화
- 굴착복구·포장공사 품질 강화 : 감리원 확대
- 차도관리 혁신단 운영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도로교통과
- 협조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65,0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국지도 및 지방도 보수사업		2018-2030	65,000	-	65,000	-

## 7. 기대효과

- 노면 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위험의 대폭 감소

## (13) 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사용으로부터 안전권 확보하기

유해화학물질 정보제공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시 가이드라인 및 입지 제한 제도를 마련함

### 1. 배경 및 필요성

-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폭발 및 누출로 자연재해보다 큰 재난발생
  - 2015년 기준 화학물질관련 사고(Chemical Accidents)는 사업장내 유출64건, 운반차량 사고 21건, 폭발 등에 의한 유출 28건으로 해마다 증가(환경통계연감)
- 불산 등 제조 및 사용과정에서 비의도적인 유출사고로 연접 거주민 피해 발생
  - 충남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현황 :제조업 62, 판매업 281, 보관저장업 5, 운반업 19, 사용업 183개소 (환경통계연감)



※자료 : Google, 「China explosion videos\_BBC」, (2017.09.18.)

Google, 「화학사고 대응 콜라보레이션(협업)이란?\_환경부 공식블로그」 (2017. 9.18)

[그림 4-28] 텐진항 폭발 현장

[그림 4-29] 화학사고 협업현장

- 유해화학물질 제조, 보관저장, 사용사업장은 거주지역으로 부터 일정거리 이격토록 입지강화 관리가 필요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거리는 12m에서 최대 30m까지 정하고 있음(환경부고시 제2014-251호)
- 화학물질 제조, 보관 및 사용 사업장의 경우, 주민 뿐만아니라 취급 근로자의 경우도 해당 물질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1차적으로 취급 및 사용 사업장 및 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있음
-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와 취급업체 급증으로 화학사고 및 인명피해 증가에 따른 초동대응체계 구축 및 화학사고 현장대응 및 제독을 위한 대응장비 지속 보강 필요

##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유해화학물질 제조, 보관저장, 사용사업장
- 사업기간 : 2018년~2050년

## 3. 추진계획

- 2019년 ~ 2020년 내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업장 분포 작성 및 독성 영향 피해거리 산정 등 위험물 취급 사업장 공개를 위한 이론 체계 정립
- ~2022년 유해화학물질 유출 시 취약지역 분석
- ~2050년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운영가이드라인 작성 및 거주지와 적정 이격 거리 산정
- 2018~ : 화학사고 현장대응을 위한 장비 지속 보강(화생방분석차 등)

## 4. 사업내용

-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사용 사업장 분포도 작성
  - 유해화학물질 사용, 유통, 저장량을 조사
  -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종류, 취급량, 보관·저장용량 등을 보기 쉽게 도식화한 분포도 작성 및 공개
- 유해화학물질 독성영향 피해거리 산정
  - 취급량, 취급빈도 등을 고려한 독성우려 농도값 조사
- 화학사고 대비 주민 소산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 유해화학물질 유출시 취약지 분석(거리, 풍향, 지표수, 지하수 등)
  - 화학사고 발생시 유관기관 협력방안 및 주민소산계획 운영 가이드라인 작성
  - 유해화학물질 유출 대비 취약지역 분석(거리, 풍향, 지표수, 지하수 등)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 소산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 유해화학물질 매뉴얼에 반영
- 유해화학물질 생산 및 사용규모별 거주민과 적정이격거리 산정
  - 환경부 건의,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 화학물질 정보의 체계화 및 구체화를 통한 취급사업장의 입지 제한 제도화
  - 입지제한 제도 마련 및 조례제정(최소 100m)
- 화학사고 현장대응을 위한 장비 지속 보강
  - 화학사고에 대한 분석·제독·지휘가 가능한 화생방분석차 도입(교체)
  - 중화제 등 장비 이송을 위한 특수재난 다목적 사륜 구조차 도입(8대)
    - ※ (2017년) 8대 보강 ⇨ (2018년) 4대 예정 ⇨ (2019년) 4대 예정

- 화학복 등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지속 보강('18년 7종 202점 보강 예정)
  - ※ 화학복 30, 화학용 유해가스 측정기 4, 제독제 및 중화제 17, 누출물 수거장비 17 등
- 화학물질 사고 분석을 통한 맞춤형 장비 지속 보강
- 화학물질안전원·중앙구조본부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
- 소방서별 합동훈련 및 구조대별 초동대응훈련 실시
  - ※ 금강유역환경청 등과 서별 연 1회 합동훈련, 구조대별 연 1회 누출대응훈련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환경보전과
- 사업부서 : 소방본부, 투자입지과, 재난대응과
- 협조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3,015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위험물취급 사업장 현황 조사	• 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사용 사업장 분포도 작성	2019	50	-	50	-
화학사고 대비 취약지 분석 등 대비책 마련	• 유해화학물질 독성영향 피해 거리 산정 • 화학사고 대비 주민 소산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 유해화학물질 생산 및 사용 규모별 거주민과 적정이격 거리 산정	2020-2050	100	-	100	-
화학사고 현장대응을 위한 장비 보강		2018-2021	2,865	1,949	916	-

## 7. 기대효과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공개와 물질에 대한 공개를 통해 주민 불안 해소
- 사고 발생에 대비한 주민 소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실제 사고 발생 시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주민 보호에 기여

## (14) 다중이용시설 안전 특별관리

민간 자율안전관리를 통해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의 안전 환경조성으로 화재와 같은 대형재난을 최소화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

### 1. 배경 및 필요성

- 상업시설의 대형화 및 신규 레저시설의 확대로 인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은 사고발생시 인명·재산의 피해가 많고, 사후 대응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건축물의 민간자율안전관리체제 정착과 자율경쟁을 통한 안전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향후 민간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율적인 안전의식 확대·전파를 목적으로 함

###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호텔, 백화점, 대규모점포, 멀티플렉스 영화관,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동주택, 일정규모 이상의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목욕탕,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
- ※ 유원시설업 현황 : 88개 업체(종합 5, 일반 28, 기타 55)

### 3. 추진계획

- 시민단체 및 소방서 합동평가단이 1차 평가해 부문별로 우수대상 추천
- 소방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부분별 전문평가단이 현장 확인을 통한 재평가
- 결과를 토대로 소방기술사와 건축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최종대상을 확정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과, 추락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 및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추진
- 유원시설 안전관리 정보망 구축, 도·시군간 안전관리 체계확립
- 유원시설업 등록시 「시설 및 설비기준」 강화
- 단기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 영업기간 변경(1년 미만 > 6개월 미만)
-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강화

### 4. 사업내용

- 방화관리자 업무수행능력, 경영자의 재정지원 및 안전관리 관심도,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작동상태, 화재발생 및 피해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한 평가항목 구성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추진

- 대상 :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 설치 대상 2,553개소
- 추진계획 : 단계별 안전대책 수립 추진
  - (1단계)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 6월 말까지
  - (2단계) 일반음식점, 고시원 : 7월 ~ 9월
  - (3단계) 기타(이외 업종) : 10월 ~ 12월
- 추진방법 : 추락방지 스티커 배부(부착) 및 안전로프 등 설치 유도

○ 다중이용업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강화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실시(2년 1회이상)
  - ※ 신규교육, 수시교육 이외 보수교육('16. 1. 21.이전 대상)추가 실시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 도내 다중이용업소 전 대상에 대한 보험 미가입(미가입 다중이용업소 과태료부과 대상) 및 만기 도래 대상 실시간 확인 후 가입 조치
  -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율 100% 유지

○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추진

- 합동 점검반 편성 : 도, 시군(관광 및 안전관리 부서), 민간 전문가
- 점검기간 : 상반기(3~4월), 물놀이 시설(5~6월), 하반기(9~10월)

○ 유원시설 안전관리 정보망 구축, 도·시군간 안전관리 체계확립

- 유원시설업체 현황,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설 및 유기기구의 정보, 안전성검사 수검 내용, 안전관리자 배치 등

○ 유원시설업 등록시 「시설 및 설비기준」 강화

-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 수질검사장비, 수상인명구조장비, 씻을 수 있는 시설 구비 및 유원시설업자 구급약품 비치 의무화
- 영업장 면적 상관없이 해당기구 1종 이상 설치시 신고 의무화

○ 단기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 영업기간 변경(1년 미만 > 6개월 미만)

○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강화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소방본부

○ 사업부서 : 하천안전과



---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비예산

## 7. 기대효과

- 시설의 안전성이 주택 또는 시설을 선택할 때의 선택기준으로 작용
- 자발적 안전관리로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추락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를 통하여, 도민의 안전에 이바지
-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미연에 예방
- 예찰활동 강화로 안전위험요인 해소 및 미흡사항 개선·보완 조치

## (15) 단계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환경부는 2016년에 나온 미세먼지 대책(14% 감축)보다 2배 높은 감축 목표(30%)를 달성하고자 사회 전 분야에서 중장기적으로 감축 대책 마련 - '17. 9.

### 1. 배경 및 필요성

- 충남은 화력발전소 밀집, 중국 황사발원지와 가깝고, 고속도로(배기가스, 타이어분진) 등 통행량 많은 지역으로서 일차 및 이차 미세먼지에 의한 학생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한 저감대책과 대응요령 작성 보급이 필요함

###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화력발전시설, 제조사업장(석유화학단지 및 산업단지 밀집지역 등), 노후경유차 등
- 자발적 협약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 진행상황 수시 파악 및 조기 달성유도
  - 제도 도입(규제지역 지정 등)
  - 감축량 확정 및 자발적 감축 협약식 추진(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상위 20개사)
- 화력발전소 배출 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및 시행(고체연료사용시설(100MW 이상을 추진대상으로 함)
  - 1단계 '21년부터 기존 발전시설 24기(폐쇄예정인 서천화력 2기 제외)의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기준의 60% 수준으로 강화
  - 2단계 '23년부터 기존 발전시설 중 11기 배출허용기준을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국내 최고 수준)
  - 3단계 '26년부터 기존 발전시설 등 19기에 대하여 영흥화력 수준 강화
- 목표 : 제2차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2015, 환경부) 목표 수준으로 우리도 목표 설정
- 사업기간 : 2018년 ~ 2025년

### 3. 사업내용

- 대기질 분석 진단 시스템 구축
- 전기자동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사업 등

###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환경보전과
- 협조부서 :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 5.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61,035억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억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공공 분야	사업장	• 저녹스 버너 지원(100대)	2018-2025	14	-	14	-
	도로	• 도로분진 흡입차량(30대)	2018-2025	60	-	60	-
	이동 배출원	• 전기자동차 보급 등	2018-2025	2,281	1,369	456	456
	충전소	• 전기 및 수소 충전소 설치 등	2018-2025	265	133	53	79
	측정망	• 집중 측정소 설치 등	2018-2025	31	-	31	-
	건강	• 주민건강 영향조사 등	2018-2025	15	-	15	-
	홍보	• 대기질 전광판	2018-2025	33	-	33	-
	에너지전환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연구 등	2018-2025	130	-	130	-
	국외	• 대외 협력사업	2018-2025	1	-	1	-
민간 분야	화력발전 3사	• 환경설비 개선사업	2018-2025	58,205	-	-	-
	협약체결	• 자발적 협약을 통한 대기오염 물질 저감	2018-2025	비예산	-	-	-

## 6. 기대효과

○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등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통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 (16) 안전까지 하도급으로 불공정 하도급 근절대책

건설업계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통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함

### 1. 배경 및 필요성

-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이 관행화 되어 있어 공사장 안전사고가 빈발하며, 이에 따른 부실시공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상대적 사회약자인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 2. 사업개요

- 하도급 실태 점검과 하도급 부조리 신고 접수를 통해 하도급 개선 협의회 운영 및 건설공사 하도급 문화 개선을 위한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 마련

### 3. 추진계획

- 정상적 하도급 거래질서 마련을 위한 불공정 행위 차단
- 모범 현장선정을 통하여 공정성 평가 실시
- 하도급 실태 점검과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4. 사업내용

- 투명한 하도급 대금 거래 정착을 통하여 임금 체불 방지
  - 국토부 대금 e바로시스템을 연계하여 계약 및 대금 지급 여부 확인
  - 전자인력제관리를 통하여 근로자 노임 지급 확인
  - 입찰공고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직불합의서 이행 확인
- 주계약자와 공동도급제 활성화를 통하여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
  - 하도급자와 수평적 계약관계로 체불 방지
  - 발주처주관 하도급실태 현장점검 강화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
- 모범공사현장 선정 실시를 통하여 하도급 공정성 평가 실시
  -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하도급 개선에 반영

-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법률상담, 자문, 감사 실시 및 제도 개선
  -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 강화
    -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 건설협회와의 간담회 운영 및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 실시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건설정책과
- 협조부서 : 계약부서, 발주부서, 시군
- 협조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비예산

## 7. 기대효과

- 불법 하도급 근절로 부실공사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

(17) 교량 및 터널 등의 공공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도내 지방도 교량·터널 등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등 합동 특별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의 안전과 도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사항 제로화

1. 배경 및 필요성

- 공공시설 중 시특법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야 함 (예) 교량 하부 점검을 위한 점검차 추가 확보 필요
- 기존 시특법 대상 시설물의 경우 A~E 등급을 평가하고 점검 및 조치사항이 안전처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이 기준을 만족하면서 충남도 시군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더 향상된 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2. 사업개요

- 실시대상 : 충남도 내 교량 및 터널(위임국도, 국지도, 지방도 합산)등 566개소

3. 추진계획

-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교량의 상태별 안전여부 진단

표 4-6.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

안전등급	정기점검 (전 시설물)	정밀점검(시특법 1·2종)		정밀안전진단 (시특법 1종)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1년에 2회 (상·하반기)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월1회(E등급 2회)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대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차별 보수보강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 제한·금지 등 응급조치
  -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 긴급 보수·보강 조치
  - 보수·보강, 개축 등 위험요인 해소대책 마련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도로교통과
- 협조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5.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16,5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정기점검 등		2018-2050	16,500	-	16,500	-

## 6. 기대효과

- 정기적인 점검 및 진단으로 시설물의 적기 보수·보강을 시행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내구 연한 증대
- 점검결과에 따른 재난위험교량(안전등급 D, E등급)으로 판정 될 경우 신속한 재가설 공사 추진으로 차량의 안전운행 및 인명사고 예방 도모

## (18) 지방상수도 지하관로 종합관리 대책 추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녹물발생 예방 및 싱크 홀 발생을 방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 1.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사용중인 상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누수로 주변토양의 지속적인 유실로 싱크홀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관망정비 및 주기적 관리를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함

### 2. 사업개요

- 사업명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 사업기간 : 2017. 1. ~ 2027. 12.(10개년계획/ 군별 5년이내)
  - 1단계 사업 추진('17 ~ '21)
  - 2단계 사업 추진('18 ~ '22)
  - 3단계 사업 추진('19 ~ '23)
- 사업내용 : 관망정비, 누수탐사/복구, 블록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 사업대상 : 우리도 6개군(금산군은 K-water에 수도사업 위탁으로 제외)
  - ※ 우리도 '17년 사업대상지 : 3개군(부여,서천,태안)
- 사업비 : 10,608백만원(국비 5,684, 도비 1,629, 군비 3,295)
  - ※ 부여군 (2,930백만원), 서천군 (3,800백만원), 태안군 (3,878백만원)
- 시행자 : 군수

### 3. 그동안 추진현황

- '16. 8.11.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획서 및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 '16. 9. 8.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도비비원 및 추진방향 알림
- '16.10.13. : 기본협약 체결(도, 3개군, K-water)
- '16.11.25. : 실시협약 체결(3개군, K-water)
- '17. 2. : 실시협약에 따른 현대화사업 착공,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17. 3. : 기초자료 및 현지 조사, 누수탐사/복구(블럭단위 설계완료 시 공사 발주)
- '17. 3. : 공사 추진 및 상반기 집행상황 점검
- '17. 7. : 상반기 성과 측정 보고회(정상 추진 중, 공정율 약 55%)
- '17.10. : 공사 추진 및 하반기 집행상황 점검



#### 4.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 1단계 계속사업 추진('17 ~ '21) : 3개 군(부여, 서천, 태안)
- 2단계 신규사업 추진('18 ~ '22) : 2개 군(홍성, 예산)
- 3단계 사업추진('19 ~ '23) : 1개 군(청양)
- 사업시행 단계별 군 및 K-water 와 협약체결
- 郡 지역 사업완료 후 市 지역까지 사업 확대 추진(환경부 건의)
- 주관부서 : 물관리정책과
- 협조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지사

#### 5.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129,062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 1단계	2017~2021	60,111	42,079	9,016	9,016
	• 2단계	2018~2022	52,182	36,528	7,827	7,827
	• 3단계	2019~2023	16,769	11,739	2,515	2,515

#### 6. 기대효과

-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녹물발생 예방 및 싱크홀 발생을 방지
-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 (19) 재난안전 위험 특성에 따른 현장대응 훈련 강화

도민들에게 실제 재난의 느낌을 전해주는 체험형 훈련과 스스로가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험형 훈련 등으로 체험·체감을 통한 재난대응 능력 배양

### 1. 배경 및 필요성

- 지역 특성에 따라 취약한 재난 유형이 차이가 있으므로 획일적인 훈련체계로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실제 재난 발생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시 공동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이를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인명 구조에 필요한 협조체계를 확보하여 재난 발생 시 활용함

### 2.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 시민 참여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
  - 거주민 참여 긴급구조 종합훈련
  - 훈련 계획단계부터 훈련대상자가 참여하여 호응도와 이해도 향상
  - 지진방재종합훈련 등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
- 병원·군 등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재난관리 협업기관의 재난대응 능력 평가 및 표준 평가 안 마련
  - 연1회 정기평가, 법정 의무교육 실시, 매월 긴급대응 협력관 점검 실시
- 가상 재난훈련 시뮬레이션 활용
  - 시군 재난 발생 특성과 연계한 풍수해·붕괴·교통사고 등 훈련 실시

### 3. 사업내용

- 시민 참여를 통한 훈련 시나리오 마련
- 재난관리 협업기관 재난대응 능력 평가 및 표준 평가 안 마련
- 훈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 정례적 훈련 실시를 위한 평가, 점검 및 교육

###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협조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 5.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2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시민참여를 통한 훈련 시나리오 마련	-	2019	비예산	-	-	-
재난관리 협업기관 재난대응 능력 평가 및 표준평가 안 마련	-	2020	비예산	-	-	-
훈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	2025	200	-	200	-

## 6. 기대효과

○ 재난관리 협업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재난대응 프로그램 개발 등 도민의 안전권 증대에 기여

---

## (20) 신속한 재난 회복을 위한 유효 재난시스템 확립

재난 발생 이전에 방재 대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발생 이후에는 유연하게 회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1. 배경 및 필요성

- 재해발생은 통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피난소 및 피난경로 등을 포함하는 피난지구의 사전구축이 중요함
- 특히 피난 지구에는 비상시 제한된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가 적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준비가 갖춰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시설장비의 운용을 위해 사전대비와 훈련이 수반 되어야 함
- 기존 마을앰프의 노후화로 신속한 상황전달 어려움, 어촌마을 각종 재난발생 시 상황전파, 대응, 복구를 위해 비상상황, 전파시스템 설치 필요

### 2. 사업개요

- 피난체제의 정비, 피난소 등 지정 및 안전 확보
- 피난소 관리운영체제의 정비
- 재난유형별 시설장비 확보 방안
- 스마트 마을 재난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3. 추진계획

- 피난체제 실태 파악 및 분석
- 피난소 운영체계 마련
- 피난소 홍보방안 마련
- 스마트 마을 재난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4. 사업내용

- 피난체제의 정비
  - 피난소 위치 및 피난방법에 대한 평상시 훈련·교육
  - 피난권고 기준의 정비, 피난지원계획 수립
  - 재난취약자에 대한 피난지원체제 구축
  -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등과의 사전 연계체계 구축

○ 피난소 등 지정 및 안전 확보

- 피난소, 피난장소의 지정·확보 및 주민홍보
- 피난소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 피난소 상하수도 공급 및 관리 방안
- 피난도로 주변시설의 안전성 확보(접근성 확보)

○ 피난소 관리운영체제의 정비

- 피난소 운영 매뉴얼 마련 및 피난소 운영체계 정비
- 임시화장실 설치 및 운영 관련 매뉴얼 작성

○ 재난유형별 시설장비 확보 방안

- 재난유형별 필요 시설장비 파악
- 시설장비 확보 및 운영방안

○ 스마트 마을 재난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주장비) 마을회관 내 / (스피커) 야외 및 각 가정집 內
- 집안, 밖에서 방송 청취 가능, 외출 후 집안 스피커로 재청취 가능
- 재난발생 시 마을이장, 공무원의 개인소지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방송 가능
- 비상상황 발생 시 재난 예·경보 시스템(재난대응과), 범죄예방 온마을 퍼지미, 산불 등 화재발생 시 의용소방대 및 주민 동원 등과 연계 운영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협업부서 : 물관리정책과, 안전정책과, 정보화정책과

○ 협조기관 : 육군 제32사단, KT 충남고객본부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32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피난소 관리·운영체제 등 마련	-	2020	비예산	-	-	-
스마트 마을 재난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2021	320	-	320	-
재난유형별 필요 시설장비 확보 방안마련	-	2020	비예산	-	-	-

## 7. 기대효과

- 피난소 및 피난경로 등 피난체제의 사전구축에 따라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효율적 시설장비의 활용이 가능
-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전파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가구별 실시간 정확한 정보 전달 체계 확립으로 주민의 편의 증진

## (21) 학교 및 청소년 이용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

학교 및 청소년 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와 안전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체계적인 시설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안전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

### 1. 배경 및 필요성

- 학교와 청소년 수련 시설, 기숙사, 합숙소, 기숙학원 등 청소년 이용시설은 학생들에게 그 어떤 시설보다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로서 학교 시설 내외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함
- 특히 최근 발생한 지진과 석면 문제, 식·음용수 등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들로 인해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음
- 따라서 학교와 청소년 수련 시설, 기숙사, 합숙소, 기숙학원 등 청소년 이용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제거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 사업개요

- 학교 등 시설 안전 체크리스트 보급
- 학교 등 시설 점검 평가단 운영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 학교 내 소규모 안전체험장 설치

### 3. 추진계획

- 학교 등 시설의 취약성 및 위험요인 도출
- 학교 등 시설 점검 및 평가체계 구축
- 교육청과 연계한 소규모 안전체험장 운영
-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와 연계하여 점검 운영
- 민간 수련시설 관리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미신고자 등 위반이 있는지에 대한 관리 및 감독과 이행 실태수시 점검

### 4. 사업내용

- 학교 등의 시설 안전 체크리스트 보급
  -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 유지 관리체계 수립

- 
- 안전점검 시행주체 및 점검시기의 명확화
  - 안전점검 시행주체별 / 분야별 체크리스트 제작(시설물 관리자 / 학생 / 교직원 등)
  - 학교 시설 점검 평가단 운영
    -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학교 시설 점검 평가단 구성(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설물 관리자 등)
    - 평가단 운영 시기 및 방법, 절차 등 마련
    - 평가단 활동 내용에 대한 feed back, 평가결과의 반영 방안
  - 청소년수련시설 시설 점검 평가단 운영
    - 자체평가 : 시군담당자, 시설 관리자 자체평가
    - 합동평가 : 여가부, 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합동평가
    - 점검대상 : 48개소(수련관 11, 문화의집, 12, 수련원 15, 야영장 2, 유스호스텔 8)
    - 점검분야 :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및 인증 현황 조사
    - 인증수련활동 미보유 시설에 대하여 인증 컨설팅 지원 및 신고 관리·감독
  - 학교 내 소규모 안전체험장 설치
    - 소규모 안전체험이 가능한 분야 선정(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체험시설 장비 보급, 프로그램 개발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 사업부서 : 안전정책과
- 협조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 6.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1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학교 등의 시설안전 체크리스트 보급	-	2019	비예산	-	-	-
학교시설 점검 평가단 운영	-	2019	비예산	-	-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	2018~	비예산	-	-	-
학교내 소규모 안전체험장 시범사업 추진	-	2020	100	-	100	-

## 7. 기대효과

-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점검의 생활화를 도모할 수 있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함으로써 안전의식 고양과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청소년시설 사전 안전점검 실시로 시설개선과 안전 확보 및 경각심 고취
- 청소년수련활동 사전신고 및 인증제 실시로 수련활동 관련 정보 제공

## (22)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환경 개선

어린이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 1. 배경 및 필요성

- 그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의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운전자의 과속 등 안전의식 결핍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대부분이 학교 주변인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고 있음
- 전국 스쿨존 총 1만6456곳 중 34.4%인 5656곳에만 CCTV(기준 : 1대 이상)가 설치되었으며, 서울의 설치율이 85.4%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강원(80.6%), 부산(78.7%), 경기북부(67.1%) 등 인데 비해 충남은 9.5%로 최하위권임
- 스쿨존 CCTV는 사고 예방과 단속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필수 안전시설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CCTV 설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제4조의2) 스쿨존의 CCTV 설치관리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할 스쿨존 내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법률개정 검토가 필요함
- 선진국들은“차량통행이 어린이보행안전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철학을 바탕으로,“제도와 기준은 간단하게, 처벌은 엄하게”를 원칙으로 삼음

### 2. 사업개요

- 각종 시설 및 장치의 도입과 의식개선 캠페인을 통한 학교주변 교통사고 발생 위험 감소
  - 물리적 감속장치 : 과속방지턱, 고원식 교차로, 요철포장, 컬러아스콘포장
  - 감속유도시설 : 통합표지판, 속도계, 감시카메라
  - 아동보호시설 : 교통섬이나 안전울타리

### 3. 사업내용

- 스쿨존 도색 관리주기 단축
  - 도색 벗겨짐 발생 전 관리 강화
- 스쿨존 내 안전시설물 설치 강화
  - 차도와 인도 구분 안전펜스 설치
  - 펜스 디자인 일원화(시각적으로 스쿨존임을 판단할 수 있도록)

- 규격에 부합된 과속 방지턱 설치 강화
- 통학용 보행도로 확보
  - 일부 지역 내 보행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통학로에 대한 전수 조사
  - 보행로 확보를 위한 지역 협의기구 구성
  - 통학 시간 스쿨존 지역 내 주정차 단속 강화
- 스쿨존 내 차량 속도 감속을 위한 시설 개선
  - S코스(S-Road) 같은 곡선도로로 감속을 유도
  - 학교 입구에는 차로폭을 줄이고 화단 등을 조성
  - 차선 사이 가로선을 점점 촘촘히 그어서 속력이 빠른 것처럼 착시 효과를 줌
  - 차선을 지그재그로 도색하여 감속유도
-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다양한 캠페인 실시
  - “스쿨존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라는 ‘대화형 표지판’으로 경각심 환기
  - 속도감지 센서를 설치해서 차량속도를 ‘표정 이모티콘’으로 제시

####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도로교통과
- 협조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7,54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학교주변 안전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쿨존 도색</li> <li>• 과속방지턱 설치</li> <li>• 차량속도 저감시설 설치 등</li> </ul>	2018-2030	7,540	3,770	-	3,770

#### 7. 기대효과

-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보강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

## (23) 배움터 지진대비 시설물 보강

학교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효율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

\* 학교현장에 적합한 내진공법 및 성능평가·보강설계·공사의 단계별 검증 기준 등

### 1. 배경 및 필요성

- 충청남도는 2013년의 경우 전국 지진발생의 35% 이상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에는 진도 5.1의 지진이 발생하였음. 최근에도 보령, 홍성 등에서 발생하는 등 진앙이 점차 내륙으로 이동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내진설계와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 이후 건축된 모든 학교는 지진 강도 6.0 기준의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나, 강도 7.0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지진피해 국가들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적절한 내진설계가 반영되었는지 검토하고, 특히 2005년 이전 건축물의 경우 내진성능 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시설보강이 필요한 대상을 확정함
- 시설보강 대상의 학교시설에 대하여 개선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함

###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005년 이전 시설물과 이후 시설물을 구분한 초·중·고 학교시설 전수
- 사업기간 : 단기는 대상시설물 분류를 통해 내진성능을 평가하도록 함(~2020). 개선사업은 시설 보강 기준(예: 지진발생 사례를 통해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나, 내진성능 하위등급 시설물 등)에 따라 연차별로 단계적 보강 사업을 실시함

### 3. 추진계획

- 분석 대상 학교시설 전수 조사
-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개정된 이후 건축된 경우도 내진성능 평가 필요)
- 시설 보강 및 폐쇄, 철거, 재건축 등의 판정 기준 연구
- 내진 보강 (대표적인 방법이 댐퍼 설비 등을 통한 에너지 경감 설비임) 우선순위 결정
- 적합한 내진 보강 기술 적용

### 4. 사업내용

- 내진성능 전수 평가사업 -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지자체나 시설관리공단 등 교육청과 연계하여 예산 확보

- 내진성능 보강, 개축 기준 및 대상사업 우선순위 개발
- 내진성능 보강사업, 내진성능 점검 및 평가 사업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협조기관 : 교육청

### 6.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45,0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내진성능 평가사업	• 학교시설 전수에 대하여 평가	~2020	비예산	-	-	-
개선대상 시설물 및 우선순위 개발	• 연구용역을 통해 기준 제시	~2020	비예산	-	-	-
내진성능 보강사업 (보수, 개축)	• 연차별로 진행	2018-2020	45,000	45,000	-	-
내진성능 점검 및 평가 사업	• 보강사업 이후 점검 및 평가	보강사업 이후 1년 내 진행	-	-	-	-

### 7. 기대효과

- 단기간에 내진성능 확인과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을 도출하고, 지진발생 자료 등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여 위험성이 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음
- 시간과 비용에 문제가 없다면 일괄적으로 모든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건축법 개정시점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개선 효과를 극대화 함
-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부터 개선해 나간다는 점에서 도민홍보를 통한 안전정책의 신뢰성을 제고

## (24) 우리고장 위험요소 보고 배우기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주민, 학생이 주축이 되어 지역 내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편성

### 1. 배경 및 필요성

- 학교와 지역사회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난취약성을 경감시키는 것을 지원하고, 학교보호 계획의 개발과 재난예방을 학교 교육과정에 도입
- 재난안전지도는 학생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위험요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재난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을 갖도록 할 수 있음

### 2. 사업개요

- 재난위험지도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작성토록 하며, 재난에 관한 교육은 전문지식이 있는 교사나 지방정부의 재난담당 공무원이나 지역사회의 관련 단체 등에서 실시하며, 또한 학생들의 지도제작을 위한 현장 조사시에도 동행하여 현장교육의 학습효과를 증대시킴
- 역사적 경험을 통해 학습된 지역사회의 재난규모를 뛰어 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난대비가 부족하여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 교사,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함께 지역주변의 현장학습을 실시함
- 현장학습은 주로 과거의 재난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자신들을 둘러싼 위험요소를 배우고, 학교 주변 지역의 위험요소를 찾아보고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유용한 시설을 파악해 둠

### 3. 사업내용

- 재난위험지도 작성
  -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등 각 학년의 수준에 맞게 작성
  - 초등학생의 경우, 자신의 집이나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은 지역적 범위를 넓혀 접근
  - 재난위험요인도 학생들의 능력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 교통안전, 학교생활안전
- 학생 재난안전 콘테스트 개최
  - 각 지역에서 작성된 재난 위험 지도 및 활동 과정에 대한 콘테스트 개최
  -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형식으로 공연, 음악, UCC 등이 활용될 수 있음
  -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작품은 교육 자료로 공유

---

○ 충남 안전체험관을 통한 체험학습 강화

- 지역 위험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지역 위험에 대한 조사 이후 체험학습을 하게 되면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체험을 통해 재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대응방법을 습득
- 지진 체험, 산불 및 산사태 체험, 교통사고 체험, 실내화재 및 고층화재 체험, 수난안전 체험, 태풍 체험, 화생방대비 체험, 감염병예방 체험 등 자연재난, 인적재난 등 다양한 재난에 대한 체험 가능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협조부서 : 시군 재난안전부서
- 협조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비예산

## 7. 기대효과

- 소규모 지역사회의 참여적 위기교육 방안으로 활용도 증대
- 재난관리 관점을 재난복구에서 위기의식 증진 및 재난대비 강화

## (25) 재난 및 안전을 주제로 한 생명존중 교육

재난 생명존중 교육을 통한 학교안전 및 생활안전 등 사회 공동체로서 책임과 역할 확립

### 1. 배경 및 필요성

- 위험에 노출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자기보호 능력이 형성되지 않아 학생은 물론 교직원도 일정한 공간에서 반복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서도 집단에 의존하면 안전하다는 무의식적 편향을 갖을 우려 있음
- 학교를 중심으로 한 위험 인자가 많으며, 학교 안전은 구조적 건축물 안전이나 화재 안전과 같은 한 두 가지의 해결책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학교 내의 안전과 학교 밖의 안전이 함께 보장되고, 복합적 안전을 위한 위험 요인 점검과 신속한 제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학교는 폭력이나 자살, 약물중독, 인터넷 중독과 같은 학교 밖의 위험과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생명존중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 2. 사업개요

- 생명존중 교육 지침 개발

### 3. 추진계획

- 학교 안전은 학교내외 생활안전과 사회공동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 재난 약자는 학생 뿐 아니라 재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과 봉사자도 교육에 동참
- 학교 안전 교육은 이후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안전의무 및 역할과 연계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시되어야 함

### 4. 사업내용

- 교육청과 연계한 학생 생명존중 교육 지침 개발 및 보급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협조기관 : 교육청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5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생명존중 교육 지침서 제작 및 보급	• 용역시행	2020	50	-	50	-
생명존중 교육	• 교육청시행	2020-2030	비예산	-	-	-

## 7. 기대효과

○ 생명존중 교육을 통한 학교 안전 및 생활안전 등 사회공동체로서 책임과 역할 확립



# 3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실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  
재난 안전약자는 따로 있네요.  
아닙니다.  
재난상황에 놓이면 모두가 재난안전약자입니다.



- 재난약자에 대한 '안전눈높이 맞추기'
- 외국인 안전교육 지원 강화
- 교통약자가 공감하는 이동권 확대
- 안전약자 보호를 위한 거주환경 개선

---

## 목 차

---

(1) 위험·위해정보 등 안전정보 공개 확대 추진 .....	230
(2)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 공간정보 구축 .....	233
(3)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센터 설립 .....	236
(4) 재난약자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광역단위 최초) .....	238
(5) 안전관리 우수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	241
(6) 안전관리 소외지역 안전·안심 프로젝트 추진 .....	244
(7) 안전약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	247
(8) 찾아가는 재난안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	249
(9) 외국인 안전교육지원 강화 .....	253
(10) 안전 약자 보호를 위한 거주 환경 개선 .....	256
(11)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공감하는 이동권 확대 .....	261

---

## 03

#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실현

### (1) 위험·위해정보 등 안전정보 공개 확대 추진

위험·위해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정보 접근성을 보장

####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재난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안전정보의 공개가 주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높아진 국민의 관심에 충실히 부응할 만한 안전정보의 공개는 부족한 실정임
- 특히, 기존의 안전정보는 주로 국가차원의 다양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도민의 실생활과 부합하지 않으며, 도민의 재난안전 생활에 파급 효과가 미비함. 동시에 생활안전 분야의 정책개발과 서비스 제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도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안전정보를 생산하고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위험·위해가 예상되는 정보의 공개는 사전 주의와 예방효과 측면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함

- 
- 또한 단순히 정보공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장소 및 시설에 대한 개선까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위험·위해 환경 자체를 제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2. 사업개요

- 위험·위해 정보(풍수해, 산불위험, 화학물질, 불량식품 등 안전사고 예방 정보)를 공개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장소 및 시설에 대한 개선
- 사업대상 : 충청남도 도민 전체
- 사업기간 : 2021년 ~ 2020년
  - 위험·위해정보는 빠른 시일 내에 도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본 사업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사업기간은 2050년까지 연차적으로 완료
  - 단, 정보공개는 단발성이 아닌 연속성 측면에서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 및 공개하는 것이 중요

## 3. 추진계획

- 위험·위해 관련 정보 수집 및 발굴
  - 도민의견수렴을 통한 도민관심 중심정보 수집
  - 도민의 안전에 파급효과가 큰 위험·위해정보 발굴
- 위험·위해 관련 정보 개방 확대 및 선도적 공개 추진
  - 정보공개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중심으로 확산
- 위험·위해 정보가 담긴 정보지 발간 및 공공장소 비치
- 안전픽토그램 제작 및 부착 유도
- 도민 편의주의적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도모
- 위험·위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사업 시행

## 4. 사업내용

- 유해식품, 원산지 허위표기 등 단속이력 자료공개
- 안전픽토그램 개발(약물복용,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 재난발생 위험지역 정보공개 (풍수해, 화학물질 등)
-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정보공개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사업부서 : 건강증진식품과
- 협조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중부지방산림청, 금강홍수통제소, 충남지방경찰청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1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유해식품, 원산지 허위표기 등 단속이력	• 유해식품, 원산지 허위표기 등	2021-2050	비예산	-	-	-
안전픽토그램 개발	• 약물복용,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2021-2025	100	-	100	-
재난발생 위험지역 정보공개	• 풍수해, 화학물질 등 정보공개	2021-2050	비예산	-	-	-
사건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정보공개	• 교통사고 등	2021-2050	비예산	-	-	-

## 7. 기대효과

- 위험·위해 정보공개를 통해 도민 스스로 생활주변의 위험·위해에 대처 가능한 환경 제공
- 재난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위험·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
- 축적된 위험·위해 정보를 기반으로 도민의 안전요구 등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제적이고 예방중심적인 재난안전 정책 개선
- 위험·위해 장소 및 시설 개선으로 도민의 안전 확보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2)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 공간정보 구축

GIS를 통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주민의 입장을 반영한 공간정보 구축

### 1. 배경 및 필요성

-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여건 변화에 따라 지리정보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간정보의 공개 및 개방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실공간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재난안전 관련 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러나 현재 충청남도의 재난안전 정보는 개별·분산적으로 관리되어 주민이 이를 이용하기 어려우며, 공간정보와의 연계가 미흡하여 정보의 최신성 유지가 곤란한 측면이 있음
- 무엇보다 재난안전 정보는 충청남도의 지역 상황에 친숙한 주민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며,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주민의 입장이 반영된 GIS기반의 공간정보 구축은 충청남도의 제반 이슈(정치·경제·사회·제도 등)와 온라인·오프라인이 결합된(O2O) 형태의 공간정보를 연계하여 산재돼 있는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의 통합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2. 사업개요

- 주민이 직접 능동적으로 정보 구축에 참여하여 GIS기반의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품질 공간 정보 생산 및 관리 체계 구축
- 사업대상 : 충청남도 도민 전체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향후 보다 많은 공간정보의 수요가 예상되는 바 2년 이내로 완료할 필요가 있으며, 공간정보 구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것이 중요함

### 3. 추진계획

- GIS기반의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
- GIS기반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체계화
  - 도민중심의 공간정보 기반 조성
  - 분야별(행정·교통·해양·지형·시설물 등)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 GIS기반의 고품질 공간정보서비스 제공

- 지역별·주제별로 수요자가 원하는 공간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
- 구축된 정보를 기반으로 대민서비스 활용

○ GIS기반의 공간정보 구축 이후 유지관리

- 공간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개발 및 자연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지형지물의 변화를 탐지하여 수시갱신과 주기갱신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 시작

○ 공간정보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민참여 도모

#### 4. 사업내용

- 지역지도(웹사이트, 모바일)제공
-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시민 안전마을 지도 작성
- 도민 검토사항 피드백 프로그램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사업부서 : 토지관리과
- 협조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16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지역지도(웹사이트, 모바일)제공	-	2020	60	-	60	-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시민 안전마을 지도 작성	-	2020	50	-	50	-
시민 검토사항 피드백 프로그램	-	2020	50	-	50	-

---

## 7. 기대효과

- GIS기반의 공간정보 구축에 따른 도민의 정보화 욕구 충족
- 도민 중심의 고품질 공간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대민 피해 최소화
- 공간정보의 공유 및 통합화를 통한 업무 효율 증대, 궁극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판단과 현장대응력 제고

### (3)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센터 설립

충남도 및 도내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망으로 연결하고 안내하는 중간지원조직 설립

#### 1. 배경 및 필요성

-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는 통합관리를 통해 도민의 접근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재난관련 기관들을 연결함으로써 정보공유를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재난안전 정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기 보다는 상호연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재난안전 정보 교류를 통한 종합적인 재난안전 정보 제공이 필수적임
- 그러나 현재 재난안전 정보는 상호간의 연계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재난안전 정보서비스의 통합을 통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재난안전 정보공동이용센터 설립을 통해 단순히 분산 처리되는 정보를 충청도가 모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충청도 및 도내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망으로 연결해주고 각 기관이 어떤 종류와 어떤 형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내해 주는 것이 중요함
- 즉, 충청도 및 도내 자치단체별로 제공하던 정보를 연계 및 통합함으로써 도민의 재난정보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 제고와 체계적인 안전서비스 기반을 구축해야 함

#### 2. 사업개요

- 충청도 및 도내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망으로 연결해주고 이를 안내해주는 재난안전 정보공동이용센터(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 사업대상 : 충청남도 도민 전체 및 유관기관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 재난안전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중기(5년 이내)로 설정

#### 3. 추진계획

- 도내 자치단체 및 재난안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정보공유 기반 조성
- 재난안전 정보의 유형별 관리 및 각종 통계 분석 제공
- 정보교류를 위한 정보시스템 간 상호연계 확대
- 재난안전 정보의 통합연계시스템 확대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 정보공동이용센터 설립
  - 시스템 개선 및 통합운영 환경 구축으로 안정된 정보 제공
- 이용자 중심의 재난안전 정보공동이용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 충청남도 및 도내 자치단체, 유관기관 간의 재난안전 정보 연계 자동화

#### 4. 사업내용

- 재난안전 정보공동이용센터 운영
- 재난안전 정보 외국어 서비스 제공
- 소방·전기·가스 점검결과 공유
- 충청남도 및 유관기관 재난안전 정보공유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사업부서 : 소방본부
- 협조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55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재난안전 정보공동이용센터 운영	-	2022	500	-	500	-
재난안전 정보 외국어 서비스 제공	-	2020	50	-	50	-
소방·전기·가스 점검결과 공유	-	2020	비예산	-	-	-
충청남도 및 유관기관 재난안전 정보공유	-	2020	비예산	-	-	-

#### 7.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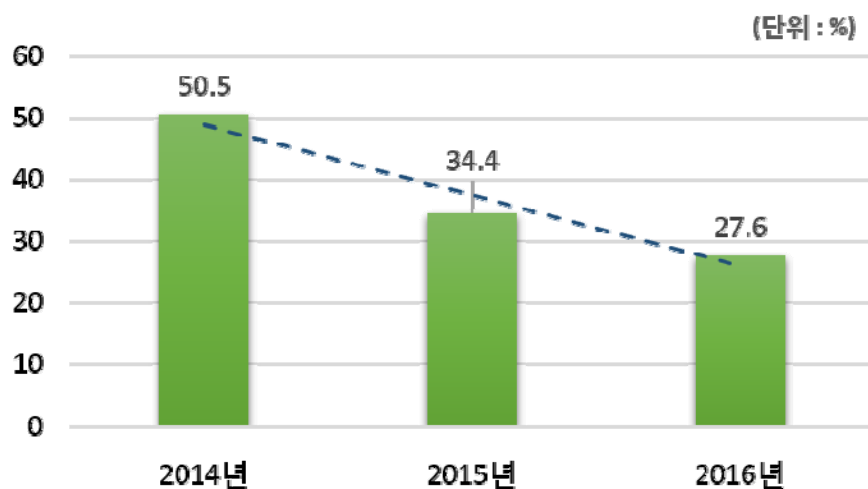
- 정보공유 및 확산이 재난안전 정보공동이용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재난안전 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업무 효율 증대
- 재난안전 정보공동이용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비용 및 시간 절감
- 도내 자치단체와 재난안전 유관기관 간의 의사소통 지원 및 향상
- 정보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재난대응 뿐만 아니라 협업 차원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가능

#### (4) 재난약자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광역단위 최초)

평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발생 가능성 최소화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취약계층의 피난을 지원하는 종합 제도 마련

##### 1. 배경 및 필요성

- 안전복지는 도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목표 가치로 최근 안전한 삶에 대한 도민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 추세임. 또한 지역의 안전수요 증가 및 도민의식 향상은 안전에 대한 다양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인적·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안전복지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대두됨
- 현재는 안전복지 분야에 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종합적인 중장기 전략과 시책들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각에서 안전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집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동시에 단기적·일회성 사업만으로는 안전복지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2014년 이후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도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안전복지 수요자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중장기적인 안전복지 전략 수립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구축해야 함. 즉,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충청남도의 안전복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도시안전에 위한 균형적인 접근을 이룰 필요가 있음



※자료 : 충청남도, 2016, 「2016년 충남 사회지표 (종합편)」

[그림 4-30] 충청남도의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2014년~2016년

---

## 2. 사업개요

- 안전복지 수요자의 유형 세분화를 통한 중장기 안전복지 전략 수립
- 사업대상 : 충청남도 도민 전체 및 재난안전 취약계층
  -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국내체류외국인 등 유형 세분화
- 사업기간 : 중장기: 2020년~2050년
  - 목표 수립에 대한 계획기간은 2020년~2050년 기간으로 설정, 목표연도는 2050년
  - 목표 수립은 3년 혹은 5년 단위로 구분하여 구체화 가능

## 3. 추진계획

- 지역사회의 안전 현황 파악 및 관계자 분석 계획 마련
- 도민(취약계층)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장치(채널) 마련
- 충청남도의 안전복지를 위한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설정
- 안전복지를 위한 추진전략과 추진전략별 중점추진과제 설정
  - 추진과제들은 현재 충청남도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행유지, 보완(강화), 신규 등으로 성격을 구분
- 안전복지 분야 중장기 전략 수립은 취약계층을 세분화하여 대책 마련
- 충청남도의 관련업무계획, 과제의 시급성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 단계별 전략 수립안 마련
- 취약계층과 분야별 목표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 및 기대효과를 나타내는 핵심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를 통한 지표 관리
- 안전복지 분야의 중장기 전략을 비롯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여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정책에 활용
- 조례 제정 준비: 조례 제정을 위한 회의기구 마련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4. 사업내용

- 안전복지 중장기 전략 수립
- 지역의 안전 환경 및 관계자 분석
- 취약계층 및 취약지 의견수렴
-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 안전목표 설정 운영
- 재난약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사업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장애인복지과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4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안전복지 중장기 기본계획 전략 수립		2020	50	-	50	-
수요자 중심 안전복지 중장기 전략 수립	• 지역의 안전 환경 및 관계자 분석	2020	30	-	30	-
	• 취약계층 및 취약지 의견수렴	2020	20	-	20	-
	•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 안전목표 설정 운영	2020-2050	300	-	300	-
	• 재난약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2020	비예산	-	-	-

## 7. 기대효과

- 수요자의 유형 세분화를 통한 도민의 안전복지 니즈 파악과 체계적인 안전서비스 기반 구축이 가능
  - 특히, 취약계층의 욕구 파악이 가능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 안전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강화
- 충청남도의 분야별 관련 목표에 안전복지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여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복지 개념이 각 분야에 스며들어 안전복지 관점에서의 관리대책 마련 강화
- 생활 안전상의 불안요인 감소 및 복지관점에서의 선제적 대응
- 도민이 안전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구축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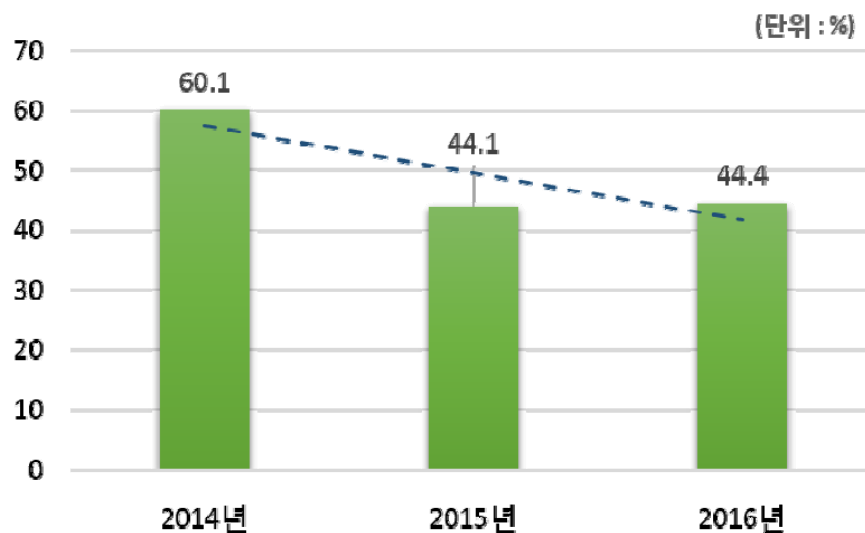


## (5) 안전관리 우수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안전관리 우수 시설을 평가 및 선정, 인증하고 이를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수준에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

### 1. 배경 및 필요성

- 안전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척도로 최근에는 경제적인 풍요와 함께 안전한 생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안전한 사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은 지역사회의 최대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지역안전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사회 수준의 안전관리 정책은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내용은 부족한 실정임. 또한 충청남도는 2014년 이후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참조)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과 시설물에 대한 인증제도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도시를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우수 시설 선정 및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함
- 동시에 기업이나 행정기관, 보육 및 교육시설, 장애인 시설 등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 : 충청남도, 2016, 「2016년 충남 사회지표 (종합편)」

[그림 4-31] 충청남도의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에 대한 인식: 2014년~2016년

---

## 2. 사업개요

-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우수시설에 대한 평가·선정을 통한 인증제도 강화
- 사업대상 : 충청남도 내 시설물
  - 행정기관, 기업, 보육 및 교육시설, 장애인 시설 등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우수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 강화의 사업기간은 각각 상이하지만(하단의 표 참조) 최종 사업기간은 5년 이내(중기)로 설정- 단, 해당사업은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3. 추진계획

- 충청남도의 시설물(기업, 행정기관, 보육 및 교육시설,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 안전관리 우수시설에 대한 평가기준 및 매뉴얼 마련
  - 시설 유형별 세부 인증기준, 절차,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운영 규정 마련
- 평가인증 제도의 안내 및 교육
  - 인증을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방법을 안내
  - 평가인증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 안전관리 우수시설 평가 및 선정
  - 평가기준 리스트에 의거하여 등급별(상/중/하 또는 S/A/B/C 등)로 평가하고, 우수시설을 선정
- 인증결과 발표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인증결과의 내용 공유, 최종 인증 획득 및 인증서(인증마크) 교부

## 4. 사업내용

- 안전점검 및 시설물 관리·평가 기준마련
- 우수시설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하천안전과
- 사업부서 :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 협조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5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2021	400	-	200	200
안전관리 우수시설의 평가인증 제도 강화	• 평가기준 및 매뉴얼 마련	2019	10	-	10	-
	• 평가인증 제도의 안내 및 교육	2020	20	-	20	-
	• 우수시설 평가 및 선정	2021	20	-	20	-
	• 인증결과 발표(인센티브 제공)	2021	50	-	50	-

## 7. 기대효과

-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
- 시설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도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안전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안전관리 우수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통해 안전문화 정착 및 자발적 안전관리 참여 증대
- 평가인증제는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켜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 (6) 안전관리 소외지역 안전·안심 프로젝트 추진

위험 노출이 쉽고, 대형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 1. 배경 및 필요성

- 충청남도 내에는 지역적 특성으로 초기대응이 미비한 곳, 저소득 가구 등 재난에 취약한 안전관리 소외지역이 존재함. 이 지역은 위험에 빈번히 노출될 뿐만 아니라 대형재난의 발생가능성을 내포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
- 그러나 재난(특히, 화재)이 발생할 경우 초기 진압이 가능한 안전용품(예 소화기) 조차 없어 속수무책으로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재난에 취약한 지역은 일반적으로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여, 응급상황 시 대응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무엇보다 각종 재난의 초동 대처와 수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즉,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곤란한 안전관리 소외지역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사용이 편리한 안전용품(휴대용 소화기, 손전등, 제세동기 등) 지급하고 교육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장치(화재 경보센서, 가스안전차단기, 가스배관 교체 등)의 설치 및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 또한 현재의 청사 대기형 소방출동체계를 소방출동로 확보 및 관내 정보수집 등을 통해 상시 소방 순찰 활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재난발생시 바로 출동대로 전환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상시 순찰출동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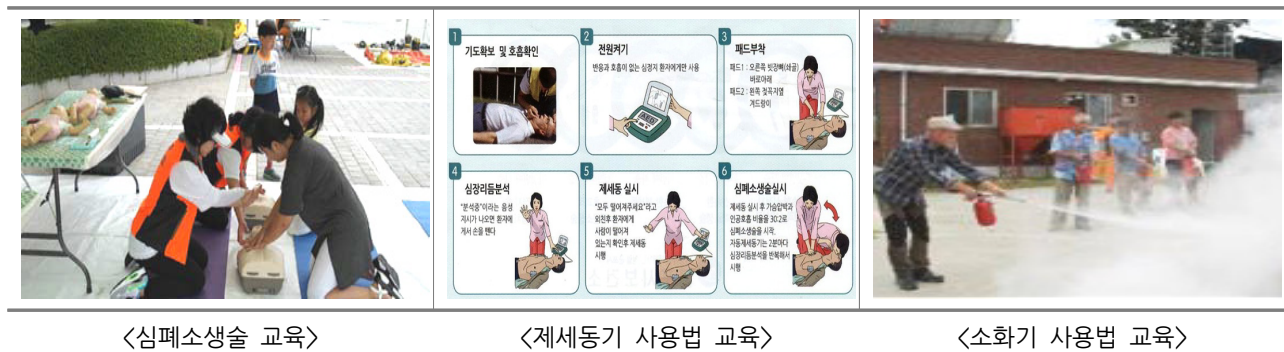
### 2. 사업개요

- 안전관리 소외지역을 발굴하고, 안전용품 지급 및 사용법 교육, 안전장치 설치,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상시순찰제 도입 등을 통한 다양한 보완책 마련
- 사업대상 : 안전관리 소외지역 및 충청남도 도민 전체
- 사업기간 : 2018년 ~ 2030년
  - 해당 사업은 다양한 보완책을 보급하는 것이므로 사업기간을 중기(5년 이내)로 설정

### 3. 추진계획

- 지역적 특성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소외지역 확인 및 관리
- 각 지역별 소방서와 연계하여 안전용품 지급 및 안전장치 설치

- 안전용품의 우선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연도별 지급 목표를 설정하여 안전용품 보급
-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연도별 설치 목표를 설정하여 안전장치 설치
- 안전용품 사용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그림> 참조)
- 안전점검 서비스 수요 확인 및 찾아가는 종합안전점검 서비스 운영
- 상시순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속히 정비
-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병행



※자료 : 국민안전처, 2016, 「2016 국민안전백서: 국민안전을 지켜온 700일의 발자취」  
**[그림 4-32] 안전용품 사용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예시**

#### 4. 사업내용

- 안전관리 소외지역 데이터 확인
- 안전용품(소화용품, 제세동기 등) 지역별 지급
- 안전장치(화재 경보센서, 가스안전차단기, 가스배관 교체 등) 지역별 설치
- 안전용품 사용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종합안전점검 서비스 운영
-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순찰 제도 도입
- 상시 순찰출동대 편성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 상시 순찰을 통한 실질적인 현장행정으로 정보수집 및 홍보
- 상시 순찰출동대를 활용한 소방출동로의 상시적 확보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사업부서 : 소방본부, 경제정책과
- 협조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 충남지방경찰청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4,789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초기대응이 미비한 지역 발굴 및 확인	-	2020	비예산	-	-	-
안전용품 지급 및 사용법 교육	-	2019-2022	1,000	-	500	500
안전장치 설치	-	2018-2020	3,789	-	1,895	1,894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	2020	비예산	-	-	-
상시순찰제 도입 및 확대	-	2030	비예산	-	-	-

## 7. 기대효과

- 안전용품 지급, 안전장치 설치,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안전망 구축 가능
- 안전용품 사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를 통해 피해의 최소화와 안전문화 정착
- 상시 순찰제를 도입함으로써 신속한 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절감
- 안전관리 소외지역 확인 및 관리를 통해 재난의 사전예방 효과

## (7) 안전약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재난 약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지원(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경제적 자활·자립 유도

###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재난이 대형화 및 복잡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도민의 피해규모도 대형화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한편, 가계부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재난 피해자는 재난발생시 그 피해로 인한 이중고를 경험할 수 있음
- 충청남도의 가계 부채는 GDP 대비 120%에 달해 내수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성 또는 복원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충남경제비전 2030)
- 이에, 재난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은 재난 피해자에게 합당한 지원(자금 대출)을 하여 경제적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2. 사업개요

-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활·자립 유도
- 사업대상 : 재난 피해자
- 사업기간 : 2018년 ~ 2030년

### 3. 추진계획

- 재난 피해통계 수집 및 관리
- 재난 피해 규모 및 피해자 기준 (자금 지원 대상 기준) 마련
- 자금지원 절차 마련
- 재난기금 운영지침 마련 및 주기적 점검

### 4. 사업내용

- 피해통계 수집체계 확립
- 재난피해자의 2중 주택대출 지원 (이자 일부 보전)
- 농촌 피해복구 비용 대출이자 일부 보전
- 재난기금 적립 (안전기금 지원대상, 범위 포함)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사업부서 : 복지정책과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대출이자지원 기 적립된 기금 활용  
※ 2017년 현재 430억 기금 적립(매년 약 15억 적립)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피해통계 수집체계 확립	-	2020	비예산	-	-	-
재난피해 대출이자 지원 (안전기금 지원대상, 범위 포함)	-	2018-2030	기금 활용	-	-	-

## 7. 기대효과

- 재난 피해통계 수집체계 확립을 통해 재난발생시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 조기 생활안정 도모
- 재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생활안정지원 및 재난수습 신뢰도 제고
- 신속한 자금 지원으로 피해 최소화 및 효과적 피해 수습



## (8) 찾아가는 재난안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재난심리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난피해로부터의 빠른 회복을 도모

###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대규모 재난이 급증하면서 재난심리지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며, 견디기 힘든 충격은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특히, 재난 발생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주요우울장애 등 정신질환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점차 확산되고 있음
- 따라서 재난피해 회복과정에서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심리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동시에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 지원 사업이 필요함
- 동시에 충청남도가 자살률이 높다는 측면(최근 자살률 전국 상위권 차지)에서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그림> 참조)
  - 충남은 강원, 부산의 5등급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도 가운데 인천·대전·대구·전남과 함께 자살 안전 등급이 4등급의 위험지역으로 발표됨. 특히,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노인 자살률도 높은 편임 (2015년 충남 총 자살자 수 721명 중 60세 이상 319명, 44.2%)
- 이에,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농어촌 노인 자살을 집중 관리하여 노인 자살률을 감소시켜야 함. 노인 자살은 모든 주민들이 해결해야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통해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여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림 4-33]인구 십만명당 자살률(전국, 충청남도): 2005년~2015년

## 2. 사업개요

- 재난 발생지역 피해자, 유가족,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심리지원 활동 전개, 자살예방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정신건강 회복 도모
- 사업대상 : 충청남도 도민 전체 및 노년층, 재난 발생지역의 피해자 및 유가족, 종사자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본 사업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사업기간은 4년 이내 즉, 2020년까지 완료
  - 단,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에 포함되는 재난심리지원 전문가 및 봉사자 구성, 심리교육, 상담 및 검사, 치료의뢰 연계 서비스 제공 등은 충청남도의 상황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사업기간 제시 가능

## 3. 추진계획

- 재난 발생지역의 피해자, 유가족,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심리지원 활동 계획
  - 재난심리지원 전문 인력 구성 및 관리 : 재난심리지원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풀 구축을 통해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관리, 재난심리지원 전문 인력을 단계적 확대
  - 재난발생 초기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활동 전개
  - 재난발생시 현장에 재난심리지원 인력 파견 및 상담 활동 강화
  - 재난안전취약계층,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 종사자의 정신적 안정 및 일상성 회복을 위한 방문상담 치료 확대

- 
- 지속적인 상담 및 관찰을 통한 사후관리 실시: 장기간의 상담을 통해
  -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
  - 자살예방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한 추진계획
    - 자살예방캠페인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사회기반의 다양한 예방 교육 진행
    - 노인자살 특화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및 사용실태 모니터링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시범 운영 및 확대

#### 4. 사업내용

- 자살예방캠페인 전개 및 예방교육 실시, (고)위험군 멘토링 운영
- 부녀회 - 독거노인 1:1 결연 프로그램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생명사랑 행복마을」육성
-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통한 음독자살 예방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시범 운영 및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사업부서 : 건강증진식품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협조기관 :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7,51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살예방캠페인 전개 및 예방교육 실시 (고)위험군 멘토링 운영	• 기존사업 확대	2018-2021	6,381	1,276	2,105	3,000
부녀회 - 독거노인 1:1 결연 프로그램		2018	10	-	10	-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생명사랑 행복마을」육성		2018	225	-	113	112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2019-2020	100	-	50	50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시범 운영		2018-2021	744	-	372	372
찾아가는 마음 건강서비스		2019	10	-	10	-

## 7. 기대효과

-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피해 최소화
- 재난심리지원의 활성화를 통해 재난 피해자, 유가족, 종사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 도모
- 즉각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와 분야별 맞춤형 상담을 통한 만족도 증진
-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재난안전 취약계층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캠페인 및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의식 강화 및 자살예방 의식 개선
- 농촌지역 주요자살 수단인 농약안전관리를 통한 자살 방지 및 자살예방 환경 조성
- 궁극적으로 재난에 대한 심리적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재난안전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구축하고 자살 시도자 및 자살 사망자 감소

## (9) 외국인 안전교육지원 강화

충남거주 외국인에 대해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사회적 책임 확보

### 1. 배경 및 필요성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충청남도 내 외국인 수는 2016년 현재 60,353명으로 2010년 이후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참조)
-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언어소통 애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재해위험 노출, 외국인 고용 업체의 안전의식과 안전관리 역량 미흡, 외국인에 대한 교육 미흡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 재해는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은 재난안전취약계층으로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충청남도는 외국인 대상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요구됨, 안전에 취약한 다문화 가족이 각종 체험을 통해 안전에 대한 대처능력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특히, 외국인 노동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언어소통의 문제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의 실시가 필수적임

표 4-7. 충청남도 외국인 변화 추이: 2010년~2016년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국	918,917	982,461	932,983	985,923	1,091,531	1,143,087	1,161,677
충청남도	42,753	48,091	46,141	49,924	54,557	56,583	60,353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2. 사업개요

- 충남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 확보
- 사업대상 : 충남 거주 외국인
- 사업기간 : 단기: ~2021년(2018년 사업 시행 후, 확대 및 개선시행)
  - 교보재를 이용한 체험교육: 2021년 이내
  - 외국인 노동자 안전관리 교육지원: 2021년 이내
  - 다문화가정 안전교육 매뉴얼 작성 및 배포: 2021년 이내

---

### 3. 추진계획

- 다문화가정의 국적에 적합한 다양한 언어와 그림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교육교재 제작
- 다양한 교보재를 이용하여 체험형 교육 실시
- 이주노동센터와 연계하여 안전관리 교육지원
  - 장기적으로 안전관리 교육은 강의식에서 실습형으로 보완하여 현장성 강화
-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매뉴얼 작성 및 배포
  - 다국어 지원을 통해 보급 효율화

### 4. 사업내용

- 교보재를 이용한 체험교육(다문화가정)
  - 심폐소생술, 붕대사용법 등 다양한 교보재를 이용한 체험형 교육
  - 다문화 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현장체험
- 외국인 노동자 안전관리 교육지원(이주노동자센터 연계)
  - 주요사고 사례 수집 :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산업현장 사고사례 및 예방법 등
  - 안전교육 실시 : 이주노동자 센터와 연계 교육대상 등 모집
- 다문화가정 안전교육 매뉴얼 작성 및 배포(다국어 지원)
  -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등 도내 거주 다문화 가족비율 참고 작성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 사업부서 : 안전정책과
- 협조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76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교보재를 이용한 체험교육(다문화가정)	• 심폐소생술, 보대사용법 등 교육 • 안전체험관 현장체험	2018-2021	360	-	360	-
외국인 노동자 안전관리 교육지원 (이주노동자센터 연계)	• 사례조사 및 안전매뉴얼 제작 • 안전교육 실시	2018-2021	200	-	200	-
다문화가정 안전교육 매뉴얼 작성 및 배포 (다국어 지원)	• 생활안전 매뉴얼 제작	2018-2021	200	-	200	-

## 7.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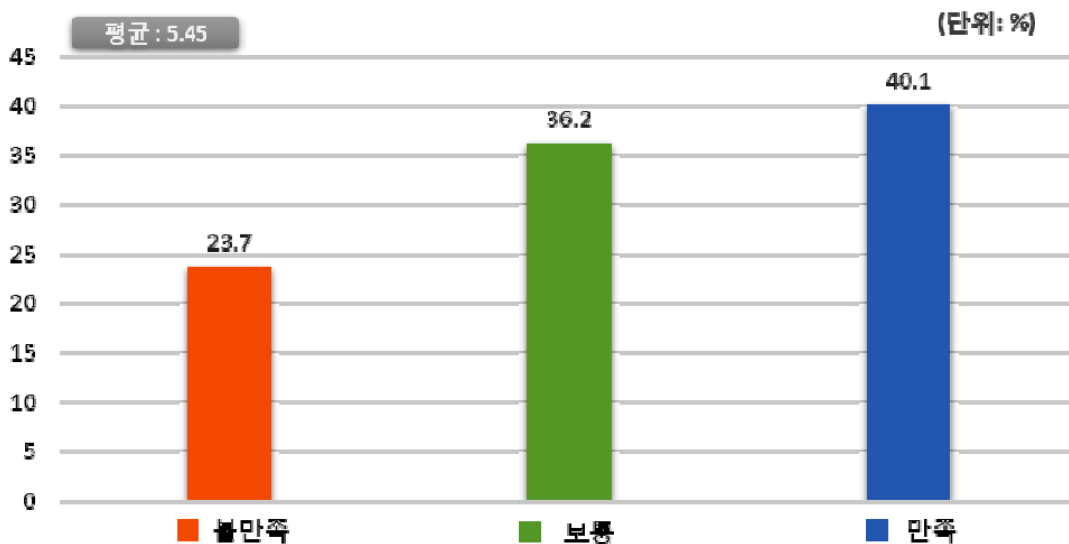
- 교육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안전지식 습득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안전사고 감소로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향상, 언어적 장애로 인한 생활안전 위험요소 제거
-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안전문화 의식 고취

## (10) 안전 약자 보호를 위한 거주 환경 개선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거주환경 개선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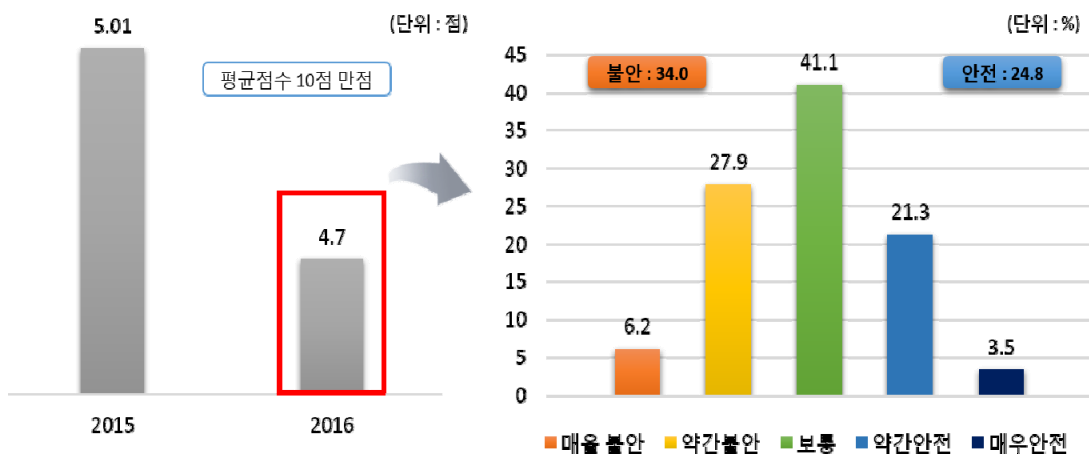
### 1. 배경 및 필요성

- 전반적으로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의 주거 환경 만족도(치안안전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10점 만점에 5.45점으로 나타남(치안안전에 대한 만족 40.1%, 보통 36.2%, 불만족 23.7%). 또한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10점 만점에 4.70점으로 나타나 범죄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제시됨(범죄위험에 대해 안전하다는 응답 24.8%, 불안하다는 응답은 34.0%)



※자료 : 충청남도, 2016, 「2016년 충남 사회지표 (종합편)」

[그림 4-34] 충청남도 주거 환경 만족도(치안안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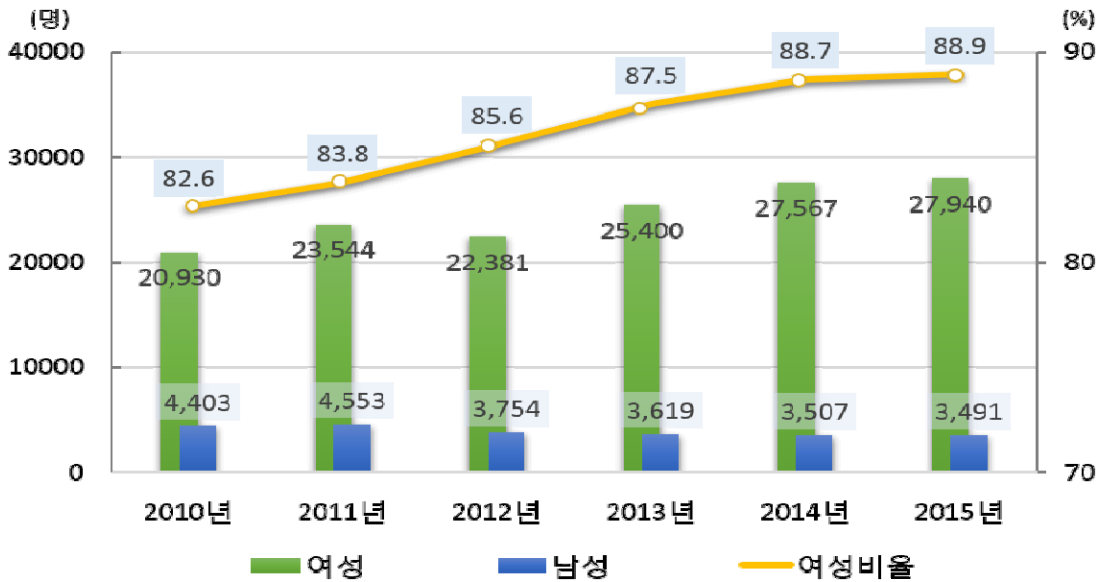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 2016, 「2016년 충남 사회지표 (종합편)」

[그림 4-35] 충청남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범죄위험)



- 특히,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2016) 여성을 대상으로한 범죄발생이 증가하면서 2016년 현재 여성의 50.9%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함.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60% 수준으로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13세~19세 여성은 43.2%로 상대적으로 불안함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5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흉악)의 피해를 입은 31,431명 중 여성의 비율은 88.9%로 전년(88.7%)보다 0.2% 증가함. 강력범죄로 인한 여성 피해자는 2000년 6,245명에서 2015년 27,940명으로 약 4.5배 증가한 반면, 남성 피해자는 2,520명에서 3,491명으로 약 1.4배 증가함.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비중은 2010년(85.3%)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외 살인, 강도, 방화 피해자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그림> 참조)



※자료 : 통계청, 201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그림 4-36]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2010년~2015년

- 한편, 충청남도의 고령인구비율은 2016년 현재 16.7%로 전국 평균 13.53% 대비 높은 수준이며, 2010년 이후 고령인구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 참조)

표 5-10. 충청남도 고령인구비율: 2010년~2016년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국	10.90	11.24	11.74	12.22	12.70	13.15	13.53
충청남도	14.87	14.99	15.27	15.64	16.04	16.42	16.7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수요가 커지면서 시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은 유사시 대피 또는 구난·구급에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안전시설이 부족하거나 관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체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지의 거주환경은 장애인 등 휠체어 이용자에게 적대적이며, 불안정한 노면, 구역과 구역 사이를 단절시키는 턱 등으로 인하여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구나 자력대피가 어려운 장애인이 장시간 생활·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거주시설 포함)은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시설 기준 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즉, 위와 같은 일련의 안전인식 조사 결과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의 미흡한 관리는 취약계층의 거주환경과 관련하여 안전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함. 이에,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됨
-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일상생활 편의증진 도모

## 2. 사업개요

-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안전한 거주환경 개선 도모
- 사업대상 :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 사업기간 : 2018년 ~ 2030년

### 3. 추진계획

○ 사업대상별 추진계획은 다음 하단의 표 참조

사업대상	추진계획
재난안전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등 거점지역에 안심택배함 설치 및 확대 :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여성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li> <li>- 남녀 공용화장실을 여성전용 화장실로 분리 설치</li> <li>- 여성화장실에 비상벨 설치</li> <li>-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 확대</li> <li>- 지역의 편의점과 연계하여 여성안전지킴이집 지정 및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요양시설의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li> <li>- 노인요양시설의 안전시설 기준 강화측면에서 경사로 설치 의무화</li> <li>- 피난용 엘리베이터 설치 권고 및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동휠체어 보행환경 현장 점검 및 개선(면적기준 확대)</li> <li>- 장애인 거주시설의 재난대비 시설 관리기준 마련 및 권고</li> </ul>
	주택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시 노인,장애인 등의 안전취약성, 욕실 주방, 성별이 다른 가구원에 따른 방 개수 등을 고려한 주택 개량 : 화장실 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 프리시설 설치

### 4. 사업내용

○ 사업대상별 사업내용은 다음 하단의 표 참조

사업대상	사업내용
재난안전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안심택배 서비스여성화장실 분리 설치 및 비상벨 설치</li> <li>- 차량방범용 CCTV와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 확대</li> <li>- 우리 동네 여성안전지킴이집 운영 (지역 단위 편의점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시설 경사로 설치 의무화</li> <li>- 화재 피난용 엘리베이터 설치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동휠체어 보행환경 개선</li> <li>- 장애인 거주시설의 재난대비 시설 관리</li> </ul>
	주택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시 노인,장애인 등의 안전취약성, 욕실 주방, 성별이 다른 가구원에 따른 방 개수 등을 고려한 주택 개량 - 화장실 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 프리시설 설치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건축도시과
- 사업부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장애인복지과
- 협조기관 : 충남지방경찰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2,7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재난안전 취약계층	•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지원	2019	100	-	50	50
	• 여성화장실 분리 설치 및 비상벨 설치	2022	100	-	50	50
	•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 확대 - 중앙정부 연계사업	2020	비예산	-	-	-
	• 우리 동네 여성안전지킴이집 운영(지역 단위 편의점 활용)	2019	비예산	-	-	-
	• 요양시설 경사로 설치 의무화	2018	비예산	-	-	-
	• 화재 피난용 엘리베이터 설치 지원	2030	500	-	250	250
	• 전동휠체어 보행환경 개선 지원	2025	200	-	100	100
	• 장애인 거주시설의 재난대비 시설 관리	2020	비예산	-	-	-
	• 주택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시 노인,장애인 등의 안전취약성, 욕실 주방, 성별이 다른 가구원에 따른 방 개수 등을 고려한 주택 개량 - 화장실 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시설 설치	2018	1,800	-	540	1,260

## 7. 기대효과

-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범죄 불안감 해소 및 안전체감 만족도 제고
- 범죄예방 및 강력범죄 차단 효과
- 재난 발생시 안전 취약계층의 피난 소요시간 단축
-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거주환경 사업을 통해 위험요인들을 제거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
- 궁극적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망 구축 가능
-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지원으로 노인 및 장애인의 생활의욕 고취와 희망동기 부여를 통한 사회적 통합에 기여

## (11)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공감하는 이동권 확대

안전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 제공

###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어르신·장애인·영유아·임산부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통편의 증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동시에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충남의 노령화 지수는 2016년 현재 119.7%로 전국 99.5% 대비 높은 수준이며(〈표〉 참조), 인구전망을 고려할 때 고령인구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고령화 등으로 교통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 그러나 현재의 교통 환경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기엔 너무 불편하고 열악하여 이용자들의 이동을 더욱 제약하는 것이 현실이며,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안전취약계층은 재난안전 사고발생시 일반인보다 더 큰 사고를 당하여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큼
- 이에, 안전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편리를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교통수단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 제공으로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

표 4-8. 충청남도 노령화지수: 2010년~2016년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국	68.4	72.8	77.9	83.3	88.7	94.1	99.5
충청남도	93.7	97.3	100.9	105.6	110.2	115.1	119.7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2. 사업개요

-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서비스 확대 제공
- 사업대상 : 안전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
- 사업기간 : 2018년 ~ 2030년

### 3. 추진계획

- 단계적·지속적으로 지역별 저상버스 확대 운영
  - 충청남도의 재정여건 및 버스업체 등을 고려하여 확대 추진
  - 시·군별 목표대수 충족토론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전환 의무화 유도 및 이행상태 점검
  - 농어촌 지역을 위주로 중형저상버스 도입 적극 추진('19년 보급)
  - 안전취약계층의 이동경로와 의식조사를 함께 병행하여 이용효율 극대화
- 단계별 행복택시/안심택시 확대 운영
  -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추진 병행(예: 업무협약 체결 등)
-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 시장·군수가 차량 등록하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
  - 휠체어 탑승장치 설치차량(장애인콜택시) 구입비 지원으로 목표대수 132대 확보 지원
- 교통약자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및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 4. 사업내용

- 지역별 저상버스 확대 운영
- 행복택시/안심택시
-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도로교통과
- 협조기관 : 충남지방경찰청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23,302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저상버스 확대	-	2018-2030	22,082	11,041		11,041
행복택시·안심택시 확대	-	2020	100		50	50
특별교통수단 확대	-	2018-2021	1,120	560	280	280

---

## 7. 기대효과

- 저상버스 확대 운영을 통한 안전취약계층의 이동편의 증진
- 안전취약계층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통한 만족도 제고
- 교통수단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이 편리한 교통 환경
-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충으로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4

##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 운영

통합방위는 안보와 안전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깊은 고민과 논의를 전제로,

1. 을지연습 등은 재난 대응이 포함된 위기관리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2. 재난 신속대응부대 등 주민 안전을 높여 줄 군사조직체계 신설도 필요합니다.
3. 북핵 등 화생방사태로 부터 국민을 보호할 화생방 보호대책이 시급합니다.

— 도 통합방위협의회 도지사 말씀 중('17. 6. 13)

#### 연 관 시 책

- 위험에 취해있는 '안전규제의 필요적 강화'
- 지진 등 대규모 재난시 '신속한 행정력 복원 대책' 수립
- '재난 지휘관 역량강화' 확대 시행
- 핵 및 생화학 사태의 선제적 대응
- 재난 및 안보위기 통합관리

---

## 목 차

---

(1) 모든 재난사고에 적용 가능한 현장지휘 운영규칙 제정 .....	268
(2) 재난 초기대응에서 수습복구까지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	271
(3) 신뢰·소통의 재난안전 정보 공유 서비스플랫폼 구축 .....	273
(4) 재난안전 E-ChungNam 종합전략 수립 .....	277
(5) 다수 사상자 이송관리 시스템 시범추진 및 확대 .....	279
(6) 최적의 피난 의사결정시스템 확립 .....	281
(7) 방재자원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283
(8) 사전 재난공보관제 지정을 통한 언론대응 일원화 .....	286
(9)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제작 및 교육훈련 .....	288
(10) 거점별 긴급구조통제단 효율적 운영기반 조성 .....	290
(11) 재난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외국인 현황 DB구축 .....	293
(12) 현장중심의 위기관리 매뉴얼 및 행동요령의 실효성 제고 .....	295
(13) 재난 시 통제관의 지휘 역량 강화 시책 확대 .....	297
(14) 재난안전 및 재난피해 DB구축 통합 관리 .....	299
(15) 재난상황정보 공통플랫폼 및 양방향 재난안전포털시스템 구축 .....	301
(16) 현실적인 민방위대피소 시설개선안 마련 .....	303
(17) 재난안전 위험도 평가시스템 구축·운영 .....	305
(18) 각종 사고유형별 골든타임 확보 지원 .....	307
(19) 재난발생 시 응급의료 대응체계 확립 .....	310

---

# 04

##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 운영

### (1) 모든 재난사고에 적용 가능한 현장지휘 운영규칙 제정

모든 재난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에서 수습복구 단계까지 책임기관에 대한 현장지휘권 및 업무 인수·인계 명확화를 위한 운영규칙 제정

#### 1. 배경 및 필요성

-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상에서는 긴급구조에서 수습복구 단계로 상황 인계 시 지휘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다수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휘권 선언 및 이양 절차에 대한 표준이 없는 실정이므로 지휘권자가 동시에 현장에 있을 때 누가 지휘권자인지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일사불란한 재난대응활동 전개에 지장을 초래
- 또한 현재 긴급구조활동에 대해서는 현장지휘활동에 관한 규칙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모든 재난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 시 대응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한 재난 발생 시 명확한 지휘권 확보로 일사불란한 재난대응활동 전개가 가능하여 피해 최소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체
- 사업기간 : 2019년~2020년

## 3. 추진계획

- 충청남도 사고 및 재난안전관리 단계별 현장지휘권 이양 조례안 제정
- 사고 수습 지휘권자 명확화 및 지휘권 이양에 관한 제규정 개정
- 관련 제규정 개정 건의(안) 도출

## 4. 사업내용

- 충청남도 사고 및 재난안전관리 단계별 현장지휘권 이양 조례안 제정
  - 재난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에 대한 수습복구 기관의 현장지휘권 확립
  - 현장지휘소 설치 및 표준현장지휘체계 규칙 제정
    -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안(2017.02 참조)
- 사고 수습 지휘권자 명확화 및 지휘권 이양에 관한 제규정 개정
  - 통제관 / 통합지원본부장 등 통제권자 지휘권 등 재설계
  -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 관련 제규정 개정 건의(안) 도출
  - 재난 유형별 관계법령 및 매뉴얼 문제점 및 관계 법령 개정안 도출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보건정책과
- 사업부서 : 소방본부

## 6. 예산계획

- 비예산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충청남도 사고 및 재난안전관리 단계별 현장지휘권 이양 조례안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난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에 대한 수습복구 기관의 현장 지휘권 확립</li> <li>현장지휘소 설치 및 표준현장 지휘체계 규칙 제정</li> </ul>	2019-2020	비예산	-	-	-
사고 수습 지휘권자 명확화 및 지휘권 이양에 관한 제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제관 / 통합지원본부장 등 통제권자 지휘권 재설계</li> <li>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li> </ul>	2019-2020	비예산	-	-	-

## 7. 기대효과

-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현장수습 절차 시 업무인수인계 공백 방지 및 현장중심의 재난 안전관리 단계별 지휘권 명확화

## (2) 재난 초기대응에서 수습복구까지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재난 초기대응에서 수습복구 활동 단계까지 대응 책임기관 간 업무인수인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BPR수립

### 1. 배경 및 필요성

- 재난 발생 시 초기 피해확산 방지에서부터 최종적인 수습·복구까지 이음새 없는 처리가 되어야 하나, 화재진압·구제역 등의 발생 시 초기에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부서와 향후 환경오염 등에 대응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부서간에 대응활동에 대한 인계·인수가 원활하지 않음
- 모든 재난에 대해 관계 부서들이 어디이고 이들 부서들 간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도출하여 업무 인계인수가 원활하도록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분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체
- 사업기간 : 2020년~2022년

### 3. 추진계획

- 재난관리 BPR 매뉴얼 수립 및 업무재설계 연구용역 추진
- 기관별·부서별 재난대응·복구단계 BPR 연구용역 추진
- 사고관련 부서간 협업체계 점검
- 업무재설계 및 관련 법제도 개정과제

### 4. 사업내용

- 재난관리 BPR 매뉴얼 수립 및 업무재설계 연구용역 추진
  - 현행 재난관리 BPR/ISP 진단
  - 재난관리 BPR 매뉴얼 수립
  - 기관별·부서별 재난대응·복구 단계 업무재설계 구조도 도출
  - 업무재설계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및 실행·점검계획 수립
- 사고관련 부서간 협업체계 점검
- 관련 법제도 개정 건의
  -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안
  - 기관별 협업·협력업무 조정과제 협의안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협조기관 : 24개 책임기관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5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재난관리 BPR 매뉴얼 수립 및 업무 재설계 연구용역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재난관리 BPR/ISP 진단</li> <li>• 재난관리 BPR 매뉴얼 수립</li> <li>• 기관별·부서별 재난대응·복구 단계 업무재설계 구조도 도출</li> <li>• 업무 재설계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및 실행·점검 계획 수립</li> </ul>	2020-2022	500	-	500	-

## 7. 기대효과

- 재난대응에서 복구 단계까지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재난안전관리 신뢰성 확보
-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의 효과성 제고



### (3) 신뢰·소통의 재난안전 정보 공유 서비스플랫폼 구축

시민-전문가그룹-행정조직 간 재난 정보공유로 불확실한 정보의 차단과 행정신뢰 확보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 구축

#### 1. 배경 및 필요성

- ICT 발달과 SNS의 급속한 확산 속에 정보-사실-루머에 대한 관리는 재난대응에서 복구과정에 이르기까지 재난관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한 영역으로 인식됨
  - 재난 발생 시 확인되지 않은 루머는 빠르게 확산되며, 정확한 정보와 사실의 연계가 없이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는 어려움
  - 세월호 당시 전원 구조 오보를 비롯해, 세월호 이후 각종 루머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확산되었던 국내의 경험 또한 간과 할 수 없음
    - ※ 정보(Information): 특정 목적을 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 ※ 루머(Rumor): 진위를 알 수 없지만 세상에서 얘기되는 이야기
    - ※ 정보(Fact): 실제하는 사건, 현상, 경험
- 이에 참여·공유·개방을 통한 인터넷 환경에서의 시민-전문가그룹-행정조직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 기반을 토대로 집단지성을 통한 신뢰·소통의 지식공유가 필요함
- 집단지성을 통한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예방, 대응, 복구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확산되는 재난 또는 위험요소에 대한 루머에 대해 전문가 그룹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조직이 정확한 사실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발전적 대안과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지식공유 플랫폼을 구축 할 필요가 있음

####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체
- 사업기간 : 2019~2020년

#### 3. 추진계획

- 재난안전관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소통의 재난관리 지식공유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재난안전관리 집단지성 거버넌스(도민, 전문가, 공무원) 구성
  - 재난안전유형별 집단지성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구성

추진내용	추진계획	
	2019년	2020년
관련 조례 개정(또는 제정)	완료	-
전담팀 구성 및 인력 확충	구성	운영
지식공유 서비스 플랫폼 개발	시범사업	운영
집단지성 거버넌스 구성	위촉	운영

#### 4. 사업내용

- 시민-전문가-재난안전실 간 재난안전관리 지식공유 서비스플랫폼 개발·운영
  - 지식정보 서비스 플랫폼 개발
  - 시·군 단위 ‘주민 모니터링단’을 통한 루머의 수집(익명)
  - 「재난안전 정보 전문가 위원회」 구축·운영을 통한 각종 루머의 통제와 정보공유(실명)
  - 재난안전실을 통한 ‘재난루머’의 관리·통제 및 객관적 사실 제공(실명)



[그림 4-37] 지식공유 체계

○ 사실로 확인된 루머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 및 결과 공유



[그림 4-38] 공유복지 플랫폼 WISH 홈페이지 메인화면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5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관련 조례 개정(또는 제정)	-	2019	비예산	-	-	-
전담팀 구성 및 인력 확충	-	2020	비예산	-	-	-
지식공유서비스 플랫폼 개발	-	2019	500	-	500	-

## 7. 기대효과

- 충청남도의 재난대응 신뢰성 확보

#### (4) 재난안전 E-ChungNam 종합전략 수립

재난안전 정보화 시스템 및 향후 시스템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재난안전 E-ChungNam전략 수립 및 관계기관 공동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 1. 배경 및 필요성

- 재난안전 관련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시스템이 상호 독립적으로 개발되어 상호 연계성이 취약하며, 전략적인 종합 계획 하에 개발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
- 재난안전관련 정보의 빠른 수집, 전달을 위해 상호독립 혹은 분리된 (기존 개발 및 신규 개발 중인)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광역 사·도 중심의 정보통신시스템을 정비하여 공공네트워크의 활용성을 강화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정보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 수립

#####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체
- 사업기간 : 2025~2028년

##### 3. 추진계획

- 실시간 상황정보 시스템 연계
- 방재자원 및 시설물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연계
- 기타 재난정보포털 등 관련 시스템 연계

##### 4. 사업내용

- 충청남도의 재난안전관련 정보화시스템 공동활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난안전 E-ChungNam 전략 수립
  - 기 구축 및 향후 구축 필요성이 있는 재난대응 실시간 상황정보 시스템 간 연계방안을 수립하고, 방재자원 관련 시스템 및 재난정보포털 등 정보 공유 필요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
- 관련기관 간 공동추진협의회 구성·운영, 공동이용 방법 등 추진체계 확립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사업부서 : 소방본부
- 협조기관 : 충남지방경찰청,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중부지방산림청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3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재난안전 E-ChungNam 전략 수립	• 연구용역	2025	100	-	100	-
공동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공동이용 방법 등 추진체계 확립	2026	비예산	-	-	-
재난안전 정보화시스템 연계	• 연구용역	2026-2028	200	-	200	-

## 7. 기대효과

○ 정보공동 활용 및 연계성 확보로 개별시스템 구축·연계 비용의 최소화

○ 재난관리 단계별 정보공유 및 재난대응 공조체계 운영 효율화

---

## (5) 다수 사상자 이송관리 시스템 시범추진 및 확대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환자관리 및 신속한 환자이송 시스템

####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까지의 재난관리 매뉴얼 및 지침은 주로 행정 및 현장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수 사상자 발생(다중손상사고) 시 병원전 단계와 병원이송 단계의 환자 이송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재난 발생 시 단계별 환자관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관리 및 환자분류, 병원별 의료기능 맞춤정보, 병원별 비상연락체계 및 통신수단 확보 등을 통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다수 사상자를 신속하게 분류하여 의료인력 및 시설을 갖춘 병원별로 이송관리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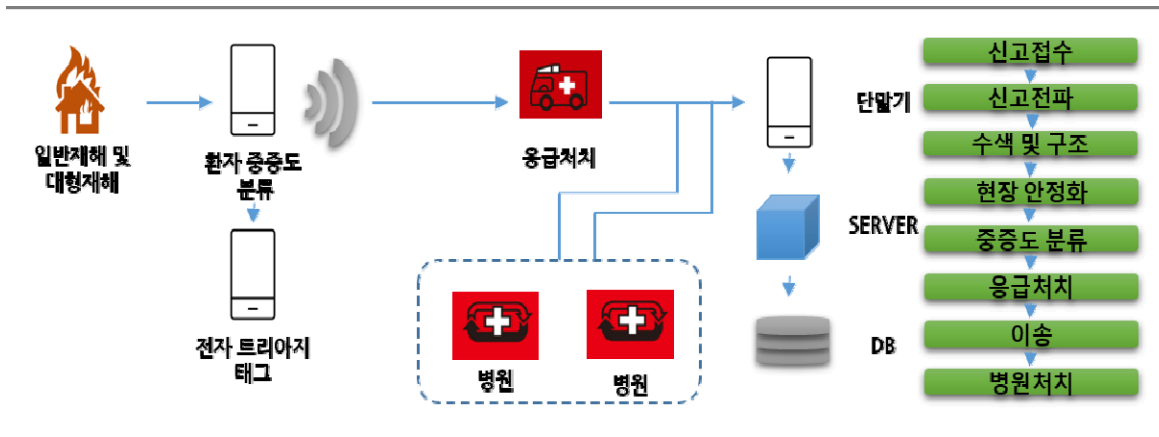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체
- 사업기간 : 2018년

#### 3. 추진계획

- IoT 기반의 다수 사상자 이송관리 시스템의 확대 도입으로 재난 발생 시 환자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기반 마련

#### 4. 사업내용

- 현재 추진 중인 IoT기반 다수 사상자 이송관리 시스템 보완
- 다수 사상자 이송관리시스템 구축
- 도내 관계 병원 공동협의체 구축
- 구급대원 교육 실시



※자료 : 대구국제소방안전박람회, 2017

Google, 「알기 쉬운 국민안전정책\_국민안전처」, (2017.09.18.)

[그림 4-39] 다수사상자 대응시스템 운용 흐름도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소방본부
- 사업부서 : 보건정책과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1,588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도내 관계 병원 공동협의체 구축	-	2018	비예산	-	-	-
다수 사상자 이송관리시스템 구축	-	2018	1,588	-	1,588	-
구급대원 교육	-	2018	비예산	-	-	-

## 7. 기대효과

- 재난 발생 시 현장지휘부의 사상자 현황 관리 효율화
- 정확한 정보관리를 통한 환자 생존율 상승 기대



---

## (6) 최적의 피난 의사결정시스템 확립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 상황 및 교통, 지리정보 상황의 종합 관리로 지역 주민의 신속한 대피로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 1. 배경 및 필요성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주변의 상황파악 및 관리를 통해 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재난 대피로를 파악하고, 지역 주민들이 신속히 피난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재난대피소 정보-재난대피로 현황-최적 대피로 도출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

### 2.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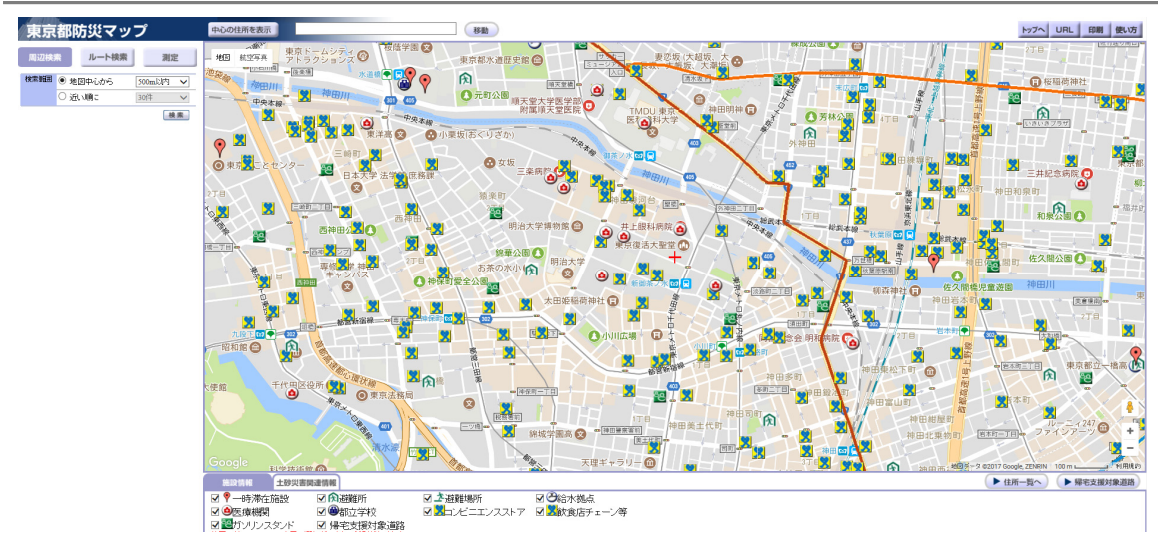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체
- 사업기간 : 2020년~2025년

### 3. 추진계획

- 재해위험지구의 공간영상정보 및 교통상황정보, GIS 기반의 지리정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최적 대피로 탐색 및 주민에게 대피정보 전달

### 4. 사업내용

- 재해위험지구 및 시설물 공간영상정보 데이터 구축
- 교통상황정보 연동
- GIS기반의 재난상황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자료 : Google, 「도쿄 방재맵화면」<http://map.bousai.metro.tokyo.jp/>, (2017.09.18.)

[그림 4-40] 피난 의사결정시스템 해외 사례(일본)

\* 도쿄도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지진, 기상정보, 도로, 철도정보, 라이프라인정보, 강우, 하천수위정도, 대피 정보, 교통통제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재매뉴얼을 가정, 사업장, 지역사회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작성, 배포하고 있음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협조기관 : 도로교통공단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5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지역 GIS 연계의 공간영상 재난대피 GIS 구축	• 지리정보와 교통상황정보 연계의 GIS구축	2020-2025	500	-	500	-

## 7. 기대효과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정확한 재난현장상황 및 교통상황 파악으로 지역 주민의 효과적 대피로 확보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인명피해 최소화

## (7) 방재자원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방재자원의 동원 및 지원을 위해 재난 유형별 방재자원 현황화 정보 시스템을 구축·관리

### 1. 배경 및 필요성

-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방재자원의 동원 및 지원을 위해서는 재난 발생에서부터 대응 및 복구까지 재난 유형에 따른 방재자원 현황 및 동원여부, 방재자원 배분계획, 방재자원 소요(물자, 인력, 비용 등), 자원의 가동력, 동원소요시간 분석 등 방재자원 이력관리 등 방재자원의 정확한 정보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동원이 요구됨
- 이에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방재자원 소요분석 및 자원 배분을 위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현행화 된 방재자원관리 기능을 연계하고 방재자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재자원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2.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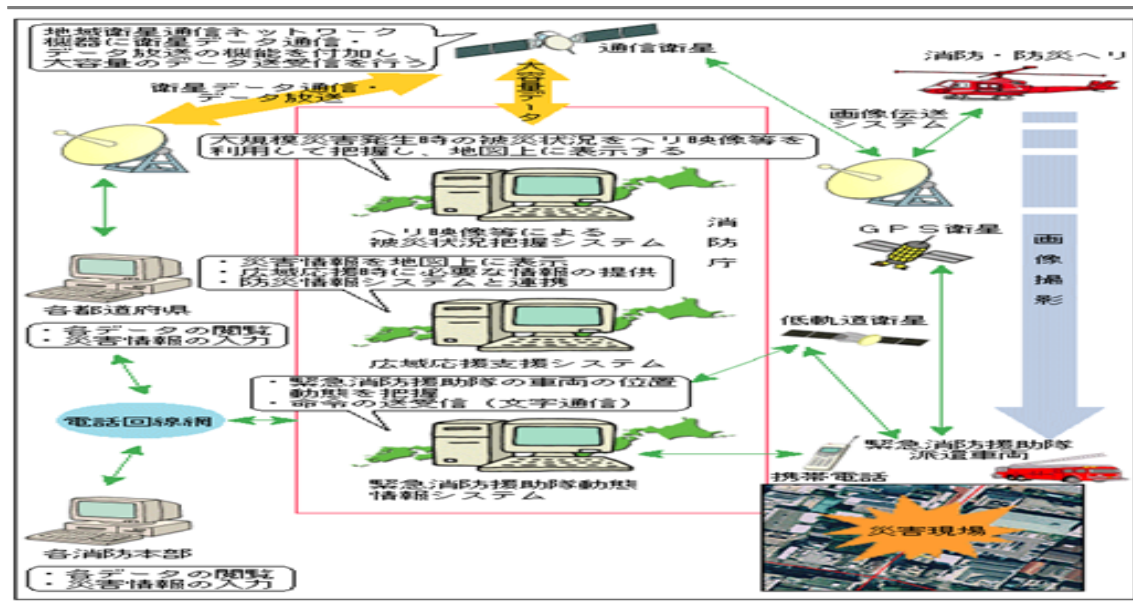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체
- 사업기간 : 2025년~2030년

### 3. 추진계획

- 현행 NDMS 및 DRSS 방재자원 일원화표준화와 연계하여 시군별 방재자원정보의 체계화
- 방재자원 범위 및 분류체계 재정비 및 방재자원 정보의 현행화
- 방재자원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4. 사업내용

- 방재자원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용역 추진
- NDMS 및 DRSS 호환의 충청남도 방재자원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방재자원정보 관리 인력 확보 및 방재자원별 위치기반 기술 적용
- 기관별 방재자원 통합관리 인력 지정 및 충원



管理情報	情報内容	比較
조직정보	소방관계기관, 항공대, 시정촌 등	고정정보
장비정보	특수차량, 소방정, 헬리콥터, 각종 특수기자재 등	고정정보
관련시설정보	방화수조, 자연수리, 진도계 등	고정정보
소방활동지원정보	긴급수송도로, 비축물자창고 등	고정정보
현지활동상황정보	차량부서 위치, 경계 구역설정 상황 등	변동정보
장비응원정보	GIS기반 차량, 자원의 이동 정보	변동정보
응원자원요청정보	현지집결장소, 응원대 배치예정 개소 등	변동정보

[그림 4-41] 일본 방재자원 관리 체계 및 관리정보 사항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1,0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시스템 개발	-	2025-2027	1,000	500	500	-
방재자원 관리 인력 선발	-	2030	비예산	-	-	-
민간 지원기관 정보공동활용 MOU	-	2030	비예산	-	-	-

---

## 7. 기대효과

- 방재자원 정보 및 동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방재자원 현황관리 현행화 및 적재적소 배치 실현
- 지역별, 기관별 방재자원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한 방재자원 중장기 운영계획 효율성 확보

## (8) 사전 재난공보관제 지정을 통한 언론대응 일원화

재난 발생 시 주민 대상의 재난정보 채널을 일원화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행정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지정 공보관제 운영

### 1.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재난공보체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관련 정부정책이 미비하고, 지난 15년 동안 재난공보체계에 대한 연구는 2건으로 정책의 기반이 매우 부실한 가운데,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북의 활용도 또한 매우 낮음
- 이에 사전지정 재난공보관제 운영으로 재난 공보창구를 단일화하고, 정보제공 표준을 마련하여 현장 상황 정보 관련 용어 단순화표준화 및 미디어 라인(Media Line) 설정을 통해 유언비어, 루머,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재난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체
- 사업기간 : 2018년부터

### 3. 추진계획

- 재난공보관을 지정하여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교육으로 지역 내 주민 대상 재난정보채널 전문화·일원화

### 4. 사업내용

- 재난공보관 지정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및 매뉴얼 교육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사업부서 : 인재육성과
- 협조기관 : KBS대전방송총국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비예산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재난공보관 지정	-	2018	비예산	-	-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교육	-	2021	비예산	-	-	-

## 7. 기대효과

- 재난정보 채널의 명확화로 불확실한 정보의 확산 방지 및 행정신뢰성 확보

---

## (9)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제작 및 교육훈련

재난 발생 시 불확실한 정보의 확산을 막고, 명확한 정보채널 운영을 위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제작

### 1. 배경 및 필요성

- SNS의 발달로 대중이 접하는 정보의 소스가 급증하고 정부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언론의 오보 및 부정적 정보의 확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제작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활동 전반을 통합적으로 총괄·조정하고 정보수집·분석에서 정보 전달을 위한 활동 전반에 대한 행정역량과 정보전달 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제작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활동 전반을 통합적으로 총괄·조정하고 정보수집·분석에서 정보전달을 위한 활동 전반에 대한 행정역량과 정보전달 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보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

###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체
- 사업기간 : 2019년~2021년

### 3. 추진계획

- 재난 유형별로 요구되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제작하고, 재난공보관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정확한 재난정보전달체계 구축

### 4. 사업내용

-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별도 제작
- 재난공보관 및 재난안전관리 담당자 대상 교육훈련 실시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사업부서 : 재난대응과
- 협조기관 : KBS대전방송총국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1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제작	-	2019-2020	100	-	100	-
교육훈련 실시	-	2021-	비예산	-	-	-

## 7. 기대효과

○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제작 및 재난공보관의 교육훈련으로 불필요한, 불확실한 정보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신뢰성 확보

---

## (10) 거점별 긴급구조통제단 효율적 운영기반 조성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장비 및 현장지휘소 필수장비 등의 체계적 확보로 효율적 운영기반 조성

### 1. 배경 및 필요성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관련하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차, 운영물품 및 통신장비를 확충하여 지휘관의 선진화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통제단 운영과 현장대응을 이루고자 함

###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체
- 사업기간 : 2019년

### 3. 추진계획

- 통제단운영차 총 16대를 거점화 시켜 보급(기 11대 배치완료)
- 통제단 운용요원 기본물품(물품백-키트) 배치
- 재난대응기관 간 통합 통신체계 구축

### 4. 사업내용

- 통제단 운영차 총 16대를 거점화 시켜 보급(2019년까지 배치 완료)
  - 2016 : 서북, 공주, 아산, 서산, 논산, 당진(6대)
  - 2017 : 동남, 보령, 서천, 홍성, 태안 (5대)
  - 주요 탑재물품 : 테이블, 의자, 텐트, 발전기, 냉풍기, 공기충진기, 명세트, 냉온수기, 무전기 등
- 통제단 운용요원 기본물품(물품백-키트) 배치
  - 수 량 : 7종 135점
  - 품 목 : 신호봉, 부책, 무전기, 손전등, 임무표, 마스크, 보안경 등
  - 형 태 : 알루미늄 박스형태(이동식)
  - 배 치 : 통제단 운영차 미배치 관서



[그림 4-42] 단 운영차에 대한 관리운영지침 마련, 긴급구조통제단 내부자료



[그림 4-43] 통제단 운용요원 기본물품, 긴급구조통제단 내부자료

#### ○ 재난대응기관 간 통합 통신체계 구축

- 정 의 : 재난관리 및 대응기관 담당자들이 재난발생 시 상호소통을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무선통신망
- 활용기관 : 8대 분야(소방, 경찰, 지자체, 해경, 군, 전기, 의료, 가스) 333개 재난관련 기관
- 운영범위 : 충남도 일부 지역 시범운영 후 도 전역, 전국 확대
- 활용기술 : 모바일 워크스페이스, 원격 의료지도, 재난현장 지휘, IOT 등 적용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소방본부
- 협조기관 : 육군 제32사단,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충남지방경찰청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2,563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통제단 운영차 5대 거점화 보급	-	2018-2019	1,763	-	1,763	-
통제단 운영요원 기본물품 배치	-	2019	300	-	300	-
재난대응기관 간 통합 통신체계 구축	-	2019	500	-	500	-

## 7. 기대효과

○ 재난현장 현장지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 및 자원관리 실현

---

## (11) 재난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외국인 현황 DB구축

재난 발생 시 주민정보가 불명확한 외국인 등에 대해 사전에 정확한 정보 DB를 구축하여,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외국인에 대한 피해 상황과 대책이 관리될 수 있도록 재난피해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1. 배경 및 필요성

- 재난 발생 시 외국인의 경우 정확한 재난피해 파악이 어려우며, 특히 다문화 가족은 국적 등의 변경 등으로 본국 가족에게 정확한 재난피해 정보 전달에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원확인 및 현황관리를 효율화

###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체
  - ※ 중앙부처 협의조정 과제 있음
- 사업기간 : 2025년~2030년

### 3. 추진계획

- 사전에 지역 내 외국인 현황에 대한 정확한 DB 상세화 및 이력관리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상황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에 활용

### 4. 사업내용

- 외국인 정보DB 표준 마련
- 정보DB시스템 구축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 협조기관 : 출입국관리사무소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5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외국인 정보DB 표준 마련	-	2050	200	-	200	-
정보DB시스템 구축	-	2025-2030	300	-	300	-

## 7. 기대효과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외국인(다문화 포함)에 대한 정확한 피해상황 정보 및 지원대책 마련으로 지역 및 국가 신뢰도 제고

## (12) 현장중심의 위기관리 매뉴얼 및 행동요령의 실효성 제고

중앙정부 중심의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장 중심의 매뉴얼 및 행동요령 마련

### 1.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위기관리 매뉴얼은 중앙정부 중심의 재난안전 유형별 관리전략에 맞춰 작성되어, 현장에서의 활용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또한, 행동요령 등이 별도로 작성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위기관리 매뉴얼과 마찬가지로 기관(담당자)의 역할과 원칙으로만 작성되어 실효성이 낮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표준매뉴얼과의 연계 하에 역할, 기능, 그리고 행동수칙을 내용으로 한 현장 중심의 충청남도 재난대응 매뉴얼 및 행동요령 체계를 선제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청남도 및 각 시·군
- 사업기간 : 2022년

### 3. 추진계획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현행 매뉴얼 및 행동요령을 종합 분석하여, 충청남도의 역할과 기능 중심으로 매뉴얼 체계를 개선하고, 이에 따른 행동수칙을 마련

### 4. 사업내용

-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 분석 및 충청남도 중심 매뉴얼 체계 개선(안) 마련
- 매뉴얼 체계 개선에 따른 행동요령 매뉴얼 개선
- 관계 공무원 매뉴얼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15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충청남도 재난대응 매뉴얼 체계 개선	-	2022	50	-	50	-
행동요령 매뉴얼 개선	-	2022	50	-	50	-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2022	50	-	50	-

## 7. 기대효과

- 현장 중심의 위기대응 매뉴얼 및 행동요령 마련으로 효율적인 재난대응 실현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매뉴얼을 통한 위기대응과정 분석으로 지역의 위기대응 능력 개선방안 마련 및 고도화



---

## (13) 재난 시 통제관의 지휘 역량 강화 시책 확대

재난유형별 책임자인 통제관의 지휘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정규화

### 1. 배경 및 필요성

-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 현장을 책임지고, 매뉴얼을 운영하는 통제관의 지휘역량 확보를 통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재난상황을 수습 복구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재난 시 지휘통제관에 대하여 사전에 지휘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정규화하는 것이 필요함

###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청남도
-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

### 3. 추진계획

- 지휘통제관에 해당하는 실·국장급 승진 대상자 및 현 실·국장에 대하여 지휘역량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

### 4. 사업내용

- 지휘통제관 재난 지휘역량 개발
- 지휘통제관 재난지휘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지휘통제관 재난지휘역량강화 교육훈련 실시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사업부서 : 해당 재난관련 주무과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200백만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현장지휘관제도 운영관리	• 규칙제정	2018	비예산	-	-	-
재난지휘관 역량강화	• 프로그램 개발	2018	100	-	100	-
교육훈련 실시	• 교육 및 가상훈련 시뮬레이션	2019	100	-	100	-

## 7. 기대효과

○ 재난 발생 시 지휘통제관의 지휘역량 강화로 재난의 조기 수습·복구 및 주민 피해 최소화

## (14) 재난안전 및 재난피해 DB구축 통합 관리

재난안전 관련 DB 및 주민 대상의 수습복구 지원을 위한 피해이력 DB를 구축하여 통합관리

### 1.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재난안전DB는 방재자원, 관리대상 시설물 등에 대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각종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 단계별 DB를 다양화하고, 활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됨

###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체
- 사업기간 : 2023년~2025년

### 3. 추진계획

- 기 구축된 방재자원 및 위험시설물 DB 외에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정보를 체계적으로 DB화 하여 재난안전 전 단계별 DB활용성을 제고
- ※ 복구과정에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DB(취약성, 경제적 상황, 복구서비스 수혜 여건 등)를 통해 재난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데 활용

### 4. 사업내용

- 시설물 등 재난안전 예방, 대응 DB 조사항목에 대한 현행화 조사
- 재난피해자 대상의 DB표준 분류체계 마련 및 텍스트 구축
- 재난안전 통합DB관리 시스템 구축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6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시설물 등 재난안전 예방, 대응 DB 조사항목에 대한 현행화 조사	-	2023	100	-	100	-
재난피해자 대상의 DB표준 분류체계 마련 및 텍스트 구축	-	2023	200	-	200	-
재난안전 통합DB관리 시스템 구축	-	2024-2025	300	-	300	-

## 7. 기대효과

○ 재난안전 정보DB의 효율적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재난안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으로 행정의 비효율성 개선

## (15) 재난상황정보 공통플랫폼 및 양방향 재난안전포털시스템 구축

재난 발생 시 각 기관의 상호독립적인 재난상황정보 관리로 인한 정보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형식을 표준화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공통플랫폼 구축

### 1. 배경 및 필요성

- 재난 발생 시 상황정보는 각각의 기관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각각의 보고형식과 내용에 따라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을 통해 정보를 수집·전파 하면서 정보의 시간적·공간적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며, 정보의 오류 및 차이를 경험하면서 대응의 혼선을 초래
- 따라서 평상시부터 재난정보의 정확한 공유 및 활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보를 수합하여 전달처에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의 표준화, 공유화 및 전달경로를 확보한 정보관리방식의 통일화로 정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통플랫폼을 구축

### 2.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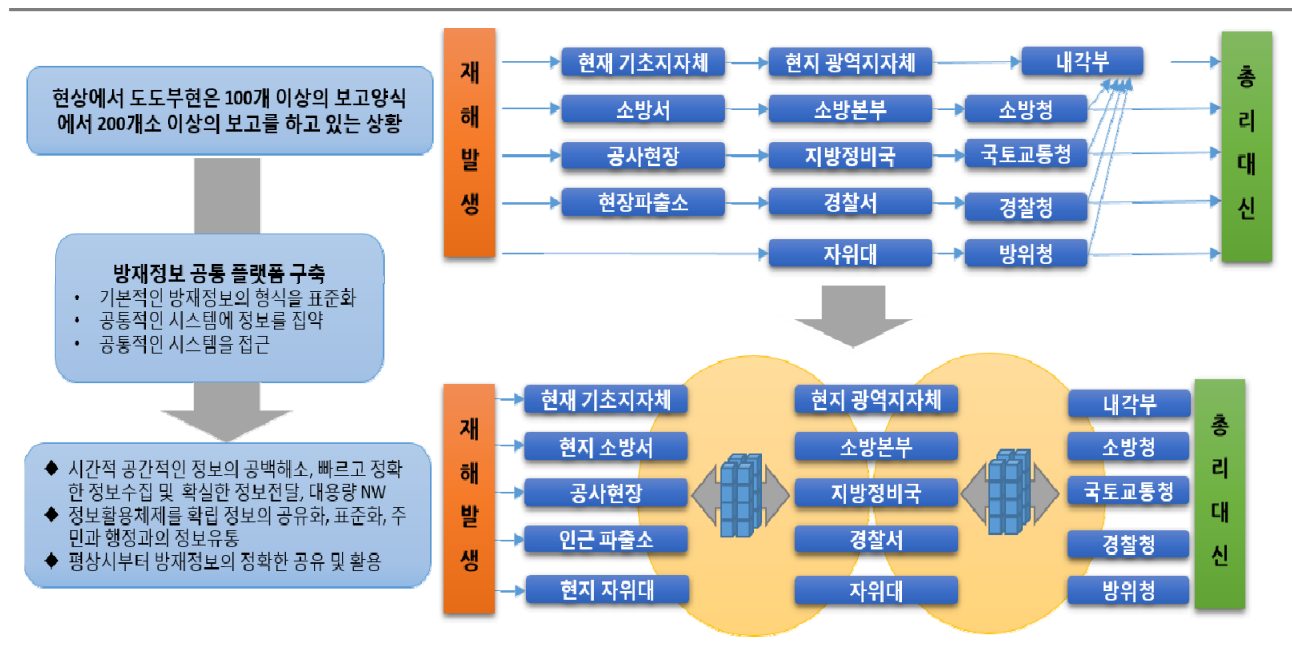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체 ※ 전국화 시범사업 형태 추진
- 사업기간 : 2025년 ~ 2027년

### 3. 추진계획

- 기본적인 방재정보의 형식을 표준화하고, 공통플랫폼을 통해 집약하여 상호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재난상황정보의 정확한 확보 및 공유
-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드론 촬영 영상화
- 재난 대응 단계별 기반 구축 및 기능개선

### 4. 사업내용

- 재난상황정보 표준화 지침 마련
- 공통플랫폼 구축



[그림 4-44] 일본 방재정보 공통플랫폼 체계도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협조기관 : 육군 제32사단, 충남지방경찰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5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재난상황정보 표준화 지침 마련	-	2025	200	-	200	-
공통플랫폼 구축	-	2026-2027	300	-	300	-

## 7. 기대효과

- 재난상황정보 공통플랫폼 구축으로 평상 시부터 정확한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효율화
-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도민의 생명·재산 피해 최소화

## (16) 현실적인 민방위대피소 시설개선안 마련

재난 발생 시 재난유형에 따른 맞춤형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을 위한 대피시설 관리 및 시설 개선안 마련

### 1. 배경 및 필요성

- 민방위 대피시설은 민방위사태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가용성, 지정·해제 등의 기준 미비 등으로 그동안 언론에서 양적으로 확대된 민방위 대피시설의 관리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
- 현재 충청남도의 경우도 390개소에 이르는 민방위대피시설 대부분이 공공용지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재난 유형에 따른 민방위대피시설 수요(지하·지상)에 부합하는 적정 대피시설의 지정·해제 관리 및 정비지침은 미흡한 측면이 있어 시설점검을 통한 민방위대피소의 시설 개선안 마련이 요구됨

###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청남도 각 시·군
- 사업기간 : 2018년 ~ 2030년

### 3. 추진계획

-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정 규모의 민방위 대피시설 정비 및 관리 강화
- 민관협력점검시스템을 통한 대피시설 내 미흡문제 점검 및 시설 개선안 도출

### 4. 사업내용

- 민관협력점검위원회 구성·운영
-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개선과제 도출
- 민방위 대피시설의 지정·해제 및 정비사업 추진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협조기관 : 육군 제32사단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5,0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민관협력점검위원회 구성·운영	-	2018~2020	비예산	-	-	-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개선과제 도출	-	2018~2019	비예산	-	-	-
민방위 대피시설의 지정·해제 및 정비사업 추진	-	2019~2030	5,000	2,500	1,500	1,000

## 7. 기대효과

○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정책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

○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



---

## (17) 재난안전 위험도 평가시스템 구축·운영

재난 경험을 토대로 재난 대피, 초동 대응 및 구조·구급 활동 난이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특성이 반영된 재난안전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구축 운영

### 1. 배경 및 필요성

- 도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계획 차원의 적극적인 재난안전대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해영향평가제도를 통한 도시재난 안전계획의 기준이 미흡하고,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지역의 위험요인과 재난경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역의 위험도 평가기법 및 관리시스템 개발이 요구됨

###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청남도
- 사업기간 : 2028년~2030년

### 3. 추진계획

- 재난 발생 시 대피, 초동대응 및 구조·구급활동 난이도에 대한 과거 이력 분석을 토대로 재난안전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 4. 사업내용

- 재난안전 위험도 평가시스템 구축
  - 재난안전 위험평가체계 개발
  - 재난위험요인, 재난발생 사례 및 대응과정 분석을 통한 지역별 재난안전 위험요인 분석
  - 재난대응 시나리오 개발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5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재난안전 위험평가체계 개발	-	2028-2028	100	-	100	-
재난위험요인, 재난발생 사례 및 대응과정 분석을 통한 지역별 재난안전 위험요인 분석	-	2028-2028	100	-	100	-
재난대응 시나리오 개발	-	2029-2029	50	-	50	-
재난안전 위험도평가시스템 구축	-	2029-2030	250	-	250	-

## 7. 기대효과

- 재난안전 위험도 평가를 통한 지역 내 위험요인 관리 효과성 제고
- 재난안전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

## (18) 각종 사고유형별 골든타임 확보 지원

사고발생 이후 소방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행정 지원 및 시설 장비 보강

### 1. 배경 및 필요성

- 소방출동대의 화재현장 도착시간이 지연되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함
  - 화재 진행상황에서 성장기 이내 소방 출동대 도착시 사망자는 16명, 최성기 진입 후 도착시 사망자는 38명으로 2배 이상 사망자 급증
  - 골든타임을 초과하여 출동대가 도착한 경우 평균 사상자 수와 재산 피해액 증가
  - 소방 출동의 현장 대응성에는 도착시간이 매우 중요함
- 인명피해에 관한 현장 대응 업무의 대부분은 일차적으로 119안전센터에서 처리함
- 화재사고와 구급사고에서 5분 이내 도달 가능한 면적과 인구는 각각 화재사고의 경우, 20.4%에 불과하며, 도달 가능 인구는 68.5%이지만, 15분을 초과하여 도달하는 면적은 10.3%에 이름

###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청남도
- 사업기간 : 2018년~2025년

### 3. 추진계획

- 긴급출동에 따른 골든타임 정립과 화재, 구급 사고시 출동 소요시간을 분석하여 출동 장애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해소 방안을 마련

### 4. 사업내용

- 출동단계 별 골든타임 정립과 모니터링
  - 각 기관·지역별 출동단계별 골든타임 준수 결과 분석을 통한 미 도달 요인 개선
- 긴급출동 장애지역 관리기준 상향 조정
- 긴급출동 장애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장애요인, 장애구간, 주변 소방시설 현황, 주민 거주현황 파악
-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드론 촬영 영상화
  - 단기 : 진입불가 대상지역 촬영
  - 중기 : 진입곤란 대상 지역 및 추가 기준대상으로 확대 실시

- 드론영상 실시간 영상 중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화재발생 시 활용
  - (토지관리과)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
  - (소방본부 및 119안전센터) 드론 확보 및 촬영기술 습득 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 재난 대응 단계별 기반 구축 및 기능개선
  - 민간대응 역량강화 : 소방관서 원거리 마을 호스릴소화전 보급 및 마을자치소방단 발대·운영, 재난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의용소방대 소방차량·장비 보강
  - 119 상황실 역량강화 : 대국민 119신고요령 홍보 및 119상황요원 직무역량 강화, 119신고·접수 시스템 및 현장정보지원시스템(AVL) 기능 개선
  - 신속한 차고 출발 ; 출동준비절차 단축을 위한 개인안전장비 장착 및 차량 탑승 훈련 전개, 출동 동선 최소화를 위한 청사구조 및 장애사항 개선
  - 현장 출동 장애 개선 : 119지역대 구급차 추가 배치, 확대 운영(11개소),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등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여건 개선,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캠페인 및 언론·SNS 등 다각적 홍보
- 소방차 통행로 환경 개선과 장애지역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 통행로 노면 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설치
  - 지하주차장이 없는 노후 아파트 주차 구획선 정비
  - 상습 미도달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인 분석
- 최적 출동 경로 정보 제공을 위한 차량 관리시스템 개선
  - 교통상황, 최단경로, 위성정보 등 실시간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 소방차에 위성지도 및 소화전 등 주요정보가 표시된 단말기 설치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소방본부
- 사업부서 : 토지관리과
- 협조기관 : 충남지방경찰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11,855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출동 단계별 골든타입 정립과 모니터링		2020	비예산	-	-	-
긴급출동 장애지역에 대한 전수조사		2020~2025	비예산	-	-	-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드론 촬영 영상화		2025	비예산	-	-	-
드론중계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li> <li>• 전문 인력 양성</li> </ul>	2018	140	-	140	-
재난 대응 단계별 기반 구축 및 기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별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 개발 도입</li> <li>• 소방관서 신설 및 보강</li> </ul>	2018-2021	11,015	2,203	6,168	2,644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을 위한 용역		2020	200	-	200	-
최적 출동 경로 제공 등 프로그램 개발		2025	500	-	500	-

---

## (19) 재난발생 시 응급의료 대응체계 확립

재난 및 사고발생 환자이송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및 의료 인프라 구축

### 1. 배경 및 필요성

- 재난과 사고 발생시 응급의료 지원체계의 미비와 환자이송 지연 등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병상과 물품, 인력 등 재난 의료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관들 간 합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충청남도만의 특성화된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대응력을 향상시킴으로 각종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

###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충청남도
- 사업기간 : 2018년 ~ 2025년

### 3. 추진계획

-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닥터 헬기 확충 및 응급 의료소 확대
- 재난의료지원 실무자들의 역량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
  - 재난의료지원 담당자(시군 보건소, 소방, 의료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오염, 테러발생, 화재, 건물붕괴 등 특수 재난 상황을 가상하여 훈련할 수 있는 표준화 된 훈련 시나리오와 매뉴얼 구축

### 4. 사업내용

- 상황별 재난대응 매뉴얼에 근거한 담당자 임무 숙지
- 재난의료지원 실무자들의 역량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
  - 지역화에 특화된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매뉴얼 개선
  - 재난의료지원 유관기관별 역할의 인지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도상훈련 실시
  -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참여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지역별 재난 발생 시 동원 가능한 의료자원현황 및 출동대응체계 마련

- 시도, 소방, 보건소,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대상 재난의료 실무교육 개최
  - 지역 특성을 고려한 5개 권역 지역별 특화교육 시행
-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사전훈련 및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교육 활성화
  - 비상대응 매뉴얼 보완 및 다수사상자 대비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교육 강화
- 유관기관 협조 구축을 통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 실시
- 재난 초기 대응은 소방에서 담당하고, 보건부서에서 전문성에 기반한 정보를 공유하여 평가
-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영
  - 재난·사고 발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응급의료기관 간 비상연락망 체계 가동
- 재난 거점병원 확대를 통하여 재난의료지원팀 현장 도착비율 향상
  - 도내 소방-보건-의료기관이 참여하여 반복적인 재난대응 훈련 실시
  - 재난시 의료지원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단일 매뉴얼 마련
  - 관련부처 합동훈련 실시
- 재난현장 응급의료지원에 대한 적용가능한 구체적 매뉴얼 마련
- 닥터헬기 활동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 배치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보건정책과
- 사업부서 : 소방본부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72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현장 출동 의료지원	-	2018-2025	240	130	110	-
권역별 재난의료전담인력 배치 운영	-	2018-2025	432	299	133	-
재난의료지원차량 관리	-	2018-2025	48	-	48	-





# 5

##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구축

기러기는 매년 10,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합니다.

왜 떼지어 날아갈까요?

편대비행은 바람의 저항을 줄여주고 외부의 적의 침입을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서로 교대하며 방향을 인도합니다.

서로 역할을 나누어 안전을 감시합니다.

서로 소리를 내어 격려하기 때문에 상대의 약함을 살피고 도와줍니다.

혼자 가면 멀리 가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 마을안전공동체 운영
- 자원봉사자 운영 매뉴얼 정비
-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기적의 숫자 5' 생활화
- 재난 대응 시 활용 가능한 민간자원의 공유체계 확대

---

## 목 차

---

(1) 도민주도 생활환경 자체점검 체계구축 .....	316
(2) 자율적인 안전모임 안전나눔사업 지원 .....	318
(3) 재난안전 책임기관간 안전울타리 형성으로 실효적인 재난 대응 .....	320
(4) 도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훈련 프로그램 개발 .....	323
(5) 재난대응 시 활용 가능한 민간자원 공유체계 확대 .....	326
(6) 재난 레질리언스에 강한 안전마을 공동체 육성 .....	328
(7) 권역별 방재특성을 반영한 안전거버넌스 구축·운영 .....	330
(8) 중간지원조직 역할 확대 .....	332

---

# 05

## 참여와 협력의 안전거버넌스 구축

### (1) 도민주도 생활환경 자체점검 체계구축

기존의 조직을 활용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한 도민 주도적 참여로의 변화 필요

#### 1. 배경 및 필요성

- 재난안전 진단 영역에 있어 부족한 공공부문 인력으로 인한 정확한 진단 및 파악 어려움을 개선
- 도민이 생활환경에 대해 자체점검 함으로서 지역의 특화된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함께 대응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으며, 특성별 지역안전 진단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 조성

#### 2. 사업개요

- 시군 및 읍면 단위별로 기존의 자발적인 마을단위별 모임을 활용하여 안전진단 모니터링단을 구축
- 안전 진단 리스트를 충남도 차원에서 제공 하나, 지역별로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시군 및 읍면 단위별 생활환경 자체 점검단(기존 재난안전관련 자발적인 조직 구성원)구성

#### 3. 추진계획

- 지역 생활터 및 일터, 특수재난사고, 불법주정차 자율감시단 구축 및 운영

- 지역 생활환경 자체 점검 리스트 발굴
- 지역 생활환경 위험요소 개선사항 피드백

#### 4. 사업내용

- 지역(내가 사는 생활터, 내가 일하는 일터) 안전진단 모니터링단 구축
- 특수 재난사고(산지킴이 감시단, 미세먼지 경보 감시단, 화학물질 유출사고 감시단) 감시단 구축 및 운영
- 불법 주정차(전통시장, 등하교 스쿨존, 소방차주차구역 등) 자율 감시단 구축 및 운영
- 지역 생활환경 자체 점검 리스트 발굴
- 지역 생활환경 위험요소 피드백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사업부서 : 환경보전과, 시군 교통 관련 부서
- 협조기관 : 충남지방경찰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비예산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지역 생활환경 자체점검 시민 감시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생활터 및 일터</li> <li>• 특수재난사고</li> <li>• 불법주정차</li> </ul>	2020	비예산	-	-	-
지역 생활환경 자체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트 보급</li> <li>• 지역 리스트 발굴</li> </ul>	2019	비예산	-	-	-
지역 생활환경 위험요소 개선사항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사항 환류</li> </ul>	2020	비예산	-	-	-

#### 7. 기대효과

- 기존 공공부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역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진단의 제기능화
-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지역 생활환경 안전점검 및 안전거버넌스 토착화

---

## (2) 자율적인 안전모임 안전나눔사업 지원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자조의 개념으로 안전관리를 전환, 이해가 공유되는 모임을 연계 이를 통해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게 함

### 1.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의 안전생산자가 소비자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함
- 안전관리에 대해 경험해보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의 협동조합에 있어 가치를 공유하는 모델을 가져와 안전에 대한 공동의 가치에 투자하고 소비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함
- 주민스스로 운영하고, 안전관련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화 필요

### 2. 사업개요

- 마을단위의 안전 소모임(아파트 단지, 학교(청소년), 동일업종 등) 운영 지원 및 안전협동조합 운영 지원을 통해 자조의 개념으로 안전관리를 전환
- 시군 및 읍면 마을단위에서 시범사업 시행
- 사업기간 : 2019년 ~ 2020년

### 3. 추진계획

- 공유가치 발굴 지원
- 안전 소모임(아파트 단지, 학교-청소년대상, 동일업종 등) 운영 지원
- 안전협동조합에 대한 설명회 및 초기 형성 지원
- 산업현장 1일 안전관리(책임자)체험 추진

### 4. 사업내용

- 안전 소모임(아파트 단지, 학교(청소년), 동일업종 등) 운영 지원
- 산업현장 1일 안전관리(책임자)체험 추진
- 안전협동조합 운영 지원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사업부서 : 경제정책과, 시군 안전관리 부서
- 협조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2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안전 소모임 운영지원	• 아파트 단지 및 생활권 기반 시범사업 추진	2020	20	-	20	-
산업현장 1일 안전관리 (책임자)체험 추진	• 안전관리 체험 추진	2019	비예산	-	-	-
안전협동조합 운영 지원		2019	비예산	-	-	-

## 7.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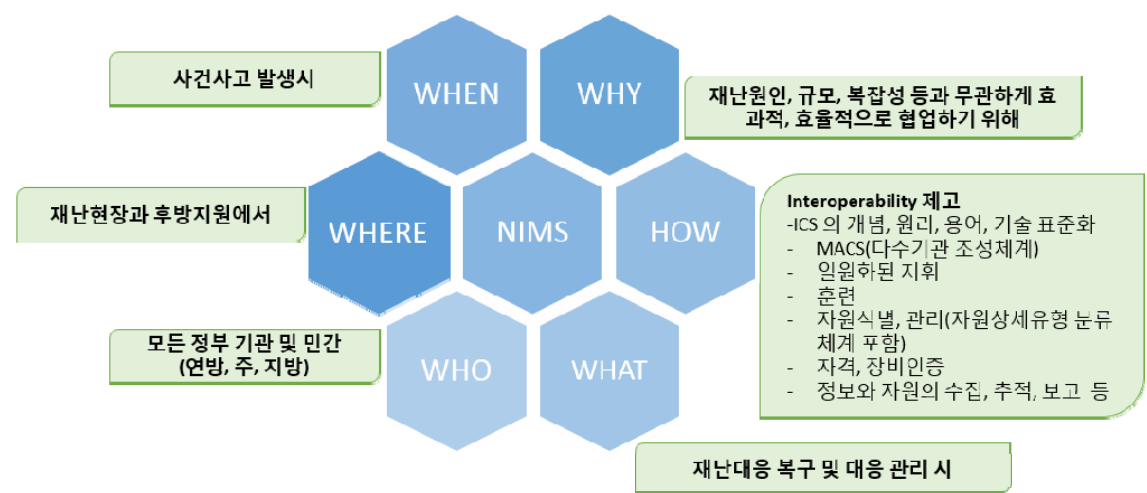
- 안전 소모임 활성화를 통한 자조의 개념으로 안전관리 전환
- 이해가 공유되는 모임 연계를 통한 안전거버넌스 시너지 효과 극대화

### (3) 재난안전 책임기관간 안전올타리 형성으로 실효적인 재난 대응

재난 발생 시 필요한 협력과 자원 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구축

#### 1.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충남의 안전거버넌스는 충남도, 소방, 경찰, 유관기관, 민간 등이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평적인 구조만을 강조해 실제 재난 발생 시 의사결정의 지연 및 신속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옴
- 또한 공공기관의 재난대응 전문역량 부족 및 협업 저조의 문제는 재난대응과 재난관리에의 실효성이 떨어뜨림
- 한편, 미국은 통합적 재난관리체계(All Hazards Approach)구축으로 재난 발생시 초기 대응이 신속히 행해짐. 미국은 국가재난대응계획(NRP)과 국가사고관리체계(NIMS)를 가동하고 있으며, 국가 자원의 통합체계화와 함께 중앙·지방정부/NGO/민간(기업)부문 상호간 협력기반(네트워크화+자원과 물자 통합적 협력)에 의한 국가안보도 동시에 체계화하여 운영함



※자료 : 소방방재청, 2014

[그림 4-45 ]국가사고관리체계(NIMS) 개요도





---

####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사업부서 : 정보화정책과, 기후환경정책과, 도로교통과, 해운항만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식품과, 도민협력새마을과, 자치행정과, 소방본부
- 협조기관 : 충남지방경찰청, KT 충남고객본부,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

#### 5.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비예산

#### 6. 기대효과

- 참여 기관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책임의식이 고취 및 안전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를 통한 신속한 초기재난대응을 가능하게 함

#### (4) 도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훈련 프로그램 개발

재난교육 및 재난훈련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대한 반성으로 시나리오에 의한 체계적인 실제적 훈련을 몸이 기억하도록 개선함

##### 1. 배경 및 필요성

- 국민들에 대한 안전관련 교육 및 홍보가 부족하고, 아울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난 훈련 문제도 제기됨
- 선진국의 재난교육을 보면, 첫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난안전교육이 정규교육과정에 편입되어 있음.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재난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둘째,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강의, 체험, 포스터, 만화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재난안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셋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난안전교육은 학년별 차등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호주의 경우에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생각을 많이 요하게 됨. 넷째, 재난 안전교육은 특히나 직접 체험해 보는게 중요한데, 미국, 일본, 호주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체험위주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음. 마지막, 일본은 교육법에 안전교육을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주별로 상이하기는 하나, 안전교육이 주에 따라 명시된 곳이 많음
- 한편, 선진국의 재난훈련을 보면, 독일은 LÜKEX 훈련을 2년마다 실시하고 있음. 독일은 911테러와 2002년 홍수로 인한 엘베(Elbe)강 범람 등 대규모 재난상황시 국민 및 국가핵심인프라 보호를 위해 2002년 『독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신전략(Neue Strategie zum Schutz der Bevölkerung in Deutschland)』을 수립하였고, 신전략에 따라 「전략적 위기관리 훈련 지침(Leitfaden für strategische Krisenmanagement Übungen)」 수립과 함께, 2004년부터 2년마다 국가 위기관리훈련인 LÜKEX를 실시하고 있음. 2009년에는 『국민보호 및 재난지원법』에 명시하고 있음. LÜKEX 훈련은 내무부의 시민보호 및 재난지원국(BBK: Bevölkerungsschutz und Katastrophen-hilfe)에서 담당하고 있음
- LÜKEX 훈련 시나리오 개발은 계획 수립단계에서 평가 단계까지 2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음. 훈련은 내무부가 계획 수립 및 감독하며, 국가-연방정부간의 협의를 통해 훈련목표, 훈련 시나리오, 훈련 참여/조직 등 훈련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게 되며, 운영위원회/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기관간 협력/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표 5-12. 위기대응 교육기관 및 훈련 예시

구분		내용
교육기관 및 훈련주관기관		민방위아카데미- 교육기관 연방국민보호재난지원청 - 훈련주관기관
교육 및 훈련 근거		독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신전략(Neue Strategie zum Schutz der Bevölkerung in Deutschland) 수립, 전략적 위기관리 훈련 지침 마련
교육 적용 재난 유형		정전, 테러, 폭발, 화학물질, 사이버 공격, 해일 등 최근, 생물학적 위협상황에서의 식품안전, 소비자보호 및 보건 추가
교육 및 훈련 대상(참여자)		공무원, 민간인 등
교육 내용(프로그램)		민방위대원 및 자원 봉사자 대상 교육 소방대원 대상 교육, 일반 국민 대상 교육
교육 및 훈련 평가(피드백)		훈련 평가 결과가 반영됨
훈련	훈련 명칭	LÜKEX 훈련
	훈련 주기	2년 주기로 실시(2004년부터) - BBK 주관
	훈련 체계	훈련 시나리오, 훈련 참여/조직 등 훈련 프레임워크 개발 운영위원회/조정위원회 운영하여 기관간 협력/조정 체계 구축
	훈련 상황 (시나리오)	겨울철 이상 기상현상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발생 국가 행사와 연관된 테러 발생, 유행성 독감(인플루엔자) 발생 폭발, 화학물질 및 방사능 테러 발생, 대규모 사이버 공격 발생 생물학적 재난 발생, 대규모 해일 발생
	훈련 내용	훈련 상황별 신속한 초동 대응, 상황전파, 유관 기관간 협력 대국민 대피, 구조 및 구급 등

## 2. 사업개요

- 재난대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다같이 안전되풀이 전략은 기존 형식적인 재난훈련을 탈피하여,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울러 충남 권역별(북부도심권-도심 재난, 서해안권-해양 재난, 내륙권-풍수해)로 상이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유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제적인 훈련을 실시

## 3. 추진계획

- 시나리오에 근거하고, 충남 권역별로 상이한 재난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유관 기관의 참여를 유도

## 4. 사업내용

- 시나리오에 근거한 충남 재난훈련 실시
- 재난 유형별 및 권역별 재난훈련 프로그램 발굴 및 훈련

- 초·중·고 재난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학교 재난안전교육사 양성
- 재난안전 교육교재 개발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협조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35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프로그램 발굴 등	• 프로그램 발굴 및 교재개발	2020	100	-	100	-
교육, 훈련	• 재난교육 및 훈련	2020	50	-	50	-
학교 재난 안전 교육사 양성		2030	200	-	200	-

7. 기대효과

-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재난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아울러 충남 권역별로 상이한 훈련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음

## (5) 재난대응 시 활용 가능한 민간자원 공유체계 확대

민간 재난 자원봉사자 양성, 민간 사업자 사전 확보 및 재난 대응 활용

### 1. 배경 및 필요성

- 재난 발생시 공공부문의 인력만으로는 재난대처에 한계가 있고, 실제 국내외 재난대처 사례를 통해 민간부문의 원활한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임
- 도-기관-민간사업자간 재난자원(재난대응 장비·물자·의료지원·긴급수송) 유·무상 지원 협정 체결을 통해서 실질적인 안전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되고, 민방위 교육에서 개인별 재난대응 관련 임무를 부여 (재난에 필요한 교육 실시)하는 일을 병행하고자 함
- 각종 재난 재해 시 자원봉사 활동 및 운영 절차 등 표준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지원 및 피해 발생 최소화하고 재난대응 자원봉사 운영 체계 마련을 통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 2. 사업개요

- 민간 재난자원봉사자(지역 안전지킴이) 양성 및 교육과 아울러, 민방위대원의 재난자원봉사 활용 방안 모색 (재난시 개인임부 부여 등) 필요
- 재난재해 상황 발생 단계별 효율적인 자원봉사자 배치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운영 매뉴얼 정비
- 분야별(학교안전·해양안전 등) 안전협의회 운영 유도 및 활성화와 도-기관-민간사업자간 재난자원 (재난대응 장비·물자·의료지원·긴급수송) 유·무상 지원 협정 체결 구축
- 시군 및 읍면 재난자원봉사자, 재난안전관련 도-기관-민간사업자

### 3. 추진계획

- 민간 재난자원봉사자 자원봉사 활용시스템 구축
- 도-기관-민간사업자간 재난자원(재난대응 장비·물자·의료지원·긴급수송) 유·무상 지원 협정 체결

### 4. 사업내용

- 민간 재난자원봉사자 (지역 안전지킴이, 적십자사 연계) 양성 및 교육
- 자원봉사자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재난대응 자원봉사자 교육
  -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재난재해 자원봉사 운영 매뉴얼 정비·배포
  - 매년 교육 및 매뉴얼 업데이트를 통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 대응 능력 강화(년 2회 교육)

- 민방위대원의 재난자원봉사 활용 방안 모색(재난 시 개인임부 부여 등)
- 분야별(학교안전·해양안전 등) 안전협의회 운영 유도 및 활성화
- 도-기관-민간사업자간 재난자원(재난대응 장비·물자·의료지원·긴급수송) 유·무상 지원 협정 체결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사업부서 : 안전정책과, 자치행정과, 도민협력새마을과
- 협조기관 :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162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민간 재난자원봉사자 (지역 안전지킴이, 적십자사 연계) 양성 및 교육	-	2020	50	-	50	-
재난 자원봉사자 운영 매뉴얼 정비	-	2018-2021	12	-	12	-
민방위대원의 재난자원봉사 활용(재난시 개인임부 부여 등)시스템 구축	-	2020	100	-	100	-
도-기관-민간사업자간 재난자원 (재난대응 장비·물자의료지원·긴급수송) 유·무상 지원 협정 체결	-	2025	비예산	-	-	-

### 7. 기대효과

- 민간자원봉사자의 양성 및 활용을 통한 재난대응 시 공공부문 인력부족 극복 가능
- 은퇴인구를 활용한 민간 재난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활용을 통한 지역내 인적자원의 선순환 구조 생성
- 재난재해 피해복구 활동 시 초기 대응의 혼선 예방과 신속한 배치·운영으로 효율적 활동 지원체계 구축
- 다양한 유형의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통한 재난 피해 최소화 기여

---

## (6) 재난 레질리언스에 강한 안전마을 공동체 육성

효과적인 재난 안전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마을단위 사업 진행, 사례를 활용한 교육시행

### 1.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하향식의 안전모임 육성을 탈피하고,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상향식의 안전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의 재생적 안전 공동체 활성화가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사례를 통한 교육이 보다 필요해 보이며, 우리 마을의 취약성을 함께 고민해 보고 각종재난에 대해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2. 사업개요

- 마을 단위 재난 취약성 모임 구축 및 운영
- 마을 단위 안전마을 선정 사업 추진 등

### 3. 추진계획

- 마을 단위 재난 취약성 스터디 모임 구축을 통해 지역의 취약성에 대해 주민이 파악하게 함
- 마을 단위 안전마을 선정을 통해 스터디 운영 및 특화마을 조성을 통해 우수사례집 발간
-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피드백 및 어드바이저 제공

### 4. 사업내용

- 마을단위 재난취약성 스터디 모임 구축 및 운영
  - 마을 안전공부방
  - 마을 재난대비 대응책자 만들기
- 마을단위 안전지도 만들기
  - No, 위험지도 Yes, 안전지도 추진
- 마을단위 안전마을 선정 사업 추진
  - 화재안전마을, 홍수안전마을 등 우수사례집 발간
- 행정의 어드바이저를 위한 긴급지원 매뉴얼 작성 및 배포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사업부서 : 재난대응과, 자치행정과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6,55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마을단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 재난취약성 스터디 모임 구축 • 안전지도 만들기 등	2021-2030	6,000	3,000	1,500	1,500
마을단위 안전마을 선정 사업	• 화재안전마을, 홍수안전마을 선정 및 우수사례집 발간	2021-2030	500	250	125	125
행정의 어드바이저를 위한 긴급지원	• 매뉴얼 작성 및 배포	2025	50	-	50	-

## 7. 기대효과

- 주민 주도의 마을단위 재생적 안전 공동체 활성화
- 상향식의 안전모임 활성화를 통한 지역 위험요소 감소와 안전마을 형성

## (7) 권역별 방재특성을 반영한 안전거버넌스 구축·운영

충남지역의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사업

### 1. 배경 및 필요성

- 충남의 경우 천안, 아산 등의 북부도심권역의 경우 화재 등 도심형 재난 발생 빈도가 높고,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등의 서해안권역은 해양 재난의 발생 빈도가 높으며, 청양, 부여,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등 내륙동남권의 경우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어 특히 태풍, 홍수 등 풍수해 피해가 많음
- 권역별로 재난발생의 유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시군별로 획일적인 안전거버넌스 구축과 안전 매뉴얼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완 필요

### 2. 사업개요

- 충남의 권역별 방재특성을 반영한 동서남북 안전 세움 갈무리 전략

### 3. 추진계획

- 권역별로 차별화되고 현실성 있는 재난 네트워크를 구성
  - 북부도심권 : 도시재난
  - 서해안권 : 해양재난
  - 내륙 동남권 : 풍수해 강화

### 4. 사업내용

- 해양사고 전문가 양성
- 민간 재난 전문가 양성
- 상호 연계 훈련 프로그램 개발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사업부서 : 해양정책과, 소방본부
- 협조기관 :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7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전문가 양성	• 해양사고, 자연재난 전문가 양성	2021-2030	500	-	250	250
재난상호 연계한 대응책 마련	• 프로그램개발	2021-2022	200	-	100	100

## 7. 기대효과

- 지역별로 차별화된 안전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의 재난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는 재난 안전 거버넌스 구축과 효율적 재난관리 가능

---

## (8) 중간지원조직 역할 확대

참여를 촉진하고 유도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확장된 중간 매개지원자 필요, 지역 안전 의제 개발 및 주민과의 소통 강화

### 1. 배경 및 필요성

- 충남안전거버넌스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행정기관이 형식적인 중간자 역할이 아닌, 보다 참여를 촉진하고 유도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확장된 중간 매개지원자 역할로 변화가 필요
- 중간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안전거버넌스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알게 되고, 또한 안전 교육 및 조사연구를 함께 함으로써 안전거버넌스에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음
- 나아가 지역 안전 의제를 개발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시켜 보다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충남연구원이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

### 2. 사업개요

- 안전거버넌스 중간지원 및 재난관리 거버넌스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한 충남연구원 역할 강화

### 3. 추진계획

- 지역 안전거버넌스 소모임 운영 지원기능 강화
- 지역안전의제 상시 발굴 및 적용
- 지역 안전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수행

### 4. 사업내용

- 지역 안전거버넌스 소모임 운영 지원을 위한 어드바이저 기능 강화
- 주민 공모제를 통한 지역안전의제 상시 발굴 및 적용
- 찾아가는 주민 안전교육 활성화
- 지역 안전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수행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1,9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지역 안전거버넌스 활성화	•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소모임 운영지원 등 연구사업 확대	2019-2025	1,600	-	800	800
주민 공모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안전의제 상시 발굴 및 적용	• 지역안전의제 발굴 및 활용	2020	300	-	300	-

## 7. 기대효과

- 충남 안전거버넌스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강화
- 지역 안전거버넌스 활성화 조사연구를 통한 실현가능한 안전모임 구축

행 복

나태주

저녁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V 선도사업





18 개 선 도 사 업	
(1) 다함께 누리는 「안전신분증」 휴대하기 .....	338
(2) 재난약자에 대한 「안전눈높이」 맞추기 .....	340
(3) 현미경으로 살펴 본 「안전사각지대」 없애기 .....	342
(4) 모두가 동행(同幸)하는 안전운전1·2·3 .....	345
(5) 위험에 취해 있는 「안전규제의 필요적 강화」 .....	347
(6) 지진 등 대규모 재난 시 「신속한 행정력 복원대책」 수립 .....	350
(7) 「재난 지휘관 역량강화」 확대 시행 .....	352
(8)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기적의 숫자 5」 생활화 .....	354
(9) 충청남도 「안전지킴이 북」 제작 활용 .....	356
(10) 권역별 다목적 「드론통합운용 위기관리 대응 체계」 구축 .....	358
(11) 한눈에 알 수 있는 「생명의 탈출 안내지도」 제작·배포 .....	360
(12) 단계별 지진재난 대응책 마련 .....	362
(13) 핵 및 생화학 사태의 선제적 대응 .....	364
(14) 재난 및 안보위기 통합관리 .....	366
(15) 도민이 연상 가능한 「재난영화 콘테스트」 개최 .....	368
(16) 지방하천 수문(통문) 자동화 시스템 구축 .....	370
(17) 중독 없는 안전충남 만들기 .....	371
(18) 항구적인 가뭄극복대책 .....	373

## (1) 다함께 누리는 「안전신분증」 휴대하기

- ❖ 1. 안전문화 (1) 자율형 안전활동 기반 구축 p77 연계
- ❖ 3. 안전복지 (3)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 p92 연계

### 1. 배경 및 필요성

- 대규모 재난발생 시 또는 개인이 대응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서, 위협에 처해 있는 개인은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보호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안전신분증」은 생명·신체가 위급할 때, 장애·치매로 인한 도움이 필요할 때, 집을 잃었을 때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긴급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일종의 자기방어용 카드임
- 평소 주의를 요하는 자신의 신체적 · 심리적 상황을 안전신분증에 기재하여 휴대하면, 위급 또는 비상시에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대규모 상황 이외에도, 본인의 의지로 의사를 대변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의사를 개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안전신분증」을 휴대하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2. 사업개요

- (도·시·군) 손쉽게 때어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신분증 서식 및 사용방법 안내
- (도·시·군) 모든 유인물(회의자료 · 계획서 · 리플릿 등) 뒷면 표지를 포함한 1~2장을 안전신분증 서식 및 홍보지로 활용
- (도민) 안전신분증 서식에 자신의 정보를 기재, 지갑 · 가방 · 외투 주머니 등 휴대
- (구조자 등) 안전신분증에 기재된 정보를 종합해서 개인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3. 추진계획

- 2017. 4/4 : 시범사업 추진(도 재난안전실 및 시·군 안전정책과)
  - 안전신분증 휴대하기 홍보 및 서식 제공, 반상회 회보 등 도민에게 배포되는 유인물 적극 활용

충청남도 안전 신분증 <b>앞면</b>				<b>뒷면</b>			
주 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긴 급 연락처	이름 ○ ○ ○	전화	010-0000-5678
성 명	김 충 남	성 별	남 여		이름 ○ ○ ○	전화	010-0000-5678
생년월일	1900년 0월 0일	혈액형	A	병력(病歷) 사항	○○×××		
전화번호	041-635-0000(010-0000-1234)			평소 다니는 병원	△△병원(T.000-0000)		
※ 이 카드는 긴급 사태에 대비, 평상시 휴대해 주십시오. 이 카드는 신분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 용 증 인 약	○×○×		
				알 레 르 기	유 ( )		

[그림 5-1] 충청남도 안전신분증(예)

- 안전신분증 샘플 제작 홍보
- 안전신분증 콘텐츠 제작을 위한 필수기재 사항 우선순위 도출
- 2018. 1~6월 본격 시행(도·시군 모든 부서)
- 2018. 7~12월 병원 등 민간기업까지 확대 시행

####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사업부서 : 시군 보건소(지소), 도·시군 모든 부서
- 협조기관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5. 예산계획

- 사 업 비 : 비예산(기정예산 활용 가능)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안전신분증 홍보 및 안내교육	• 홍보물 제작 • 필수기재사항 우선순위 도출	2017.10~12	비예산	-	-	-
안전신분증 서식 배포 및 홍보	• 도·시군 모든 부서	2018.1-6	비예산	-	-	-
	• 병원 등 민간기업에 확대	2018.7~12	비예산	-	-	-

#### 6. 기대효과

- 가방이나 지갑·휴대폰 등에 넣어 두거나 몸에 휴대하면, 긴급상황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미아(迷兒) 및 미(迷)어르신 발생에도 대비가 가능

## (2) 재난약자에 대한 「안전눈높이」 맞추기

❖ 3. 안전복지 (3)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 p92 연계

### 1. 배경 및 필요성

- 안전에 있어서 약자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으므로, 안전 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적극적인 사전 진단과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됨
- 물리적인 한계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은 신체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안전에 있어 더욱 취약한 특성을 보임
- 또한, 재난발생 시에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이재민·지역주민까지 확대되므로 이에 대한 포괄적인 안전 눈높이 맞춤사업이 필요함

### 2. 사업개요

- 어린이·어르신·장애인의 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
- 재난약자 보호와 피해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재난피해자 자금 지원방안 마련

### 3. 추진계획

- 사업대상1 : 어린이·어르신·장애인
- 사업대상2 : 도민 전체
- 사업기간 : 2018~2020

### 4. 사업내용

- 어린이 안전시설개선 프로그램 (여성가족정책관)
  - 엘리베이터 손 끼임 방지 스티커 부착 개선사업(만 6세 영유아 92.4% 차지)
    - ※ 2012~2015년간 엘리베이터 위해사례 648건 중 380건 손끼임 사고(한국소비자보호원, 2016)
    - ※ 손끼임 주의 게시물은 정면이 아닌 측면에 부착 안내(일본 등 선진국 이미 시행)
  - 주요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게시물 부착 홍보
- 어르신 안전운전 프로그램 제공(저출산고령화대책과)
  - 어르신 운전차량 스티커 정비
  - 고령 운전자 안전수칙 홍보
  - 교통안전 공단 연계 교육이수자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 장애인 이동안전 환경 개선 프로그램 (도로교통과)
  - 장애유형별 이동안전 환경 확보를 위한 시설 점검
  - 장애인들의 손 높이에 맞는 점자 안내도 및 보도 상 점자블록 정비
  - 휠체어 사용을 위한 경사도 개선 및 턱 낮춤
  - 볼라드 연성화로 충격 완화
- 재난약자 보호와 피해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전정책과)
- 재난피해자에 대한 복구자금 이차 지원 조례반영 (재난대응과)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사업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도로교통과, 재난대응과
- 협조기관 : 충남지방경찰청

## 6. 예산계획

- 사 업 비 : 1,030백만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어린이 안전시설 개선사업	• 엘리베이터 등 어린이 안전시설 개설	2020	80	-	80	-
어르신 안전프로그램	• 어르신 운전차량스티커 교부 • 고령운전자 안전수칙 홍보 등	2018	150	-	75	75
장애인 안전환경 개선 프로그램	• 장애인 손 높이 맞는 점자 안내도 및 점자블록 정비	2020	800	-	400	400
조례 제정	• 재난약자 보호 조례 제정 • 재난 피해자 대한 복구 자금 이차 지원	2019	비예산	-	-	-

## 7. 기대효과

- 실제 사고 발생 및 안전위험 요인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와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전복지 실현에 기여함
- 모든 도민이 재난 앞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이중 장치를 설치하고, 재난 이후 빠른 사회 복귀가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제적인 지역 회복력을 강화함

### (3) 현미경으로 살펴 본 「안전사각지대」 없애기

❖ 2. 안전생활터 (1) 안전·안심 위협요인 저감 p82 연계

#### 1. 배경 및 필요성

- 공공시설물 혹은 일정규모에 준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점검 및 안전에 대한 사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규모시설을 대상으로는 기준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범위가 기존과는 다르게 시장의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어, 신설되는 시설물에 대한 제도적 관리의 뒷받침이 빠르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개발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 함
- 사회복지시설 중 특정관리대상시설\*은 법적 지정관리 되고 있으나, 비 법적 소규모시설의 경우 안전 점검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음. 이는 제도적 자치의 부재에서 야기 됨
- \* 특정관리대상시설 : 연면적 1,000~5,000㎡미만, 소규모시설 1,000㎡미만
- 이외 물놀이 유원시설, 키즈카페 등 신생 다중시설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며, 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실효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요구 됨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급 이송체계 구축, 도서지역과 외곽지역의 편차 없는 병원 전 단계 신속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2. 사업개요

- 도내 취약계층 이용 소규모시설(사회복지분야) 대상으로 안전 점검 등 안전서비스 실시
- 취약계층 이용 소규모시설 법적 지정관리 등 제도개선 건의
- 다수 사상자 이송관리시스템 구축 및 구급차량 운행경계 구분 허물기
- 119지역대(11개소) 신설 및 노후 119구급차(구급장비) 교체 보강
- 재난으로 인한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 구축

#### 3. 추진계획

- 사업대상 : 도내 소규모시설물(사회복지분야)
- 사업기간 : 2018~2022

#### 4. 사업내용

- 사회복지분야 소규모시설 현황조사 (복지정책과, 여성가족정책관)
  - 소규모시설 현황조사 1차: 공공시설, 2차: 사유시설을 실시하며 공공시설의 경우 여성인권 상담소, 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가족센터, 청소년 시설 등
- 사회복지 분야 소규모 시설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하천안전과)
  - 민간 전문가 합동 분야별(건축·전기·가스등) 실시·체계적 관리
- 취약계층 이용 소규모시설 법적 지정관리 등 제도개선(하천안전과)
  - 점검 및 제도적 미비 분야 발굴을 위한 위원회 운영
- 다수 사상자 이송관리시스템 구축(소방본부)
  -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체계의 일환으로 다수사상자 이송관리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현황조사 및 사고데이터 수집을 통해 구축 기반을 다짐
  - 현재 사상자 이송 시스템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자원 구축현황 조사(민간공공시설 포함)
- 구급차량 운행경계 구분 허물기(소방본부)
  -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이 다른 지역에 대한 공간정보기반 데이터 구축
  - 현재 운행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연구
  - 구급차량 운송시스템에 대한 관련기관 협조 및 협약 체결
- 119 신고 접수 상담안내 등 병원 전 응급지원체계 내실화(119 광역기동단)
-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전자 트리아지 시스템 활용으로 환자 생존율 향상 및 신속한 재난현장 안정화(119 광역기동단)
- 구급차와 헬기·선박이 연계하여 도서·원거리 지역 구급이송체계 구축(119 광역기동단)
- 소방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119지역대(11개소) 구급차 추가 배치확대(119 광역기동단)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하천안전과
- 사업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복지정책과, 소방본부

## 6. 예산계획

○ 사업비 : 8,675백만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사회복지분야 소규모시설 관리	• 현황 조사,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등	2018	비예산	-	-	-
다수사상자 이송관리	• 시스템 구축	2018	55	-	55	-
구급차량 관리	• 공간정보기반 데이터 구축	2025	600	-	600	-
응급이송체계 구축	• 응급지원체계 내실화 • 구급이송체계 구축 • 소방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구급차 배치	2018~2023	8,020	4,010	4,010	-

## 7. 기대효과

○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 및 제도 개선 분야 발굴을 통해 안전사각지대의 소각



#### (4) 모두가 동행(同幸)하는 안전운전 1·2·3

- ❖ 2. 안전생활터 (1) 안전·안심위험요인 저감 p82 연계

##### 1. 배경 및 필요성

- 충남은 교통안전등급이 4등급으로 전남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 시도 중 하위 등급에 속해 있으며 이를 위한 자구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표4-1. 충남도 최근 6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현황

(단위 : 명)						
합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0월말
2,246	418	390	395	385	363	295

##### 2. 사업개요

- 3不 운전(음주운전·졸음운전·휴대폰운전) 생활화를 위한 홍보 프로그램 시행
- 도내 로드 킬 『제로 화』 목표 수립
- 도로 사고위험요인 제거 프로그램 추진
- 생활권 안전보행권 확보를 위한 농어촌도로의 길 어깨(노면) 확보 프로그램 추진

##### 3. 추진계획

- 도내 전체 도로 및 로드 킬 현황 파악
- 로드 킬 당한 사체 신고센터 운영 및 바로 치우기

##### 4. 사업내용

- 3不 운전(음주운전·졸음운전·휴대폰운전) 캠페인(도로교통과 · 경찰청)
  - 3不 관련 콘텐츠 제작
  - 3不 관련 콘텐츠 홍보 및 효과적인 시설물 개선 방안 확보
- 로드 킬 사고 『제로 화』 목표 수립 (도로교통과)
  - 도내 로드 킬 신고 내역 데이터화 및 로드 킬 다발 지도 제작
  - 로드 킬 저감 목표 연차별 계획 수립(도로별 주요 출몰지역부터 우선 순위)
  - 로드 킬 신고체계 개선방안 및 원스톱 신고센터 개설, 사체 바로 치우기

- 도로 사고 위험요인 제거 (도로교통과)
  - 도로파임, 노면차이 신고시스템 마련 및 신속한 복구 추진
  - 비규격 과속방지턱 전수 조사 및 과속방지턱 시공 시 사후 확인 절차 마련
  - 결빙지역 열선시공(공항 활주로 참조) 시범적 확대 : 주요 교량우선 실시
- 안전보행권 확보를 위한 농어촌도로의 길 어깨(노건) 확보 프로그램(도로교통과)
  - 농어촌 도로 노건 확보
  - 전동휠체어 등 이동보조수단에 대한 데이터 수립
  - 어르신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실버 존 지정 확대 및 보행동선 조사 연구
  - 무단횡단 다발지역 차단 울타리 추가 설치
- 도로 위 지상기기 점검 및 노후 지상기기 정비를 통한 미관 개선(도로교통과)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도로교통과
- 사업부서 : 종합건설사업소
- 협조기관 : 충남지방경찰청

6. 예산계획

- 사업비 : 5,07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3不 운전 생활화	• 콘텐츠 제작 및 홍보	2018	70	-	70	-
로드 킬 사고 제로화	•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신고 센터 개설	2018~2025	비예산	-	-	-
	• 차단울타리 설치		4,000	2,000	2,000	-
안전보행권 확보	• 길 어깨 확보 및 지상기기 점검	2020	1,000	-	500	500

7. 기대효과

-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고, 보행자가 스스로 주의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대책의 수립을 통해 쾌적한 안전운전 문화 정착
- 로드 킬 없는 안전하고 + 깨끗하고 + 청결한 지역 이미지 제고

---

## (5) 위험에 취해 있는 「안전규제의 필요적 강화」

❖ 4. 안전시스템 (2) 실질적인 현장 대응능력 향상 p97 연계

### 1. 배경 및 필요성

- 우리 사회는 겉으로는 안전을 주창하지만, 사회 저변에는 아직도 위험을 강권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위험에 취해 안전 불감증 현상을 보이고 있음
-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될 수 있는 데, 경제적 규제는 규제 완화, 규제 철폐 등에 대한 주장도 많이 존재했지만, 사회적 규제, 특히 각종 재난 시 마다 안전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여론임
- 안전에 대한 필요적 규제를 강화하여 안전한국, 안전충남을 만드는 초석을 다져나갈 필요가 있음
- 공연장 안전 법규 강화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의 부담 완화와 안전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한 안전사고 zero화

### 2. 사업개요

- 도 공사·건설감리규정 강화
-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근절대책 추진
-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찰제도 개선
- 안전규제 적용 제외사례 조사
- 선박·여가소방관련 규제 점검
- 공연장 및 야외 공연의 안전규제 강화

### 3. 추진계획

- 건설공사 및 감리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
- 선박·여가소방관련 규제 점검
- 공연장 및 야외 공연의 안전규제 강화

### 4. 사업내용

- 도 공사·건설감리규정 강화 (건설정책과)
  - 한 단계 더 강화된 조치로, 건설감리 규정 미준수시 퇴출방안 도입
  - 미국의 경우 공사장 안전관리에 경찰력이 동원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사고이후에 동원이 되어 개선이 필요함

-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근절대책 추진 (건설정책과)
  - 안전과 같은 중요부분은 원도급자가 끝까지 책임
  - 안전부분의 대금은 도급금액 그대로 인정
-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찰제도 개선(세무회계과)
  - 하도급 수급사업자가 안전사고 발생의 책임자일 경우 입찰참가제한 근거규정 마련
- 안전규제 적용 제외사례 조사 (안전정책과)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안전규제 적용이 제외된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
- 선박·여가소방관련 규제 점검
  - 선박 : 유도선, 수상레저 (해양정책과)
  - 여가 : 공연장, 놀이시설 (문화정책과, 관광마케팅과), 경량항공기(도로교통과)
  - 소방 : 인력, 시설 및 장비 (소방본부)
- 여가시설 안전사고의 정의 및 보고 절차에 대한 기준(관광마케팅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시 지역제한 규정(소방본부), 경량항공기 보험가입여부 확인규정 확립(도로교통과)
- 공연장 및 야외 공연의 안전규제 강화(문화정책과)
  - 공연장 등록기준 확대 : 객석수 50개 이상 → 모든 공연장
  - 재해대처계획 신고 : 공연장 등록시 → 매년 말일까지 차기년도 계획 작성 제출, 야외공연(3천명이상 → 1천명 이상(공연 7일전 제출))
  - 공연장 안전진단 및 검사
    - 정기안전검사 : 무대기기 규모에 따라 3년~5년 주기 → 3년 주기로 통일
    - ※ 무대기기 규모 : 40개 이상 3년, 20~39개 5년, 20개 미만은 검사생략
    - 정밀안전검사 : 정기안전검사 결과 필요시 → 모든 공연장 9년 주기
    - ※ 정기안전검사 결과 필요시에도 정밀안전검사 실시
  - 운영비에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화 : 공연장(500석 이상) 운영비의 1%, 야외공연(1천명이상) 공연비의1.15~1.21%
  - 안전관리조직 구성 의무화 : 5백석 이상 공연장 및 1천명 이상 야외공연시 : 전담인력 2~3명 구성
  - 행정처분 규정 신설 : 재해대처계획 미이행 : 6개월 이하 영업정지,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부당사용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공연장 및 야외공연장의 공연법 개정사항 준수여부 불시 점검(연 2회)
- 규제 강화에 따른 시군 및 현장의 문제점 등 파악, 개선사항 발굴 중앙부처 건의

---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건설정책과
- 사업부서 : 세무회계과, 안전정책과, 해양정책과, 문화정책과, 관광마케팅과, 도로교통과, 소방본부
- 협조기관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충남지방경찰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6. 기대효과

- 필요적 안전규제의 합리적인 강화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
- 도민의 생활안정과 산업현장의 안전과 경쟁력, 안전한 여가활동을 동시에 도모

## (6) 지진 등 대규모 재난 시 「신속한 행정력 복원 대책」 수립

### ❖ 4. 안전시스템 (3) 행정지원 시스템 강화 p99 연계

#### 1. 배경 및 필요성

- 재난 발생시, 재난 유형별 피해저감 및 효율적 상황통제, 신속한 복구 등을 목표로 재난상황을 빠르게 극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대형 복합재난 발생 시 가장 우선시 되는 조치는 첫째, 안전한 주민대피대책이며, 둘째 후속조치를 위한 신속한 행정력 복원임
- 재난발생 시 업무중단에 따른 행정력 복원이 지연될 경우, 재난피해는 확산되고 복합화가 불가피하므로 도정의 핵심 행정력의 신속한 복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2. 사업개요

- 도의 핵심기능을 파악, 업무중단에 대비한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 도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에 대한 형태별 대응요령 수립
- 도와 유관기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위기발생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대책 수립 및 공보체계 마련
- 위기발생 데이터 구축을 통한 미래예측 및 제도 개선

#### 3. 추진계획

- 도의 행정력 복원대책 수립 추진(안전정책과)

#### 4. 사업내용

- 도정의 핵심기능 분석(안전정책과)
  - 업무중단 시, 주민 영향과 중요도에 따라 선정
-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및 통신수단 확보(자치행정과)
  - 시설규모, 수용인원, 사용가능한 서비스, 통신, PC 등 필수기능 확인
- 재난발생 시 지휘·통제를 위한 명령·지시 및 의사소통 방안 마련(재난대응과)
- 비상대응인력 사전 지정, 주요문서·기록물 등 정보시스템 보호\*(정보화정책과)
  - \*기록물 보관 장소, 유사시 기록물 유지 담당자 지정 등

---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사업부서 : 자치행정과, 재난대응과, 정보화정책과

## 6. 기대효과

-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 시에도 2차적인 피해 및 사회혼란을 조기 극복 가능
- 연속성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도정에 대한 대민신뢰도 향상 기여

## (7) 「재난 지휘관 역량강화」 확대 시행

❖ 4. 안전시스템 (3) 행정지원 시스템 강화 p99 연계

### 1. 배경 및 필요성

- 재난현장에서 통제관의 역량을 효율적인 대응의 성패를 가늠하는 요소임.
- 재난현장에서 통제관의 지휘역량 확보여부는 재난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재난상황을 수습 복구하는 데 중요함
- 또한, 재난지휘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과정의 정규화가 필요함

### 2. 사업개요

- 현장지휘 운영규칙 제정을 통해 현장지휘 제도화
- 시군 부단체장 및 국장·과장대상으로 재난지휘관 역량강화 교육확대 시행
- 교육방법 첨단화
- 실제상황 상정 시나리오 작성

### 3. 추진계획

- 재난지휘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 4. 사업내용

- 재난현장지휘 운영규칙 제정(재난대응과)
  - 재난현장 지휘의 연속성 확보
  - 인계인수 시점의 명확화
  - 현장 구급과 대응 복구 간에 유기적 연결 등
- 재난지휘관 역량강화 교육 확대 시행(재난대응과, 도공무원교육원)
  - 그동안, 도청 실 과장 및 승진대상자 중심으로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앞으로, 시군의 부단체장 및 국장·과장 대상으로 확대
  - 시설규모, 수용인원, 사용가능한 서비스, 통신, PC 등 필수기능 확인
- 교육방법 첨단화(재난대응과, 도공무원교육원)
  - 가상훈련 시뮬레이션 도입
  - 실제상황 상정 시나리오 작성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사업부서 : 공무원교육원, 해당 재난 주무과, 시군 재난안전 부서
- 협조부서 : 시군 안전총괄과

## 6. 예산계획

- 사업비 : 200백만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현장지휘관제도 운영관리	• 규칙제정	2018	비예산	-	-	-
재난지휘관 역량강화	• 프로그램 개발	2018	100	-	100	-
교육훈련 실시	• 교육 및 가상훈련 시뮬레이션	2018	100	-	100	-

## 7. 기대효과

- 재난지휘관의 역량강화로 재난 시 정확한 상황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 배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
- 재난현장지휘 운영규칙 재정으로 구조구급과 대응복구 간의 연계시점 조건 등 책임소재 제도를 통해 사후관리에 철저

## (8)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기적의 숫자 5」 생활화

❖ 5. 안전거버넌스 (2) 다양한 형태의 안전네트워크 운영 p105 연계

### 1. 배경 및 필요성

- 안전문화 정착 및 확산의 일환으로 개인과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고 안전확보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중요함
- 각종사고초등대응, 신속 대피, 조기교육 등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며, 그러한 초기 대응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기적이라는 의미에서 프로그램을 제안함
- ※ 충청남도의 전반적인 안전도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안전(44.9%) > 보통(43.4%) > 불안(11.7%)의 수준 (도민 안전의식 수준조사 결과보고서, 충남연구원, 2016)

### 2. 사업개요

- 화재발생 시 초기 5분 내 진압(소방본부)
  - 5분 내 출동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취약지역 소방자위권 확립
- 심폐소생술 황금시간 5분을 위한 실제교육 - 훈련 - 경연대회를 연계 추진 및 정례화 (소방본부)
- 화생방 대피시간 5분 행동요령 홍보 및 훈련 정착 (안전정책과)
- 5가구 안전 나누미 시행 (안전정책과)
- 5세부터 시작하는 평생안전 교육 (여성가족정책관)

### 3. 추진계획

- 각 프로그램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교육 홍보

### 4. 사업내용

- 화재진압 초기 5분 사업 (소방본부)
  - 소방차 길 터주기 : 지역별 소방차 화재발생 가정을 통한 마을별 소방차 진입 위해요소 발굴 및 시민 홍보
  - 소방통로 불법 주정차 및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단속 강화
  - 취약지역 소방자위권 확립 :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대책이 요구되므로, 지역 특성별 화재대비 용품 등 보급 및 지역방재단, 소방대를 통한 훈련 실시
- 심폐소생술 황금시간 5분 (소방본부)
  - 소방서별 응급처치 교육장 설치·운영 및 교육실습 장비 확보 : 응급처치 교육장 CPR 교육실습장비 지속보강

-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심폐소생술 이수 의무대상자에게는 이에 대해 주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의무교육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함
- 택시면허 적성검사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화
- 심폐소생술 훈련
-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진행
- 교육 - 훈련 - 경연대회가 연결 될 수 있는 연중, 분기별 계획 수립
- 화생방 대피시간 5분(안전정책과)
  - 계단이용홍보 및 3분 대피 2분 머물기 반복 훈련
- 5가구 안전 나누미 “평시엔 생활지킴이, 재난땀 안전지킴이”(안전정책과)
  - 민간의 참여로 이루어진 마을 안전공동체로, 평소에는 취약계층의 돌보미로 재난 시에서는 민간리더로 활동이 가능한 봉사자 양성
- 5세부터 시작하는 평생안전 교육(여성가족정책관)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사업부서 : 소방본부, 여성가족정책관
- 협조기관 :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 6. 예산계획

- 사업비 : 2,495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화재진압 및 심폐소생술	• 교육 및 경연대회	2018~2025	2,450	2,450	-	-
화생방 대피	• 교육 및 홍보	2018	30	-	30	-
마을 안전공동체 운영	• 5가구 안전나누미 시범운영	2018	10	-	10	-
평생안전 교육	• 유아,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	2018	5	-	5	-

## 7. 기대효과

- 안전과 재난은 초기에, 아동 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확산
-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사회전반 안전도 향상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

## (9) 충청남도 「안전지킴이 북」 제작 활용

❖ 1. 안전문화 (2) 전면적 생활안전문화운동 전개 p79 연계

### 1. 배경 및 필요성

- 안전과 재난대응요령 등이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도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서 또는 안내서가 필요함
- 「안전지킴이 북」은 생활안전 - 자연재난 - 범죄예방 등에 대한 안전·안심 가이드북 역할을 수행하며, 모범적인 샘플을 e-북 및 유인물로 제작하여 시군 배포, 읍·면단위로 제작하여 활용할 것으로 권고하고자 함

### 2. 사업개요

- 방재지혜주머니·방법지침서·화생방사태 대응요령 등을 핸드북을 제작 보급
- 가이드북 제작 후 감수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정확도와 신뢰도 확보

### 3. 추진계획

- 안전가이드 북 수록(안) 구상
- 안전가이드 제작(안) 감수 추진
- 안전가이드 제작 및 배부
  - 노인(활자 확대), 장애인(→점자소식지), 외국인(→영문잡지) 등 수요자 맞춤형 제작

### 4. 사업내용

- 방재지혜주머니 제작 및 보급 :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평상시 행동요령, 귀가 곤란자의 마음가짐과 대책, 방재용품의 알선,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설치지도, 재해용 메시지 다이얼, 비상시 반출품 리스트 등
- 방법지침서 제작 및 보급 : 범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한 대책,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보호, 성범죄로부터 자기보호, 가정폭력 대처,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대응, 당신의 생활을 지키는 상담창구
- 화생방사태 대응요령 보급 : 화생방 사태의 피해, 대피하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전파, 3분 대피 2분 머물기 훈련 안내, 대피소 위치도, 민방위경보 이해하기, 방독면 착용해 보기, 화생방 포탄투발·화학 사고시 대피요령
- 가이드북 제작 후 감수위원회 운영 : 가이드북 정확도와 신뢰도 확보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사업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재난대응과, 소방본부
- 협조기관 : 충남지방경찰청

## 6. 예산계획

- 사업비 : 90백만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충청남도 「안전지킴이 북」 제작 활용	•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2020	90	-	90	-

## 7. 기대효과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가이드 북 출간으로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
- 읍면동별로 안전지킴이 북 제작으로 주민 피부에 와 닿는 안내서 제공

## (10) 권역별 다목적 「드론통합운용 위기관리 대응 체계」 구축

❖ 2. 안전생활터 (1) 안전·안심위험요인 저감 p82 연계

### 1. 배경 및 필요성

- 드론은 산불감시, 화재진화 등의 소방분야, 교량 및 고층건물 안전점검, 범죄예방 재난현장 조사 등 다양한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 안전 분야에서의 드론의 사용은 앞으로도 효용성이 높아 질 것이라 기대 됨

### 2. 사업개요

- 「드론항공센터」 설치운영 및 대형 복합재난 발생 시 협조체계 구축

### 3. 추진계획

- 드론항공센터 설립 및 대형 복합재난 발생 시 협조체계 구축
-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 마련

### 4. 사업내용

- 3개 시군을 1개 권역으로 묶어 “5개 드론항공센터” 설립(토지관리과)
  - 센터별 3개 팀(소방팀·방재팀·영농팀) 육성(소방본부·재난대응과·농업기술원)
- 드론항공대회 정기 개최(토지관리과)
  - 항공대회 개최와 더불어 안전에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 발굴이 가능한 프로그램 편성
-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토지관리과)
  - 신기술 접목, 다목적 장비개발 전후방 연관 산업육성
  - 향후 무인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정책 개발
- 권역별 또는 시군별 대형 복합재난발생 시 상호 지원체계 구축(토지관리과)
- 드론관련 규제 및 조례 도입(토지관리과)
  - 드론에 의해 유발되는 사고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제도화 방안 연구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토지관리과
- 협조부서 : 시군 토지관련 부서

## 6. 예산계획

○ 사업비 : 1,800백만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 원)

구분	세부내용	기간	소요예산			
			소계	국비	도비	시·군비
드론항공 센터 설치	• 5개 센터	2020	1,500	-	550	950
대형복합 발생 시 협조체계 구축		2019	비예산	-	-	-
드론항공대회 개최	• 매년 개최	2018~2022	300	-	300	-
드론산업 육성계획	• 조례 제정 등		비예산	-	-	-

## 7. 기대효과

○ 드론을 이용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재난예방 및 차세대 먹거리인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

## (11) 한눈에 알 수 있는 「생명의 탈출 안내지도」 제작·배포

❖ 1. 안전문화 (3) 정책과 제도의 안전 요소 강화 p80 연계

### 1. 배경 및 필요성

- 재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탈출안내지도를 제작하여, 평상시 재난대책이나 안전한 피난경로를 검토하는 등 도민의 자주적 대응에 도움을 주어 인적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사업개요

- 각종 재난 시 침수 등 피해범위·대피로·대피소·의료기관 등을 표기한 종합 방재지도 제작
- 언어의 문제로 재난에 있어 취약한 외국인을 위한 영어·일어·중국어 방재지도 제작

### 3. 추진계획

- 종합 방재지도 제작에 기초 자료 현황 조사
- 종합 방재지도 제작 배포

### 4. 사업내용

- 재난 발생 이력 조사 및 피해범위 조사 :
  - 반복적으로 재난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도 제작 및 보급
- 재난 발생 시 주요 대피경로 지정
  - 대피경로 지정을 통해 빠른 대피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며, 상습 침수도로 및 결빙 도로에 대해 사전에 도민들에게 정보 제공
- 대피소에 따른 의료기관 지정 및 연계
  - 대피소와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지정하여 빠른 응급처치 의료지원 가능
- 영어·일어·중국어 방재지도 제작
- 충남도내 외국인 거주 지역 범주화를 통한 외국어 방재지도 제작 지원
  - 대표 외국어에 대해 제작하나, 산업 종사자 및 대학가 주변 외국인 통계를 통해 특이 언어에 대해서도 점차 보급할 수 있게 함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6. 예산계획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생명의 탈출 안내지도	• 기초 현황 조사 및 지도 배부	2018~19	300	-	300	-

## 7. 기대효과

- 도민에게 실제적인 행동요령 및 실천규칙의 가시적으로 배포하여, 위기 발생 시 혼란을 줄이고, 위기에 당면상황 뿐 만 아니라 사후 개인적인 복구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음

## (12) 단계별 지진재난 대응책 마련

❖ 2. 안전생활터 (1) 안전·안심위협요인 저감 p82 연계

### 1.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도 최근에 지진 발생과 진도로 인한 피해(울산, 경주)가 발생하였고, 충남도에서도 지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

※ 우리나라 지진발생 건수 (2015년 44건, 2016년 252건)

최근 5년간 ('12년~'16년) 3.0이상 규모의 지진(7건, 연평균 1.4건)

○ 충남은 북부 서해안권 중심으로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서산, 금산 등 화학산업 단지, 국내 최대 폐광산 위치 지역으로 지진발생이후 피해가 발생할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음

### 2. 사업개요

- 기존 공공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한 시설물 내진보강 향상
- 지진 대피훈련 대상 확대 및 홍보 강화
- 지진재난 대응 매뉴얼 미비점 보완, 대피시설(511개소) 개선 및 표지판 설치

### 3. 추진계획

- 2단계(2016~2020년) 추진, 내진 보강율 향상(44% → 56%)
- 단계별 道 지진대응 대책 수립 (2017. 8 ~ 2018. 7.) : 지질 환경 분석 등

### 4. 사업내용

- 기존 공공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한 시설물 내진보강 향상
- 지진 대피훈련 대상 확대 및 홍보 강화
  - 지진 대피훈련 대상 확대(학생→全 도민)
  - 행동요령(리플릿) 배부 등
- 지진재난 대응 매뉴얼 미비점 보완
- 대피시설(511개소) 개선 및 표지판 설치
  - 대피시설 현황 파악 및 정비
  - 대피소까지 표지판 설치, 긴급하게 이동시 주민들의 이동경로를 확보함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재난대응과
- 협조기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6. 예산계획

- 사업비: 13,9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공공시설 내진성능 확보	• 보강율 44% → 50%	2018~2020	13,500	-	6,750	6,750
대피시설 개선	• 기존 56개소 → 511개소	2020	300	-	150	150
지진대비 정책수립	• 내진보강 우선순위, 지진 위험도 조사 등	2018	100	-	100	-

## 7. 기대효과

- 지질조사, 내진 보강 등 지진대비·예방 기능 강화와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 등 지진대책 마련으로 지진피해 발생 최소화

## (13) 핵 및 생화학 사태의 선제적 대응

❖ 4. 안전시스템 (2) 실질적인 현장 대응능력 향상 p97 연계

### 1. 배경 및 필요성

- 한반도는 핵(核)무기와 생화학(生化學) 무기를 사용할 전쟁 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
- 우리는 북한의 핵(核)과 생화학(生化學) 무기의 위협에 노출된 상황임에도, 국민들은 방독면 하나도 없거나 사용할 줄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

### 2. 사업개요

- 예·경보 시스템 개선 및 경보전파 체계 보완
-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한 교육·훈련 추진
- 민방위대원(15만 명) 방독면 단계별 100% 확보
- 모든 도민 방독면 갖기 운동 전개

### 3. 추진계획

-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핵 및 생화학 무기 공격 시)
- 1인 1방독면 구입계획 마련

### 4. 사업내용

- 예·경보 시스템 개선 및 경보전파 체계 보완
  - 민방위+재난경보+마을방송+CBS재난문자+가두 홍보차량 등 경보 사각지대 최소화
  - 폭격 등 피해로 경보발령 불가시 대체경보 발령대책 마련
-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한 교육·훈련 추진
  - 핵 및 화생방 방호교육(민방위대원), 핵 상황 가정 훈련(민·방·공) 등
  - 대피 시 계단이용, 3분 대피+2분 머물기 훈련 정착
- 2022년까지 민방위대원(15만 명) 방독면 100% 확보
- 모든 도민 방독면 갖기 운동 전개
  - 3인 이상 온 가족 방독면 구입 시 일정부분 지원방안 검토

## 5. 추진체계

- 추진부서 : 안전정책과
- 협조기관 : 육군 제32사단

## 6. 예산계획

- 사업비: 5,461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시스템 개선	• 예경보 체계 보완	2020	500	-	250	250
교육훈련	• 핵무기 등 공격 시 대응 요령 안내	2018	80	-	80	-
방독면 보급	•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확보	2018~2022	4,881	265	2,207	2,409

## 7. 기대효과

- 핵 및 생화학무기 공격 시 행동요령 안내 등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기여
- 방독면 쓰는 방법 등 교육 훈련으로 직접 체험 하고 느끼면서 안보 의식 고취

## (14) 재난 및 안보위기 통합관리

❖ 4. 안전시스템 (2) 실질적인 현장 대응능력 향상 p97 연계

### 1. 배경 및 필요성

- 위기·재난·재해 등 위기관리 용어 정의 및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제시됨 용어정의를 통한 체계적이고 위계가 잡힌 전략수립 및 정책수립이 가능함
- 현재 재난안전실을 위기관리실 또는 위기관리센터로 명칭 변경 제안

### 2. 사업개요

- 위기관리 통합관리요령 마련
- 시군 간 위기관리 공조 협약을 통한 대형 복합재난 대비

### 3. 추진계획

- 위기관리와 재해재난 관리체계 전체적으로 검토 ※ 태스크포스(TF)팀 구성
-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 통합 관리(안) 수립

### 4. 사업내용

- 위기관리 통합관리요령 마련 건의(안전정책과)
  - 재난대응 및 비상대비자원(인적+물적)의 통합관리 : 현재 모포, 천막 등 몇 가지 물품만 통합관리 중
  - 재난상황실 및 전시종합상황실 설치기준 마련
  - 도 및 시군의 설치기준이 없어 상황실이 보안 및 방어장비가 제각각
  - 대다수 시군은 재난상황실 및 전시상황실 설치하지 않고, 대회의실 등을 임시로 상황실로 사용하는 실정. 상황실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주요시설이 적의 공격에 노출되는 문제점 노정
  - 경보통제소·통신실 등 주요시설의 설치기준 마련 상황실과 마찬가지로 설치기준이 없어 적의 공격에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
- 시군간 위기관리 공조 협약(자치행정과, 재난대응과)
  - 태풍 핵공격 등 대형 복합재난 발생시 신속한 재난복구 및 행정력 복원을 위해서 접경지역인 인근 시군과의 공조는 필수적(재난대응과)
  - 위기관리 물적 자원의 공유를 위한 시도·시군간 협약(재난대응과)
  - 인접 시도·시군간 자원봉사단체 네트워크 및 협력 지원(자치행정과)

---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사업부서 : 재난대응과, 자치행정과
- 협조기관 : 육군 제32사단

## 6. 기대효과

- 재난 대응과 비상대비를 위기관리로 통합함으로써, 제한된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 운영
- 위기관리 통합관리 요령을 통해 전시상황실 및 경보통제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자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 가능

## (15) 도민이 연상 가능한 「재난영화 콘테스트」 개최

❖ 1. 안전문화 (3) 정책과 제도의 안전 요소 강화 p80 연계

### 1. 배경 및 필요성

- 재난에 대해 스스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내게 함
- 재난영상의 제작 및 보급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자신의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사전 대비를 가능하게 함

### 2. 사업개요

- 충남도의 재난취약성을 바탕으로 2030년 재난상황을 가정·제작
- 재난관련 영화상영제 운영 및 토론회 개최

### 3. 추진계획

- 재난영화 콘테스트 계획 수립
- 재난영화 토론대회 운영 계획 수립

### 4. 사업내용

- 충남도의 재난취약성을 바탕으로 2030년 재난상황을 가정·제작
  - 서산의 화학사고, 천안의 도시 침수, 계룡대의 핵폭발 사태 등을 가정하여
  - 재난발생시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영화 내 실제 방재관련 행동 대응요령을 반영하는 방안 고려.
- 재난관련 영화상영제 운영 및 토론회 개최
  - 기 제작 재난영화 상영 후 도민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 제공
  - 도내 상영관과 협의하여 4D영화 상영 및 생생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함
- 교육과 연계한 재난영상 보급 :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지역별 재난유형에 따라 영상을 보급하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UCC공모제, 토론회 등 개최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안전정책과
- 협조기관 : KBS대전방송총국



## 6. 예산계획

○ 사업비 : 210백만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재난영화 제작	• UCC 공모(학생) • 영화제작 콘테스트(일반)	2019~	100	-	100	-
재난영상 보급	• DVD 제작 배부	2019~	80	-	80	-
재난영화 토론 대회	• 영화 상영 및 토론회	2019~	30	-	30	-

## 7. 기대효과

- 도민들이 재난에 대한 지역에 대한 위험요소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및 다양한 문화적 서비스 제공
-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 내 안전이슈에 대하여 연중 붐업에 긍정적인 기여를 함

(16) 지방하천 수문(통문) 자동화 시스템 구축

❖ 2. 안전생활터 (1) 안전·안심위협요인 저감 p82 연계

1. 배경 및 필요성

- 농촌인력 고령화(수동조작 지난\*), 시군 재난상황실 수문 적기 작동여부 확인 시스템 부재로 수해피해 발생우려, 수문자동화 등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필요

\* 수동(전동)식 : 관리원이 현장상황에 따라 작동, 자동식 : 스스로 수위 판독 작동

2. 사업개요

- 수문(통문) 전동화 현황조사, 우선순위 결정 순차적 구축 추진

3. 추진계획

- 지방하천 수문 자동화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1개 시군 시범실시 (18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활용)

4. 사업내용

- 수문(통문) 전동화 현황조사 : 현재 730개소(전동식 370, 수동식 360)  
- 주거인접, 특용작물 재배지, 농경지 등 구분을 통한 조사 실시
- 수문(통문) 자동화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하천안전과
- 협조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금강홍수통제소

6. 예산계획

- 사 업 비 : 16,000백만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동화 연차별 추진	• 지방하천 36개소	2018~2028	16,000	-	8,000	8,000

7. 기대효과

- 수문 자동화, 중앙 원격조정 시스템구축으로 태풍·홍수 등에 능동적 대처로 재난피해 사전 차단 가능

---

## (17) 중독 없는 안전충남 만들기

❖ 1. 안전문화 (3) 정책과 제도의 안전 요소 강화 p80 연계

### 1. 배경 및 필요성

- 충남만의 특별관리 중독 분야의 설정으로 도민의 중독 예방 및 관리 추진
- 중독 영역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안전충남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형성 및 협력 활동 전개

### 2. 사업개요

- 도내 개별 중독 진단 및 관련 기관 협력시스템 구축
- 도내 광역중독 센터 설치 : 중독사례관리 및 업무 시스템 진단, 개선
- 중독센터 기반 거점별 운영, 도내 중독관리시스템 확대

### 3. 추진계획

- 충남 내 발생하는 다양한 중독 사례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 충남 내 중독센터와 협력하여 중독예방-발생치료-사후 관리시스템 체계 구축
- 광역 중독센터의 설치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중독에 대한 예방적 측면의 활동 실시

### 4. 사업내용

-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중독, 도박중독 관리사업 등 (건강증진식품과)
- 부정·부패중독 관리 사업(감사위원회)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건강증진식품과
- 사업부서 : 경제정책과, 감사위원회, 시군 보건소

## 6. 예산계획

- 소요사업비 : 3,9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중독 예방 관리	• 관리시스템 구축	2030	비예산	-	-	-
중독 관련 예방 교육	• 프로그램 및 교육실시	2018-2030	3,900	1,950	585	1,365

## 7. 기대효과

- 도민들을 중심으로 중독의 위험성과 안전한 삶의 중요성을 재인식 가능
- 부정부패 중독 등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중독의 유형을 개발하여 새로운 안전모델 제시 가능
- ‘중독현황 및 예방-치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재발의 억제로 안전한 충남, 청정 이미지를 개선
- 도내 중독센터 기점으로 활동을 체계화하여 도민들의 안전생활을 도모

## (18) 항구적인 가뭄극복대책

❖ 2. 안전생활터 (1) 안전·안심위협요인 저감 p82 연계

### 1. 배경 및 필요성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 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특히, 충남 서북부지역은 기상 가뭄에 취약
- 보령광역상수도 공급지역 생활용수 부족(5월, 6월)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마철 직전으로 산간지역 및 서북부 지역 중심 농업용수 부족으로 논물 마름 현상 발생.
  - 논물마름, 간척지 염해발생, 밭작물 시듦 현상 발생
  - 간척지 담수호 염분도 상승(3,000~4,500ppm)
- 보령, 홍성, 서산 일부 산업단지 용수부족 전망 및 지하수 수위저하로 용수부족 발생하여 특히 당진 대호호 저수율 저하로 대산 공업용수 공급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지하수 다량 이용 산업단지 공법용수 부족을 유발함

### 2.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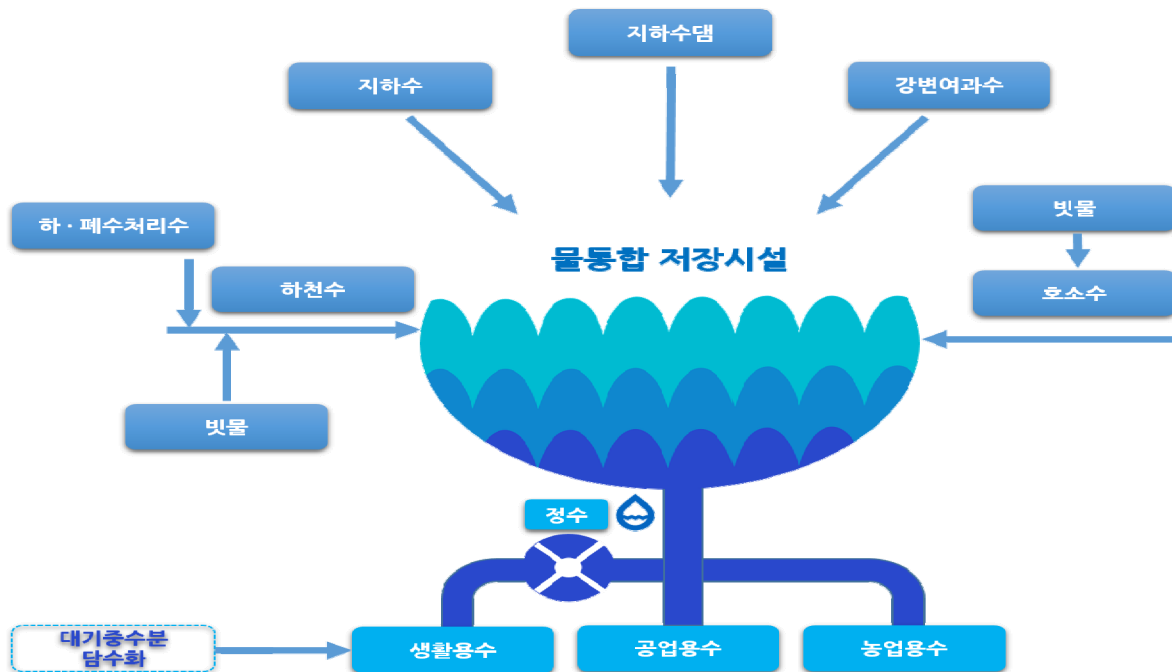
- 수원다변화 체계구축 추진체계 수립
  - 하천수, 호소수, 지하수, 지하수댐, 강변여과수, 하수처리수, 농업배수 등
- 수원다변화 및 근거리용수 공급시설 설치
- 아산호~삼교호~대호호 수계연결

### 3. 추진계획

- 사업대상 : 보령광역상수도 보급지역, 도 서북부 지역(서산, 보령, 홍성, 태안)
- 사업기간 : 2018년 ~ 2040년

#### 4. 사업내용

- 다변화 물 통합저장시설 설치 (물관리정책과)



[그림 5-2] 물 통합 저장시설

-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복원 추진(단기) (물관리정책과)
- 서해 연안 중규모 지하수댐 및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물관리정책과)
- 농업용수 개발사업 (농촌마을지원과)
- 해안 및 도시지역 대기 중 물 확보시설 설치(장기) (물관리정책과)
-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사업 (물관리정책과)

#### 5.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물관리정책과
- 사업부서 : 농촌마을지원과, 재난대응과
- 협조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지사

## 6. 예산계획

○ 사업비 : 541,400백만원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세 부 내 용	기 간	소 요 예 산			
			소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충남지역 가뭄조사 및 대책수립 용역	• 1식	2018	600	402	198	-
상수도 개발 사업	• 상수원 개발 및 지방상수도 보수사업(부여군외 2개 시·군)	2018~2021	60,100	42,000	9,100	9,000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 서산대산지역(하루 10만톤)	2018~2020	222,000	222,000	-	-
농업용수 개발사업	• 관정, 양수장 설치 및 양수저류(천안시외 8개시·군)	2018~2025	179,000	179,000	-	-
해안 및 도시지역 대기중 물 확보시설	• 시범지역 1개소 선정	2027~2030	1,000	-	1,000	-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사업 농업용수 공급 (총 2만 5천ha)	• 아산호 백석포양수장 삽교호 운정양수장, 당진용수간선 보강 및 용수관로 신설	2018~2021	80,500	80,500	-	-

## 7. 기대효과

-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수자원 관리대책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 및 가뭄극복으로 저에너지 녹색성장 기여 및 도민의 안전한 삶 추구
- 수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배분으로 용수공급의 불균형 해소와 서북부 지역의안정적 용수공급으로 항구적 가뭄피해 예방



## 서 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VI

안전충남 2050  
계획의 집행과 관리



# 01

## 예산계획

### 1) 예산계획 총괄

○ 총 사업비는 3,779,150백만원 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05,156 백만 원(13.3%), 2019년 544,859백만 원(14.4%), 2020년 553,190백만 원(14.6%), 2021년 408,159백만 원(10.8%), 2022년 356,539백만 원(9.4%), 2023년 300,520백만 원(7.9%), 2024년 295,809백만 원(7.8%), 2025년 297,335백만 원(7.8%), 2030년 100,927백만 원(2.6%) 임

표 6-1. 연도별 총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안전문화	안전생활터	안전복지	안전시스템	안전거버넌스
합계	3,779,150	38,404	3,654,231	41,801	32,537	12,177
2018	505,156	5,753	485,028	7,409	6,610	356
2019	544,859	5,868	526,236	5,644	6,572	539
2020	553,190	5,541	534,308	6,844	5,238	1,259
2021	408,159	5,402	392,220	4,712	4,488	1,337
2022	356,539	2,814	348,031	2,578	1,882	1,234
2023	300,520	2,803	293,866	1,728	889	1,234
2024	295,809	2,882	289,226	1,728	739	1,234
2025	297,335	2,882	289,319	1,928	1,922	1,284
2026	101,959	892	97,643	1,708	1,016	700
2027	102,209	892	97,892	1,708	1,017	700
2028	101,824	892	97,792	1,708	732	700
2029	100,278	892	96,337	1,708	641	700
2030	100,927	891	96,337	2,208	591	900
2031 이후	10,390	0	10,000	190	200	0

- 재원별로는 국비가 2,150,441백만 원(56.9 %), 도비가 723,524백만 원(19.1%), 시군비가 905,185백만 원 (23.9%) 임

표 6-2. 재원별 총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안전문화	안전생활터	안전복지	안전시스템	안전거버넌스
합계	3,779,150	38,404	3,654,231	41,801	32,537	12,177
국비	2,150,441	7,214	2,118,706	12,877	5,944	5,700
도비	723,524	7,130	683,183	9,219	20,290	3,702
시군비	905,185	24,060	852,342	19,705	6,303	2,775

## 2) 부문별 사업비

- 사업부문을 크게 안전문화, 안전생활터, 안전복지, 안전시스템, 안전거버넌스로 구분하였음
- 부문별 사업비를 살펴보면, 안전문화 38,404백만 원(1.0%), 안전생활터 3,654,231백만 원(96.7%), 안전복지 41,801백만 원(1.1%), 안전시스템 32,537백만 원(0.9%), 안전거버넌스 12,177백만 원 (0.3%)임

표 6-3. 연차별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30	~2050
총사업비		3,779,150	1,603,204			2,165,557						10,390
			505,156	544,859	553,190	408,159	356,539	300,520	295,809	297,335	507,197	10,390
		100.0%	13.4%	14.4%	14.6%	10.8%	9.4%	8.0%	7.8%	7.9%	13.4%	0.3%
안 전 문 화	자율형 안전활동 기반 구축	21,226	2,011	2,280	2,149	2,379	2,377	2,376	2,515	2,515	2,624	0
		0.6%	0.1%	0.1%	0.1%	0.1%	0.1%	0.1%	0.1%	0.1%	0.1%	0.0%
	전면적 생활안전 문화운동 전개	12,690	3,292	2,928	3,086	2,714	130	120	60	60	300	0
		0.3%	0.1%	0.1%	0.1%	0.1%	0.0%	0.0%	0.0%	0.0%	0.0%	0.0%
	정책과 제도의 안전요소 강화	4,488	450	660	306	309	307	307	307	307	1,535	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소계		38,404	5,753	5,868	5,541	5,402	2,814	2,803	2,882	2,882	4,459	0
		1.0%	0.2%	0.2%	0.1%	0.1%	0.1%	0.1%	0.1%	0.1%	0.1%	0.0%
안 전 생 활 터	안전·안심 위협요인 저감	3,439,459	442,030	479,883	487,804	360,546	331,705	287,979	286,692	286,585	476,239	0
		91.0%	11.7%	12.7%	12.9%	9.5%	8.8%	7.6%	7.6%	7.6%	12.6%	0.0%
	재난에 강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162,082	27,418	30,773	30,774	31,094	15,746	5,307	1,954	2,154	6,862	10,000
		4.3%	0.7%	0.8%	0.8%	0.8%	0.4%	0.1%	0.1%	0.1%	0.2%	0.3%
	안전한 배움터 확립	52,690	15,580	15,580	15,730	580	580	580	580	580	2,540	0
		1.4%	0.4%	0.4%	0.4%	0.0%	0.0%	0.0%	0.0%	0.0%	0.1%	0.0%
소계		3,654,231	485,028	526,236	534,308	392,220	348,031	293,866	289,226	289,319	486,001	10,000
		96.7%	12.8%	13.9%	14.1%	10.4%	9.2%	7.8%	7.7%	7.7%	12.9%	0.3%
안 전 복 지	안전정보 접근권 확대	810	0	0	210	20	520	20	20	2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수요자 중심 안전 서비스 체계 구축	5,689	1,263	1,523	1,643	730	260	10	10	10	50	190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	35,302	6,146	4,121	4,991	3,962	1,798	1,698	1,698	1,898	8,990	0
		0.9%	0.2%	0.1%	0.1%	0.1%	0.0%	0.0%	0.0%	0.1%	0.2%	0.0%
소계		41,801	7,409	5,644	6,844	4,712	2,578	1,728	1,728	1,928	9,040	190
		1.1%	0.2%	0.1%	0.2%	0.1%	0.1%	0.0%	0.0%	0.1%	0.2%	0.0%
안 전 시 스 템	권한과 책임을 지닌 안전자치 구현	1,300	0	500	167	167	166	0	0	100	20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실질적인 현장대응 능력 향상	11,212	3,526	2,709	1,609	1,059	1,058	83	84	417	667	0
		0.3%	0.1%	0.1%	0.0%	0.0%	0.0%	0.0%	0.0%	0.0%	0.0%	0.0%
	행정지원시스템 강화	20,025	3,084	3,363	3,462	3,262	658	806	655	1,405	3,130	200
		0.5%	0.1%	0.1%	0.1%	0.1%	0.0%	0.0%	0.0%	0.0%	0.1%	0.0%
소계		32,537	6,610	6,572	5,238	4,488	1,882	889	739	1,922	5,433	200
		0.9%	0.2%	0.2%	0.1%	0.1%	0.0%	0.0%	0.0%	0.1%	0.1%	0.0%
안 전 거 버 넌 스	도민 주도형 안전활동 확대	370	0	0	170	0	0	0	0	0	30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다양한 형태의 안전네트워크 운영	9,207	356	309	459	959	956	956	956	1,006	3,250	0
		0.2%	0.0%	0.0%	0.0%	0.0%	0.0%	0.0%	0.0%	0.0%	0.1%	0.0%
	지역특성에 기반한 안전거버넌스 운영	2,600	0	230	630	378	278	278	278	278	250	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소계		12,177	356	539	1,259	1,337	1,234	1,234	1,234	1,284	3,700	0
		0.3%	0.0%	0.0%	0.0%	0.0%	0.0%	0.0%	0.0%	0.0%	0.1%	0.0%

표 6-4. 재원별 사업비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총사업비		3,779,150	2,150,441	723,524	905,185
		100.0%	56.9%	19.1%	24.0%
안전문화	자율형 안전활동 기반 구축	21,226	3,472	2,429	15,325
		0.6%	0.1%	0.1%	0.4%
	전면적 생활안전 문화운동 전개	12,690	1,792	3,528	7,370
		0.3%	0.0%	0.1%	0.2%
	정책과 제도의 안전요소 강화	4,488	1,950	1,173	1,365
		0.1%	0.1%	0.0%	0.0%
소계		38,404	7,214	7,130	24,060
		1.0%	0.2%	0.2%	0.6%
안전생활터	안전·안심 위협요인 저감	3,439,459	1,979,590	638,655	821,214
		91.0%	52.4%	16.9%	21.7%
	재난에 강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162,082	90,346	44,378	27,358
		4.3%	2.4%	1.2%	0.7%
	안전한 배움터 확립	52,690	48,770	150	3,770
		1.4%	1.3%	0.0%	0.1%
소계		3,654,231	2,118,706	683,183	852,342
		96.7%	56.1%	18.1%	22.6%
안전복지	안전정보 접근권 확대	810	0	810	0
		0.0%	0.0%	0.0%	0.0%
	수요자 중심 안전 서비스 체계 구축	5,689	0	3,094	2,595
		0.2%	0.0%	0.1%	0.1%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	35,302	12,877	5,315	17,110
		0.9%	0.3%	0.1%	0.5%
소계		41,801	12,877	9,219	19,705
		1.1%	0.3%	0.2%	0.5%
안전시스템	권한과 책임을 지닌 안전자치 구현	1,300	0	1,300	0
		0.0%	0.0%	0.0%	0.0%
	실질적인 현장대응 능력 향상	11,212	765	7,788	2,659
		0.3%	0.0%	0.2%	0.1%
	행정지원시스템 강화	20,025	5,179	11,202	3,644
		0.5%	0.1%	0.3%	0.1%
소계		32,537	5,944	20,290	6,303
		0.9%	0.2%	0.5%	0.2%
안전거버넌스	도민 주도형 안전활동 확대	370	0	370	0
		0.0%	0.0%	0.0%	0.0%
	다양한 형태의 안전네트워크 운영	9,207	5,700	1,882	1,625
		0.2%	0.2%	0.0%	0.0%
	지역특성에 기반한 안전거버넌스 운영	2,600	0	1,450	1,150
		0.1%	0.0%	0.0%	0.0%
소계		12,177	5,700	3,702	2,775
		0.3%	0.2%	0.1%	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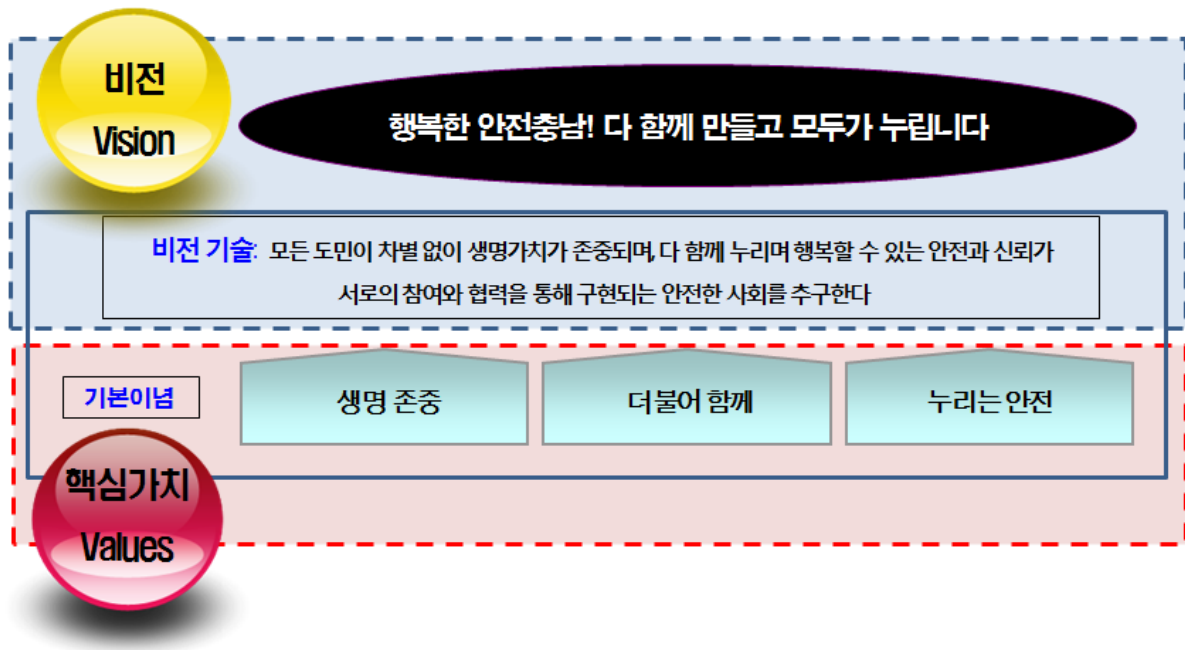
## 02

# 평가계획

### 1) 비전 달성을 위한 체계적 성과관리

#### (1) 비전의 기본적 목적과 요건에 부합된 내용의 충실화

- 일반적으로 비전은 이를 추구하는 기관의 장기적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됨. 이는 미래가치가 포함된 바람직한 미래상이라 할 수 있음
- 안전충남비전은 충남의 안전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의 필요성에 따라 공공부문 이해관계자, 도민, 전문가 인터뷰, 현장조사, 회의 등을 통하여 수립되었음
- 안전충남비전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 및 도민의 핵심인식과 관련된 핵심단어를 도출하고 근원적 가치와 장기적 목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음



[그림 6-1] 안전충남비전의 내용기술과 가치

- 단 충청남도의 근원적 존재의의에 해당하는 미션은 보다 높은 지향점이기 때문에 제외될 수 있으며, 보다 재난 및 안전관리 영역에 집중하여 비전과 가치가 설정되고, 이는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등의 성과관리체계로 구체화 될 수 있음
- 3가지로 제시된 기본이념은 비전이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하여 대표성을 지니며, 비전의 목적이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변하지 않는 이해관계자의 미래지향적 희망과 의지가 반영된 가치로 정의될 수 있음
- 안전충남비전의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의 기본적 목적과 요건에 부합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성을 갖추어 도민들에게 제시하여야 비전으로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출 수 있음

표 6-5. 안전충남비전의 목적과 요건 검토

비전의 설정 목적	비전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비전이 지향하는 방향성(충남도청을 포함한 공공부문과 민간의 이해관계자 등) 제시</li> <li>• 도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개선과 참여 의지의 구심점</li> <li>•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관한 이해 도모</li> <li>•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전 과정에서 동력의 근원</li> <li>• 재난 및 안전관리의 신속성과 정확성, 효율성 증대와 추진 기반</li> <li>• 재난 및 안전관리 이해관계의 조정과 통합의 기초</li> <li>• 안전충남비전의 구체적 실천내용은 이해관계자의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적 목적 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적 가치가 포함된 간결성</li> <li>•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적, 외적 요소의 균형</li> <li>•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호소력</li> <li>• 전략과의 일관성과 미래가치의 달성 가능성 내포</li> <li>• 전략과 성과목표, 지표의 일관성 유지</li> <li>• 재난 및 안전관리의 미래상에 관한 생동감 있는 표현</li> <li>• 모든 이해관계자의 열정과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감동성</li> <li>• 달성가능성에 관한 신뢰감</li> <li>• 실행과정에서의 안정적 추진 가능성</li> </ul>



## (2) 전략기획 기반 성과관리체계 마련

- 성과관리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에서는 “정부업무의 추진에 있어 기관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성과관리란 각 기관이 그 임무달성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후, 조직의 역량과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이나 자원배분, 개인의 성과보상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임(국무조정실, 2015)
- 즉, 성과관리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제성 또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운용적 책임성 (operational accountability)을 제고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의미함(Kelly & Rivenbark, 2003)

표 6-6. 안전충남 성과관리의 기본적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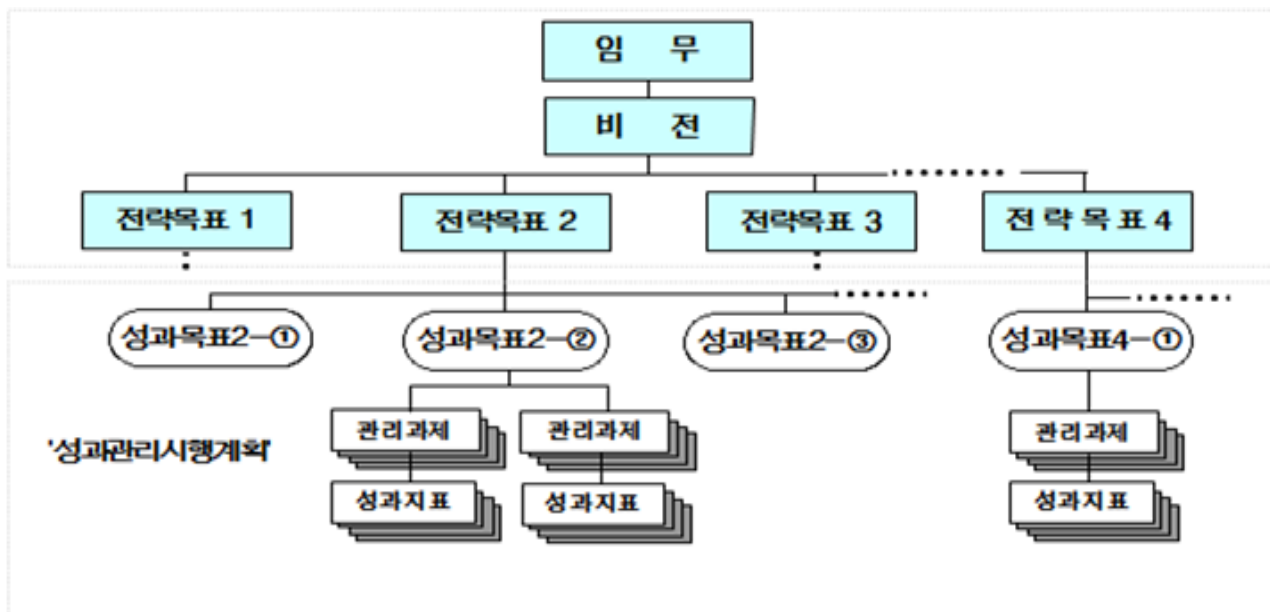
고려하여야 할 안전충남비전 성과관리체계 구축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안전충남비전의 큰 계획 속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활동이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환류</li> <li>② 제한된 자원(인적, 물적, 재정적 등)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성과산출</li> <li>③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li> <li>④ 스스로의 성취감 확보 등을 통한 동기부여</li> <li>⑤ 안전충남비전의 방향성 제고와 구체화를 위한 기본적 매뉴얼 기능 수행</li> <li>⑥ 성과관리체계 구축과정에서의 의사소통 기회확대를 통하여 업무의 구체적 인식, 이해도 제고</li> <li>⑦ 안전충남비전의 올바른 수행에 대한 점검 역할을 수행하여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자극제의 역할(긍정적인 부분의 독려와 부족한 부분의 컨설팅 기능 확대)</li> <li>⑧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고 명확한 성과결과 정보는 안전충남비전의 성과확산을 위한 신뢰감 있는 홍보역할 수행</li> <li>⑨ 충남의 재난과 안전에 관한 학습의 기회 제공</li> <li>⑩ 최종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개선</li> </ul>

- 비전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정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략기획 체계를 갖추어야 함. 전략 기획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안전충남비전은 충남도청의 강력한 의지와 뒷받침을 받으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전략기획 기반의 성과관리체계에 보다 역량을 집중한다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 안전충남비전이 실효성 있는 전략기획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충족하여야 함

표 6-7. 안전충남 성과관리체계가 갖추어야 할 전략기획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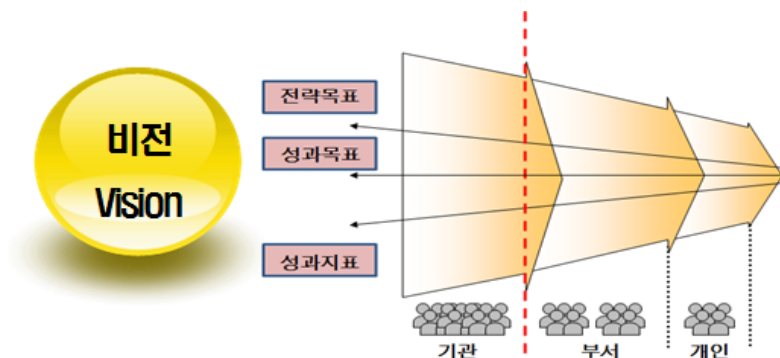
안전충남비전의 전략기획 체계 요건
① 환경적 검토를 통한 영향요인의 검토(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재난 및 안전관리와의 관련성 확인 ② 충남의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이해관계자의 역량, 인식 검토(내부 이해관계자, 외부 이해관계자) ③ 충남의 비전과 가치에 부합하는 기회와 이슈의 확인 ④ 종합적인 SWOT분석을 통한 전략적 방향 도출 ⑤ 도민 및 공공부문 이해관계 기관 및 담당자의 수직적, 수평적 의사소통 체계 ⑥ 투입자원의 종합적 검토 ⑦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기술 검토 ⑧ 전략의 집행과정에서의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 순환적 과정의 공식화 ⑨ 분권적 기획체계 확립과 성과결과의 업무활용의 공식화 ⑩ 전략의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 쟁점에 관한 제시, 우선순위의 명확한 부여체계 ⑪ 평가정보의 분석, 활용 및 지식 축적을 위한 정보시스템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업무와 활동의 종합적 검토 ⑬ 재난 및 안전관리의 성과표준체계 정립

- 전략기획을 구축하는 과정을 통하여 기관의 내부역량과 외부환경을 명확히 인식하고, 비전, 가치, 전략 등의 합의와 신뢰를 구축하며, 성과관리 전반적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 적극적 참여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전략기획은 기관의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고 내부역량과 환경대응능력을 종합하여 분석·적용한, 장기적 비전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과정의 연속체계라 할 수 있음



[그림 6-2] 우리나라 일반적 공공부문의 전략기획체계

- 전략기획은 미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기본적 구성을 가지고 있음. 전략목표 (strategic goal)는 비전에 부합하는 이념과 목표, 가치, 기능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는 중·장기적인 중점정책 방향을 의미함. 각 전략목표 하에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과목표 (performance goal)를 설정하여야 함. 성과목표는 전략목표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되며, 연도별 주요 업무의 분석 또는 사업의 검토를 통하여 도출함
-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는 전략목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계량적 혹은 비계량적으로 성과를 구체화하여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성과지표에 의해서 성과가 실제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성과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음
- 성과관리체계에서 비전과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는 전사적으로 연계되어 전개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함. 이러한 정렬체계는 공백 없는 성과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임
- 전사적 정렬은 비전의 하향적 구체화와 성과측정에서의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최종적 가치 창출인 비전달성을 상향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역량집중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시의적절한 전략적 조치를 가능하게 함



[그림 6-3] 성과관리체계의 캐스케이딩(Cascading)

○ 안전충남비전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그림 6-4] 안전충남비전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 (3)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성과관리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전략기획 기반 체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효율적 관리라 할 수 있음

표 6-7. 안전총남비전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역할

성과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체적 역할, 필요성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가치의 균형적 분배에 관한 파악(체계적 성과의 인과성의 시스템 적용)</li> <li>② 성과의 상시적 점검을 통한 현상과 결과의 원인파악과 시의적절한 조치(전략의 성과 문제발생시 원인을 추적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지도의 역할)</li> <li>③ 재난 및 안전관리의 근원적 성과요인의 파악과 전략적 우선순위 파악</li> <li>④ 업무담당자의 중복되고 반복되는 업무부담 완화</li> <li>⑤ 구체화된 성과요인들을 통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활동 유도</li> <li>⑥ 성과관리 정보시스템에서 각 관련 부서의 역할분배와 책임 명확화(재난 및 안전관리의 유기적 관리체계 구축 기반)</li> <li>⑦ 역량집중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li> <li>⑧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충된 목표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식화된 경로, 의사소통의 장 역할</li> <li>⑨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지원 지식산출을 통하여 전문가 역할 수행</li> <li>⑩ 전체적인 틀에서 성과관리 상황을 제시하고, 전반적인 업무개선 방향 제시</li> <li>⑪ 이해관계자의 동기유발을 위한 건전한 협력관계 구축(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결과는 보다 진취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li> <li>⑫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제시를 통한 혁신의 구체적인 변화기준 제시</li> <li>⑬ 도민에 관한 신뢰도 확보</li> <li>⑭ 평가의 전문성, 평가정보의 신뢰성, 평가과정의 정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방안</li> <li>⑮ 인사관리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객관적 승진 및 배치 기준으로 활용(근무평정의 경우에 강제적이고 부정적인 조치를 위한 도구가 아닌 긍정적으로 구성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li> <li>⑯ 체계적 성과관리 정보시스템은 현재 긍정적 변화를 위한 컨설팅의 도구로 활용</li> </ul>

- 정보시스템은 비전과 전략, 성과지표 등을 실제적으로 측정하여 성과달성에 대한 확인과 결과에 대한 원인파악, 분석과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 전략적 조치를 위한 가이드 역할 등을 수행함
- 지금까지 공공부문에서 성과관리가 정착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담당자의 업무부담, 구체화된 이행체계의 부족 등이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은 가장 필수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정의 기초라 할 수 있음. 즉, 성과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은 하나의 도구로써 목표 및 지표 관리를 위한 정교화 된 관리체계임

#### (4) 성과관리를 위한 변화의 전제조건

##### ▶ 건전한 성과문화의 정착

- 일반적으로 조직문화란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조직전체의 업무와 활동에 영향을 주는 고유의 가치관과 신념, 규범, 관습, 행동습관 등의 총체이며, 내·외부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임
- 지금까지 기존 조직에서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난 및 안전 관리에 성과관리체계가 도입된다고 해도 구성원의 긍정적인 인식과 의지가 뒷받침 되지 못하여 형식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즉, 겉으로는 성과관리의 절차와 방법을 도입하여 성과평가를 시행하지만 내용적으로 기존의 관행에 따라 정책 추진 진도 파악 정도의 단순화된 목표관리 형태로 형식화 될 것임. 따라서 성과관리체계를 마지못해 수용하여 구축하는 것 보다는 구성원의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조직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도구로 능동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변화과정을 거쳐야 함
- 대부분의 성과관리 기관들은 성과정보를 통해 인사평가, 통제, 예산 편성, 처벌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음. 이는 구성원들에게 성과관리를 긍정적인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완벽한 성과측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성과관리를 시행하기만 하면 무조건 효과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이는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합의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고유한 성과문화가 기반이 되어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

##### ▶ 지속적인 의사결정자의 정책적 의지와 리더십

- 공공부문에서 의사결정자의 확고한 지원과 관심 없이 성과관리체계는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없음. 또한 성과관리의 중요성과 효과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비교적 긴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자가 성과관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리고 통제가 아닌 발전을 위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구성원들에게 인식시켜야 함. 또한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지원, 물적지원, 교육기회 제공 등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현재 충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지가 뒷받침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지는 단체장의 임기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임. 도지사는 도민이 성과관리과정에 참여하고 공감대를 같이 만들어가며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 이에 요구되는 변혁적 리더십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역할을 하는 모든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역량을 향상시키고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또한 명확하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제시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적극적인 추진력을 갖춘 리더십임

## ▶ 조직 및 개인의 관행적 특성 파악과 이해

- 공공부문 성과관리에서 가장 큰 변화의 한계는 조직은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새로운 혁신수단에 의하여 중단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 변화는 조직의 내부체계의 변화, 업무에 대한 권한 및 통제력 상실, 새로운 업무의 추가적 부담 등을 유발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는 집단적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음
- 조직의 관행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해하는 것은 성과관리를 통한 변화와 혁신의 공감대 형성과 결과에 대한 순응, 결과의 효과적 반영, 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비전의 달성 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이를 위해 조직 내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비공식적 문화, 사기 및 동기부여에 기여하는 특수한 성향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 조직구성원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방어를 하게 되고, 이는 소극적 행동, 책임과 결정 회피, 책임전가, 정보의 왜곡 등 다양한 회피의 모습으로 표출됨
-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저항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실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 위한 소통의 확대가 필요할 것임. 특히 결정된 사항이 강요되고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성과관리로의 급진적인 변화는 이러한 상실감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됨

## ▶ 성과관리로의 변화과정 신뢰성 확보

- 성과관리는 많은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음. 명확한 성과표준, 매뉴얼의 실효성,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성과측정 및 활용기술의 정확성, 새로운 변화업무의 타당성, 성과결과 반영의 공정성 등 성과관리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신뢰성을 갖추어야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적절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변화과정에서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임
- 성과관리는 “실질적으로 측정하여야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가 가장 근원적인 질문임. 일반적으로 재정적, 수치적으로 측정하기 쉬운 성과에 매몰되며, 상위기관의 관심분야에 한정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에 바람직한 성과측정방법, 목표설정방법, 성과분석방법 등에 관한 적절한 성과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안전총남비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도민의 삶과 연계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신중한 변화과정이 필요할 것임

## 2) 전략과제의 핵심 성과지표 및 관리

### (1) 성과지표의 이해

#### ▶ 성과지표의 개념과 요건

-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란 조직의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 혹은 질적으로 나타난 것을 말함. 성과지표에 의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성과의 달성수준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과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지표는 성과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국무조정실, 2015a)
- 바람직한 성과지표의 요건으로서는 SMART(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d)라는 다섯 가지 개념이 가장 넓게 활용되고 있음. 기획재정부(2012)는 기존의 달성가능성과 관련성을 원인성(attributable)과 신뢰성(reliable)으로 변경·적용하여 활용하였으며, 국무조정실(2015b)의 매뉴얼에는 정책대표성, 적절성, 인과성, 구체성, 측정가능성, 기한성, 비교가능성 등이 포함함
- 바람직한 성과지표의 요건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은 양(量)보다 질(質)(quality over quantity), 명확성(public clarity), 자료획득 가능성(feasibility), 협력(collaboration) 등을 제시하고 있고, 호주는 성과정보와 행동, 균형과 명확성, 성과기준 등을 바람직한 지표의 성격으로 정의하고 있음(한국개발연구원, 2004).
- 공공부문의 경우 성과지표에 관한 결정이 신중하게 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성과지표의 균형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정량지표의 신뢰성과 정성지표의 객관성, 결과지표의 강조, 만족도와 체감도 조사의 한계 등 중요한 이슈들을 반영하여 비전과 전략방향에 왜곡되지 않도록 성과지표체계를 설정하여야 함
- 최근까지의 성과지표의 선정요건을 종합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6-8. 안전총남비전 성과지표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할 요건

요건	내용
지표기술 및 정의의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지표는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정의되어야 하고, 구체적(specific)으로 기술되어 성과결과를 쉽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함</li> <li>성과지표의 기술 및 정의가 명료성, 명확성(well-defined)이 있게 되면 자료수집 또한 명확하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li> </ul>
전략기획 기반 목표체계와의 연계성(성과목표와의 집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지표는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로 전략적 정렬(cascading)되는 연계적 관련성(relevance)을 갖추어야 함. 이는 기관의 비전달성을 위한 우선순위와 연계되어 있음</li> <li>이는 성과목표를 설정한 후에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지표를 통한 과제와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추상적인 목표를 구체화된 과제로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임. 정책대표성도 전략기획과의 연계성으로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임</li> <li>또한 성과목표와 지표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낭비적인 과제의 진행이나 예산의 낭비 등의 행위를 촉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아가 목표와 관련된 성과의 책임의 귀속성 등의 영향파악(attributable)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li> </ul>
노력과 성과의 인과적·균형적 달성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지표에 대한 목표값은 정해진 기간에 달성가능(achievable, attainable)한 것이어야 함. 이는 노력이 반영되어 나타내어 질 수 있는 인과성을 갖추어야 함</li> <li>달성가능성이 중요한 요건이지만, 이와 관련되어 지표의 통제가능성을 생각하여야 함. 결론적으로 실무적으로 피평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자료 또는 실적으로 평가되는 경우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통제가 가능한 지표만을 설정할 경우에는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가 어렵고 대표성이 없는 지표를 선정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사례는 환경과 관련된 오염도와 교통사고 수, 여타 공인된 지수를 활용하는 경우 등 피평가자가 통제하지 못하는 지표가 다수 포함될 수밖에 없음</li> <li>성과의 통제가능성과 관련해서 업무담당자는 통제 불가능한 부문의 완전한 달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는 노력에 대한 평가로써 의미있는 지표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중요한 점은 노력의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신뢰를 기반한 성과측정임. 통제불가능한 영역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의 방안으로 협력(collaboration)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임</li> <li>이에 성과는 조직이나 기관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지표를 무조건 선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성과의 인과적 관계가 성립되는 대표성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li> </ul>
신뢰적 자료기반의 측정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람직한 성과지표는 측정값의 타당성과 신뢰성(reliable)을 갖춘 수 있는 자료의 획득 가능성(feasibility)을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함. 자료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와 변동이 많아 객관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성과지표가 될 수 없음</li> <li>기본적으로 성과지표는 측정가능(measurable)한 것이어야 함. 추상적인 언어로 측정방법 등이 나열해 놓으면 유용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음. 측정가능성은 측정을 위한 자료가 존재하여야 함을 의미함. 그러나 반드시 정량지표로 정해지는 것은 아님. 정성적 측면도 다양한 정량화 방법으로 측정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li> </ul>
성과측정 과정에서의 시간적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지표는 전반적 관련 과제과정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성과확인인 가능하여야 함.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할 경우에는 실시간 성과확인을 통해서 미흡한 원인과 잘 진행된 결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함</li> <li>일반적인 적시성은 성과지표의 측정이 당해 연도에 적절한 성과정보로 측정되는 것을 의미함.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측정이 가능한 기간 내에 결과가 산출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는 요건임</li> </ul>
성과의 원인과 결과정보의 유용성·활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측정 후 결과 값에 대한 원인이 명확히 제시되어 환류단계에서 활용되어 질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이는 명확한 근거에 의한 평가와 성과결과정보 활용의 측면에서 중요한 요건이 됨</li> <li>또한 성과정보는 균형적인 자원활용의 측면에서 유용성을 갖추어야 하며, 과거 사업성과와 유사사업,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지표 적용기관과의 성과가 비교 가능한(comparable) 지표가 되어야 할 것임</li> </ul>

자료 : 국무조정실(2015a).

## ▶ 성과지표의 유형

- 성과지표는 기본적으로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됨. 정량지표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측정결과에 주관성이 배제될 수 있어서 채택되기가 쉬움. 반대로 정성지표의 경우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객관성에 문제될 수 있음. 공공부문의 경우 국민의 삶과 연관된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정성지표의 보완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성과측정의 내용에 따라서는 투입(inputs)지표, 과정(processes)지표, 산출(outputs)지표, 결과(outcomes)지표로 구분할 수 있음. 현재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논리모형(Logic Model)은 투입(input) → 활동(activity) → 산출(output) → 결과(outcome) → 영향(impact)이라는 선형적 논리 구조를 갖춘
- 현재 공공부문에서는 단순히 정성적 부분을 강조하고, 결과지표는 늘려가야 한다는 막연한 성과지표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다 실제적인 측정방법 검토를 통하여 실무적인 성과지표 유형이 제시되어야 함

표 6-9. 성과지표의 유형정리

	정량지표(계량지표)	정성지표(비계량지표)
정의	측정결과가 수치로 나타내어지는 지표	측정결과가 일반적 수치로 나타내어지지 않은 지표
특성	객관성 확보 가능 성과측정의 결과가 주관적 견해에 의하여 변동되지 않음	평가자의 주관성 개입 가능 대부분이 만족도 평가로 이루어짐(평가위원 평가, 만족도 평가와 체크리스트 평가 등은 고객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정성적 결과를 정량화 하는 것임)
대표적 예	증감률, 건수, 금액, 면적, 인원, 시간, 발생률, 달성률, 지수 등	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 평가위원 평가, 체크리스트 점수, 장기사업의 이행도에 관한 중간점검 확인 등
	개념	특성
투입(Input) 지표	예산, 인력, 시간 등 자원의 투입량을 나타내는 지표	예산집행과 자원투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나타낼 수 있음
과정(Process) 지표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	사업진도의 중간점검의 의미를 가짐 중장기 사업의 연차평가에 활용가능
산출(Output) 지표	사업완료 후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투입대비 산출의 효율성 평가 계량적 목표달성 평가 용이
결과(Outcome) 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업의 효과와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	국민체감 및 궁극적 목표의 효과성 평가 공공성의 최종평가에 활용

자료 : 국무조정실(2015a).

- 안전충남비전의 성과지표 설정 시 고려하여야 할 성과지표의 유형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음. 업무 및 성과의 성격에 따른 성과지표의 10가지 유형은, ① 수치화된 단일목표형, ② 계획대비 목표달성형, ③ 추세치 반영 목표증감형, ④ 과거실적 평균대비형, ⑤ 실질적 유효성과 달성형, ⑥ 내·외부 평가단 평가점수형, ⑦ 이해관계자 만족도형, ⑧ 복합적 성과요인 측정형(복합지표형), ⑨ 사회적 공인지수형, ⑩ 인과적 체크리스트 점수형임(국무조정실, 2015a)

표 6-10. 업무 및 성과의 성격에 따른 성과지표 유형

	적용가능 대상 업무 및 성과의 성격	측정단위
수치화된 단일목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감률의 측정이 어렵고, 의미가 없는 경우</li> <li>양적 단순 수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경우</li> <li>목표 달성값이 숫자적으로 낮아 비율측정이 어려운 경우</li> <li>단순한 결과에 대한 측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li> <li>목표의 상향성과 하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li> </ul>	건수 원(금액) 명(인원) 시간
계획대비 목표달성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립된 계획목표 대비 추진 성과를 측정하는 경우</li> <li>계획에 의한 달성도가 의미가 있는 경우</li> <li>단순 계획대비 또는 단기간 실적 목표달성일 경우</li> <li>증감의 추세가 장기적으로 나타나거나 중요할 경우에는 “추세치 반영 목표증감형” 또는 “과거실적 평균대비형”으로 설정</li> </ul>	% (목표성과 달성비율)
추세치 반영 목표증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값의 상향과 하향의 경향이 명확하여 추세치 반영이 가능한 경우</li> <li>하향의 결과값이 의미 있는 경우</li> <li>추세치는 3~5년 정도 수준으로 반영</li> <li>과거 실적이 3년 이하일 경우에도 전년도 실적대비 증감률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 활용</li> </ul>	% (증가율, 감소율)
과거실적 평균대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표에 의한 성과가 상향·하향 변동이 심하여 증감률이 의미 없는 경우</li> <li>성과에 관한 통제가능성이 적은 경우</li> <li>최근 실적의 하향세가 뚜렷한 경우</li> </ul>	% (평균값 대비 달성비율)
실질적 유효성과 달성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과값 중 유효하거나 의미 있는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li> <li>정해진 기간 또는 시간에 나타난 성과를 의미 있게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li> <li>많은 양으로 투입되거나 이루어지는 활동 중 무의미한 결과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li> </ul>	% (전체 대비 유효실적 비율)
내·외부 평가단 평가점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li> <li>정성적 평가부문, 전문영역의 업무 등에서 전문가에 의한 성과판별이 필요한 경우</li> <li>내·외부 평가단에 의해서 점수화되는 경우</li> </ul>	점 등급
이해관계자 만족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표적인 정성평가지표</li> <li>국민,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적용하는 경우</li> <li>특정한 공공서비스 수혜자를 대상으로 활동의 결과를 평가받는 경우</li> <li>만족도의 증감률을 측정할 경우도 이 유형에 포함됨</li> </ul>	점 (총점) % (응답비율, 증감률)
복합적 성과요인 측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li> <li>지표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성과지표 수를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li> <li>정성적 부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노력이 반영된 정성적 결과와 수치화된 정량적 결과를 종합하기 위해 가중치를 두어서 평가</li> <li>정보시스템으로 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다 세분화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li> <li>복합지표의 경우에는 성과지표의 기술(정의)의 수준이 한단계 높은 수준이며, 성과측정에서 구체화됨</li> </ul>	점 %

	적용가능 대상 업무 및 성과의 성격	측정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족도 평가의 정성적 결과와 수치화된 정량적 결과를 종합하여 가중치를 두어서 측정</li> <li>• 정량평가와 현지점검의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하나의 지표로 설정</li> <li>• 정성적 부문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의 이행여부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복합지표를 활용</li> <li>• 중장기 사업의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추진실적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li> <li>• 만족도형인 경우이나, 성과의 보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다른 유형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혼합하여야 하는 경우</li> <li>• 최근 활용도가 가장 높은 지표유형</li> </ul>	
사회적 공인지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분야와 관련하여 국제 또는 국가적으로 권위가 있는 공인지수를 활용하는 경우</li> <li>• 지수가 산출되는 과정과 내용 등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경우</li> <li>• 기관의 대표적 지수로 자체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활용가능 할 경우</li> <li>•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업성과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추상적인 공인지수 사용을 지양</li> </ul>	점 보통의 경우 단위가 없는 경우가 많음
인과적 체크리스트 점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성적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li> <li>• 단순 유무를 판단하여 총점을 내는 경우, 단순유무에 대한 항목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보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크항목들의 인과관계를 반영하여 점수화시키는 경우가 있음</li> </ul>	점

자료 : 국무조정실(2015a).

## ▶ 성과지표의 선정

- 현재 성과지표 개발절차는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 확인 → 성과지표 수집, 후보 성과지표 생성 → 1차 성과지표 선정 → 성과지표 조정 및 확정 → 성과지표 상세화 → 성과지표 가중치 부여의 7단계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국무조정실, 2015b). 이 과정에서 후보 성과지표는 목표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수의 지표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검토와 합의과정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도출, 설계하여야 함. 이를 통해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전략과의 인과적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후보 성과지표군에서 선정된 성과지표는 내용에 따른 측정방법의 구체화를 통하여 성과지표의 유형을 설정하고, 측정 데이터 수집과 성과확인 요소, 역량 및 활동 분석, 이해관계자의 책임성 및 성과수준, 관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최종적 모습을 갖추어야 함
- 성과지표의 검증은 우선 전략기획에 포함되어 비전과 목표 등과의 연계성을 갖추었는가와 앞서 제시한 성과지표의 선정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성과측정과정에서 예상되는 제대로 된 업무 및 활동의 측정과 구성원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며, 제약요인과 부적절성의 예측, 성과의 비교대상과 실제적 변화 유도여부, 성과책임의 명확한 분배 가능성 등을 검증하여야 함

## (2) 안전충남비전의 성과지표 측정요소 제안

- 안전충남비전에서 제시하는 전략에 따른 추진과제를 검토하여 설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세부측정 요소는 다음과 같음. 이는 업무 및 활용 유형에 따른 각각의 성과지표의 모습을 갖추어 성과지표로 개발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성 및 정량적 속성들이 가중치를 부여하여 측정되는 복합지표의 형태로 설정될 수도 있음
- 현재 안전충남비전의 전략목표의 성과목표 내용 중 많은 부분에 중복되는 세부과제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점검과 조정이 필요할 것임. 특히 도민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중심 과제 내용의 경우에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므로 주민참여, 교육, 정보접근성, 지원, 서비스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대한 적절한 검토가 필요함

표 6-11. 안전충남지전 성과지표 측정요소 제안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측정요소 검토
높은 의식과 실천의 안전문화	• 자율형 시민안전활동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체감도 증진 실적(농어촌 사고대응 정보제공·활용, 안전사고 대응처리 속도, 체감도)</li> <li>• 주민안전교육 실적(각 프로그램 참여도, 교육 콘텐츠, 의무교육 이수률, 안전플러스 참여도,</li> <li>• 스마트폰 안전사용 교육·홍보, 생활폐기물 교육 실적)</li> <li>• VR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선(콘텐츠 개발 실적, 체험공간확보율, 교육제공 및 수혜자 실적)</li> </ul>
	• 전면적 생활안전문화 운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문화 정책홍보 실적(각 홍보수단별 목표발간·배포 실적, 유효 홍보 실적, 도민참여 실적)</li> <li>• 주민의 안전문화 참여기회 확대(캠페인·경진대회 참여실적, 주민제안 건수 및 반영률, 만족도)</li> <li>• 중독관리 통합체계 구축도(원인·예방·대응·재발생·상당관리 등 시스템 구축과정평가, 활용도)</li> </ul>
	• 정책과 제도의 안전 요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 안전요소 반영도(전체적 안전관련 계획 분석, 반영률, 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li> <li>• BPR 구축도(각 재난유형별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전과정의 업무 분배·책임·협업 등 구체화)</li> <li>• 안전문화 인센티브 확대(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 부여실적, 수혜 기관의 성과 지속성)</li> </ul>
편안하고 든든한 안전생활터	• 공동체의 안전복원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전문역량 강화 실적(사전재해영향성 분석체계 구축도, 위험 취약성 분석기술 도입·활용)</li> <li>• 교통·보행시설 안전개선 실적(상습사고지역 개선도, 교통사고 감소율, 보행안전시설 확충)</li> <li>• 지역 취약 위해요소 개선도(미세먼지 저감, 다중이용·가축사육시설 점검·개선, 유해물질)</li> <li>• 시설 및 현황파악, 연안항만 위협요소 처리율, 해수욕장 위협요소, 생활폐기물 처리 개선)</li> </ul>
	• 생활안전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개선실적(내진보강, 도로·지하시설물·대피시설 안전개선, 연구조사 등)</li> <li>• 추진사업의 원활한 이행도(상습재해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가뭄대책, 하천정비, 노후저수지)</li> </ul>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측정요소 검토
	• 안전한 배움터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시설 안전점검 점수(점검평가단 활동 실적, 점검평가 점수 개선도, 결과 조치율)</li> <li>• 안전교육 시행 실적(체험형 교육시설 설치비율, 교육콘텐츠 개선 실적, 교육참여도·만족도)</li> <li>• 학교주변 안전환경 개선 실적(스쿨존·학교주변펜스 개선실적, 사고 감소율, 위해요소 발굴)</li> </ul>
함께 누리는 안전복지	•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개 및 활용실적(식품안전단속, 재난위험지역, 안전픽토그램 등 정보제공, 콘텐츠 발굴)</li> <li>• 안전지도 제작 및 활용실적(안전지도 구축도, 위험요소 반영정도, 지역지도제공 및 활용실적)</li> <li>• 정보공동이용센터 설립 실적(대상 지역 목표대비 진행률, 정보뱅크 구축도, 활용도)</li> </ul>
	• 수요자 중심의 안전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전략 수립 진행과정평가(환경 및 관계자 분석, 의견수렴, 대상별 목표수립, 구체화 등)</li> <li>• 안전소외지역 지원실적(안전점검인증, 화재취약지역 점검·조치, 소화기 공급률, 순찰 및 교육)</li> <li>• 정신건강 지원활동 실적(재난피해자 카운슬링 프로그램, 자살예방 교육, 고위험군 멘토링)</li> </ul>
	• 안전취약 계층의 적극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거주환경 개선 실적(여성전용시설 개선, 여성안전지킴이집 운영 실적, 체감도)</li> <li>• 취약대상별 조치(전동휠체어 보행환경, 요양시설 개선률, 스티커 부착률, 스마트워치 보급률)</li> <li>• 외국인 안전교육 실적(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대상 교육실적, 인원, 콘텐츠, 정보제공)</li> </ul>
신뢰와 소통의 안전시스템	• 권한과 책임을 지닌 안전 자치의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안전정보시스템 연계 실적(통합적 재난안전 정보 및 통신시스템 구축 과정평가)</li> <li>• 재난안전 이해관계자 지식정보 공유실적(인터페이스 구축 및 활용도, 대안발굴실적, 반영률)</li> <li>• 안전관리 제도개선 실적(현장관리 및 대응활동 전개, 지휘기관 및 현장책임 관련 규정 개선)</li> </ul>
	• 실질적인 현장대응능력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실적(장비 및 물자 확충실적, 전문성 강화 교육 훈련 실적)</li> <li>• 재난상황 정보시스템 내실화(공동플랫폼 구축 및 활용도, 콘텐츠 확대실적, 상황전파 신속성)</li> <li>• 위기관리 의사소통 역량강화 실적(재난 유형별 매뉴얼 제작 진행도, 교육과정 운영실적)</li> </ul>
	• 행정지원시스템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공보체계 개선 실적(용어 및 정보제공 표준화율, 부정확한 정보 오류 개선률, 신뢰도분석)</li> <li>• 행정지원체계 구축 실적(긴급지원정보 구축 및 활용률, 재난대피 정보구축, 목표대비평가)</li> <li>• 방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율(자원현황 및 소요 분석, 이력관리 등 구축진행도 평가)</li> <li>• 골든타임 확보 지원(소형소방차·화재경보시설·가정용 화재경보기 보급률, 출동시간 감소률)</li> </ul>
참여와 협력의 안전 거버넌스	• 도민주도형 안전활동 영역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민주도 생활환경 자체점검 실적(생활환경 위해 사업장, 교통안전 취약지역, 산악안전 등)</li> <li>• 지역안전 모니터링단 활동 실적(전체 모집인원수, 활동건수, 유효 활동인원수, 결과반영률)</li> <li>• 주민 안전점검을 위한 정보 제공 실적(점검 내용 배포, 안전피드백, 우수사례 제공, 의제제안)</li> </ul>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측정요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안전 네트워크의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봉사단체와의 업무협업 실적(업무협약 횟수, 협업활동 건수, 의제발굴 건수)</li> <li>• 재난대응 자원 확보율(장비 및 물자 확보율, 협의체 구성 및 논의 실적)</li> <li>• 민간 재난대응인력 양성 실적(전체 인원 수, 재난대응 참여인원 수, 임무부여 및 인식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성에 기반한 안전 거버넌스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마을 공동체 운영 실적(안전공부방 참여실적, 의제발굴 및 결과 반영률, 교육컨텐츠 제공)</li> <li>• 화재안전마을 지원 실적(화재안전마을 확산비율, 우수사례 홍보실적, 소방교육제공 실적)</li> <li>• 안전 자조모임 운영 실적(안전동아리 참여 및 지원실적, 안전동아리 활동 및 의견반영실적)</li> </ul>

### (3) 안전충남비전 성과지표 개발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 ▶ 도민 중심의 성과지표 개발

- 최근 성과관리의 중요한 지향점은 수요자 중심 체계로의 변화임. 이는 기존 공급자 중심 성과관리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부문이 되고자하는 변화라 할 수 있음
- 수요자 중심 즉, 도민 중심의 성과관리체계는 첫째, 성과관련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우선시됨. 이를 위해서 성과를 산출하기 위한 측정요인의 구체화된 기술, 도민 입장에서 언어적 접근성 확보, 자원투입의 비교 가능한 정보 제공, 책임과 권한의 명확한 이해자료 제공, 체감할 수 있는 실적과 성과내용의 구체적 기술 등이 이루어져야 함. 성과관리의 한계점 중 하나는 성과를 산출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점임
- 최근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폭을 넓히고, 국민이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안전충남비전의 경우 도민들의 참여와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 전달 등이 핵심인 과제가 많으므로, 도민에 의해 만들어가고 동의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갖춘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도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의 성과관리체계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
- 도민 중심의 성과지표 설정은 만족도 중심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으나, 이는 보다 구체화된 언어로써 정량적, 정성적 측정요인이 세분화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할 것임. 복합지표의 형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중요한 점은 공무원 등 공급자의 활동에 대한 점검이 아닌 실제적으로 도민의 생활변화에 대한 체감 중심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설문항목 또는 정량적 세분화된 개선실적 측정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며, 도민이 성과를 판별할 수 있는 언어사용과 상세적인 성과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관련 기관, 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협업과 자율성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의 경우 단일한 기관이나 부서 등이 독립적으로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음. 만약에 분산된 성과관리체계로 개발될 경우에는 업무 및 예산의 중복과 혼란, 도민의 성과에 대한 불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유관 이해관계자의 협업을 강조하고 전략과 비전체계에서 이를 연계하여 집중되도록 개발되어야 함. 또한 자체적인 평가 및 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통합될 수 있는 역량 있는 자율성을 강조하여야 함. 성과평가의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함
- 또한, 성과관리의 정교화를 통하여 안전충남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산출, 중간결과, 최종결과 각 단계별로 필요한 측정 방법 개발, ② 유용한 비교 그룹 확인, ③ 적절한 그룹을 대상으로 측정 지표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④ 잠재적 기회와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 제공, ⑤ 자원 및 산출을 통제할 수 있는 측정 기여도 향상, ⑥ 측정 방법과 프레임워크 개선 등을 고려하여야 함. 각각의 요소들은 연계되어 있으며, 반복되어 합의된 주요한 변화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되고 발전하여야 할 것임(New Zealand Government, 2008). 이러한 과정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간의 역할이 명확해 질 것이며, 기관 내에서도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업무책임을 명확하게 분배할 수 있을 것임(국무조정실, 2015a)
- 다년도의 종합적인 성격의 안전충남비전 성과관리계획 실현가능성의 핵심은 이러한 고려사항들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모든 성과관리 이해관계자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는가에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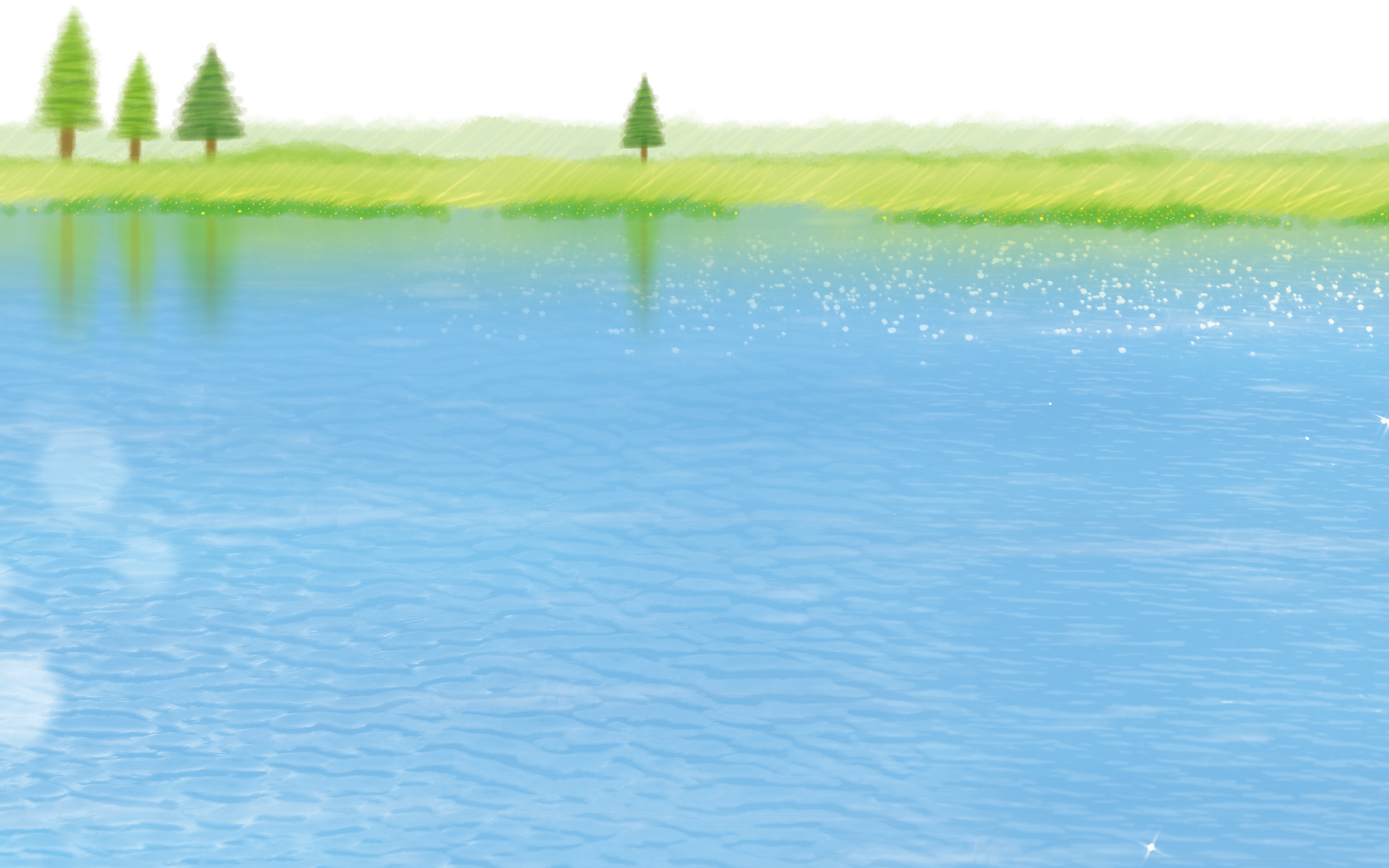


## 호수

정지용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 부록 1

01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재난·안전분야 정책 대응방향

02 드론산업과 재난·안전분야 정책 대응방향



---

# 01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재난·안전분야 정책 대응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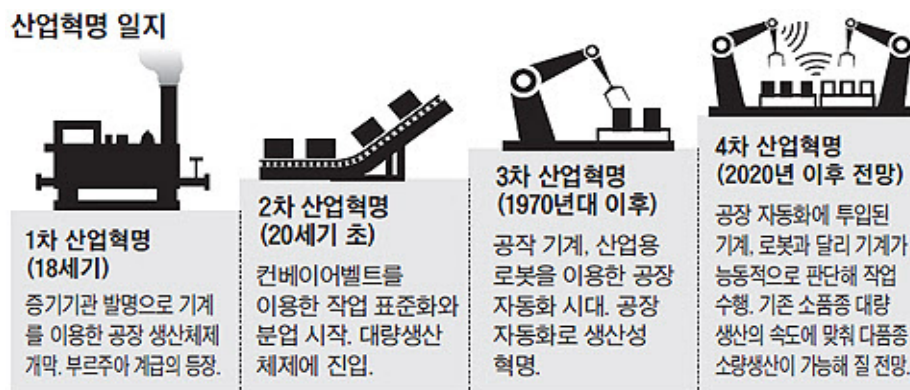
### 1. 4차 산업혁명시대의 등장 및 특성

#### □ 2016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주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

- 지난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의제로 제4차 산업혁명이 논의되면서 화두가 됨
- WEF는 「The Future of Jobs」 보고서를 통해 근 미래에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일자리 지형 변화라는 사회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
-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라고 정의하며, 전 세계의 산업구조 및 시장경제 모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 4차 산업혁명 특성

-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인간과 기계의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이버-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으로 정의<sup>1)</sup>
  -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기존 산업혁명들과 차별화
  - 1·2·3차 산업혁명이 손과 발을 기계가 대체하여 자동화를 이루고 연결성을 강화해온 과정이라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사람의 두뇌를 대체하는 시대의 도래를 포함



※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04/2014090403905.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04/2014090403905.html)

- 4차 산업혁명은 전자기기, IT, 자동화 생산 등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생물학, 물리학 등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융합되는 기술 혁명을 의미<sup>2)</sup>
  - 디지털혁명, ICBM혁명, 디지털 트레이드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대변혁 시대의 도래를 의미
- ※ ICBM혁명(IoT, Cloud, Big Data, Mobile) : 사물인터넷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 이를 분석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 서비스로 제공하여 관련 산업 촉진
- ※ 디지털 트레이드(Digital Trade) : 인터넷을 활용하여 무형의 디지털 화물을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시대가 도래함(ex. 3D 프린팅을 위한 설계도 주문, 해외 유명 대학 동영상 강의수강 등)
-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혁신과 성장,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와 경제 구조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 지능정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이 다른 분야와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기술혁신이 급속히 빨라지는 추세  
(예 : 미국의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등)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상과 정책 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16-04

2) 「제조업과 ICT의 융합, 4차 산업혁명」, 융합연구정책센터, 융합 Weekly TIP 2017 Vol.52

## 2.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기술

- 다보스 포럼에서 언급된 주요 기술로 사물 인터넷, 로봇공학,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제시되었으며 기술간 융합이 4차 산업혁명을 보다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
- 다보스포럼에서는 주로 기술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4차 산업혁명에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 제조업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함
  - IoT,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터, 빅데이터 등 ICT기술을 통해 생산공정과 제품간 상호 소통시스템을 지능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작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인터스트리 4.0이 대표적임
- 현 세계경제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Martin Schwab)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기술혁신은 ICT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며 전개되고 있으며, 주요 혁신기술들을 물리학기술, 디지털기술, 생물학기술이라는 메가트랜드 관점에서 분류하였음<sup>3)</sup>

표 1.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기술

메가트랜드	핵심기술	내용
물리학 (Physical) 기술	무인 운송수단	○ 센서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자율 체계화된 모든 기계의 능력이 빠른 속도로 발전 ○ 드론, 트럭, 항공기, 보트 등 다양한 무인운송수단 등장
	3D 프린팅	○ 입체적으로 형성된 3D 디지털설계도나 모델에 원료를 층층이 겹쳐 쌓아 유형의 물체를 만드는 기술 ○ 현재 자동차, 항공우주, 의료산업에서 주로 활용되며, 의료 임플란트에서 대형 풍력 발전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가능
	로봇공학	○ 로봇은 센서의 발달로 주변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에 맞춘 대응도 하며, 다양한 업무 수행이 가능해짐 ○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원격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다른 로봇과의 네트워크로 연결 가능
	그래핀 (신소재)	○ 최첨단 나노소재인 그래핀은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고, 두께는 머리카락의 100 만분의 1 만큼 얇고, 뛰어난 열과 전기의 전도성을 가진 혁신적인 신소재
디지털 (Digital) 기술	사물인터넷	○ 상호 연결된 기술과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물(제품, 서비스, 장소)과 인간의 관계를 의미 ○ 더 작고 저렴하고 스마트해진 센서들은 제조공정, 물류, 집, 의료, 액세서리, 도시, 운송망, 에너지 분야까지 내장되어 활용되고 있음
	블록체인 시스템	○ 현재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각종 국가발급 증명서, 보험금 청구, 의료기록, 투표 등 코드화가 가능한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할 전망
생물학 (Biological) 기술	유전학	○ 과학기술의 발달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비용은 줄고 절차는 간단해졌으며, 유전자 활성화 및 편집도 가능 ○ 인간게놈 프로젝트 완성에 10년이 넘는 시간과 27억달러가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몇 시간과 1,000달러 가량의 비용이 소요
	합성생물학 (synthetic biology)	○ 합성생물학 기술은 DNA 데이터를 기록하여 유기체를 제작할 수 있어 심장병, 암 등 난치병 치료를 위한 의학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개인별 맞춤 의료서비스 및 표적치료법, 농업과 바이오 연료생산 등에 활용 기대
	유전자 편집	○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인간의 성체세포를 변형할 수 있고 유전자 변형 동식물도 만들어 낼 수 있음

※자료 :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혁명」, 클라우스 슈밥, pp.36~50을 재정리

3)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8권 15호 통권 629호

- 다보스 포럼은 또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Global Risks Report)에서 가장 유망한 12대 기술을 선정하여 발표하기도 하였음('16.11월)
  - 인공지능 및 로봇틱스 기술이 가장 유망한 기술로 선정되었으며, 첨단 컴퓨팅 기술, 가상증강현실 및 3D 프린팅을 선정하였음
  - 다만, 이러한 기술들은 현재의 정책과 규제로는 기술에 대한 리스크에 적절히 대처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마련이 필요

표 2. 2017년 12대 유망기술 분야

순위	유망기술	순위	유망기술
1	인공지능 및 로봇틱스	7	유비쿼터스 센터
2	바이오기술	8	첨단 컴퓨팅 기술
3	에너지 포집, 저장, 전환기술	9	첨단소재 및 나노소재
4	금융거래 해킹방지기술 및 분산원장기술	10	가상·증강현실
5	지구과학	11	우주기술
6	신경기술	12	3D 프린팅

※ 자료 : 「제조업과 ICT의 융합, 4차 산업혁명」, 융합연구정책센터, 융합 Weekly TIP 2017 Vol.52

### 3.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재난·안전

#### □ 안전산업의 개념 및 특징

- 각종 안전수요(자연적·사회적 재해)에 대하여 경제주체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유·무형의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합동, 2015.3.19)
  - 전통적 3대 안전부문(소방·방재·사업장 안전)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부문을 추가한 7대 부문으로 안전산업 범위 확대(산업연구원(KIET))
- 다양한 위험요인과 재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소방방재청, 2005)
  - 안전산업에 대한 명확한 학문적 정의는 없지만, 안전산업을 재난·안전산업과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정책추진 과정에 적절한 개념을 사용하여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 안전산업은 민간보다는 공공을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되고, 시장의 공급도 공공부문의 수요와 규제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함
  - 수요의 다양성, 부족한 공급, 높은 규제 의존성



## □ 세계 안전산업 동향과 국내 및 충남 안전산업 실태

- 전 세계적으로 안전수요 증가로 급성장중이며, 안전산업을 자국의 관심분야 중심에서 인식하여 대응하고 있음
  - 전 세계 안전시장은 약 2,530억불 규모('11)로 '21년까지 연평균 8% 성장 전망
  - 미국은 9.11 사태 이후 '테러 방지'에 초점을 두고 항공보안 분야, 감시·경호 등 테러방지 및 보안분야 등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독일은 20세기 초반부터 시설·유해물 안전에 초점
- 첨단기술과 금융서비스에 기반한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ICT 등 첨단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접목되어 다양한 제품, 서비스 창출 가능
  - 글로벌 안전전문 기업들은 융·복합, 사업확장을 통해 종합서비스 기업으로 변모
- 국내 안전산업의 문제점
  - 안전 관련 규제에 의해 시장 규모가 좌우
    - ※ 주요 선진국은 민간의 자율규제가 중심이 되나 국내의 경우정부에 대한 시장 의존성이 높음(국내 주요 안전투자의 약 82%(10.6조원))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
  - 단순 제품 제조 중심의 저부가가치 산업구조
    - ※ 정부조달, 단순 제조·시공 등 수동적 역할로 인해 규모가 영세하고 시장선도형·기술혁신형 기업이 부족
    - ※ 高科技 제품은 기술·자본력을 갖춘 선진국이, 低기술 제품은 가격경쟁력을 갖춘 개도국(중국)이 국내시장을 점유
  - 전문기술·인력 및 산업정책을 위한 기업 발전 인프라가 취약
    - ※ 전문기술 및 인력 등 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취약하며, 안전산업분류체계가 부재하였으나 2015년말 분류체계가 마련
  - 산업간 연계, 융·복합 서비스 발달의 미약
    - ※ 단순 하드웨어형 사업구조로 전문성과 고유성이 취약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통합시스템 산업(SI), 안전서비스 등 융·복합 산업의 발달이 매우 취약

표 3. 국내 안전산업 시장 규모('13)

분야	시장 규모	
	규모(조원)	특 징
소방	12	- 소방공사(6.7조) 및 소방제조(2.6조)가 76.6% 점유
방재	14	- 정부 발주 다수,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95.3%)
사업장	3	- 안전제품 제조, 안전교육, 컨설팅 등
시설물	3.1	- 시설유지·보수 시장 3조원('12), 업체수 4,500여개 - 점검·진단시장은 약 1천억, 최근 업체수 급증으로 기업 채산성 악화
보안	3.5	- CCTV 등 물리보안 1.2조원(연평균 13% 상승, 3대 기업(에스원, ADT, KT텔레캅) 점유율 85%) - 인증 등 정보보안 2.3조원(연평균 11% 상승) - SW 안전분야(컨설팅, 시험·인증 등) 4천억원

※ 자료 :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관계부처합동, 2015.3.19.

- 충남 안전산업과 관련하여 구축된 자료나 발표된 통계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도내 안전 산업과 관련된 별도의 행정자료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즉, 안전산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자료조사나 실태조사 결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로, 안전산업 분류체계에 따른 도내 안전산업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 대상을 충청권으로 확대하면,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과학기술과 전문인력에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까지 입지하고 있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대덕특구는 정부출연연구원 41개 가운데 26개, 교육기관은 28개 가운데 7개, 정부·국공립기관도 41곳 가운데 19곳이 집중되어 있으며, 박사급 연구원도 2만여명, 관련 기업도 전국의 3,958개 가운데 1,516개가 집중되어 있음
  - 향후에도 대전에는 첨단센서, 로봇, 3D 프린팅, 스마트 의약,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소프트 융합 등 6대 분야를 특화하고,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한 미래융복합 산업단지'의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음

##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재난·안전 분야 적용

○ 재난·안전 분야에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사례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음

표 4. ICT를 활용한 서비스 예시 및 활용사례

	선제적 예방 및 상황전파	신속한 대응 및 복구지원
모바일	- 미국의 대국민경보시스템(PLAN) : 휴대전화 기지국을 이용, 맞춤형정보발송	- 유럽의 SMART WORKPAD
IoT	- 일본, 밀라노 등의 지능형교통안내시스템 - 홍수재해 모니터링 시스템	- 유독물차량 사고대응시스템 - 터널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소셜 미디어	- 미국 트위터 지진감지기 : 트위터글 중 지진 낱말을 토대로 지진의 위치정보를 파악, 지진발생을 실시간으로 전파 - 호주의 Emergency 2.0 프로젝트	- 아이티지진(2010) 발생시 상황인지를 위해 미국은 HSMDMI8을 구축하여 복구와 재건 지원
CCTV	- HD급 CCTV기술을 활용하여 현장영상을 수집 분석하여 사전에 재해나 재난 예방	- 테러 현장주변 CCTV 영상검색으로 범인 검거
로봇	- 재난감시용 무인비행기(드론) - 미국 국방부의 경찰로봇과 지뢰탐사로봇 ‘에어리얼’ - 미국 나사의 솔로트랙 : 해양탐사용 무인 잠수로봇	- 2011년 일본 대지진 현장에 재난대응 로봇을 투입하여 재난 구조활동 전개 - 영국의 FireSpy 로봇 : 소방요원이 접근 불가한 빌딩에 투입, 진화작업 수행
빅데이터	- 영국 The Foresight HSC : 해수면 상승, 해안침식, 홍수 등 관리 - 유전자 데이터 공유 기반 질병치료체계	- 스마트 빅보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난대응 의사결정 지원
공간정보	- 스마트안전귀가, 택시안심서비스, 아동/여성 안전 지도, 범죄예방시스템(서울, 경기, 부산 등) - 미국 맵플러 서비스 : 2012년 11월 허리케인 샌디 피해지역 주변의 주유소 지도 제공	- 산불방재시스템 - 유독물차량 추적시스템 - 일본 ‘나가레도로’ : 피해지역 사람들에게 이동을 돕는 지도서비스 제공
가상훈련 시스템	- 특수재난 훈련센터 - 시민안전체험센터 및 초중등생 체험교육	- 가상훈련 시나리오에 따른 의사결정, 대응

○ 각 지자체에서도 드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안전산업 생태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구시 : 안전 소재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안전융합산업 연구기반구축사업’ 추진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MOU를 체결하고 국내최대 규모의 융·복합 시험인증시설을 포함한 ‘안전융합산업기술센터’ 건립 추진(2015.4월)

※ ‘스마트 드론 활용 기술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산불감시, 화재진화 등 안전·방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 드론의 우선 개발 착수(‘스마트 드론 활용 기술기반 구축사업’: 비행테스트 공간과 스마트 드론센터 등이 입주할 드론 단지 조성 계획)

- 경기도 :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빅데이터 산업으로 연계

※ 재난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안전서비스 구상

※ 점진적으로 시장규모가 큰 빅데이터 산업으로 확장하여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 서울시 : 여성, 어린이, 치매환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앱 제공

표 5. 주요 도시별 안전산업 사례 비교

지역	분야	전략사업	전략기술	특징
경북	재난	국가재난안전 클러스터 국민안전로봇 개발사업	- 자연·사회재난·안전 관리기술(산악/해양/원자력/건설/교통 등 다양한 영역의 재난 고려) - 로봇기술	- 기존사업에 일부사업을 추가하여 안전산업클러스터 구상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과 협력
부산	ICT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상황인지형 대피안내 서비스 사업	- 융합서비스 플랫폼, IoT, 빅데이터 및 드론 활용기술 등	- 스마트도시 사업의 일환 - 생활밀착형 서비스 중심 -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실증
대구	재난	안전융합산업 연구기반구축 사업	- 소방장비의 소재 및 부품산업 - 시험인증 - 드론 활용 기술	- 안전기술 R&D 중심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협력
경기	ICT	재난데이터센터 구축사업	- IoT, 빅데이터 활용기술 및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 등	-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분야
서울	ICT	도시문제 해결형 사업	- ICBM(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반 서비스	-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앱 - 생활밀착형 서비스 중심

#### 4.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한 향후 대응방향

- 국내 및 충남지역 안전산업의 한계와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
  - 안전수요의 증가에 따른 안전산업의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게 전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충남 지역내 안전관련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
- 안전산업의 실태파악 필요
  - 안전산업의 분류체계가 최근 수립되면서 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못함 (2016년에야 비로소 전국단위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짐, 「2016년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국민안전처)」)
  - 기업의 자율적 재난안전관리 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검토
- 안전신기술 창출 및 육성 방안 마련
  - 국내외 재난 및 안전분야 신기술 개발과 적용에 대한 동향 파악 필요
  - 지역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기술역량 파악
    - ⇒ (예)배재대, 백석대 등 인공지능분야 연구지원 방안
  - 지역내 대학, 연구소 등과의 연계를 통한 안전 신기술 전문인력 양성 방안 모색
    - ⇒ (예)대학에 전문인력 양성반 개설
- 안전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충남내 안전산업 실태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인프라 실태 분석
  - 충남도내 안전산업 실태를 고려한 안전 관련 산업들의 집적화 및 특성화 방안 검토필요
    - ⇒ (예)도내 노후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활용 가능성 검토
  - “기업-학-연-관”이 연계된 안전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모색
    - ⇒ (예)기술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

## 02

# 드론산업과 재난·안전분야 정책 대응방향

### 1. 드론의 개념 및 활용범위

#### □ 드론의 개념

- 드론(Drone)이라 불리우는 무인항공기는 상황·목적, 국가별로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 무선전파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를 뜻하는 것으로, 사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이나 조정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총칭<sup>4)</sup>

---

4) 「드론 시장 및 산업 동향」, 융합연구정책센터, 융합 Weekly TIP 2017 Vol.53

표 6. 드론의 다양한 표현과 정의

구분	정의
무인기 (무인기 시스템)	○ 조종사가 비행체에 직접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조종, 사전 프로그램 경로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 형식으로 자율비행하거나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자체 환경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체와 지상통제장비 및 통신장비, 지원장비 등의 전체 시스템을 통칭
드론 (Drone)	○ 사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비행하는 무인 비행체
RPV	○ Remote Piloted Vehicle ○ 지상에서 무선통신 원격조종으로 비행하는 무인 비행체
UAV	○ Unmanned/Uninhabited/Unhumaned Aerial Vehicle System
UAS	○ Unmanned Aircraft System ○ 무인기가 일정하게 정해진 구역뿐만 아니라 민간 공역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Vehicle이 아닌 Aircraft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항공기임을 강조하는 용어
RPAV	○ Remote Piloted Air/Aerial Vehicle, ○ 2011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 쓰이기 시작한 용어
Robot Aircraft	○ 지상의 로봇 시스템과 같은 개념에서 비행하는 로봇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

※ 자료 :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http://kodipa.org>)

- 193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대공포 훈련용으로 개발하면서 타겟 드론(target drone)이라 명명하면서 쓰이기 시작
  - 이후 제한적으로 드론이 투입되었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에서 군사용으로 개발되어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등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어 옴
- 최근 수직이착륙형태의 소형 드론이 개발되면서 레저스포츠, 항공촬영, 3차원 공간정보 획득, 농약살포, 택배 등으로 활용되면서 민간용 드론 시장이 확대되고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드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요소로 구성<sup>5)</sup>

- 하드웨어 요소로는 비행체가 있으며 컴퓨터, 항법장비, 송수신기, 가시광선 및 적외선 센서 등의 장비로 구성
- 소프트웨어 요소로는 지상통제장치, 임무탑재체, 데이터링크, 이착륙장치, 지상지원 등으로 구성

표 7. 무인기의 구성

구성요소		내 용
하드웨어	비행체	○ 기체에 실리는 추진장치, 연료장치, 전기장치, 항법전자장치, 전기장치 및 통신장비 등을 포함
소프트웨어	지상통제장치	○ 임무계획 수립과 비행체 및 임무 탑재체의 조종 명령, 통제, 영상 및 데이터의 수신 등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주 통제 장치
	임무탑재체	○ 카메라, 합성구경 레이더, 통신중계기, 무장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한 장비
	데이터링크	○ 비행체 상태의 정보, 비행체의 조종 통제, 임무 탑재체가 획득·수행한 정보 등의 전달에 요구되는 비행체와 지상간의 무선통신 요소
	이착륙장치	○ 비행체가 지상으로부터 발사, 이륙하고 착륙, 회수하는데 필요한 장치
	지상지원	○ 지상 지원설비 및 인력 등을 총칭, 무인항공기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분석, 정비, 교육 장비 시스템을 포함

※ 자료 : 월간로봇(2009. 11)

## □ 드론의 활용범위

- 드론은 군사용에서 민수용으로 확대되면서 수요가 급증
  - 가격하락, 소형화, 이동성 강화 등을 통해 상업적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
- 의학, 기상, 과학, 예술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도입 및 활용
  - 의학분야에서는 응급환자 탐지 및 수송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상분야에서는 기상관측 및 태풍 등 기상변화의 실시간 감시에 활용
  - 과학분야에서는 멸종동물의 지역적 분포 및 이동경로의 확인, 지리적 특성 파악, 정밀한 지도제작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예술분야에서도 영화 및 방송 등 다양한 촬영에 활용
  - 그 외에도 물품배송, 불법수렵 감시, 범죄감시 및 예방, 수색 및 구조, 각종 스포츠 및 영화 촬영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미래형 드론 개발 및 활용을 강화하고 있으나, 각국의 규제여부가 상용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에서 드론 개발의 및 운영이 진행중이나 국가별 규제로 상업화가 지연
  - 국내에서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안보문제 등으로 드론의 상업화에 상당한 제약이 있음

5) 「드론(Drone) 부상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KED산업은행, 산업이슈 2015, pp.25~43

표 8. 국가별 무인항공기 개발 및 운영현황

국가	주요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항공기 개발의 선두주자로 무인항공기 개발에 막대한 자금증액 및 투자 추진</li> <li>○ 각 군마다 다양한 형태의 무인항공기를 개발·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군 : Global Hawk, Predator A, Predator B(Reaper)</li> <li>- 육군 : Hunter, Shadow, Raven</li> <li>- 해군/해병대 : Pioneer, Fire Scout, Scan Eagle, Pointer, Dragon Eye</li> </ul> </li> <li>○ 군 외에도 민간 NASA에서도 MQ-9 IKhana 운용</li> </ul>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을 제외한 최고의 무인항공기 제작 및 운영기술을 가진 국가</li> <li>○ 유인전투기를 무인전투기로 전환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무인항공기 개발 및 운영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eron TP, B-Hunter, Hermes, Skylark, Searcher 등</li> </ul> </li> </ul>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모든 종류의 무인항공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용 : 단거리 무인항공기 Sperwer, 중고도 무인항공기 Eagle1</li> </ul> </li> <li>○ (영국) 중고도 장기체공 무인항공기 및 전술 무인항공기 배치를 위해 8억 파운드 규모의 Watchkeeper 프로그램 진행</li> <li>○ (독일) 유럽에서 가장 활발하게 무인항공기를 실전에 운용하는 국가로 고고도 장기체공 정찰/감시 무인항공기 도입 추진</li> <li>○ (이탈리) 1960년대부터 고성능의 공중표적기 및 정찰·감시 시스템을 가진 국가로 중고도 장기체공 무인항공기 Falco, 저고도 침투무인항공기 Mirach 150 운영</li> </ul>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부터 본격적인 기술개발을 시작하여 송골매(RQ-101) KUS-TR 등의 개발에 성공하는 등 군사용 드론 개발 성공</li> <li>○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대한항공이 세계 최초로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Tiltrotor)를 개발하여 도입 추진 중</li> <li>○ 농약살포, 작물 파종, 질병 방제, 산림 보호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은 119개 조합에서 153여대의 드론 보유</li> </ul> </li> </ul>

※ 자료 : 국방기술품질원(2013), 농업중앙회(2014), 위키피디아([www.wikipedia.org](http://www.wikipedia.org)), KED산업은행(2015), 「드론(Drone) 부상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 주요 분야별 활용범위<sup>6)</sup>

- 군사 : 정찰·감시와 대잠 공격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용도에 따라 표적드론, 정찰드론 또는 감시드론, 다목적드론 등으로 구분
- 물류운송 :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도서·산간지역 뿐만 아니라 도심지에서도 신속·정확한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드론 택배 서비스 추진
- 농업 : 살충제 및 비료살포 뿐만 아니라 원격 농장관리, 정밀농업 확대 등으로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
- 정보통신 : 여러 개의 드론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인터넷을 중계(relay)하여 인터넷이 안되는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 재해관측 : 재해 현장, 탐사보도 등 기존의 지리적 한계나 안전상의 이유로 가지 못했던 장소를 드론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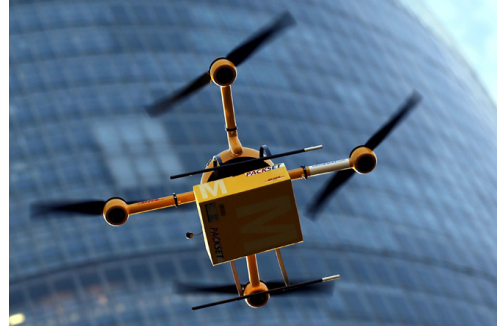
6) 「드론 시장 및 산업 동향」, 융합연구정책센터, 융합 Weekly TIP 2017 Vol.53



- 
- 환경·교통 : 기상관측 및 태풍 등 기상변화 및 환경오염의 정도를 실시간 감시하고 고속도로 운행  
상황 확인 등 교통상황 관측



a. 기상관측(호크드론)



b. 의약품 배송



c. 농업용 드론



d. 범죄감시용 드론

※ 자료 : [http://bizion.combbsboard.phpbo\\_table=insight&wr\\_id=170&sca=Trend](http://bizion.combbsboard.phpbo_table=insight&wr_id=170&sca=Trend)

[그림 1] 다양한 드론의 활용

## 2. 드론 시장환경과 산업 동향

### □ 글로벌 드론 시장의 동향

- '14년 전체 항공시장의 규모는 4,700억 달러이며, 이 중 무인기 시장의 규모는 53억 달러로서 전체 시장의 1.1%에 불과
  - 하지만 세계 무인기시장은 '03~'12년까지 연간 21.8%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음
- 향후 항공기 시장은 '23년까지 연평균 4%의 성장세가 예상되나, 무인기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세 전망됨<sup>7)</sup>
  - 상업용 민간 드론시장은 '14년 6천만 달러에서 '23년까지 8억 8천만 달러로 연평균 35%의 성장이 전망됨
- '12년 기준 국가별 드론 시장 점유율은 미국 71%, 유럽 13%, 중동 7%, 아시아·태평양 8%이며, 이는 '21년이후 미국의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미국 49%, 유럽 17%, 아시아·태평양 22%, 중동 9% 등으로 경쟁체제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sup>8)</sup>
  - 이처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전은 중국의 급성장에 기인하며, 중국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중임
  - 특히 상업용 드론의 경우 중국의 DJI가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농업용, 수색·구조용 등 다양한 용도의 상업용 드론을 생산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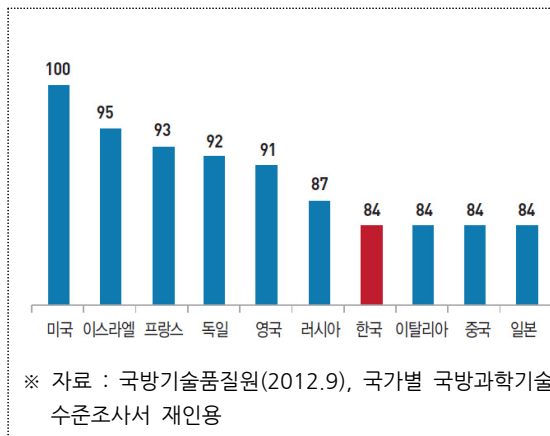
### □ 국내 드론 시장의 동향

- 도입 초기단계로 시장규모는 미미하나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15년간 1.6조원(누적기준) 시장으로 확대 전망<sup>9)</sup>
  - 국내에서도 무인비행장치의 숫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레저용이며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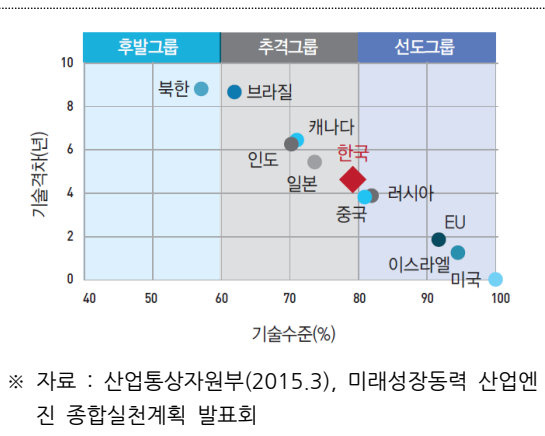
7) Teal Group(미국 방산전문 컨설팅회사), 2014 Market Profile and Forecast, World Unmanned aerial Vehicle systems, 2014

8) 「드론 시장 및 산업 동향」, 융합연구정책센터, 융합 Weekly TIP 2017 Vol.53

9) 국토교통부 '13.8.28 보도자료



[그림 2] 2012년 국가별 무인항공기 기술수준



[그림 3] 2013년 무인항공기 기술수준

## □ 주요 국가별 드론산업 동향

- 미국 : 군사용 드론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최근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ICT 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유통·물류산업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면서 새로운 변화 추진

표 9. 미국 민간 드론기업 사업추진 현황

기업명	주요 사업추진 현황
보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고 수준의 무인기 기술/실적 보유</li> <li>○ 미 해군과 합동으로 무인정찰기 팬텀레이*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일반에 공개된 ‘팬텀레이’는 기존 정찰 기능뿐 아니라 방공망 제압, 전자전 공격 등도 가능해 스텔스 무인전투기로 평가</li> </ul> </li> </ul>
노스롭 그루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3대 항공우주산업체 중 하나</li> <li>○ 대형 고고도 정찰기인 트리톤 드론 개발 (2017년까지 총 68대 해군에 납품 예정)</li> </ul>
구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세대 기술개발 프로젝트 ‘구글 X’ 중 하나로 드론 활용 배달 프로젝트인 ‘Project Wing’ 진행</li> <li>○ 비행선 형태의 무인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및 통신에 활용 (프로젝트 룬)</li> <li>○ 태양광 무인기 제작업체인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社 인수(‘14년)하여 드론을 통한 무선인터넷 보급망 확장에 활용 예정</li> </ul>
아마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 헬기를 이용한 차세대 드론 배송시스템(Amazon Prime Air) 실용화 추진 중</li> </ul>
페이스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의 드론 업체인 어센타(Ascenta)를 2천만 불에 인수</li> <li>○ 인터넷 소외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인터넷 드론 아퀼라(Aquila) 개발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시험비행에 성공했으나 ‘16년 11월 진행한 시험비행의 실패로 아퀼라를 통한 인도 인터넷 제공 보류</li> </ul> </li> </ul>
3D ROBO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개방형 플랫폼*을 통한 상업용 드론 개발 및 제품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형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운영시스템, 기술개발, 부품조달 등 드론을 직접 제작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형태</li> </ul> </li> </ul>

※ 자료 : KED산업은행(2015),『드론(Drone) 부상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표 10. 중국 민간 드론기업 사업추진 현황

기업명	주요 사업추진 현황
DJ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용 드론을 최초로 출시하였고 팬텀시리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팬텀4 발표. 설정한 피사체를 따라 촬영하는 액티브트랙, 화면으로 특정지점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비행하는 탭플라이 등의 신기능이 추가되었으며 특히 비행 속도를 72km/h까지 올릴 수 있는 스포츠 모드가 새롭게 장착돼서 드론 레이싱이나 더욱 활동적인 영상 촬영이 가능</li> </ul> </li> <li>○ 드론의 핵심 기능인 플라이트 컨트롤러와 드론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카메라를 일정한 기울기로 유지하는 짐벌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li> <li>○ 국내에 플래그십 스토어 및 실내 드론 경기장 DJI 아레나 구축</li> </ul>
XAIRCRA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 농업 드론 선두업체</li> <li>○ 기업가치만 12억 7,000만 위안에 달하며 주요제품으로 P20 시리즈 보유</li> </ul>
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이 탈 수 있는 1인용 유인 드론 개발</li> <li>○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드론 콘트롤 시장을 공략하는 업체로, DJI의 전문적인 항공촬영보다 대중화 성격이 강함</li> </ul>
샤오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가 스마트폰의 대명사인 샤오미도 미 드론(MI Drone)*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K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면서도 기존 4K 드론에 비해 저렴한 가격</li> </ul> </li> </ul>

※ 자료 : ‘드론 르네상스’ 이끄는 중국을 엿보다. 보안뉴스(2016.12.24.), 샤오미 미 드론, DJI팬 텀 등 4K 드론 비교, 동아사이언스 (2016.06.06.) 재구성

○ 그 외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레저용 소형 드론을 중심으로 드론 시장이 활성화

## □ 국내 드론산업 동향

- 드론 기술발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드론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로 육성·지원
- 정부는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심의·확정하였으며, 국토부·미래부·산업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 및 지자체별로도 드론 산업 육성 중
  - (구)미래창조과학부 : 원천기술개발 중심 연구 추진
  - 국토교통부 : 드론을 항공 분야의 일부로 파악하고 사업화 매진
  - 산업통상자원부 : 고기능·중대형 등 첨단 드론 육성 추진
  - 부산시 : 사물인터넷(IoT) 테스트 베드를 운영하고, 드론의 이동성을 융합한 도시관리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할 계획
  - 대구시 : 무인항공기 집적단지 조성 및 스마트 드론 기반 구축사업 추진
  - 수원시 : 드론 강소기업 육성 및 드론 실외 테스트 베드, 장거리 옥외 테스트베드 조성 예정
- 국내 드론 산업은 대한항공과 (주)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전통적인 항공 산업체가 군수요를 바탕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찰이나 군사위주로 전개해옴
- 상업용 드론 시장은 아직 시작단계 수준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항공촬영 등에 쓰이는 소형 드론의 경우에는 소수 업체만이 개발을 진행

표 11. 국내 민간 드론 기업 사업추진 현황

기업명	주요 사업추진 현황
대한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으로 틸트로터형 무인기 개발(TR-60) 성공 및 상용화 추진 노력중*</li> <li>- 다만 최근 틸트로터 무인기 사업인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개발' 상용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미시행 판정을 받으면서 상용화 사업이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li> <li>○ 美 보잉사와 MOU를 통한 무인헬기사업(500MD*)를 무장형 무인헬기로 개조하는 사업 추진</li> <li>- 주야간 경찰감시에 근거리 정밀타격 기능까지 가능하도록 제작. 개발 완료 후에는 전방 감시정찰과 즉각 대응활동 등에 활용</li> </ul>
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분야 초소형 무인항공기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참여</li> <li>○ 초소형 무인항공기시스템인 크로우(CRAW)를 제작한 마이크로에어로봇社 인수('10년)</li> </ul>
LG C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융합한 자체 무인헬기 토탈 솔루션 개발 추진중</li> <li>○ 산업용 무인헬기 토탈 솔루션 공급업체인 원신스카이텍 인수('13년)</li> </ul>
LG 유플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E 망을 이용한 드론 제어 기술 확보(기술시연 성공)</li> <li>○ 세계 최초 LTE망을 통한 드론 조정 성공</li> <li>○ 드론을 활용하여 결혼식 생중계*</li> <li>- LTE 통신망을 이용해 공중에서 촬영한 동영상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LTE 지능형 비행로봇 U+LTE 드론을 민간 분야인 야외 결혼식에 적용</li> </ul>
K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0년대 초반 국내 최초 드론인 군 경찰용 저고도 단거리 무인항공기 송골매 개발</li> </ul>
유콘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기 전문 업체로, 경찰용 무인기인 리모아이(Remo Eye)개발 및 국내 최초로 UAE에 지상통제장비 수출</li> <li>○ 농업용 방제드론 리모팜(Remo Farm)을 시작으로 민간시장 진출 추진중</li> </ul>
바이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구용 비행로봇인 '드론 파이터*'를 시작으로 산업용 비행로봇 개발 진행중</li> <li>-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쿼드콥터(회전날개가 네 개 달린 무인항공기) 모형으로 기존 무선조종 헬기에 비해 조종이 쉽고 가상현실에서만 가능한 비행 게임을 현실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li> </ul>
성우엔지니어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용 무인 방제헬기 상용화 성공(REMO-H)</li> </ul>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R&D전략(융복합분야 무인기시스템), 2015, 재구성

## □ 재난·안전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 사례

- 지난 2015년 4월 네팔지진시 재난 현장에서 드론 기술을 활용
  - 글로벌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은 가족, 친구들이 생존자를 확인하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IT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인도 및 네팔 당국은 드론을 이용해 재난지역을 수색하는 등 재난상황에서 관련 기술을 활용
-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산림보호활동에 드론을 활용
  - 소형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구청직원이 조정하고, 드론이 찍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및 해운대구 CCTV 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감시하는데 활용
  -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산불감시, 산림훼손 감시, 산사태 우려지역 및 산림 병해충 예찰 등의 효과적 감시를 목적으로 투입
  - 실제로 2015년 1월 해월정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소방대보다 앞서 드론이 발화지점을 찾아내기도 하였음
  - 해운대구는 여름에 개장하는 해수욕장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드론활용을 확대할 계획
- 민간 배송업체인 CJ대한통운은 (구)국민안전처와 협약을 통해 재난발생시 이재민 구호를 위해 고립 지역에 드론 등을 활용하여 구호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함
  - 3kg 정도의 화물을 탑재할 수 있고 반경 20km내 지역에 최대시속 60km 정도로 운송할 수 있는 드론을 도입하였으며, 2015.5월 시험비행을 통해 입력된 주소로의 자동운행으로 목표지점에 의약품 등을 성공적으로 배송
- 이 외에도 재난·안전분야에서의 드론 활용 사례가 있으나, 주로 감시·정찰, 소방 등 한정된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활용을 위한 연구 및 시도가 필요

## 3. 향후 정책 대응방향

- 드론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핵심동력으로 통신, 물류, 농업, 의료 및 재난·안전 분야 등 다양한 산업으로의 활용가치를 확대해 나가야 함
  - 국내 드론 업체들이 민간 및 상업용으로 확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마련이 필요
  - 특히 각종 규제조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애요소의 과감한 정비 필요
- 재난·안전분야에 드론 활용을 위한 적극적·다각적 방안 모색 필요
  - 현재는 주로 산림보호활동, 재난현장 정보 제공, 재난자 위치파악 및 긴급물품 제공 등에 활용하고 있거나 지속적 테스트를 수행중에 있음

- 
- 또한 해양 분야에서도 적조 모니터링, 연안침식, 해안 불법점유 감시 등에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처럼 상황감시와 긴급대응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 드론 활용을 타 분석도구와 연계한 데이터 분석-예측-활용을 위한 능력의 고도화 등 향후 기술개발 및 분석능력 고도화를 통해 활동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음

○ 효율적 드론 운영 방안 모색 필요

- 각종 재난·재해 유형에 따라 드론의 활용범위가 점차 다양화 되어가는 추세이므로 드론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드론의 사용과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센터를 설립하거나 드론기술의 보급 및 확대를 위해 드론관련 각종 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향후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드론산업육성계획을 마련하여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간의 연계, 육성을 도모하여야 함






풀 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 부록 2

## 01 기타 도민의견 제안 프로그램



# 01 기타 도민의견 제안 프로그램

○ 본 장에 기술된 내용은 안전충남 2050 비전 및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 제안된 도민 의견조사 내용 중, 세부 실행사업에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내용의 취지나 방향으로 일부 반영된 의견에 대한 종합 정리로서, 향후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참고하여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 임

부문	의견 제안
안전교육	1. 안전관련 사업 정보제공
	2. 우리동네 다시보기 방법 교육
	3. 축사 개보수 관련 안전교육
	4. 농기계 안전교육 활성화
	5. 이동형체험교육시설 단계적 확산 및 찾아가는 교육실시
	6. 직장인 안전 교육 강화 및 체험프로그램 확대
	7. 기관별 법정교육과 연계한 안전교육 확산
	8. 축산업 종사자 재난예방교육 활성화
	9. 충남형 안전교육 조례제정
	10.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3호 충남 유치
	11. 충남 도립대학교 안전교육과 신설
	12. Augment Reality를 활용한 체험 예방 콘텐츠 운영
	13. VR·AR 콘텐츠 및 기술개발을 통한 찾아가는 교구 개발
	14. 지역내 안전교육업체 수급확대
민관협력	15. 안전관리업체 독과점 개선
	16. 익명성이 보장된 안전신문고
	17. 열린공간 제공확대
	18. 조직 간 연계를 통해 통합서비스 제공 및 안전단체 전용 인터넷 쇼핑몰 구성
	19. NGO의 날 제정
	20. 자유학기제 연계 청소년 안전활동 지원
	21. 청소년 안전동아리 육성 지원
	22.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 권한 부여(등하교 시간대 특정)
	23.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24. 방재장비 사용권한 확대
	25. 오토바이 안전확보 민간 MOU
	26.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가 안심 프로젝트
	27.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재난약자지원	28. 혹서기 대책 마련
	29. 어르신 교통사고 발생시 대응요령 홍보
	30. 재난위험 경광등 경보기 설치
	31. 영·유아 안전문화 캠페인(어린이 보호주간 지정)
	32. 응급 상황 헬기이송시스템 홍보
	33. 재난피해자 유가족 및 재난대응자 가족 관리
정보전달	34. 대피소 안내·홍보 방식 변화
	35. 충남 안전생활 카카오톡 이모티콘 개발 및 보급
	36. 재난 피해 지역의 실시간 정보 분석 리포트
	37. 교통사고 발생 상황 네비게이션 현출 지원
	38. 지역취약성 기반 사고발생 리스트 제작
	39. 미래재난 예측 발굴

부문	의견 제안
제도개선	40. 하천 익사사고 방지 기준 및 유역 환경 안전관리기준 마련
	41. 건설현장관리 경찰협조방안 마련
	42. 낚시면허제 및 허용지구 제도화
	43. 해수욕장 안전인증제 도입
	44. 전동 보행보조장치 안전관리규정 제언
	45. 드론 사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46.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홍보
	47. 노인운전차량 스티커 개량
	48. 회전교차로 운행방법 홍보
	49. Safety School Zone 정착을 위한 설치기준 개선
	50. 농약사 개업 규정 강화
	51. 차선 도색 반사율 규정 강화
	52. 가로등 누전 점검 주기 개선
	53. 스쿨버스 안전사고 예방대책
	54. 특별사법경찰관의 책임과 기능 명확화
	55. 학교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56. 재난안전부서 기피 극복방안
	57. 국제 교류 강화
	58. 안전관련 제도·정책 용어개선
	59. 공공정책에 긍정적인 단어 사용
안전관리장비 및 시설도입	60. 스쿨버스 출입문 이중화 방안
	61. 소방서 책임권역 및 응급의료영역확충
	62. CCTV 효율적 운영 및 확충
	63. 침입범죄 예방용 'Target Hardening'
	64. 주취자 안전확보를 위한 SOS버스 운영
	65. 공용시설 와이파이 설치
	66. 비상주 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아크차단기 설치
	67. 시·군 재난상황실 보강 및 신규 설치
	68. 화학사고 주요발생지역 소화용 화학차 보급
안전설비 및 환경점검	69. 지방하천 천변저류시설 확충사업
	70. 충남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정비사업
	71.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72. 도심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 재난안전예방 체계 마련
	73. 시특법 대상 시설물 3D 스캐닝 이력관리
	74. 산사태 위험지역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통한 원격모니터링
	75. 공원·등산로 안전관리
	76. 옥외 간판 정비사업 지원
	77. 모서리 없애기
	78. 노후 공동주택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
	79. 빈집 및 노후건물 화재대응 시설개선
	80. 완강기 설치대상 건물 점검
	81. 시설물 무료 안전점검 서비스
	82. 노후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83. 안전테마파크 조성

---

## 교육내용

### 1. 안전관련 사업 정보제공

안전사업 시행 전 충분한 사전 설명 및 교육이 이루어져서 실무자가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유도

### 2. 우리동네 다시보기 방법 교육

주변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개인이 생활 환경의 위험요소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필요

### 3. 축사 개보수 관련 안전교육

축사개보수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노후 축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사고 시 행동 보상 요령 등에 대한 교육 필요

## 교육대상

### 4. 농기계 안전교육 활성화

농기계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부주의, 기계사용 미숙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내용이 현재 농협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에 연계 필요

### 5. 이동형체험교육시설 단계적 확산 및 찾아가는 교육실시

현재 소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동형 체험교육시설과 그 콘텐츠를 안전체험관 수준으로 향상하고, 관련 도서 및 교육을 제공

### 6. 직장인 안전 교육 강화 및 체험프로그램 확대

민간기업의 경우 개인이 시간을 할애하여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장 대상의 교육기회제공

### 7. 기관별 법정교육과 연계한 안전교육 확산

기관별로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기관교육이 있음(위생교육 등) 의무교육에 안전커리큘럼을 추가하여 의무적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유도

---

## 8. 축산업 종사자 재난예방교육 활성화

축산업자가 소규모고 개인사업자가 많아 이에 대한 관리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방안이 필요하며, 축협(사료보급)과 연계하여 실효를 높이도록 유도함

## 교육지원

### 9. 충남형 안전교육 조례제정

건축 공사 발주 및 행사 승인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지정하고 이를 이수하게 하여, 안전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제시

### 10.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3호 충남 유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충청남도에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함

### 11. 충남 도립대학교 안전교육과 신설

안전교육이 의무화 되어, 안정적인 강사 수급과, 안전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 요구됨

### 12. Augment Reality를 활용한 체험 예방 콘텐츠 운영

모바일 사용이 익숙한 세대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 이를 활용하여 체험을 통한 안전 경각심 확보

### 13. VR·AR 콘텐츠 및 기술개발을 통한 찾아가는 교구 개발

어르신들의 경우 체험관 방문을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인지능력 저하가 사고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르신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이동가능한 교구 개발이 필요

### 14. 지역내 안전교육업체 수급확대

안전의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는만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 민간참여

### 15. 안전관리업체 독과점 개선

안전관리시장이 독점적으로 형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화 필요

### 16. 익명성이 보장된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을 통해 도민이 자유롭게 의견 제안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17. 열린공간 제공확대

마을 등 소규모 공동체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토론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18. 조직 간 연계를 통해 통합서비스 제공 및 안전단체 전용 인터넷 쇼핑몰 구성

도에서 진행되는 관련된 사업들이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동시에 4대 취약 계층을 방문하고 안전취약자 가정 방문시 안전단체에서 사용가능한 전용 인터넷 쇼핑몰을 구성하여, 실제적으로 취약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함

### 19. NGO의 날 제정

각종 시민단체간 화합을 날을 지정하여, 서로 다른 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들 간에 연대를 통해 재난 발생시 지원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시 교류의 장 마련

### 20. 자유학기제 연계 청소년 안전활동 지원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체험관 방문 및 안전관련 교육이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21. 청소년 안전동아리 육성 지원

안전모임의 근간이 되는 안전동아리 공모사업 등을 진행하여 동아리 육성, 학생들이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민관협력

### 22.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 권한 부여(등하교 시간대 특정)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교통안전지도 단체 등)를 활용

### 23.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 민간위원 위촉

### 24. 방재장비 사용권한 확대

재해발생시 장비사용허가를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대한 개선 필요

### 25. 오토바이 안전확보 민간 MOU

오토바이의 경우 건별로 일당이 지급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업주교육이 철저히 이루어 져야함. 운영 형태에 따라 인센티브제도사업을 연계해야함

### 26.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가 안심 프로젝트

전국 411개 대학 중 서울·경기 131개(32%)를 제외한 여타 시도 中 도내 소재 대학수 전국 2위(35개 대학), 대학가 주변 5대 범죄 발생비율 3% 차지하므로 대학가 주변 안전 확보 필요

### 27.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내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학교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 및 참여의지 제고

## 재난약자지원

### 28. 혹서기 대책 마련

무더위쉼터 이용률이 높지 않은 곳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 필요 또한 농번기 간이 그늘막 설치 등 실질적으로 대피가능 한 환경 제공



---

### 29. 어르신 교통사고 발생시 대응요령 홍보

교통사고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보급하는 방안으로, 간단한 행동요령에 대한 문구를 제작하여 어르신 운전자들에게 배포

### 30. 재난위험 경광등 정보기 설치

난청, 외국인, 노인들의 경우 안내방송을 통한 대피 유도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시각적 자극으로 위험을 감지 할 수 있도록 경광등 정보기를 설치

### 31. 영·유아 안전문화 캠페인(어린이 보호주간 지정)

영·유아 보호주간을 지정하여 이 기간 집중적인 영·유아 관련 안전교육 및 인식 확산 계기 마련

### 32. 응급 상황 헬기이송시스템 홍보

어르신 응급상황 발생 시 헬기이송 혜택 대상에 대한 홍보 필요

### 33. 재난피해자 유가족 및 재난대응자 가족 관리

재난피해자 유가족 보호 및 지원, 재난대응자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응자 가족의 안전확보 지원

## 정보전달

### 34. 대피소 안내·홍보 방식 변화

온라인 및 인터넷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구들도 있으므로 공과금 고지서 뒷면을 활용해 대피소 및 안전관련 정보제공 제안

### 35. 충남 안전생활 카카오톡 이모티콘 개발 및 보급

모바일을 통합 접근성 확보 및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여, 안전 관련 이슈를 빠르게 확산 시키는 방안

### 36. 재난 피해 지역의 실시간 정보 분석 리포트

소셜 미디어에 기록된 피해 지역의 지원 요청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시군구 단위로 정보를 산출하여 제공

---

### 37. 교통사고 발생 상황 네비게이션 현출 지원

교통사고 후 사고지점에서 운전자가 직접 수신호를 하다가 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

### 38. 지역취약성 기반 사고발생 리스트 제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목록을 작성하여 대비함으로써 재난대응능력을 향상

### 39. 미래재난 예측 발굴

기술 발달로 파생되는 미래재난에 대한 예측 필요

## 제도개선

### 40. 하천 익사사고 방지 기준 및 유역 환경 안전관리기준 마련

하천의 물놀이 익사사고 및 녹조예방을 위한 유속, 수심 가이드라인 작성

가뭄예방을 위한 갈수기 물공유(물 자치권-수리권)기준 설정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생태관리기준 설정

### 41. 건설현장관리 경찰협조방안 마련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시행 시 경찰이 주변 안전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 필요

### 42. 낚시면허제 및 허용지구 제도화

낚시객 증가로 해상 안전사고가 유발되고, 어선에 의한 폐도구 방치 오염으로 주민생활에 위협요인이 됨  
시설 및 장비가 갖추어진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낚시면허제 및 허용지구 도입

### 43. 해수욕장 안전인증제 도입

해수욕장 주변의 선박사고, 이안류, 부대시설 등 안전사고 빈발 지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한 안전인증  
등급화 제도 도입

---

#### 44. 전동 보행보조장치 안전관리규정 제언

보행을 보조하는 전동기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고, 사고 발생시 관련규정 부재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 및 보험처리의 난이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규정을 중앙에 제언

#### 45. 드론 사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드론 경진대회 시 안전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드론 사용의 안전성 확보 마련제도를 충남도 조례로 제정 제언

#### 46.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홍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이행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함

#### 47. 노인운전차량 스티커 개량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인운전차량의 표시 스티커를 개량하여 시인성을 높임

#### 48. 회전교차로 운행방법 홍보

회전교차로 확대 도입에 따라 회전교차로 운행방식 홍보가 필요

#### 49. Safety School Zone 정착을 위한 설치기준 개선

현행 스쿨존과 관련한 설치기준, 시설물 종류 및 규격, 보행로 확보 등에 대한 규정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졌는지 조사한 후 개선하여야 함

#### 50. 농약사 개업 규정 강화

농약을 취급하는 농약사가 단순 허가제로 개업을 할 수 있으므로 규정강화가 요구됨

#### 51. 차선 도색 반사율 규정 강화

야간 혹은 우천시(특히 야간 우천시) 차선인식의 어려움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존의 차선 도색의 반사율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여 개선 및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 필요

#### 52. 가로등 누전 점검 주기 개선

현재 가로등 점검 1년에 1번 주기로 이루어있어, 누전을 감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실시간 누전 감지를 통해 화재 및 장마철 감전사고 방지

---

### 53. 스쿨버스 안전사고 예방대책

스쿨버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간힘 사고, 스쿨버스에 의한 교통사고 등의 원인 분석 및 관련 기준 강화

### 54. 특별사법경찰관의 책임과 기능 명확화

일상생활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특별사법경찰의 책임과 기능을 명확히 함

### 55. 학교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변화와 참여환경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위기대응 능력 향상 기반 마련

### 56. 재난안전부서 기피 극복방안

안전관리수당 신설, 현재 민생사법경찰지원(특사경)업무를 담당하는 팀에서 받는 수당에 준하여 월 20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제안

안전관리 부서 방재안전직 채용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실시 및 자격증 이수 지원

### 57. 국제 교류 강화

안전 선진화 모델 학습을 위하여 국제 교류 필요

### 58. 안전관련 제도·정책 용어개선

일반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업 명, 정책, 제도에 대한 내용이 개선되어야 함

### 59. 공공정책에 긍정적인 단어 사용

부정적인 단어를 통해 경각심을 확보할 수도 있으나,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의지 및 의식을 고취하는 방안 필요(자살 > 살자 변경 등)

---

## 안전관리장비 및 시설도입

### 60. 스쿨버스 출입문 이중화 방안

현재의 버스는 출입문이 앞쪽에만 존재하여 출구가 막힐 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스쿨버스를 대상으로 이중화를 시작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안 제시

### 61. 소방서 책임권역 및 응급의료영역확충

권역별 출동지역, 도착시간 등을 고려한 관할조정 및 소방서 신규 설치

### 62. CCTV 효율적 운영 및 확충

2016년 전국에서 CCTV를 활용한 범인검거 건수는 21,016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범죄억지력 및 사후검거 측면에서 활용가치 높음

### 63. 침입범죄 예방용 ‘Target Hardening’

절도사건 중 침입절도 사건 다발과 셉테드 사업이 침입범죄에 간접·경고적 효과만 있을 뿐 직접적 방어불가하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 64. 주취자 안전확보를 위한 SOS버스 운영

주취자가 야간 도로변에서 사고나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행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 65. 공용시설 와이파이 설치

통신장애(지하, 터널, 산간지역)로 인해 안전사고시 신속대응이 어려우므로, 통신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

### 66. 비상주 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아크차단기 설치

전선 결함 등으로 인한 아크 발생시 이를 감지하여 회로의 전류를 차단하는 화재예방 설비 도입을 통해 축사 등 비상주 시설 화재예방 가능

### 67. 시군 재난상황실 보강 및 신규 설치

재난상황실이 없는 시군을 파악 및 시설 설치유도  
인력보강, 노후 장비 교체

---

## 68. 화학사고 주요발생지역 소화용 화학자 보급

소화용(消火用) 화학 약품을 사용하여 불을 끄는 소방차를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 지역에 보급

## 안전설비 및 환경점검

### 69. 지방하천 천변저류시설 확충사업

국가하천, 도심지 주변의 홍수예방을 위한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도심지역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확대 시행하여 홍수저감사업+도심유출수 정화사업+빗물저류사업+지하수함양사업 병행추진

### 70. 충남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정비사업

도심지역 주변의 농경지 및 공장주변 지역에 설치된 비점오염물질 저감 시설은 상당수가 오히려 오염을 가중시키고 사람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점검 후 과감히 철거

### 71.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당진, 서산, 태안 등 고압 송전선로에 의한 재산권 침해 및 전자파에 의한 위해요소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안전을 위한 지중화사업 단계별 추진

### 72. 도심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 재난안전예방 체계 마련

도심재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형 재난에 대응하는 방안 마련하고, 노후시설 및 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예방체계 마련

### 73. 시특법 대상 시설물 3D 스캐닝 이력관리

교량 등에 대해 3차원 스캐닝 장비 활용하여 이력 관리

### 74. 산사태 위험지역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을 통한 원격모니터링

절개지 등 위험지역 RFID 활용하여 변화량 실시간 모니터링, 충남의 산사태 모니터링 대상지역이 많음. 인력부족의 문제 등을 해결하고, 안전한 조사를 위해 RFID 원격 무선 정보전달 체계구축 필요

---

## 75. 공원·등산로 안전관리

범죄로부터 취약한 공원·등산로에 대한 점검 및 시설물 보완을 통해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여 ‘거리의 눈’으로 활용

## 76. 옥외 간판 정비사업 지원

강풍으로 인한 간판 떨어짐에 의한 위험 예방

## 77. 모서리 없애기

학교 및 어린이 생활시설에 우선 적용

## 78. 노후 공동주택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

충남 도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범죄예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체감안전도 제고와 범죄 억제 모색

## 79. 빈집 및 노후건물 화재대응 시설개선

빈집 화재는 초기대응이 어려운 만큼 화재 감지 센서를 활용한 관리 필요

노후 건물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검사 필요

## 80. 완강기 설치대상 건물 점검

평상시 완강기 관리소홀로 비상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

## 81. 시설물 무료 안전점검 서비스

노후화된 건축물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점검 및 보수 필요

## 82. 노후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노후된 공원, 놀이터 등의 벤치, 간판 등이 방치되어 위험요소화 되는데 대한 관리 필요

## 83. 안전테마파크 조성

천안 안전체험관을 테마파크형 안전체험관 조성, 다시 찾아오고 싶은 안전체험 테마파크의 조성 필요

청산은 나를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사랑도 벗어놓고 미움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청산은 나를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나옹선사





# 부록 3

## 01 실행과제(프로그램) 사업비



## 실행관계(프로그램)별 사업비

[illegible]

실행과제(프로그램)별 사업비

[illegible]



실행과제(프로그램)별 사업비

[illegible]

## 실행관계(프로그램)별 사업비

[illegible]

안전충남 실행계획 2050  
만든 사람들





## 비전 수립 참여자

### 안전충남 비전위원회

위원장 :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은 충북대 교수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이재은 충북대학교 교수  
유병훈 충청남도 재난안전실장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  
허성우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원장  
우주형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은국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회장  
이순옥 충청남도 간호사회 회장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  
김윤희 목원대학교 교수  
배동철 호서대학교 교수  
김근영 강남대학교 교수  
위금숙 위기관리연구소 소장  
양기근 원광대학교 교수  
이주호 세한대학교 교수  
김영수 신성대학교 교수  
김겸훈 한남대학교 교수  
조민상 백석대학교 교수

### 안전비전 연구단

연구기관 : 충남연구원  
연구책임 : 조 성 전임책임연구원

이상진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박근오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전임책임연구원  
이동규 동아대학교 교수  
양기근 원광대학교 교수  
정원희 건양대학교 교수  
이창길 인천대학교 교수  
류상일 동의대학교 교수  
노황우 한밭대학교 교수  
허아랑 성균관대학교 리더십과공공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성애 마음채움심리상담센터 센터장

### 행정지원

지원총괄 : 유병훈 충청남도 재난안전실장

윤찬수 충청남도 안전정책과장  
조모연 충청남도 안전비전 T/F팀장  
이원주 충청남도 안전비전 T/F팀 주무관  
이남재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장  
김성호 안전정책과 안전문화교육팀장  
우태환 안전정책과 경보통제팀장  
명완호 재난대응과 사회재난대응팀장

## 비전위원회 총괄 분과위원회

### 총괄위원회

위원장 : 이재은 충북대 교수

이재은 충북대학교 교수  
김겸훈 한남대학교 교수  
이상진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양기근 원광대학교 교수  
배동철 호서대학교 교수  
김근영 강남대학교 교수  
이주호 세한대학교 교수  
조민상 백석대학교 교수  
이동규 동아대학교 교수  
이창길 인천대학교 교수

### 분과위원회

안전문화 분과

위원장 : 조민상 백석대학교 교수

노황우 한밭대학교 교수  
김윤희 목원대학교 교수  
이성애 마음채움 상담센터장  
김용광 바르게살기운동충청남도협의회장  
김덕일 안전보건공단 천안지사장  
권기동 교통안전공단충부지역본부장

안전생활터 분과

위원장 : 이상진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  
배동철 호서대학교 교수  
류진하 전 충남자율방재단연합회장  
조성수 경찰청  
서동철 교육청

안전복지 분과

위원장 : 양기근 원광대학교 교수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  
정원희 건양대학교 교수  
이종원 충청투데이 충청본부장  
임상옥 한국전기안전공사  
김현규 전 충청남도 보건복지국장  
허아랑 성균관대 리더십과 공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안전시스템 분과

위원장 : 이주호 세한대학교 교수

위금숙 위기관리연구소 소장  
김근영 강남대학교 교수  
이순옥 충남간호사회장  
김효종 32사단  
김성찬 119광역기동단

안전거버넌스 분과

위원장 : 김겸훈 한남대학교 교수

류상일 동의대학교 교수  
오미숙 녹색어머니회 충남지회 부회장  
곽병철 적십자사충남지사 사무처장  
강창환 의용소방대연합회장  
김지훈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장